

2009 북한개요



2009 북한개요

인쇄일 | 2009년 10월

발행일 | 2009년 10월

발행처 | 통일연구원

발행인 | 통일연구원장

주 소 |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전 화 | 02-900-4300 팩스 | 02-901-2541

홈페이지 | www.kinu.or.kr

편집·인쇄 | 다해미디어 02-722-7123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009 북한개요 / 통일연구원 [편]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482 ; 170×140 cm

ISBN 978-89-8479-498-6 93340 : 비매품

309.111-KDC4

951.93-DDC21

CIP2009002012



2009 북한개요





제1장 지 리

1. 자연환경	15
가. 위치 및 면적	15
나. 지형	16
다. 지하자원	17
라. 기후	19
2. 사회환경	21
가. 인구	21
나. 행정구역	25

제2장 정 치

1. 정치이념	29
가. 주체사상	29
나. 각종 하위 통치이념	34
다. 혁명관	40
2. 정치체제	42
가. 체제 성격	42
나. 조선노동당	44
다. 정권기관	55
3. 정치권력	68
가. 김일성시대 정치	68
나. 김일성 사망과 유훈통치	71
다. 김정일시대 정치	72



제3장 군사

1. 인민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85
가. 형성과정	85
나. 성격	86
다. 군의 위상	87
2. 군사정책 및 전략	88
가. 정책기조	88
나. 군사전략	91
3. 군사조직과 제도	93
가. 군사조직	93
나. 군사제도	96
4. 군사력	100
가. 지상군	100
나. 해군	101
다. 공군	102
라. 예비전력	104
마. 군사비	106
바. 군수산업	107
사. 대량살상무기 개발현황	108
아. 대외군사협력	110



제4장 외교

1. 외교정책	115
가. 정책기조	115
나. 외교정책 전개과정	117
2. 외교활동	126
가.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126
나. 외교 현황	128
다. 수교 현황	168
라. 민간대상 대외선전 및 동포조직 현황	172

제5장 경제

1. 경제체제	179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179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181
2. 경제정책의 기초	184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184
나. 중공업 우선정책	185
다. 군사·경제의 병진	186
라. 경제관리 개선	187
3. 경제관리	189
가. 관리원칙	189
나. 관리방법	191
다. 관리체계	195



4. 경제계획 및 실적	209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209
나.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214
다. 내부정비 조치 및 부문별 경제계획 추진	220
5. 분야별 현황	223
가. 국민소득	223
나. 재정	226
다. 화폐·금융	236
라. 산업부문별 실태	246
마.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288

제6장 과학기술

1. 과학기술정책	303
가 정책기조	303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304
2.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계	313
가. 과학기술 행정체계	313
나.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계	315
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317
3. 최근 과학기술부문 동향	323
가. 각종 과학기술 행사 강화	323
나. 과학기술 대외협력 활동 강화	323
다. IT산업 육성 동향	324



제7장 사회

1. 사회정책 및 구조	329
가. 사회정책	329
나. 사회계층 구조	330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333
가. 조직생활 통제	333
나. 경제·사회적 통제	334
다. 사회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335
라. 사회적 일탈현상과 부조리	336
마. 71 조치 이후 사회상 변화	337
바. 정치범수용소	338
3. 법제도	340
가. 법제 특징 및 최근 입법동향	340
나. 분야별 현황	341
4. 주민생활	344
가. 의식주생활	344
나. 직장생활	348
다. 가정생활	351
라. 여가생활	352
5. 노동문제	354
가. 노동정책	354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355
6. 사회복지	356
가. 사회보장제도	356
나. 사회복지시설	357
다. 사회보험	359



7. 보건·의료	361
가. 보건·의료정책	361
나. 의료시설	363
다. 보건·의료요원 양성	364
라. 고려의학	365
8. 도덕·풍속	366
가. 도덕과 예의범절	366
나. 관혼상제	368
다. 명절	370
라. 민속놀이	373
9. 환경	375
가. 환경정책	375
나. 오염실태	377

제8장 문 화

1. 교육	385
가. 교육정책	385
나. 교육관리체계	386
다. 교육내용	391
라. 교원양성	393
마. 특수교육	394
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교육변화	395
2. 문학·예술	396
가. 문예정책 및 이론	396
나. 문예단체	400
다. 분야별 현황	401



3. 언론·출판	413
가. 언론	413
나. 출판	421
4. 관광	422
가. 관광정책	422
나. 관광자원	423
다. 주요 관광지	424
라. 관광시설	429
5. 체육	430
가. 체육정책	430
나. 지도·양성기관	430
다. 주요 체육대회	432
라. 체육시설	433
6. 종교	436
7. 역사	440
가. 시대구분	440
나. 주체사관	441
8. 언어	442
9. 문화시설	445



제9장 대남·통일

1. 대남전략 기초	453
가. 대남인식과 전략목표	453
나. 대남전략 및 전술	455
다. 대남기구	460
2. 대남전략 전개과정	465
가. 1945~1953: 무력적화통일 추구	465
나. 1953~1969: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적극 모색	465
다. 1970~1989: 대결관계 속에서 대화전략 추진	466
라. 1990~1999: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구사	468
마. 2000~2007: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469
바. 2008~현재: 대남 경계 및 긴장고조	471
3. 연방제 통일방안	473
가. 1960년대: '남북연방제' 안	473
나. 1970년대: '남북연방제' 안	474
다.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75
라.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안	477
마. 2000년대: '낮은 단계 연방제' 안	479

01

지 리

- 1. 자연환경
 - 가. 위치 및 면적
 - 나. 지형
 - 다. 지하자원
 - 라. 기후
- 2. 사회환경
 - 가. 인구
 - 나. 행정구역





I. 지 리

1. 자연환경

가. 위치 및 면적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에 위치한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도상으로 북위 33도~43도에 속하는 온대기후지역이다. 동쪽으로는 동해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열도와, 서쪽으로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대륙과 마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와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과 접하고 있어서 예로부터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북한 지역의 위치

방향	경·위도	해당 지명
동단	동경 130도 41분 32초	나선시 우암리 (분단선: 경흥군 노서면)
서단	동경 124도 18분 41초	평안북도 용천군 진흥노동자구 (분단선: 용천군 마안도)
남단	북위 37도 41분 00초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분단선: 황해도 웅진군 봉강리)
북단	북위 43도 00분 36초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분단선: 현재와 같음)

※ 출처: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8), p.10.

※ 주: 섬을 포함하는 경우의 서단은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동경 124도 10분 47초)

북한지역은 1953년 7월의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 222,784km²의 55%인 123,138km²)를 차지하고 있다.

한반도 남북의 총 길이는 약 1,100km이고 동서의 길이는 좁은 곳이 200km, 넓은 곳은 320km이다. 해안선 길이는 총 8,593km인데 이중 북한지역의 해안선은 2,495km이다. 또한 중국과는 1,353.2km, 러시아와는 16.2km를 각각 접하고 있어 그 접경선의 전체 길이는 1,369.4km이다.

나. 지형

북한의 지세는 백두대간인 낭림산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려 이로부터 서쪽으로 강남산맥, 적유령산맥, 묘향산맥, 언진산맥, 멸악산맥 등이 펼쳐져 있고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에 걸쳐 함경산맥과 부전령산맥 등이 낭림산맥과 이어져 북부와 동부가 높고 서부와 남부로 오면서 점차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산맥으로부터 발원한 여러 개의 큰 강들은 서해 및 동해로 흐르고 있으며 이들 강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평안북도의 묘향산과 함경남도의 함흥을 연결하는 선의 이북지방은 고산지대를 형성하여 백두산(2,750m), 관모봉(2,540m), 북수백산(2,521m), 남포태산(2,433m), 와갈봉, 차일봉, 두운봉, 백산, 운령, 대연지산, 낭림산 등 2,000m가 넘는 산만도 50여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고원지대가 발달되어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백무고원(백두 및 무산고원)과 개마고원을 비롯하여 장진고원, 낭림고원, 풍산고원 등 10여개의 고원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회령분지, 강계분지, 구성분지, 덕천분지, 이천분지 등 분지지형도 고루 발달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강·하천들은 이러한 고산지역의 경사가 심한 지형을 따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고 수량도 풍부하여 동력자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크다.

● 1

북한은 우리나라 전체면적을 223,370km²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2008), p.10.

북한에서 가장 길이가 긴 압록강을 비롯하여 대동강, 청천강, 예성강 등 서해로 흐르는 강들은 산악지대를 벗어나서는 완만한 경사와 곡류하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두만강, 남대천, 용흥강, 어랑천, 성천강 등 동해로 흐르는 강들은 대체로 하천의 길이가 짧고 하폭이 좁고 깊으며 거의 직류하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평야는 큰 하천들을 중심으로 서해안지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해안지역에는 서해안에 비해 평야의 발달이 미약하며 규모가 작다. 주요 평야로는 평양을 중심으로 중부 및 서남부의 대동강 유역에 발달한 평양평야(950km²)와 황해남도의 재령, 신천, 안악, 은천 등 재령강 유역에 발달한 재령평야(1,300km²), 황해남도 연안, 배천, 청단 지역의 연백평야(1,150km²), 평안남도의 안주, 문덕, 숙주, 평원 등 청천강 유역의 열두삼천리평야(750km²), 함경남도의 함주, 증평 등 성천강 유역의 함흥평야, 평안북도 압록강 유역의 용천평야 등이 있다.

또한 북한에는 크고 작은 자연호수와 인공호수가 많이 있다. 자연호수로는 양강도의 천지(9.2km²)를 비롯하여 함경남도의 광포(9.0km²), 함경북도의 장연호(7.7km²) 및 만포호(8.6km²) 등 5km²이상의 호수만도 5개에 이른다. 인공호수는 관개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과 수력발전용으로 조성된 것으로 수풍호(298.2km²)를 비롯하여 운봉호(104.9km²), 장진호(46.1km²), 부전호(20.3km²), 서흥호 등 5km²이상의 호수가 25개 정도 조성되어 있다.

다. 지하자원

북한지역에는 지질적으로 시생대부터 신생대에 걸쳐 여러 지층이 형성되어 있고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다양한 광물이 분포되어 있다. 북한에 부존되어 있는 유용광물 중 경제적 개발가치가 있는 광종은 40여 종이며, 이 중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은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종

분류	광종
금속광물 (19종)	금, 은, 동, 철, 연, 아연, 중석, 몰리브덴, 티탄철광, 망간, 크롬, 장연, 카드뮴, 니켈, 안티모니, 코발트, 세륨, 니오븀, 이트륨
비금속광물 (20종)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인상흑연, 활석, 인회석, 형석, 중정석, 납석, 장석, 운모, 연옥, 규석, 규사, 사문석, 고령토, 규조토, 석면, 홍주석, 규회석, 수정
에너지 (3종)	무연탄, 유연탄, 우라늄

철광석은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심으로 황해남도 은률과 재령 일대, 함경남도 허천·덕성·북청군 및 강원도 창도군 등에 자철광, 적철광, 갈철광, 능철광의 형태로 매장되어 있다. 금·은광은 평안북도 운산·선천군 및 황해북도 연산군, 함경남도 허천군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동광은 양강도 혜산시를 중심으로 갑산·운흥군, 함경남도 허천군 및 자강도 화평군 등에 매장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주종 수출품이 되고 있는 연·아연광은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남도 성천군, 황해북도 은파군 등의 40여개 광산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함경남도 단천군의 검덕광산이 규모면에서 유명하다. 마그네사이트광은 북한지역에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0%가 매장되어 있을 정도로 풍부하며, 특히 함경남도 단천군 일대에는 노천탄광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석탄 역시 평남, 평북, 함북 등 북한 전역에 걸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한편 원유는 매장 가능성은 있으나 경제성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북한 서부 연안 대륙붕과 동한만에 대한 시험탐사작업이 스웨덴,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외국 석유기업들에 의해 일부 시도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20만분의 1, 5만분의 1 지질도를 완성하고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지하자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 2
채취공업성 국가자원개발국
리득호 부국장 인터뷰, 「조
국」(도쿄: 조총련, 2003년
4월) p.36

라. 기후

북한의 기후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지역이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덥다. 그리고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훈훈한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자주 흐리고 무더우며,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춥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봄과 가을은 대체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봄철에는 기온의 급상승에 따른 수분증발의 증가로 가장 건조한 시기가 된다. 연중 평균 바람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초당 약 2~3m 정도로 약한 편이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7~9월 중 태풍이 통과하여 적지 않은 풍수해와 해일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동안의 주요 태풍으로는 제니스(1995), 올리와(1997), 야니(1998), 바트(1999), 프라피룬·사오마이(2000), 라마순·루사(2002), 매미(2003) 등으로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1995년도에는 태풍이 북한 전역에 피해를 크게 입힌 바 있으며, 2007년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1995년도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1) 기온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0℃로서 남부지방이 14~15℃, 중부지방이 10℃ 내외인데 비하여 북부지방은 3~6℃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한 편이다. 지역별로는 동쪽의 산맥 발달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하여, 해안지대가 내륙지방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남부해안지대는 가장 추운 1월달의 평균기온이 약 2℃ 내외인데 비하여 북부 고원지대는 영하 18℃로 남북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 해산의 연평균 기온이 3.9℃인데 비하여 해주 및 원산은 11℃로써 7℃ 정도의 차이가 있고 1월 평균기온은 원산의 영하 2.1℃에 비하여 해산은 영하 15.3℃로서 약 13℃ 정도의 차이가 있다.

겨울은 대체로 약 5개월 동안 지속되어 남한지역에 비해 기간이 길다. 하천의 결빙기간만도 두만강은 4개월 이상, 압록강 및 대동강은 3개월 또는 그 이상 계속된다.

그러나 여름철의 월평균 최고온도는 해산의 19.9℃(7월평균)에 비하여 신의주의 8월 평균기온이 4℃ 정도가 높을 뿐이고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월평균 최고온도와도 별 차이가 없는 등 여름의 지역별 평균온도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지역별 월평균 기온

(단위 : °C)

지역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평양	-5.5	-2.0	3.9	11.6	17.3	22.0	22.9	24.8	20.2	11.9	4.4	-2.7	10.8
신의주	-7.2	-3.1	2.6	9.9	16.0	20.7	23.5	23.9	19.2	11.4	3.0	-4.3	9.6
사리원	-3.0	-0.9	4.5	11.2	16.7	21.2	23.9	25.0	21.1	14.2	6.4	-0.4	11.7
해주	-4.0	-0.9	4.5	11.2	16.5	21.1	23.8	24.7	20.5	13.6	5.8	-1.0	11.3
개성	-4.9	-1.7	3.9	11.4	17.1	21.7	24.4	24.7	20.3	13.1	5.1	-1.8	11.1
원산	-2.1	0.5	5.3	11.5	16.1	20.2	23.0	23.7	19.4	14.0	7.0	0.9	11.6
함흥	-3.5	-0.7	4.2	10.9	15.3	20.0	22.7	23.4	18.9	12.8	5.1	-0.8	10.7
청진	-4.8	-2.8	1.7	7.8	12.0	16.5	20.3	22.0	18.1	11.6	3.7	-2.3	8.6
해산	-15.3	-10.3	-3.1	5.6	12.0	16.8	19.9	19.3	13.0	5.3	-3.7	-13.1	3.9
강계	-12.8	-7.1	0.6	9.4	15.9	20.9	23.7	22.7	16.9	8.8	-0.7	-7.8	7.6

※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7~2008 각년호)

※ 주: 이 통계는 1996~2007년간 평균 기온

(2) 강수량

북한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600mm~1,500mm이며 그 중 53~63%가 6~8월의 3개월 동안에 내린다. 북한 주요지역의 연간 강수량을 보면 개성이 1,576.5mm인데 비하여 청진은 536.9mm로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다.

지역별 월평균 강수량

(단위 : mm)

지역 \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평양	13.6	13.7	21.8	54.5	83.5	90.7	241.3	232.9	126.8	48.8	34.0	12.4	974.0
신의주	9.3	12.1	31.9	62.2	82.9	104.6	281.9	235.6	89.0	54.2	24.4	9.8	998.0
사리원	12.2	12.3	16.7	43.2	80.7	74.4	210.0	193.0	115.9	36.4	31.4	10.3	836.3
해주	14.2	16.3	27.5	65.2	101.5	111.7	334.4	246.4	120.8	33.7	33.6	9.0	1114.2
개성	17.2	19.7	31.5	67.0	103.1	123.1	677.1	322.6	126.3	39.5	37.1	12.3	1576.5
원산	33.7	20.4	30.5	62.6	122.7	133.1	291.2	336.0	232.9	99.6	56.4	30.6	1449.6
함흥	13.9	8.3	16.0	52.9	71.2	72.5	179.5	174.2	104.9	51.0	35.2	9.0	788.6
청진	14.6	6.0	10.7	30.7	55.0	59.3	125.6	105.2	78.1	22.7	18.3	10.5	536.9
혜산	5.7	5.7	11.6	25.1	70.8	70.3	146.2	108.5	57.5	25.3	16.1	7.0	549.8
강계	11.1	11.8	23.1	49.1	80.3	93.4	205.4	171.8	62.2	47.0	25.0	16.5	796.8

※ 출처: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7~2008 각년호)

※ 주: 이 통계는 1996~2007년간 평균 강수량

북한의 지대별 강수량 분포를 보면 대체로 원산지방을 비롯하여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 적유령산맥 일대가 연평균 1,300mm 내외로 가장 많은 편이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북부 내륙지방은 700mm이하이며, 동북부의 두만강 유역도 600~800mm정도로 강수량이 적은 지대에 속한다.

2. 사회환경

가. 인구

북한은 그동안 인구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다가 지난 1989년에야 「유엔인구기금」(UNFPA)에 1946~1987년 기간의 각종 인구통계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1994년 1월3~15일 기간 중 「유엔인구

기금」의 도움을 받아 인구 총조사를 실시하여 1993년 인구를 2,121만 3,378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북한은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매년 총인구만을 발표해오고 있다. 2008년 「조선중앙연감」에 의하면 2004년 북한의 총인구는 2,361만명이다. 북한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960년대는 3.08%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부터는 1.70%, 1980년대에는 1.60%, 1990년대 이후에는 1.0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1960년대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인력으로 보충하기 위하여 1980년대까지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극심한 경제난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출산기피와 영아사망률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 평양시 및 평안남·북도에 전체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서부지역에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으며, 북부내륙지방인 자강도·양강도에는 8.7%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보면 총인구의 61% 정도가 도시지역에 집중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직업별 인구구성은 1960년대에서 1993년말 현재까지 공장·기업소 근로자는 38.3%에서 63.1%로, 농장원은 44.4%에서 23.5%로, 비생산직 사무원은 14.0%에서 13.4%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³⁾ 이렇듯 농업인구는 감소, 공장·기업소 근로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서구의 산업화에 따른 도시집중화 현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을 갖는다. 북한의 인구정책⁴⁾은 1980년대까지는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1983년에는 여성들의 낙태수술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사자·영아사망률이 증가하고 더욱이 여성들의 출산기피현상이 나타나며 따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다산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에는 「산아제한규정」을 변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다산여성들과 유아들에 대해 국가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낙태수술을 금지하고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구일제조사자료집』(1995) 참조.

●●4

“인구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인구현상과 과정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본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유리한 인구적 요인을 갖추므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는데 있다”: 『인구학』(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참조.

있다. 1998년에는 37년만에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여 다산 운동을 독려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쪽 수레바퀴를 떠맡고 있다”⁵⁾고 주장하면서, 강성대국건설에서 여성들의 적극적 참여와 출산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매년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일(7.30)을 즈음하여 여성들의 역할과 다산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한편 북한은 주민의 평균수명을 1998년에는 74.5세,⁶⁾ 1999년에는 66.8세⁷⁾로 발표(2001년)하였는데, 평균수명이 짧아진 이유는 식량난으로 인한 영아사망률의 증가, 아사자 발생과 보건·의료시설의 미비 등 열악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표 인구

(단위: 천명)

연도	총인구	증가율	남	증가율	여	증가율	성비(%)
1946	9,257	-	4,629	-	4,628	-	100.0
1949	9,622	1.30	4,782	1.09	4,840	1.5	98.8
1953	8,491	-3.08	3,982	-4.48	4,509	-1.76	88.3
1956	9,359	3.30	4,474	3.96	4,885	2.71	91.6
1960	10,789	3.62	5,222	3.94	5,567	3.32	93.8
1965	12,408	2.84	6,067	3.05	6,341	2.64	95.7
1970	14,619	3.33	7,127	3.27	7,492	3.39	95.1
1975	15,986	1.80	7,433	0.84	8,553	2.68	86.9
1980	17,298	1.59	8,009	1.50	9,289	1.66	86.2
1982	17,774	1.37	8,194	1.15	9,580	1.55	85.5
1985	18,792	1.87	8,607	1.65	10,185	2.06	84.5
1986	19,060	1.43	8,710	1.20	10,350	1.62	84.2
1987	19,346	1.50	8,841	1.50	10,505	1.50	84.2
1989	20,000	1.68	9,140	1.68	10,860	1.68	84.2
1993	21,213	1.48	10,330	3.12	10,884	0.06	94.9
1994	21,514	1.42	-	-	-	-	-
1996	22,114	1.38	-	-	-	-	-
1997	22,355	1.08	-	-	-	-	-
1998	22,554	0.89	-	-	-	-	-
1999	22,754	0.89	-	-	-	-	-
2000	22,963	0.92	-	-	-	-	-
2001	23,149	0.81	-	-	-	-	-
2004	23,612	2.0	-	-	-	-	-

●●4

“인구정책의 중요한 목적은 인구현상과 과정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분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전반적인 사회경제 발전에 유리한 인구적 요인을 갖춤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적극 다그치는데 있다”: 『인구학』(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6) 참조.

●●5

『노동신문』(2001. 7.30)

●●6

모든 주민들에 대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성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의 실시, 74.5살에 이른 사람들의 평균수명과……”: 『조선중앙통신』(1998. 7.21)

●●7

외무성 부상 최수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아동기금」 회의(2001. 5.15)에서 발표.

연도	총인구	증가율	남	증가율	여	증가율	성비(%)
2005	23,149	-1.96	-	-	-	-	-
2006	23,149	-	-	-	-	-	-
2007	23,612	2.0	-	-	-	-	-
2008	23,612	-	-	-	-	-	-

※ 출처: 북한의 중앙통계국 발표자료 종합, 1989년부터는 「조선중앙연감」을 통해 매년 발표
 ※ 주: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수

북한의 총인구 추계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남	여	성비(%)
1970	14,905	7,052	7,853	89.8
1972	15,683	7,458	8,225	90.7
1975	16,646	7,964	8,682	91.7
1977	17,083	8,194	8,889	92.2
1980	17,621	8,478	9,143	92.7
1982	18,214	8,784	9,430	93.1
1985	19,097	9,248	9,849	93.9
1987	19,559	9,491	10,068	94.3
1990	20,221	9,841	10,380	94.8
1992	20,798	10,140	10,658	95.1
1995	21,543	10,519	11,024	95.4
1997	21,810	10,672	11,138	95.8
1999	22,082	10,824	11,258	96.1
2000	22,175	10,876	11,299	96.3
2001	22,253	10,920	11,333	96.4
2002	22,369	10,983	11,386	96.5
2003	22,522	11,066	11,456	96.6
2004	22,709	11,165	11,543	96.7
2005	22,928	11,282	11,646	96.9
2006	23,079	11,364	11,715	97.0
2007	23,200	11,429	11,771	97.1
2008	23,298	-	-	-

※ 출처: 통계청
 ※ 주: 성비는 여성인구 100명당 남성인구수

나.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해방 당시 6도, 9시, 89군, 810읍·면이 있으나, 1952년 12월 행정체계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도(특별시), 시·군(구), 읍·면, 리(동)의 4단계 행정구역 체계 중 면을 폐지하여 도(직할시), 시(구역)·군, 읍·리(동·노동자구)의 3단계 행정구역체제로 개편하고 군 지역을 재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단위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즉, 1946년 9월 평양시를 평안남도에서 분리하여 특별시로 승격시켰다가 1952년 12월에는 직할시로 개편하는 등 60여 차례에 걸쳐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2009년 2월 현재 2직할시, 9도, 25시, 33구역,⁸⁾ 147군, 2구, 2지구, 147읍, 3230리, 1137동, 267노동자구⁹⁾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¹⁰⁾

종래의 행정구역 개편이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면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및 가계우상화를 위한 지명개칭과 한국의 행정구역수를 의식한 구역수의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본다면, 나선시, 흥남시, 신의주특별행정구, 남포시 등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개편이라고 볼 수 있다.

●● 8

‘구역’은 대도시(평양, 함흥, 청진)에 ‘구·지구’는 도(평안남도, 함경남도에 소속된 행정구역으로 시·군의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단위이다.

●● 9

‘노동지구’는 광산·임·수산사업소, 공장, 기업소 등에 인구가 집중되어 일종의 취약형태를 갖추게 되면서 별도로 설치된 행정구역으로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시 신설되었다.

●● 10

「조선대백과사전 18」(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p.21~23; 「고장이름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0~2002), 조선향토대백과(2004) 및 북한의 신문·방송 종합

행정구역 현황

구분	시(구역)	군(읍)	구	지구	리(동)	노동자구	도 소재지
평양시	(19)	4(4)			118(284)	10	-
나선시	-	-			12(20)	-	-
평안남도	6	19(19)	1	1	396(193)	31	평성시
평안북도	3	22(22)			484(88)	31	신의주시
자강도	3	15(15)			229(68)	23	강계시
양강도	1	11(11)			143(25)	67	해산시
황해남도	1	19(19)			419(26)	11	해주시
황해북도	3	15(15)			332(78)	8	사리원시
함경남도	3(7)	15(15)	1	1	465(160)	35	함흥시
함경북도	3(7)	12(12)			253(134)	44	청진시
강원도	2	15(15)			379(61)	7	원산시
합계	25(33)	147(147)	2	2	3,230(1,137)	267	

02

정 치

- 1. 정치이념
 - 가. 주체사상
 - 나. 각종 하위 통치이념
 - 다. 혁명관
- 2. 정치체제
 - 가. 체제 성격
 - 나. 조선노동당
 - 다. 정권기관
- 3. 정치권력
 - 가. 김일성시대 정치
 - 나. 김일성 사망과 유헌통치
 - 다. 김정일시대 정치





II. 정 치

1. 정치이념

가. 주체사상

(1) 형성과정

북한에서 '주체' 라는 용어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5년 12월 28일 개최된 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라는 김일성의 연설에서이다.¹⁾ 당시 김일성이 당 사업에서 주체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는 북한전역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어 이로부터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 연설에서 '주체' 는 당면한 사상사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김일성이 당내의 여러 파벌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면서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중·소간 이념분쟁의 격화로 국제공산주의운동 대열에서 현대 수정주의에 관한 시비가 벌어지자 대외정치 명분으로까지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주체' 가 '주체사상' 으로 된 것은 김일성의 1인 지배권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김일성의 절대권력이 확고해지고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된 것은 1967년의 일이다. 이때부터 김일성 우상화의 이론적 근거²⁾가 되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1
「김일성자작집 9」(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p.467.

●● 2
북한에서의 사상교양사업은 1948년 9월 정권 수립시까지의 '전국사상총동원운동', 1950년대의 '공산주의교양', 1960년대의 '혁명전통교양' 등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 가운데 1960년대에 진행된 혁명전통교양은 김일성과 그의 가계 우상화가 중심 내용이었다. 김일성은 제4차 당대회(1961.9)에서 보고를 통해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결부시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3

『조선노동당력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1), p.461.

●● 4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 하기 위한 당사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7), pp. 8~9.

●● 5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등을 통해 1930년에 주체사상을 창시했다고 공식화시키고 있으나, 때로는 그 시기를 1928년으로 소급하기도 한다. 즉 김일성이 1928년 10월에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연감』(1982), p.190.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는 타도제국주의동맹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결성된 것으로 선전했다. 『정치사전』(1973), p.145.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 사상적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등장은 김일성의 1인 지배 강화,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에 들어서자 당의 유일한 이념으로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으로 표방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 이념으로 공식화하여 당 규약에 명문화하였다.³⁾ 1972년에 제정된 헌법은 주체사상을 공식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하였다.

김정일은 당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2.12)에서 후계자로 결정된 후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1974.2.19)에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주의’를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으로서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라고 강조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구별지었다.⁴⁾ 한편 1974년 4월에는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이후에는 주체사상을 ‘현시대 로동계급의 영생불멸의 지도이념’이라고 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우월한 사상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1982년 이후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를 지도적 원칙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는 등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1986년 이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놓았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 ‘주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1970년대에 와서 주체사상을 확립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1930년 6월 말, 중국 만주의 장춘현 ‘카룬’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 창시를 선포했다고 주장한다.⁵⁾ 그러나 김일성이 1930년대에는 중국공산당의 무장부대인 동북항일연군에서, 그리고 1940년대 초반에는 소련군의 정찰부대인 88특별여단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가 1930년에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는 김정일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한 것이다.

주체사상 체계의 형성과정

내용	제기시기	배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1955.12.28)	·스탈린의 사망 ·당내 남로당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956.12.11)	·대외원조 감소(5개년 경제계획 수립 차질) ·당내 반김일성 움직임 고조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 (1957.12.5)	·공산권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당내 연안파, 소련파 타도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1962.12.10)	·중·소분쟁 심화 ·미·소 공존 모색 ·한국의 5·16
정치(외교)에서의 자주	제2차 당 대표자회 (1966.10.5)	·중·소분쟁의 확대 ·비동맹 운동의 발전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 회의(1967.5.28), 당중앙위 제5기 제8차 전원회의(1974.2.12) 및 전국 당선전일군강습회(1974. 2.19)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
온 사회 주체사상화 강화	제6차 당대회(1980.10.10)	·부자 세습체제 공고화

(2) 기능과 내용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정치체제와 주민생활 그리고 대외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된다. 김일성 사후에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들⁶⁾도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노동당과 국가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⁷⁾고 되어 있으며,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제3조는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 6

김정일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11.1): “사상 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996.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995.10.2).

●● 7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규약 전문에는 ‘말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했으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는 ‘말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 8

1992년 개정 헌법에서도 “말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이라는 구절을 삭제하였고, 1998년 개정헌법에도 이러한 구절은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 9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는 1961년 11월 5일자 「노동신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북한의 주민들도 교양과 학습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체사상 교양에는 원리교양, 충실성 교양,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역사·전통 교양, 당정책 교양, 계급교양 등이 주종을 이룬다. 주체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삶 자체를 규정짓는 하나의 준거틀이라 할 수 있다.

주체사상은 대외면에서 자주노선의 추구라는 명분하에 폐쇄체제를 합리화하는 준거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대남면에서는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남조선혁명 및 공산화통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대내외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그 내용도 새로운 면들을 보충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란 말을 처음 사용할 때,⁹⁾ 그 내용에 대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라 했다. 여기서 사람이란 집체적 용어인 인민대중을 의미한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말했다.¹⁰⁾

주체사상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가는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¹¹⁾ 그러나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 개념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붙는다. 그것은 ‘혁명적 수령관’이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지만 아무 조건없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는 없다고 한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지도가 주체확립에서 핵이 되는 셈이다. 이 점에서 주체사상에서의 수령의 역할과 지위는 그 기원과 종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10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1055.

●● 1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참조.

1986년에는 ‘수령·당·대중’이 수령을 뇌수(腦髓)로 하는 하나의 유기체적 통일체이며, 이들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그 내용에 추가하였다. 김정일은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 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

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 때 역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된다”고 하여 ‘수령론’에서 더 나아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¹²⁾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은 최상의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혁명의 주체는 다름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체로서 생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 이론은 곧바로 ‘혈연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은 인민대중이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 주는 ‘아버지 수령’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다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김정일은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개인과 집단의 자주성이 다 같이 실현되는 완전한 집단주의적 사회관계”로 되어간다고 강조한다.¹³⁾ 북한은 이와 같은 주체사상의 혈연론으로 세습체제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3) 최근 위상 변화

주체사상이 지닌 북한사회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이었으나, 1990년대 중반이래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그 실천적 유용성이 저하되면서 강조빈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했다. 김정일의 권력승계 이후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신군정치론’ 등 경제난국에 대처하고 체제를 안정화하기 위한 행동강령적 성격의 슬로건들이 주체사상을 대신하여 정치적 기치로 활용되고 있다. 유일한 최고지도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의 공식적 위상과는 별개로 실질적 정책지침으로서의 실효성은 최근 다소 감소한다는 평가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체사상이 지배이념으로서 자리를 내놓았다는 것은 아니며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 정세에 따른 하위 실천이념들의 부각 필요에 의해 그 강조의 수위를 낮추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 12

김정일,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7.15) 참조.

● 13

김정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1.3). 『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7), p.288.

나. 각종 하위 통치이념

(1)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

동구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체제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두 가지 하위 통치이념은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이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다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집중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동구사회주의의 몰락에 대해 “오늘날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력사의 법칙”¹⁴⁾이고 사회주의의 일시적 좌절의 이유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없었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동구의 민주화와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침투해 들어온 반동적 책동의 결과”¹⁵⁾라고 입장을 정리한 다음,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대신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선전하면서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 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아가기 위해 몸바쳐 투쟁하자”¹⁷⁾고 주민들을 학습시켰다. 즉 ‘우리식 사회주의’란 ‘영원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독창적이고 우월한 사회주의, 다시 말해서 인류의 참된 복지생활이 보장되는 이상 사회를 구현한 정치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 14

1990~1994년도 김일성
신년사 참조.

●● 15

김정일 담화(1992.1.3)

●● 16

위 담화 참조.

●● 17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
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5.5); 「김정일선
집」(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7), p.52.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한 걸음도 물러서거나 주저함이 없이 김정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2002년 1월 신년 공동사설에서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¹⁸⁾라며 ‘우리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령·사상·군대·제도의 ‘4대 제일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민족제일주의’¹⁹⁾는 1986년 7월 김정일의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후 198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행한 김정일 연설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에서 본격 강조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북한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되었다.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의 원천이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지도자, 둘째 주체사상, 셋째 혁명전통, 넷째 ‘우리식 사회주의’, 다섯째 민족의 고유한 역사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결국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워 붕괴된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창된 하위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남 측면에서는 민족대단결 논리를 뒷받침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재와 노력을 들여 1994년 10월 단군릉을 완공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

(2) 붉은기 사상

김일성 사망(1994.7), 자연재해 등 체제위기 국면이 전개되던 1995년부터 김정일은 “적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상이 희어지는 것이나, 우리는 붉다”며 사회주의 붕괴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를 지키는 보루로

●● 18

「노동신문」(2002.1.1)
참조

●● 19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민족자주의식의 높은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욱 빛내어 나기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로 발현되는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규정하였다. 「철학연구」 제 4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김정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1989.12)

●● 20

고영환 「우리민족 제일주의 평양 평양출판사 1989, pp. 127~188

서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주의 순결성·체제보루를 상징하는 ‘붉은기 사상’을 내놓았다.

‘붉은기 사상’은 1995년 8월 28일자 노동신문에 ‘붉은기를 높이 들고 나가자’라는 논설이 실린 이후부터 북한의 각종 언론보도에 등장하였다. 이어 1996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는 제목을 내세우면서부터 ‘붉은기 사상’의 선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붉은기 사상’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위기를 느낀 북한 지도부가 체제수호의 구호로서 내세운 것으로 그 선전의 강도를 높였을 뿐 주체사상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다. ‘붉은기 사상’의 기초인 ‘붉은기 철학’이 주체의 혁명철학에 기초해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과 신념의 철학을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해 나온 체제수호의 논리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붉은기 사상’은 “어떤 배신도 모르며 사소한 사상적 변질도 없는 일심단결의 상징이며 혁명적 지조와 절개로 죽어서도 붉은 기폭에 싸여 영도자의 품속에서 영생하려는 신념의 기치”²¹⁾로 표현된다. 그러나 1997년 10월 김정일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고 황장엽 망명(1997.2) 등으로 인한 북한사회의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면서 ‘붉은기 사상’에 대한 강조도 줄어들었다.

●● 21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노동신문」(1996.1.9) 참조.

●● 22

북한은 중앙방송(1998. 4.8)을 통해 “강선의 정신과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일어날 때 조국은 위대한 강성대국으로 만병에 위력을 떨칠 것이다”라고 하였고, 판문점 동포 단합대회(1998.8.5)에서도 “민족대단결로 분열주의 세력이 구축한 분단의 장벽을 단호히 허물어 버리고 부강번영하는 통일 강성대국을 건설” 하라고 주장하였다.

(3) 강성대국론

강성대국론은 1998년에 본격 등장한 이념이다. 1998년 2월 김정일의 자강도 현지지도 및 ‘8·15’를 전후하여 ‘강성대국’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다.²²⁾ 이어 8월 22일 노동신문 정론 ‘강성대국’이 발표되고, 같은 해 8월 31일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서는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인 것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등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 건설론은 3가지 측면으로 제시된다. 첫째는 사상·정치적 강국 건설이고, 둘째는 군사의 강국 건설이

며, 셋째는 경제의 강국 건설이다.

북한은 사상의 강국이란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공고한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이 이룩된 나라”를 말하며, 군사의 강국은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필승의 강군,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가 빛나게 실현되어 그 어떤 원수도 범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보루”를 뜻하고, 경제의 강국이란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빛을 뿌리게 된다”²³⁾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신사고’에 기초하여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 ‘종자론’²⁴⁾을 관철할 것을 촉구하였다.²⁵⁾ ‘신사고론’은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고방식, 투쟁기풍 등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과거 다른 나라의 낡은 틀과 관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우리식’ 대로의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다.²⁶⁾ 북한이 강성대국론을 내놓은 배경에는 대내적으로 김정일 시대의 출범에 즈음하여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이념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정권이 건재함을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4) 선군정치론

1995년 이후 김정일 정치의 특징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선군정치이다.²⁷⁾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7년 12월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군 중시의 정치방식은 김일성 사후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²⁸⁾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선행, 군 중시’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동

● 23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가자”, 『노동신문』 (198.9.9).

● 24

‘종자론’은 1973년 4월 김정일의 논문 「영화예술론」에서 제시된 이론으로 “사업에서 근본을 이루는 핵을 틀어쥐고 근원적 문제부터 혁명적으로 풀어 사업 전반에서 변혁을 이룩해 나간다”는 종자 중시의 논리이다.

● 25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 『노동신문』 (2001.1.1) 참조.

● 26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높이에서 보고 풀어 나가자”, 『노동신문』 (2001.1.9).

● 27

북한은 1960년 8월 25일 김정일이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105방크사단’을 방문하였을 때부터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신문』 (2005.10.5) 참조.

● 28

『노동신문』 (1998.10.19) 참조.

●● 29
「노동신문」(1998.10.19)
참조

●● 30
「노동신문」(1998.8.22)
참조

●● 31
2003년도 신년 공동사설
참조

●● 32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노동신문」 논설 (2003.3.21).

●● 33
「노동신문」(2003.4.3)
참조

●● 34
1999년도 신년 공동사설
참조

●● 35
「노동신문」(1998.10.10)
참조

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경제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다”²⁹⁾는 표현으로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방공업은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국가정치의 첫째가는 중대사”³⁰⁾라고 함으로써 다른 어느 분야보다 국방력의 강화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였다.³¹⁾ 또한 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였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정립된 것으로 주체사상은 선군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침이라고 주장³²⁾하고 있다. 주체사상이 추구하는 국가의 자주성을 수호하는 것은 선군정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여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구현하는 정치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선군정치는 이른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군의 정치·경제·사회적 선도역할을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군정치는 군 중시의 정치로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³³⁾로 규정된다. 또한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무기로 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³⁴⁾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북한은 이러한 군 중시 정치를 “김정일 동지의 기상이자 우리 당의 기질이고 김정일 동지식이자 우리 당의 혁명방식”³⁵⁾이라고 하는가 하면,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데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다. 군 중시 사상을 반영한 국방위주의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선군정치론은 오늘날 김정일체제 유지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치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군 우선의 의지를 수시로 표현해 왔다. 1997년 신년 공동사설은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사회주의의 운명과 부강조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축하하여 정권기관들이 보낸 축하문에는 “군대가 혁명주체의 핵심역량, 주력군을 이루며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라고 강조했다. 1998년 3월 9일 노동신문은 “군대를 기둥으로하여 혁명을 완성해 나가야 하며 군대를 본보기로 온 사회와 혁명대군을 정예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군 고위간부들의 권력핵심의 인사에서도 두드러진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자신이 1998년 9월에 이어 2003년 9월, 2009년 4월에도 국가 최고의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었다. 2003년 9월 최고 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혁명1세대인 이을설, 백학림 등 군부 원로들이 일선에서 퇴진하였지만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개최 이후에도 군부 실세인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이 용무 등 핵심계층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96년에는 4월 25일 인민군창건일과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정전협정 체결일) 등 군관련 기념일을 공휴일이자 ‘국가명절’로 지정하였다.

선군정치의 표방으로 군부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2003년 3월 노동신문에서 “인민군대는 혁명의 주력군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류다리, 금릉동굴, 금강산 발전소, 문화유적지 건설 등 대부분의 중요 경제건설 사업과 각종 우상화 선전물을 군 인력으로 건설했다. 그 밖에도 군대는 무역회사와 공장, 기업소, 광산, 협동농장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제2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사와 철도운행, 중요 치안업무 등에도 간여하고 있다.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문화와 생활기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했다. 또한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 초소 우리학교 운동’을 벌여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꾀하고, 2002년부터는 ‘군민일치³⁶⁾·관병일치³⁷⁾·군정배합의 실현³⁸⁾’을 강조하고 있다.³⁹⁾

그리고 2004년 1월 이후 선군사상을 전체사회에 일색화하려는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선군사상의 핵심인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정신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킴으로써 전 인민들을 체제보위를 위한 전사로 만들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 사회에 보급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군대식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여 경제회생의 추동력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 36

군민일치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결 같은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3, p.338.

● 37

관병일치란 “지휘관과 병사가 하나같이 굳게 뭉쳐 서로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3, p.514.

● 38

군정배합이란 “군사일군들과 정치일군들이 서로 합심하여 최고사령관의 사상과 의도대로 군사사업과 정치사업을 벌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신문」(2002.8.3) 참조

● 39

북한이 2003.5.14 개최한 ‘김정일의 선군혁명로선에 대한 중앙연구토론회’에서 군민일치, 관병일치, 군정배합의 실현을 다시 강조하였다.

다. 혁명관

(1) 혁명목표와 단계

북한의 혁명목표는 ①북한지역에서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건설 ②남한지역에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완수 ③세계 공산화 혁명이라는 3가지 과업을 달성하는 것인데 이 3가지 과업간의 연관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남조선혁명을 위한 기지’를 강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은 세계혁명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은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할 때까지의 혁명단계 구분, 각 혁명단계 마다의 목표와 전략적 과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주의 혁명론의 특징은 프롤레타리아 정권이 들어서서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한 사회주의 제도를 수립한 이후부터 무계급 사회가 실현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까지를 과도기 단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⁴⁰⁾

(2) 대내혁명(3대혁명)

북한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서의 혁명목표로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의 두 가지 고지 점령을 제시하고 있다. 전자는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에서의 2가지 혁명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수행을 당면한 전략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3대혁명 중에서 무엇보다 인간개조 및 정치사업을 위해 사상혁명을 중요시하고 이를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촉진을 위해 1970년대 초부터

● 40

철학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44~58

김정일 관장하에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전당·전인민적 차원에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 운동’, ‘80년대 속도 창조 운동’ 등을 벌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김일성 사망후 1995년부터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대내적으로 정치·군사·경제의 3대진지강화론을 내세워 체제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3) 대남혁명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의 혁명완수’를 위한 지역혁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성격을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⁴¹⁾ 북한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의 완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의 당면목표는 현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계열이 주도하는 민주연합정부라는 이름의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북한은 대남혁명노선에서 남한 내에 인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평화적 방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폭력적 방도에 의거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임하면서도 대남혁명의 전략목표와 혁명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⁴²⁾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함에 따라 강경 일변도의 혁명전략의 성격이 다소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4) 세계혁명

북한은 세계혁명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면서 다른 한편, 이를 전 한 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여건 조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계혁명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 운동,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운동을 그 기본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대남혁명의 대외적 환경으로서 국제혁명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시 된다.

●● 41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동강 구월서방, 1974), p.278.

●● 42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1990.5.24) 시정연설에서도 전 민족적 통일조선형성을 촉구하였다.

●● 43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세계혁명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91~99.

●● 44
「조선중앙연감」 (1977), p.69.

●● 45
이것은 북한에서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것이 "인민정권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 라고 강조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인민정권 건설 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133.

세계혁명의 기본전략으로서 반미투쟁을 세계 모든 혁명역량의 선차적 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반제·반미 역량의 통일전선 형성,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단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그러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퇴조, 비동맹운동의 변화 등으로 인해 세계혁명의 추진은 명목상으로 남아 있을 뿐, 실제로는 스스로의 체제생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

2. 정치체제

가. 체제 성격

북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인 1당 지배체제의 특성과 동시에 절대권력·주체사상에 지배되는 유일 지배체제이자 세습체제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억압기구에 의한 체제 운영과 유일 통제 이데올로기의 지배, 그리고 단일 지배정당, 통제경제, 권력세습 등의 요소들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정체(政體)는 다원주의·민주주의와는 유리된 전근대적인 체제이자 퇴행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1당 지배체제

북한은 "조선로동당을 근로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 이라고 규정하면서⁴⁴⁾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등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⁴⁵⁾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⁴⁶⁾ 이와 같은 북한 정치체제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구조의 일반적 특성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도 당의 활동사항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통치수단을 군대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김정일 정권의 대내외 여건과 김정일 개인의 통치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동당의 조직과 집행기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것이 군부와 함께 현 북한 통치조직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유일 지배체제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기본노선이 당내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에 있다고 하면서,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하여 유일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의 수령은 ‘전당의 조직적 의사의 체현자’이며, ‘당의 최고영도자’ 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영도의 유일 중심’ 이라고 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있다.⁴⁷⁾

또한 수령이 혁명투쟁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관련, ‘혁명적 수령관’ 을 제시하여 수령의 지위는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령도자” 로 규정된다.⁴⁸⁾

북한은 수령의 ‘영도의 유일성’ 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 북한식 사회주의의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소련 및 동구 등의 여타 사회주의 국가가 좌절된 것과는 달리 북한식 사회주의의 제도의 공고성과 불패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⁴⁹⁾

북한은 이러한 유일지배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바탕을 둔 ‘일심단결’ 과 ‘수령결사옹위정신’ 이나 수령을 위한 ‘총폭탄정신’, ‘자폭정신’ 등으로 무장할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 46

위의 책 p.13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11조」

●● 47

김정일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특)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1982.10.17) 참조.

●● 48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199.

●● 49

「주체의 사회주의 정치제도」 (평양: 평양출판사, 1992), p.137.

●● 50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I)」, (서울:국토통일원 1988), p.341.

●● 51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창설 초기만 해도 서울의 조선공산당은 ‘당 중앙’ 으로서 인정되고 있었다. 「조선중앙년감」 (1949), p.715.

●● 52

1946년 4월 18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협의 대상 정당·사회 단체의 자격문제에 관한 제5호 성명을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 53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동하여 북조선노동당을 창립함에 대한 결정서” (1946.8.29),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I)」, (서울:국토통일원 1988), p.57.

●● 54

「조선노동당력사교재」, (평양: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228.

(3) 세습체제

북한 정치체제의 또 하나의 특성은 ‘영도의 계승성’에 있다. 영도의 계승성이란 수령으로서 사상, 자질, 능력을 이어 받은 것으로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미화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권력세습 문제를 정권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김일성 자신이 “김정일 동지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 문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졌다. 이러한 세습체제는 김정일이 1997년 10월 당 총비서가 되고, 이어 19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면서 완성되었다.

현대적 정치 관념에 반하는 권력 세습은 북한 정치의 전근대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 조선노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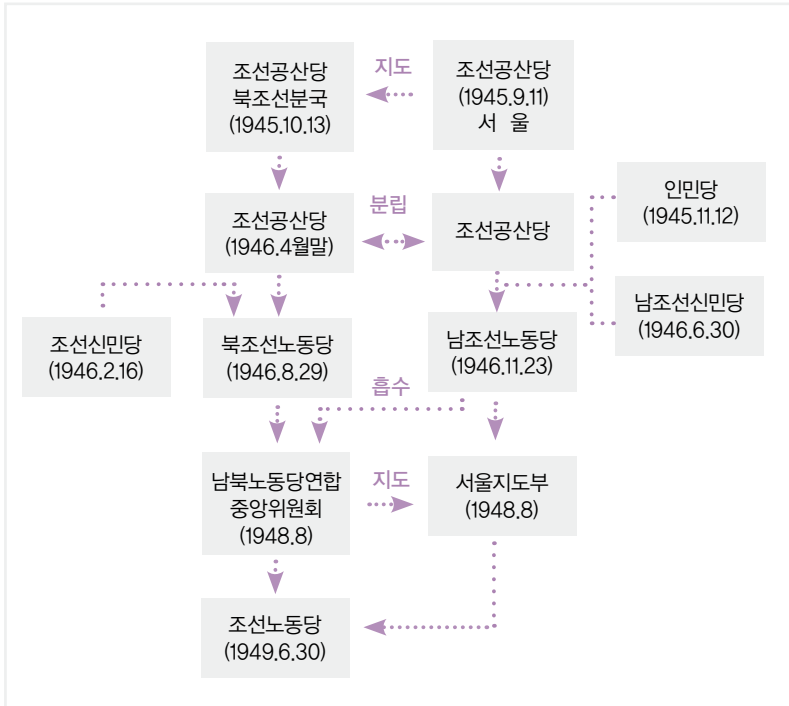
(1) 형성과정

북한은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창건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⁵⁰⁾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된 1945년 10월 10일을 조선노동당 창건일로 공식화하여 1949년부터 ‘사회주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채택한 ‘정치노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창설하였다.⁵¹⁾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1946년 4월말에 북조선공산당으로 되었다가⁵²⁾ 8월 29일에는 중국 연안으로부터 돌아온 조선독립동맹 계열이 중심이 된 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발족되었다.⁵³⁾ 또한 북조선노동당은 1948년 8월 정권수립을 위하여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를 구성하고⁵⁴⁾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범 후 1949년 6월 30일에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되었다.

조선노동당 형성과정



(2) 이념과 목표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는 역대 당대회를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왔다. 북한정권 창립 이전에 개최된 1, 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규약은 당의 이념을 명시하지 않은 채, 독립국가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경제·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4월에 열린 제3차 당대회에서⁵⁵⁾ 당규약 제1조를 개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노동당을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 계승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 완수’를 당의 당면 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웠다.

●● 55

제3차 당대회는 대내적으로 1955년 12월 박헌영의 처형 등 남로당계의 대거 숙청 대외적으로는 1955년 2월에 열린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의 스탈린 격하와 평화 공존이라는 새로운 정책이로의 전환이 모색되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 56

제4차 당대회 개최시 주변 상황은 중·소분쟁이 표면화된 시기로 김일성은 보고에서 '수정주의(소련)와 교조주의(중국)의 두 조류를 모두 반대한다'고 하는 중립적 입장을 내세우면서 이러한 상황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에 이용하였다

●● 57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참조.

당 이념 및 목표의 변화과정

당대회	지도이념	최종목표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1946.8.28~30)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북조선노동당 제2차 대회 (1948.3.27~30)	-	·통일적 독립국가 건설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1956.4.23~29)	마르크스-레닌주의	·사회주의제도의 수립(대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조선노동당 제4차 대회 (1961.9.11~18)	마르크스-레닌주의 +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사회주의제도의 강화 발전(대내)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전 한반도)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 (1970.11.2~13)	마르크스-레닌주의 +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제도의 승리(대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수행 (전 한반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1980.10.10~14)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대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 (전 한반도)

※ 출처: 각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 및 회의록 참조

그러다가 1956년 4월에 열린 제3차 당대회에서⁵⁵⁾ 당규약 제1조를 개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활동의 최고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노동당을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 계승자'로 규정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 완수'를 당의 당면 목적으로,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최종목적으로 내세웠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의 이념 및 목표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당규약 개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표방하는 변화를 보였다.⁵⁶⁾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명문화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당의 최종목표로 내걸었다.⁵⁷⁾ 한편 북한은 내부사정으로 제6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3) 조직 및 운영체계

(가) 핵심 조직

조선노동당의 조직·운영은 당원의 합의보다는 수령을 정점으로 한 소수집단의 하향식 지시에 따르는 운영체제로 점차 바뀌면서 김일성 1인 지배를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 기능해 왔다.

조선노동당 발족 초기에는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가 주요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1956년 제3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권한이 커졌으며, 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에 ‘비서국’이 신설되면서 당의 운영이 김일성의 지시를 받는 비서국 중심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정치국’으로 바꾸고 그 안에 ‘상무위원회’를 신설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조선노동당 발족 초기에 당대회는 매년 1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3개월에 1회씩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현재는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 따라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며, 필요에 따라 규정된 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소집할 수도 있게 규정되어 있다.⁵⁸⁾

●● 58

당규약 제21조, 제24조
참조

지도기관 변천과정

당대회	지도기관	당책임자	회의 개최 기간
1, 2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상무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장	·당대회 : 1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3개월에 1회
3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조직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당대회 : 4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4개월에 1회 이상
4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¹⁾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당대회 : 4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6개월에 1회 이상
5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당대회 : 4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6개월에 1회 이상
6차 대회	당대회→당중앙위원회 →정치국→상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총비서	·당대회 : 5년에 1회 ·중앙위 전원회의 : 6개월에 1회 이상

※ 출처: 각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 참조

※ 주: 1)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4차 전원회의 결정(1966.10.21)에 따라 비서국이 설치된 이후, 당 운영의 중심이 비서국으로 옮겨졌다.

(나) 당세의 변화

●● 59

「김일성저작집 1」(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7), p.372.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창설 초기에 4,530명의 당원을 가진 전위조직으로 출발하였다. 그후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 개최시 조선신민당과의 합당을 계기로 당원의 급속한 증가를 보인 이래 195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때에는 100만 당원을 확보하고, 약 5만개의 세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⁵⁹⁾

당원 증가 추세

시 기	당원수(명)	당세포수(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 집행위원회(1945.12)	4,530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1946.8)	366,000	12,000
북조선노동당 제2차대회(1948.3)	725,762	29,762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1952.12)	1,000,000	48,933
조선노동당 제3차대회(1956.4)	1,164,945	58,258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1961.9)	1,311,563 ¹⁾	65,000
조선노동당 창건 20주년(1965.10) ²⁾	약 1,600,000	
조선노동당 제5차대회(1970.11) ³⁾	약 1,730,000	
「노동신문」(1972.8.29) 보도	약 2,000,000	
「노동신문」(1978.1.29) 보도	약 2,000,000	200,000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1980.10) ⁴⁾	약 3,220,000	약 210,000

※ 출처: 각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보고서의 김일성 연설, 「조선중앙년감」

※ 주: 1) 당원 1,166,359명, 후보당원 145,204명

주: 2) 「노동신문」(1965.10.10)

주: 3) 「노동신문」(1970.10.10)

주: 4) 당 제5기 제19차 전원회의(1979.12.18) 당대표자 선출비율에 의거 추정

6.25전쟁 기간 중 출당과 전사 등으로 인한 당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1950년 7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당원 수는 오히려 45만명이나 증가하였으며, 당시 신입당원이 전체당원의 40%나 될 정도로 대규모의 당원증가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이같은 당원의 대량증가는 자연히 질적 저하현상을 가져 왔다. 당시 신입당원의 반 이상이 문맹자로 당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의 강화가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북한은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회시 당원 수 1,311,563명,⁶⁰⁾ 당세포 수 65,000개로 공식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당세에 관한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 참가한 당대표⁶¹⁾ 중 결의권 대표수와 결의권 대표의 선출 비율⁶²⁾을 감안하면 당시 당원수는 대략 32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1개 세포당 평균 당원수를 15명으로 계산할 경우⁶³⁾ 당시 당세포 수는 21만개 정도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전국당세포비서대회(3.31~4.1) 및 노동당 창건 49주년 기념 보고대회(10.10)에서 북한은 당세포 수를 막연히 ‘수십만 개에 이른다’고 한 것으로 보아,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당세의 확장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당원 수의 대폭 증가는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3대혁명 소조원’ 등 전후 세대의 대거 입당⁶⁴⁾과 산업구조 및 업무의 다양화로 각급 기관과 공장·기업소에 대한 당의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원 증가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회 개최 현황

대회별	개최일자	당원수 ¹⁾ (명)	인구 대비	대표수 (명)	주요 안건
제1차 당대회	1946.8.28 ~30(3일)	366,000	4%	801	·북조선공산당과 신민당 합당 문제 ·북조선노동당 강령 및 규약 채택
제2차 당대회	1948.3.27 ~30(4일)	725,762	8%	999	·북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제3차 당대회	1956.4.23 ~29(7일)	1,164,945	10%	914	·평화통일선언 채택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제4차 당대회	1961.9.11 ~18(8일)	1,311,563	17.5%	1,230 ²⁾	·경제발전7개년계획 채택 ·평화통일선언 채택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제5차 당대회	1970.11.2 ~13(12일)	1,730,000 (추정)	11.4%	1,871 ³⁾	·경제발전6개년계획 채택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 60

한달 전인 1961년 8월 1일 북한은 당원 1,166,359명, 후보당원 145,204명으로 발표하였다.

●● 61

제6차 당대회 참가 대표수는 총 3,220명(결의권 대표 3,062명, 발언권대표 158명)으로 발표되었다.

●● 62

북한은 제7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79.12.18), 당원 1,000명당 결의권 대표 1명 선출 후보 당원 1,000명당 발언권자 1명을 선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 63

당규약 제42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서 구성되며,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 당조직을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64

1990년 2월 13일 평양방송은 “소조원 17만여명 중 2만여명이 당원이 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전후세대의 대거 입당을 시사하였다.

대회별	개최일자	당원수 ¹⁾ (명)	인구 대비	대표수 (명)	주요 안건
제6차 당대회	1980.10.10 ~14(5일)	3,220,000 (추정)	12.2%	3,220 ⁴⁾	·김정일의 공식 등장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안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 출처: 당대회 대표 자격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당해 연도 「조선중앙연감」·「노동신문」

※ 주: 1) 후보당원 포함

2) 발언권만 갖는 대표 73명 포함

3) 발언권만 갖는 대표 137명 포함

4) 발언권만 갖는 대표 158명 포함

(다) 운영체계

당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여 외형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로는 1당 지배체제를 제도화하고 있다.⁶⁵⁾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 및 노동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각급 당위원회는 각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 되며 ‘정치적 총참모부’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당위원회는 집단적 지도를 기본 활동지침으로 하고 있다.⁶⁶⁾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며, 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대회가 선출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도(직할시)·시(구역)·군 당의 경우는 해당 당대표회가, 당대표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당대표회가 선출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초급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당총회(당대표회)이며, 당총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당총회가 선거한 해당 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⁶⁷⁾

군대 내에도 각급 단위부대에 당조직이 설치되며, 군대내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인민군 당위원회가 당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조직된다. 군대 내의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주둔 지역에 있는

●● 65

당규약 제11조.

●● 66

당규약 제12조, 제13조.

●● 67

당규약 제14조.

각급 당위원회에 정치 및 군사 간부를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요 정치·경제·군사분야에 정치기관인 정치국(정치부)을 두고 있다. 정치국은 해당기관에 조직된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전투단위로 일컬어지는 당세포이다. 당세포는 당원 5~30명 단위에 조직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세포의 상급조직으로 초급당 조직이 있으며, 이 위원회는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 조직된다.⁶⁸⁾

각급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당위원회의 위원과 후보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가로 회의가 성립되며, 회의의 결정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당 회의에서 채택된 제반 정책은 비서국(지방은 비서처)에서 집행되고 있다. 중앙위원회의 비서국에는 사상담당 등 분야별로 통상 10명 내외의 비서를 두고 있다.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 당위원회와 당세포에는 비서와 부비서가 있다.

당간부의 자질 향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각급 당위원회는 간부양성 및 재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당의 교육기관으로는 시(구역)·군당의 부장급 이상을 입교대상으로 하는 김일성고급당학교가 중앙에 있으며, 각 도에는 공산대학, 각 군에는 군당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김일성고급당학교에는 1개월부터 5년까지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다.

모든 당간부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각급 재교육기관에서 적어도 한달씩 교육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⁶⁹⁾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보도·출판 매체로 ‘노동신문사’와 ‘조선노동당출판사’가 있다. 이들은 당원들과 일반주민에 대한 사상교육과 함께 당의 정책관철을 위해 주민들을 조직, 동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 68

당규약 제42조.

● ● 69

「김일성저작선집 6」(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pp.136~152.

(4) 외곽단체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67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모든 정치단체나 조직들은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바 조선노동당의 우당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천도교청우당’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적인 정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 비난성명 발표시나 통일문제 등과 관련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제의시 나타나는 이름뿐인 정당이다.

북한이 발표하는 각종 성명에는 이러한 명의를 가진 정당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다. 그 중에는 근로단체로 불리는 대규모 조직을 가진 단체들도 있다. 이러한 근로대중의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근로대중단체 현황

단체	창립일	회원수
조선직업총동맹	1945.11.30	약 160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1946.1.31	약 130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946.1.17	약 500만 ¹⁾
조선민주여성동맹	1945.11.18	약 20만

※ 출처: 방완주, 「조선개관」(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88), pp.106~107.

※ 주: 1) 「노동신문」(1995.10.10)

이들 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⁷¹⁾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과 같은 통일단체를 비롯하여 민족화해협의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등이 있다.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등이 존재하는데 이 종교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산하에 있다. 북한

● 70

창립 당시 조선민주당 이었으나, 조선민주당 제6차 대회(1981.1.28)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되었다.

● 71

당규약 제56조.

에 존재하는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은 대부분 북한의 통일노선 선전과 대남·대미 선전·선동 활동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전위조직들이다.

정당·단체(2008년 12월 기준)

정당· 대남 단체	조선천도교청우당 위원장 유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의장 강연학 등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반제민족민주전선 (반제민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북측본부 의장 김유호	조국통일범민족청년 학생연합북측본부 의장 김인호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김영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장 유미영	남조선의 비전향 장기수 구원대책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대외 단체	남조선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재북평화통일촉진 협의회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대외문화연락 위원회 위원장대리 문재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재철	조선외교협회	조선 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염순길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일본군위안부 및 강제 연행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조선인간재연행피해자 유가족협회 회장 김용걸	아시아여성들과 연대 하는 조선여성협회 회장 이청희
사회 단체	조선유네스코민족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식량 및 농업기 구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서기장 이태균	유엔아동기금 민족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 조선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비서 이용철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위원장 김병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위원장 강장욱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위원장 노성실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최철남	조선자언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송남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허명규	조선중앙보호사협회 위원장 이동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엄정철
경제 단체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위원장 백현봉	조선국제무역 촉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심상진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장 장재언
종교 단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최상순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김병훈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변영립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배달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정윤근
학술 단체	조선역사학학회 위원장 허중호	조선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 강능수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학선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영	

다. 정권기관

(1) 정권의 성립

오늘날 북한에서는 1948년 9월 9일을 정권수립일로 기념하고 있다.⁷²⁾ 그러나 실제로 해방 직후부터 북한지역에서는 소련군의 점령하에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었다. 그 첫 작업은 1945년 8월 27일 조직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었다. 같은 해 10월 8일에는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부의 주재로 평양에서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가 소집되고, 이어 10월 28일에는 ‘북조선 5도 행정국’이 정식 발족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개최된 ‘북조선 민주주의 각 정당·사회단체, 각 행정국 인민위원회 대표 확대협의회’에서는 북한 주둔 소련군의 비호 아래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한지역의 최고집행기관이었으나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자성이 없었다.

1946년 11월 3일에는 북한 전역에서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하여 3,459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하였는데 북한은 당시 총유권자 4,516,120명의 99.6%가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947년 2월 17~19일까지 3일간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위원 및 각 정당·단체 대표 1,1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어 여기에서 선출된 대의원 237명으로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다.

북조선인민회의는 2월 21~22일 이틀간 제1차 회의를 열고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두 22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당별 구성은 북조선노동당 16명, 조선민주당 2명, 천도교청우당 2명, 무소속 2명이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시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탄생

● 72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3), p.419.

●● 73

이 회의에는 남한의 유권자 99.97%가 참가한 서명투표로 구성된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선출한 360명이름을 밝히지 않은 66명 포함도 참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최고인민회의제4차 회의 중요문헌집」(평양, 1948), pp.283~287; 「조선중앙연간」(1949), pp.14~17.

●● 74

북한은 1946년 11월 북한지역에서 인민위원회 선거를 실시한 후, 이듬해인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8.15) 이후에야 공산정권이 들어선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다.

●● 75

총 10장 104개조.

●● 76

총 11장 149개조.

●● 77

총 7장 17개조.

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총회가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위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를 결의하자 인민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게 되었다.

1947년 11월 18~19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제3차 회의가 개최되어 '조선립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12월 20일에는 헌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듬해 1948년 2월 6일부터 개최된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인민토의에 회부하고 또한 이를 심의하기 위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를 소집키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28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회의에서는 헌법 초안을 축조심의하여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으로 정식 확정하였다. 이어 7월 9~10일에는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가 소집되어 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문제를 북조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였다. 1948년 8월 25일 북한에서 최초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 212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당시 북한은 등록된 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하여 이중 98.49%의 찬성율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소위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9월 2~10일까지 평양에서는 5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⁷³⁾ 여기에서 인민공화국헌법을 정식 채택하였으며,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출범시켰다.⁷⁴⁾

(2) 사회주의 헌법 제정

북한은 1948년 '인민공화국 헌법'⁷⁵⁾을 처음 제정한 이래 1972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⁷⁶⁾을 채택하고, 199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이를 개정하였다.(이하 '구 사회주의 헌법'⁷⁷⁾ 그리고 김일성 사망 4년 후인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이를 다시 대폭 개정,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내놓았고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이를 다시 수정·보충하였다.

1972년 헌법이 김일성 독재권력 구축 이후 이를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체계를 국가주석 중심으로 제도화하였다면, 1992년 구 사회주의 헌법은 김정일에게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일종의 과도적 헌법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우선 권력구조면에서는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군사관련 제반 기능과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군정을 국방위원장 산하로 일원화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방위원장에 김정일을 선출함으로써 김정일의 위상을 강화하고 군부 장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다.⁷⁸⁾

또한 구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 지도이념 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대신 주체사상의 독자성을 강조하였으며,⁷⁹⁾ 주석,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관의 임기를 5년으로 단일화하였다. 대외정책 추진원칙에 있어 종전의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 ‘자주·평화·친선’ 등으로 바꾸어 명시함으로써 이념적 색채를 약화시켰다.⁸⁰⁾ 통일과 대남분야에서 그동안 대남적화전략 조항이라고 문제시되던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통일’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⁸¹⁾ 이에 반해 1998년의 개정헌법은 ‘김일성 헌법’이라는 헌법 서문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이 이미 출범한 상황에서 김정일의 통치 스타일을 헌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개정된 ‘김정일식 헌법’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 사회주의헌법과 비교한 개정헌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구조의 대폭 개편이다.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내각제를 채택하고,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3인에게 권력이 분립되는 듯한 형식을 취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종전의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어 권한이 강화되었고, 위원장은 ‘국가대표’ 권한을 가진다.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 종전에 비해 권한이 강화된 내각 총리는 북한 ‘정부대표’ 권한을 갖는다.⁸²⁾

그러나 실제로는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

●● 78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1993.4.7~9)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 79

구 사회주의 헌법 제3조.

●● 80

구 사회주의 헌법 제16조, 제17조.

●● 81

구 사회주의 헌법 제5조, 제9조.

●● 82

사회주의 헌법 제111조, 제120조.

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⁸³⁾으로 격상되었고, 여기에 김정일을 다시 추대함으로써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김정일이 ‘국가의 최고수위’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김정일은 그 위상이 한층 강화된 국방위원회를 통해 군대 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

지방정권기관의 경우, 지방인민위원회가 지방행정경제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을 흡수하여 내각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체계가 일원화되었다.

둘째, 헌법 서문의 신설이다. 헌법 서문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창건자’, ‘사회주의 조국의 시조’로 규정하며 개정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였고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하였다. 셋째, 경제분야의 변화이다. 개정헌법은 경제분야에서 사경제범위의 확대 등 현실을 인정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실용주의적 정책방향으로 나갈 것임을 시사하였다. 즉 개인소유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가격·원가·수익성 등 시장경제 개념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헌법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3) 정권기관의 조직·기능

(가)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들은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⁸⁴⁾ 즉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밖에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우리의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

●● 83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의 김영남의 국방위원장 추대연설

●● 84

사회주의 헌법 제1조.

의 역할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가 있다.⁸⁵⁾ 회의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⁸⁶⁾ 그러나 실제로 1998년 10기 최고인민회의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며 회기도 단 하루에 그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법제위원회와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별 위원회를 두고 있으나,⁸⁷⁾ 실질적인 국정 심의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임기 5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⁸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당, 사회단체, 내각, 군 등에서 직책을 겸임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의원의 직책보다는 자신들의 원래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로 되어 있다. 2003년 8월의 선거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의 수는 제9기, 제10기의 경우와 같이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 선거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임기 개시 이후 5년 7개월이 경과한 2009년 3월 8일 실시되었다.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최태복, 부의장은 김완수, 홍성욱이 맡고 있다.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회의를 대신해 모든 일을 담당한다.

●● 85

사회주의 헌법 제92조.

●● 86

사회주의 헌법 제93조.

●● 87

사회주의 헌법 제98조.

●● 88

사회주의 헌법 제90조.

역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기별	선거일	대의원수	투표율/찬성율	재임기간 ¹⁾	내용개요
1	1948.8.25	572 ²⁾	99.97/ 98.49	9년	·흑백함 투표 실시(제1기~2기) ·인민공화국 헌법 승인 ·인구 5만 명당 1인 선출 ·13차례 회의 개최
2	1957.8.27	215	99.99/ 99.92	5년 1개월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시행(1957. 6) ·11차례 회의 개최
3	1962.10.8	383	100/100	5년 1개월	·단일투표 실시(제3기~9기) ·인구 3만명당 1인 선출(제3기~9기) ·7차례 회의 개최
4	1967.11.25	457	100/100	5년	·8개항 통일방안 제안 ·6차례 회의 개최
5	1972.12.12	541	100/100	5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주석 선출) ·7차례 회의 개최
6	1977.11.11	579	100/100	4년 4개월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시정연설) ·5차례 회의 개최
7	1982.2.28	615	100/100	4년 9개월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촉진할데 대한 결정" 채택(제3차회의) ·5차례 회의 개최
8	1986.11.2	655	100/100	3년 5개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시정연설) ·5차례 회의 개최
9	1990.4.22	687	99.78/100	8년 3개월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시정연설) ·7차례 회의 개최
10	1998.7.26	687	99.85/100	5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제1차 회의) ·사회주의 헌법 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제 부활) ·6차례 회의 개최
11	2003.8.3	687	99.9/100	5년 7개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제1차 회의) ·외무성의 대외적 조치에 대한 승인 결정
12	2009.3.8	687	99.98/100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제1차 회의)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제1차 회의)

※주: 1) 재임기간은 최고인민회의의 각기별 제1차 회의 소집일을 기준으로 환산, 헌법상 임기는 제1기 3년, 제2~9기 4년, 1992년 및 1998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5년으로 바뀌었다.

2) 북한은 남한 출신 대의원 360명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국방위원회

1998년의 헌법개정을 통하여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되었다.⁸⁹⁾ 이는 국방위원회가 국방분야에서 주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영남 대의원(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추대연설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역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 주권 및 행정기관으로서 북한의 중추적 기관이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⁹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내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진다.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위원회는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의 지도, 국방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⁹¹⁾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⁹²⁾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달리 국방위원회 회의는 과거 당 정치국 회의와 같은 고위층 정책협회가 아니라 정책집행을 위한 실무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보통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⁹³⁾ 예컨대, 국방위원회 회의는 제1부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혹은 위원 중 한 명이 위임을 받아 각 분야의 책임자를 불러 ‘국방위원장 명령’을 전달하거나 지시관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09년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당 행정 및 수도건설부장 장성택, 인민보안상 주상성,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우동측,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주규창,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정각

● 89

사회주의 헌법 제100조.

● 90

사회주의 헌법 제103조.

● 91

이 권한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명령으로 종전의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하였다가 이후 인민무력부로 다시 환원시켰다.

● 92

이 권한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명령으로 종전의 인민무력부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하였다가 이후 인민무력부로 다시 환원시켰다.

● 93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pp. 407~408.

등이 새로이 선출되는 등 국방위원회가 대폭 강화되었다.

- 위원장: 김정일(총비서)
- 제1부위원장: 조명록(총정치국장, 유임)
-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유임), 이용무(인민군 차수, 유임), 오극렬(당 작전부장, 유임⁹⁴⁾)
- 위원: 전병호(군수공업부장, 유임), 김일철(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유임),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임), 장성택(당 행정 및 수도건설부장, 신임), 주상성(인민보안상, 신임),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신임), 주규창(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신임),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신임)

(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98년 헌법개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었다. 헌법상으로 볼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국방 이외의 국가적인 사업을 다 맡고 국가를 대표하여 활동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개정을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위가 높아졌으며 종래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중앙인민위원회, 국가주석이 갖고 있던 권한의 대부분을 물려받게 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된다.⁹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5년⁹⁶⁾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 기간 국가건설 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약간 명을 명예부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⁹⁷⁾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소집, 헌법과 현행부문법 규정 해석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⁹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하고,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⁹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를 가지는데,¹⁰⁰⁾ 전

●● 94
2009년 2월 국방위 부위원장
장에 임명됨

●● 95
사회주의 헌법 제108조,
107조

●● 96
사회주의 헌법 제109조

●● 97
사회주의 헌법 제108조

●● 98
사회주의 헌법 제1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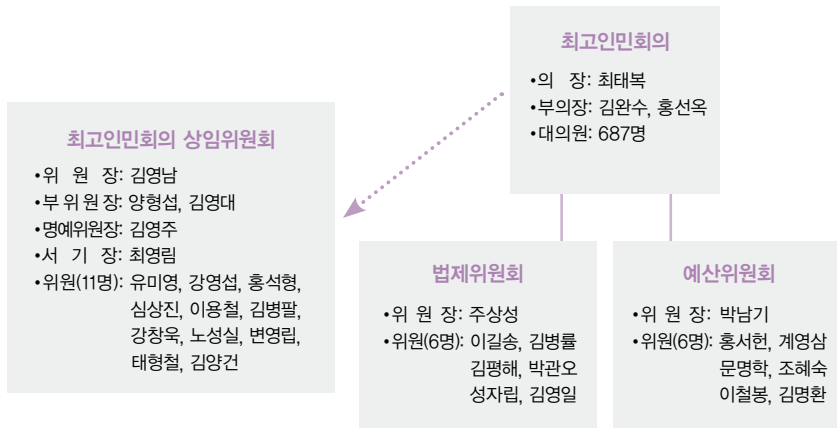
●● 99
사회주의 헌법 제111조

●● 100
사회주의 헌법 제112조

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¹⁰¹⁾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내리며 자기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의 앞에 책임을 진다.¹⁰²⁾

- ● 101
사회주의 헌법 제113조.
- ● 102
사회주의 헌법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최고인민회의(2009년 5월 기준)



(라) 내 각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으로서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¹⁰³⁾ 내각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보충 등이다.¹⁰⁴⁾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¹⁰⁵⁾ 내각 성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총리, 부총리와 내각 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¹⁰⁶⁾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내며,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

- ● 103
사회주의 헌법 제117조,
제118조.
- ● 104
사회주의 헌법 제119조.
- ● 105
사회주의 헌법 제120조.
- ● 106
사회주의 헌법 제121조,
제122조.

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¹⁰⁷⁾ 내각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¹⁰⁸⁾ 내각 위원회·성은 지시를 내며,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 대책과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¹⁰⁹⁾

2009년 5월 현재 내각은 총리 산하에 4명의 부총리(곽범기, 태종수, 노두철, 오수용)와 총 37개 부서(2위원회, 30성, 1부, 1원, 1은행, 2국)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헌법에서 정무원이 폐지되고 내각제가 신설된 이후 총 3개의 공업성과 1개의 부가 증가하였다. 금속기계공업성이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되고 전기석탄공업성이 전력공업성과 석탄공업성으로 분리되었으며 원유공업성과 수도건설부가 신설되었다.

내 각(2009년 5월 기준)

37개부서
(2위원회 30성 1부 1원 1은행 2국)

•총리: 김영일
•부총리: 곽범기, 노두철, 태종수, 오수용

외무성 박의춘	건설건재공업성 동정호	임업성 김광영	교육성 김용진	국가과학원 변영립	전자공업성 한광복
인민보안성 주상성	철도성 전길수	수산성 박태원	체신성 유영섭	체육지도위원회 박학선	무역성 이용남
국가계획위원회 노두철	육해운성 나동희	도시경영성 황학원	문화성 강능수	중앙은행 이광곤	수매양정성 문응조
전력공업성 허택	농업성 김창식	국토환경보호성 박송남	재정성 김완수	중앙통계국 김창수	국가검열성 김익순
석탄공업성 김형식	화학공업성 이무영	국가건설감독성 배달준	노동성 정영수	내각사무국 김영호	기계공업성 조병주
채취공업성 강민철	경공업성 이주오	상업성 김봉철	보건성 최창식	원유공업성 김희영	수도건설부 김응관
금속공업성 김태봉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평양시 박관오	나선시 김수열	함경남도 김풍기	함경북도 박수길	평안남도 안극태	평안북도 박경삼
황해남도 오응창	황해북도 이상관	자강도 최기룡	양강도 김철	강원도 고종덕	

(마)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한다. 도(직할시)와 시(구역)·군에 조직되어 있는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으로서 임기 4년의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¹¹⁰⁾ 그 임무와 권한¹¹¹⁾은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형에 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의 심의 및 승인 등이다. 지방인민회의는 위와 같은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1~2회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¹¹²⁾

그러나 실제로 지방인민회의에서 정책선정이나 예산심의 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중앙에서 내려온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에 불과하다. 최고인민회의와 달리 지방인민회의에는 상임위원회조차 없다.

(바) 지방인민위원회

지방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지방인민회의와 마찬가지로 도(직할시)와 시(구역)·군에 조직되어 있는 인민위원회는 해당인민회의 휴회 중의 지방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¹¹³⁾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위원들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으며¹¹⁴⁾ 그 임무와 권한¹¹⁵⁾은 인민회의의 소집,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 등이다.

지방인민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위원장·부위원장·사무장들로 구성되는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¹¹⁶⁾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내며,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¹¹⁷⁾

● 110

사회주의 헌법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 111

사회주의 헌법 제134조.

● 112

사회주의 헌법 제135조.

● 113

사회주의 헌법 제139조.

● 114

사회주의 헌법 제140조.

● 115

사회주의 헌법 제141조.

● 116

사회주의 헌법 제142조, 제143조.

● 117

사회주의 헌법 제144조, 제145조, 제146조.

(사) 검찰소와 재판소

- 118 사회주의 헌법 제147조, 제148조
- 119 사회주의 헌법 제149조
- 120 사회주의 헌법 제151조
- 121 사회주의 헌법 제152조
- 122 사회주의 헌법 제153조
- 123 사회주의 헌법 제154조
- 124 사회주의 헌법 제154조
- 125 인민참심원 이란 일종의 배심원을 말하며, 재판시 판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나 재심재판에만 참가한다 :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701.』
- 126 사회주의 헌법 제155조
- 127 사회주의 헌법 제157조
- 128 사회주의 헌법 제158조
- 129 사회주의 헌법 제160조
- 130 사회주의 헌법 제161조, 제162조

개정헌법에서는 종래 ‘재판소와 검찰소’ 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순서를 바꾸어 검찰소를 앞에 내세웠다. 이는 법질서를 세우는 검찰기관의 임무를 중시하고 일선에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시(구역)·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은 5년이다.¹¹⁸⁾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면한다.¹¹⁹⁾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의 통일적 지도하에 이루어 지는데, 모든 검찰소는 상급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해야 하며,¹²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¹²¹⁾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에서 하며,¹²²⁾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은 5년이고¹²³⁾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¹²⁴⁾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 또는 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¹²⁵⁾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 등에서 선출한다.¹²⁶⁾

재판은 판사 1명(특별한 경우 3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수행한다.¹²⁷⁾ 재판은 공개(법이 정한 데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¹²⁸⁾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¹²⁹⁾고 하여 재판의 형식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최고재판기관이며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는 중앙재판소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⁰⁾

사법·검찰 조직 체계



(4) 특수기능 조직

북한에는 당규약이나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들이 있다. 이러한 특수조직들은 1970년대 초반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권력체계의 확립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주요한 주민통제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 국가안전보위부

북한은 1973년 당시 정무원 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보위 부문만을 독립시켜 국가정치보위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 기구는 1982년 4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와 함께 정무원에서 분리되면서 그 명칭도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고, 1993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기관은 인민보안성과 더불어 김정일 1인 지배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감시기관으로서 정치사찰을 주임무로 하고 있으며, 조직체계는 중앙으로부터 인민군과 도(직할시)·시(구역)·군은 물론 기타 특수기관에까지 설치되어 있다.

(나) 3대혁명소조

북한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3대혁명을 규정한 이후, 이를 추진

하기 위한 조직으로 3대혁명소조를 구성하여 각급 생산단위로 파견하기 시작하였다.¹³¹⁾ 소조는 당원, 대학생, 과학자 등 20~5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김정일의 직접 지도 밑에 경제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문화기관, 각급 학교 등에까지 파견되어 기존의 당조직과 더불어 3대혁명을 지도하였다.¹³²⁾

소조운동은 실질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북한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를 계기로 3대혁명소조원 중심의 전후 세대가 대거 입당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3대혁명소조 활동은 1990년대 들어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정치권력

가. 김일성시대 정치

(1) 권력투쟁

북한의 정치사는 한마디로 김일성 1인 지배체제 확립과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의 구축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의 지도층은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 운동 또는 항일투쟁 경력, 지역적 출신 등을 달리 하는 파벌들간의 연합형태로 구성되었다. 당시 북한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던 파벌로는 김일성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지하공산당 운동을 했던 국내파, 중국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하다 귀국한 연안파, 소련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북한에 보내진 소련파가 있었다.

김일성(본명 김성주)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전혀 정치적 기반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북한 주둔 소련군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였다.¹³³⁾ 그는 당시에 소련군이 북한을 소비에트화 하는데

●● 131

김창성, 『3대혁명 소조운동과 그 생활력』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83)

●● 132

북한은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 20돌 기념중앙연구토론회(1982.4)에서 소조활동기간을 마친 22만 여명의 소조원 출신들이 당 및 정권기관과 경제부문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133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1차 확대회의(1945.10.13)에서는 김용범이 책임비서로 선출되었으며, 같은해 12월 17일에 개최된 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 회의에서 비로소 김일성이 책임비서로 되었다.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반대파 또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여 왔다. 그 첫 희생자는 국내파 인물들로서 김일성은 이들을 처음부터 좌경적 오류, 종파주의자, 영웅주의자로 비판하였다.¹³⁴⁾

권력투쟁은 6.25 발발 직후에 벌어진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에서 본격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 연안파·소련파에 대한 숙청과 1960년대 후반의 갑산파와 군부에 대한 숙청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에 장애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남침의 실패로 인해 조성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에서 남로당 계열을 숙청대상으로 삼았다. 김일성은 195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시발로 1955년 12월까지 남로당계의 지도급 인물들인 박헌영, 이승엽, 배철, 김남천, 임화 등을 미국의 고용간첩이라는 죄목을 붙여 숙청을 단행하였다.¹³⁵⁾ 이후 김일성은 남로당계 잔당에 대한 숙청을 계속하며 또다시 연안파 및 소련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1956년 2월에 개최된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공산권 내에서 개인숭배 반대와 스탈린 격하운동이 진행되자 북한에서도 반김일성 운동이 고조되는 한편, 군수공업을 위주로 한 중공업 우선의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남에 따라 김일성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연안파와 소련파에 의해 절정에 달했던 반김일성 운동은 1956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일성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때 김일성은 김두봉, 최창익, 박창옥 등 연안파와 소련파 지도자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였는데 이 사건은 ‘8월 종파사건’으로 불린다.

김일성은 1958년 3월, 제1차 당대표자회를 소집하여 반대파 인물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일단락 짓는 한편, 전국적으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대파의 기반을 일소하는 등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자파 내의 인물들에 대한 숙청에도 착수하였다. 1967년 5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

● 134

김일성,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51), pp.105~212.

● 135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 박헌영, 이승엽 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1966), pp.150~160.

●● 136

「노동신문」사설(1969. 5.17)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적 사업 기풍을 세우자' 참조.

의에서 김일성은 박금철과 이효순 등 갑산과 당료들을 반당·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한데 이어, 1969년 1월 인민군당 제4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민족보위상 김창봉, 인민군 총정치국장 허봉학 등을 유일사상체계 문란 등의 이유로 숙청한 것이다.¹³⁶⁾

1970년 11월에 개최된 제5차 당대회 이후부터 북한의 지도층은 완전히 김일성 일파로 일색화되었다. 그러나 1973년 9월 김정일의 당비서 취임을 계기로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를 비롯하여 김동규, 이용무, 유장식 등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당료와 군부에 대한 숙청을 또다시 전개하였다.

이처럼 1960년대 말까지의 숙청이 김일성의 1인 지배체제 구축과 그의 우상숭배를 위한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후계세습 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2) 김일성 개인숭배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 실태는 영웅화 단계를 넘어서 신격화로까지 진행되었다. 김일성 개인숭배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58년 이후부터이다. 김일성 개인숭배 운동은 과장된 찬양과 상징조작, 날조된 과거행적의 선전, 사상교육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김일성을 호칭할 때에는 그 이름 앞에 최상의 수식어, 최상의 경어가 붙는다. 예컨대 '아버이 수령'에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에 이르기까지 그를 호칭하는 수식어는 매우 다양하다. 1960년대 그에 대한 우상화 초기에는 그의 이름 앞에 붙는 경칭과 찬양의 수사가 무려 180여자에 달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름에 새로운 수식어나 경어를 붙여가며 인간의 위치에서 신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렸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 항일독립운동사는 김일성 중심의 혁명투쟁사로 그 일가의 족벌사로 개작되었다. 북한의 신문·잡지와 각급 학교 교과서, 학술서적 등 모든 출판물들은 반드시 김일성 교시로부터 시작하여 내용이 서술되며, 출판물의 대부분은 김일성의 행적들을 수록한 개인숭배를 위한 선전책자이다. 북한의 헌법, 노동법, 토지법, 교육 테

제 등 모든 법령들은 김일성의 저작품으로 되어 있다. 김일성 개인송배는 항일혁명투사, 조선의 해방자로서 김일성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세기와 더불어' 라는 김일성 회고록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치학습 및 사상교육의 기본교재로서 활용되고 있다.¹³⁷⁾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을 능가하는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의 천재적 이론가로 칭송된다. 모든 주민들은 먹고 입고 쓰고 일하는 것이 모두 '수령님의 은혜' 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토록 강요되었다. 각 가정의 안방에는 반드시 그의 사진을 걸어 놓고 북한 전지역에는 3만 5천 여개가 넘는 동상, 석고상을 세워 놓아 전 주민이 참배토록 하였다.

김일성 개인송배운동은 그의 가계와 혈통에 대한 우상화로 확대되어 직계 선조, 외가친척, 전처의 행적을 역사책에 기록하였으며 그들이 활동하였다는 장소는 혁명유적지·사적지로 지정되었다. 북한은 1992년 4월 13일 김일성에게 유례가 없는 최고의 군사칭호로 대원수 칭호를 수여함으로써 그에 대한 우상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김일성 우상화 작업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김정일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¹³⁸⁾에 안치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참배토록 하고 있는 등 김일성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통치기반을 확대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나. 김일성 사망과 유훈통치

1994년 7월 8일 오전 2시 김일성이 사망하였다. 북한 당국은 사망 34시간 만인 1994년 7월 9일 낮12시 '특별방송' 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사망원인에 대해 "겹쌓이는 헌신적인 과로로 인하여 19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되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었다" 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사망 11일 후인 7월 19일 영결식을 갖고 김일성의 시신을 과거 소련의 레닌,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의 경우와 같이 미이라 형태로 금수산의사당(주석궁)에 안치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은 노동당 총비서와 주석 등 김일성이

● 137

『세기와 더불어』(조선노동당출판사는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기해 발간되기 시작한 김일성 회고록으로서 김일성의 항일투쟁 활동내용을 담고 있다. 『세기와 더불어』는 1998년 6월 현재 총 8권까지 발간되었다.

● 138

『금수산의사당』 이 당중앙위원회·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중앙인민위원회·정무원 공동명의로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개칭(1995. 6.12)되었다.

가지고 있던 당과 국가를 대표하는 직책들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승계 받지 않았으며, 단지 군최고사령관 명의로 김일성 유훈¹³⁹⁾만을 내세우며¹⁴⁰⁾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였다.¹⁴¹⁾ 이와 같은 김정일의 태도는 그의 등장 배경의 한계 및 가부장제적 정치문화와 함께 경제난을 비롯하여 북한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체제는 김일성이 보유했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그대로 승계 받은 후계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국가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는 등 가부장적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충효'라는 덕목의 가치를 강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김정일은 이렇게 정치화된 '충효' 덕목을 내세워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을 김일성과 동일시하는 선전을 계속하면서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자신에게로 이입시키는 작업에 주력하였다. 결국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관철을 특히 강조하고, 김일성에 대한 최상의 애도를 통해 스스로 '충효의 최고 화신'임을 과시함으로써 수령의 후계자로서 부족한 카리스마를 보완하고 승계 이후에도 자신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충성을 강화해 가는 길을 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시기에까지 이어져,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의 서문에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받들며, 새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 139

북한은 '유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유훈을 강조하면서도 통치의 폭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려는 고려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 140

김정일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995.10.2 「김정일선집」 (평양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6) 참조

● 141

외교부 부부장 최수현의 제5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1995.10.11)에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영도자로 호칭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김일성 사망 이래 김정일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통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김정일시대 정치

(1) 후계문제의 등장 및 김정일의 부상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20여년에 걸쳐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북한에서 후계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 11월 제

5차 당대회 이후부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 자신이 1971년 6월에 개최된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제6차 대회에서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세대는 바뀌어 해방 후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말로써 권력승계의 당위성을 피력한 바 있다.¹⁴²⁾ 김정일의 권력승계는 먼저 당을 장악하고 이어 군을 장악해 가는 수순을 밟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김일성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김정일은 1942년 2월 16일 소련 하바로프스크 인근의 소련 극동군 제88특별여단 브야츠크 야영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다.¹⁴³⁾ 김정일은 6.25전쟁으로 인해 남산인민학교, 중국 길림학원, 만경대혁명학원, 삼석인민학교, 평양 제4인민학교 등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인민학교 과정을 마쳤다.

이어 평양 제1중학교(1954~1957), 남산 고급중학교(1957~1960)를 거쳐 1960년 9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정치경제학과에 입학하였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郡)의 위치와 역할’이라는 제목의 졸업논문으로 1964년 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김정일이 당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던 해인 1964년 6월 19일 노동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이 되면서부터이다.

당사업을 시작한 김정일은 1967년 노동당 선전선동부 과장이 되었고 이후 한 직급씩 높아져 196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 1971년 문화예술부장, 그리고 1973년 9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 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부상한 것은 이 무렵부터이다.

1974년 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는 김정일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함과 동시에 2월 12일에는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후계자로 추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¹⁴⁴⁾ 이 회의에서 당시까지 김일성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가 당 비서에서 물러났으며,¹⁴⁵⁾ 이후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부주석 김동규 등도 자취를 감추었다. 대신

● 142

「조선중앙연감」(조선중앙통신사, 1972), p.285.

● 143

당시 이 야영에서 김정숙과 함께 활동하였던 김정일 유모 李在德(중국 거주)의 증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서울: 중앙일보사, 1992), p.376. 북한은 김정일이 1942년 2월 16일 백두산의 항일 유격대 밀영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이 지역을 ‘고향집’이라고 부르며 성역화하였다.

● 144

김일성방송대학 강좌 제78회(1993.11.10) 및 제80회(1993.11.16) 참조.

● 145

제5기 제8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난 후 당 조직담당 비서인 김영주가 부총리로 전보되고 김정일의 주도로 ‘속도전 운동’이 전개되었다.

김정일을 옹호하는 임춘추, 오진우 등의 지위가 상승하는 등 권력 핵심부에 변화가 있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3대혁명소조운동'이다. '3대혁명소조'란 "간부들을 잘 도와주어 그들이 보수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을 버리고 당이 요구하는 대로 일을 잘하도록 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임무를 맡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당핵심들과 청년인테리들로 무어진 소조"를 말한다.¹⁴⁶⁾ 이 단체는 1973년 2월 13일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 졌으며 김정일은 같은 해 9월 이 조직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사실상 김정일의 행동대로서 당 및 행정기관과 공안기관 등에 대해 통제·조정·감독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과 함께 주요 정보를 당 중앙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를 하였다. 즉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통해 기존의 당 조직을 통제·감독하는 또 하나의 계선을 자신의 직접 지휘하에 운영함으로써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각종 문헌자료 가운데 부자세습을 비판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과학원에서 편찬한 「정치사전」 1973년도 판에는 종전에 수록되었던 '세습'이란 항목이 삭제되었다.¹⁴⁷⁾

1974년 2월부터는 대내적으로 김정일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다만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그를 후계자로 공식 등장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작업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5년 2월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을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부르는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시기에 해외로 나가는 선전책자, 특히 조총련의 교육자료에서는 김정일을 직접 언급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예찬하기 시작하였다.¹⁴⁸⁾

(2) 후계자 공식화

김정일은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권력의 전면에 공개적으

● 146

「조선말 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1688.

● 147

1970년 발간된 「정치용어사전」은 세습제도에 관해 "착취사회에서 특권계급의 신분에 기초하여 그 직위 또는 재산을 대대로 물려받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킨 반동적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 148

당시 동 교육자료에서는 "우리 당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수령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로 등장하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후계자로 나서기 시작하였다.¹⁴⁹⁾ 그 후 그는 1981년 5월 18~22일간 묘향산 지구를 실무시찰한 것을 시작으로 주요 산업과 건설현장에 나타나 실무시찰, 실무지도를 계속해왔고 1988년에 들어와서는 그의 이러한 활동에 김일성에게만 사용되던 ‘현지지도’ 라는 용어를 붙이기 시작하였다.¹⁵⁰⁾ 1983년 6월 2~12일에는 중국공산당 총서기 호요방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등소평, 이선녘, 조자양, 등영초 등과 회담하였으며 1986년부터는 중·소 등의 수뇌급과 신년 연하장을 교환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정상급 활동을 계속해 왔다.

한편 김정일의 군 장악과정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다. 김정일은 이미 당을 장악함으로써 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쥐고 있었으나 이때부터는 군 관련 직함들을 보유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군을 장악해나가기 시작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고, 1991년 12월 24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이때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실질적인 군통수권을 행사하였다.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 칭호를 수여받은 데 이어 1992년 4월 23일 최고사령관 자격으로 664명의 군 장성에 대해 대대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북한군의 상징적 인물인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에게 원수 계급장을 달아줌으로써 자신이 군의 최고책임자임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한 개정헌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과거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던 군사관련 제반기능과 권한을 통합하고, 이듬해인 1993년 4월 7~9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일의 군부 장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국방위원회의 권한은 1998년 헌법개정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진행됨에 따라 이미 1986년 5월에 김일성은 “우리 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 149

1980년 10월 김정일의 공식등장 이전에는 통일력 명당방송을 통해 후계자 자질에 관한 방송을 계속해 왔다.

● 150

「노동신문」(1990.1.7) 참조

선언하였으며,¹⁵¹⁾ 각종 선전매체들은 북한에서 “영도의 계승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김일성은 1994년 3월 31일에 개최된 ‘전당 당세포 비서대회’에 보낸 축하문에서 “당령도의 계승문제를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염원에 맞게 원만히 해결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성과”라고 지적함으로써 이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일의 50회 생일인 1992년 2월 16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공동축하문을 통해 그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으며, 이어 김일성 80회 생일(1992.4.15) 기념 ‘주체사상 토론회’에서도 그에 대한 맹세문을 채택하면서 그를 ‘당·국가·군대의 수위’로 호칭하였다.¹⁵²⁾

1993년 10~11월에는 사회단체와 군대 그리고 민간인들의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김정일 중심의 일심단결을 촉구하였다. 특히 11월 17일 제7차 기자동맹 대회에서는 김정일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수령’으로 부르고 ‘우리시대 김정일시대’라는 표현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다.¹⁵³⁾ 이와 같은 동향들은 김정일이 이미 김일성 사망 이전에도 김일성의 권력을 사실상 승계받아 북한의 실질적 통치권자로서 군림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김정일 이상화

북한은 김정일에로의 권력승계를 준비하는 과정과 병행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김정일 이상화 작업을 벌여 왔다.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김정일에 대한 호칭 변화이다.

북한은 1974년 2월 이후 김정일에 대해 ‘당중앙’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오다 1975년 6월 김정일 생일을 휴무일로 공식 지정하면서부터 ‘유일한 지도자’라는 호칭을 등장시켰다. 1977년 이후에는 ‘당중앙’이라는 호칭과 함께 ‘영명하신 지도자’, ‘존경하는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 등의 호칭이 등장하였으나 김정일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또한 ‘당중앙의 불빛을 우리러’ 등의 가요를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당중앙’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151

김일성,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교훈』(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8), p.111

●●152

김일성은 “김정일이 국정전반을 장악하고 있다.”(1992.4.12, 워싱턴 타임즈 회견); “전체인민이 김정일과 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혁명의 대를 이어 나아가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1992.4.14 김일성 80회 생일 축하연설)고 발언하였다.

●●153

1993년 10월 18일의 ‘군지휘관·정치일군대회’와 11월 11일의 인민무력부 김정일 위대성 연구토론회에서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였으며, 또한 11월 15일의 「직총」 중앙위원회 제26차 전원회의와 「여맹」 중앙위원회 제18차 전원회의, 11월 16~17일의 「사모청」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와 「농근맹」 중앙위원회 제21차 전원회의 등에서도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단결을 강조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정치국 상무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등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그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즉 1983년 2월 김정일의 41회 생일을 계기로 ‘영도자’란 호칭이 등장하였고, 1983년 5월에는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직책과는 상관없이 ‘최고사령관’이라고 불렀다. 1985년 2월에는 ‘수령’ 호칭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986년 2월에는 ‘인민의 아버지’, 그리고 이른바 ‘구호나 무 발굴사업’이 본격화된 이후인 1987년 2월부터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영도자’, ‘백두광명성’, ‘향도성’ 등의 호칭이 사용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일성과 거의 같은 형태와 수준의 호칭을 김정일에게 사용함으로써 그가 북한 권력의 최고수위임을 드러내었으며 1991년 10월에는 ‘또 한분의 걸출한 수령’이라는 호칭도 사용하였다. 1993년 7월에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노동신문에 기고한 기명논설에서 김정일을 ‘탁월한 군사 전략가, 강철의 영장’이라 칭하였고, 1993년 8월에는 ‘민족의 아버지, 인민의 지도자’라는 호칭도 등장하였다. 1993년 10월에는 김정일을 ‘우리 아버지’라고 지칭한 2곡의 가요를 제작하여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하였다. 북한은 각급 학교 교과서에도 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내용을 수록하고, 김정일과 관련한 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 청소년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소학교 국어교과서에는 “나는 아버지 원수님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의 뜨거운 충성심을 깊이 느꼈습니다”¹⁵⁴⁾라는 구절이 있으며, 중학교 국어교과서에는 “아, 친애하는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동지, 그이께서 백두산에 탄생하시였다”¹⁵⁵⁾라는 찬양이 등장한다. 각급 학교 수학과 대수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선생님의 크나큰 사랑이 깃들어 있는 ‘은덕분교’로 소학교 학생 165명이 견학을 갑니다. 그 가운데 3/5은 4학년생이고...”¹⁵⁶⁾등으로 김정일과 관련지어 문제를 내는 방식이 쓰이고 있고, 음악 교과서에도 “온 나라 꽃봉오리 학습터 찾아 지도자 선생님을 따라 배워요”¹⁵⁷⁾등 김정일을 찬양하는 가사가 등장하였다.

북한은 또한 김정일의 ‘위대성’과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는 책자와 문학작품 그리고 노래를 대량으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김정

●● 154

소학교 4학년 국어 참배, p.31.

●● 155

중학교 3학년 국어 해돋이, p.16

●● 156

소학교 4학년 수학 분수, p.160.

●● 157

학교 1학년 음악 제3과 정자산의 학습터, p.7

일의 출생 및 성장과 관계가 있는 여러 지역을 ‘혁명사적지’로 조성하여 왔다.

1982년 ‘어은 혁명사적지’를 시작으로 현재 16개가 조성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정일이 출생하였다는 백두산 밀영으로, 북한은 여기에 귀틀집, 회의장소 등을 건립하여 놓고 이를 ‘고향집’이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의 문예출판사는 1991년 9월 김정일에 관한 전설을 모은 ‘백두광명성 전설집’을 발간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해방 후 청진시를 방문, 일본인들이 쓰던 지구의 일본지도를 먹으로 새까맣게 칠해 놓자 일본 땅에 검은 구름과 소낙비가 내렸다는 내용의 ‘지동이 울다’를 비롯하여 30여 편의 김정일 전설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1987년 5월부터 항일혁명투쟁 당시 빨치산 대원들이 나무껍질을 벗겨 글을 써넣었다는 소위 ‘구호나무’에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그 태양빛 이어갈 백두광명성”,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등의 구호가 발견되었고, ‘탄생’ 및 ‘후계자로서의 위상’과 관련한 200여 가지의 김정일 칭송 글귀가 발견되었다고 선전하였다.

1988년 2월 김정일의 46회 생일을 기해 일본의 한 화원 주인이 오랜 연구 끝에 재배에 성공하여 기증하였다는 베고니아꽃을 ‘김정일화’로 명명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급·선전하는 한편, 백두산, 금강산 등 명산의 바위 위에는 한 글자의 길이가 수 미터나 되고 글자의 깊이만 해도 1미터에 이르는 김정일의 어록과 이름을 새겨 우상화에 활용하고 있다.

김정일 우상화에는 김일성도 직접 참여하였다. 김일성은 1992년 2월 16일 김정일의 50회 생일을 맞아 자신의 아들에 대한 친필 송시를 한문과 한글로 발표하였으며, 1994년 3월과 4월에는 “김정일 조직비서는 한마디로 말하여 충성의 최고 화신”, “신념이 강하고 배짱이 센 사람,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등으로 공개적인 칭찬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사망 이후 맞이한 김정일의 53회 생일을 앞두고 1995년 2월 7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¹⁵⁸으로 김정일 생일을 ‘민족

●● 158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 전인 1992년 2월 7일 이미이 정령을 비준하였다고 발표: 「노동신문」(1995.2.7) 참조

최대의 명절'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이틀간의 휴무일을 부여하는 등 공식적인 권력승계를 앞두고 후계자로서의 상징조작을 강화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3년 1월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인덕정치'와 '광폭정치'로 처음 규정한 이래 계속해서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정일 이상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인덕정치'의 실현을 통해 "령도자와 인민들이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와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자식' 간의 혈연적 관계가 형성되었다"¹⁵⁹⁾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최고사령관 동지', '장군님',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등의 호칭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4) 김정일 정권의 출범

김정일은 1970년대 이래로 지도자 학습을 계속해 왔고, 점차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여 김일성 시대 말년에는 북한의 국정전반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 북한의 지도자가 된 것은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이라기 보다는 김일성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던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이 그늘 밖으로 나온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

김일성 사후 3년의 과도기를 소위 '김일성 유훈통치' 방식으로 체제 위기를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8일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이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지 1년 후인 1998년 9월 5일 김일성 사망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제10기 제1차회의)하여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됨으로써 김정일 정권이 공식 출범하였다.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중점은 '국가주석' 제 폐지이다. 종전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에 이관시켜 국가기능의 분산·조정을 꾀했다. 과거 국가주석의 지휘를 받던 정무원은 내각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각총리는 정부를 대표하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직책으로 격상시키고 여기에 김

● 159

「노동신문」(1995.1.15)
참조

●● 160

김영남의 국방위원장 추대사(1998.9.5) 참조.

정일을 다시 추대하였다. 국방위원장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 개정헌법상에는 명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김영남의 추대사를 통해 국방위원장이 “나라의 정치·군사·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지휘하는 국가 최고의 직책”이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절대적인 직책이라고 강조하였다.¹⁶⁰⁾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의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통합 수행하게 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원수의 역할을 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 권력구조가 외형적으로 국방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3자간의 권력분산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며 실상은 국방위원장으로의 김정일이 절대권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권력구조의 ‘김정일식 통치체제’인 것이다.

그동안 김정일은 내부적으로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체제결속을 도모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강성대국론’, ‘신사고론’ 및 ‘과학중시사상’ 등을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체제보장과 경제적 지원확보를 위해 대미관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중국 및 러시아 정상 외교를 통한 전통적 우호 관계를 복원하고, 일본 및 유럽연합(EU)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2003년 9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일을 국가최고직책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또 다시 추대하고 내각총리 등 국가지도기관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어 ‘정권창건 55돌 기념 열병식 및 군중시위’ (9.9) 등 각종 대규모 행사를 통해 체제의 견고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5) 김정일 정권의 특성

북한의 김정일 통치체제 역시, 여타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첫째, 퇴행적 봉건정체(封建政體) 또는 전제주의적 일인 통제체제이다. 김정일은 당 총비서 및 국방위원장으로서 사회주의 국가권력의 양대 축인 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다. 일인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북한의 이념체제가 주체사상이다. 혁명적 수령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 주체사상은 북한의 모든 인민과 정치조직 및 기구가 수령의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수령의 교시와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군사우선주의이다. 통상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사우선주의는 “군사를 국가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를 도모한다.”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고까지 주장하는 ‘선군정치론’은 북한혁명과 건설의 주체세력이 군대라고 규정한다. 나아가서 선군정치론은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한다.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 등은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요구하는 운동들이다.

셋째, 체제생존과 내부결속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정치 슬로건을 생산하는 한편,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체제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새로운 실천적 하위 통치이념들이 등장하였다. 한편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체제결속과 내부역량 강화 노력의 이면에서 북한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 개성공단 조성, 금강산관광사업,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등과 같은 조치들을 감행하면서 체제생존의 해법을 찾기도 하였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함께 북한인민의 결속을 새로이 다지기 위한 정치적 슬로건이 ‘강성대국론’이다. 강성대국론의 기치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북한체제의 위기시대를 넘기면서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추어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목표의 해로 설정하고 있다.

03

군사

- 1. 인민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 가. 형성과정
 - 나. 성격
 - 다. 군의 위상
- 2. 군사정책 및 전략
 - 가. 정책기조
 - 나. 군사전략
- 3. 군사조직과 제도
 - 가. 군사조직
 - 나. 군사제도
- 4. 군사력
 - 가. 지상군
 - 나. 해군
 - 다. 공군
 - 라. 예비전력
 - 마. 군사비
 - 바. 군수산업
 - 사. 대량살상무기 개발현황
 - 아. 대외군사협력





Ⅲ. 군사

1. 인민군의 형성과정과 성격

가. 형성과정

인민군의 창설은 1945년 8월 해방 직후부터 ‘건당·건군·건국’이라는 3대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 주둔 소련군사령부는 김일성을 내세워 정치조직인 당을 우선적으로 결성하고 1945년 10월 12일에 “북한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무장대를 해산시킬 것, 모든 무기·탄약·군용물자들을 군경무사령관에 바칠 것, 평민중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도위원회들은 소련군 사령부와의 협의하에 기정된 인원수의 보안대를 조직함을 허가한다”¹⁾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 따라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치안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던 민족진영의 자위대, 국내파 공산계열의 치안대 등을 해산시키고 10월 21일 소련군 출신 한인 2,000여 명으로 구성된 적위대를 중심으로 북한 각지에 인민군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보안대를 조직하였다. 또한 군내 정치장교와 군사간부 양성을 위해 1945년 11월 ‘평양학원’ 1946년 6월 ‘보안간부학교’ 등 군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보안대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감에 따라 1946년 8월 15일 각 지역에 조직된 보안대를 통합·지도하기 위하여 평양에 보안간부 훈련대대부(訓練大隊部)를 창설하였고, 1947년 5월에는 이를 인민집단군 총사령부로 개칭하였다.

1948년 2월 4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내에 현재의 인민무력

● 1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성명(1945.10.12) 「조선중앙연감」 (1949), p.58.

부의 전신인 ‘민족보위국’을 신설하였으며 정권 수립 7개월 전인 2월 8일 ‘인민집단군’을 ‘조선인민군’으로 개칭하고 정규군 창설을 선포하였다.

해군은 1946년 6월 5일 수상보안대사령부를 원산에 창설(동해 수상보안대 : 원산, 서해 수상보안대 : 남포)한 데서 비롯되었다. 1946년 8월 사령부를 평양으로 이전·확장하였으며 1946년 12월에는 수상보안대를 해안경비대로 개칭하고 1947년 6월 원산에 해안경비대 간부학교를 두었는데 이것이 후에 해군군관학교로 되었다. 해안경비대는 1949년 8월 20일 내무성 관할에서 민족보위성 관할로 변경되면서 8월 28일 처음으로 ‘어뢰정대’를 창설함으로써 정규해군으로 발족되었다. 북한은 어뢰정대 창설일인 8월 28일을 1972년 6월 3일 정령에 의해 ‘해군절’로 정하여 1992년까지 기념해왔으나 1993년부터는 수상보안대 창설일인 6월 5일로 변경하였다. 공군은 1945년 10월 25일 민간기구로 발족한 신의주 항공대가 1946년 6월 7일 ‘평양학원’ 예하 항공중대로 편입되면서 군사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947년 8월 20일 소련유학을 마치고 온 신의주항공대 출신 약 300여명을 중심으로 비행대를 창설하고 1948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과 함께 항공대대로 증편함으로써 정규공군으로 발전하였다. 북한은 1972년 5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해 비행대를 창설(1947.8.20)한 날짜를 ‘공군절’로 정하였다.

나. 성격

북한 인민군은 노동당규약(제7장 제46조)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 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당의 절대적 지배하에 있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등 군의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북한군의 역할 확대는 어디까지나 당의 영향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으로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반적인 무력지휘에서부터 당의

●●2
노동당 규약 제27조.

●●3
인민군의 충성의 선서 첫 제행 무리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

군사정책 집행방법의 결정, 군수산업과 인민군대 및 무력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의 조직·지도와 군대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²⁾ 군의 당적·혁명적 성격 외에 군을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활동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군은 ‘김일성·김정일의 군대’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³⁾ 북한은 노동당규약 제46조에서 “인민군의 항일무장투쟁의 혁명 전통 계승”을 강조하고 있으며 1977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오던 것을 1978년부터는 김일성이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1932년 4월 25일로 변경하였고 김정일이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이끌어 온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⁴⁾

한편 1996년부터는 인민군의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과 군의 혁명적 사상무장 강화에 목적을 둔 ‘오중흙 7연대 칭호 쟁취운동’을 전개하고 있다.⁵⁾ 이는 인민군의 성격을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 경력 및 김정일의 군 영도력과 연결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 군대는 대내적으로는 물리적 강제력을 보유한 핵심적인 체제보위 수단이며, 대외적으로는 ‘벼랑끝 외교(brinkmanship)’의 배경으로서, 대남면에서는 대남혁명 수행을 위한 실천 역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 군의 위상

북한군은 김일성 사망 이후 경제난 등 체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혁명의 기둥’⁶⁾으로 체제수호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북한은 1998년 3월 9일자 노동신문에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해 “군대를 비사상화, 비정치화함으로써 총 권 군대가 당이 변질되고 국가가 와해되는 것을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나앉아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내지 못한 결과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정일은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이며 나라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사우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공개활동시 경제·사회 등 여타 분야 활동보다도 군부대 시찰을 포함한 군관련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김일성·김정일 출생일, 당창건일 등을 계기로 군장성급 진급

●●4

북한은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을 공식 선포하고 이 날을 창군일로 기념해왔다. 그러다가 1978년 2월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주장하면서 창군일을 이른바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시절 조직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립일(1932.4.25)인 4월 25일로 변경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빨치산 시절로 소급한 것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성을 부각·선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

북한 주장에 의하면, 오중흙 7연대는 항일혁명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로서 위기시 김일성 및 혁명사령부를 목숨바쳐 보위한 모범적인 전위부대로 당시 연대급 지휘관으로서는 오중흙이 최초로 전사한 부대이다. 북한은 1996년 1월부터 훈련, 부대관리, 사상무장 등에서 모범을 보인 부대에 ‘오중흙 7연대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6

1998년 3월 9일 노동신문은 역사상 처음으로 김정일이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정식화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인사를 단행하여 군인들의 사기진작과 충성심을 유도하고 자신의 군 부장악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등 군인사를 통치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⁷⁾ 이에 따라 주요 행사시 발표되는 주석단 명단에서도 군인들의 비중이 크게 늘어 났으며 상위 서열을 차지하고 있다.⁸⁾ 한편 김정일의 지시로 군이 주요 공장, 협동농장 등을 비롯한 각급 사회기관에 파견되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군민일치’ 기풍을 강조하여 군에 대한 주민들의 원호사업 뿐만 아니라 소위 ‘혁명적 군인정신’⁹⁾에 기초한 군대와 주민들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강요함으로써 주민사상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군병력을 발전소와 댐건설, 토지정리 등에 대거 투입하는 등 경제건설의 주력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일의 군사우선정책 추진으로 북한에서 군은 ‘혁명의 기둥’으로서 체제 보위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 및 사회통제 기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 7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추대(1991.12.24) 이후 2007년 4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1365명의 진급인사를 실시하였다.

●● 8

김일성 생존시 주석단에 등장하는 군인물로는 오진우, 최 광 백학림, 김광진 등 4~5명에 불과했으나 김정일 시대에는 차수 11명이 대부분 주석단에 참석하고 있다.

●● 9

1998년 5월 13일 노동신문은 김정일이 “혁명적 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며 인민군 군인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각오로 투쟁하기 때문에 어떤 과업도 무조건 집행하고 있다. 경제지도 일군들도 혁명적 군인정신을 말로만 따라 배운다고 하지 말고 실지 사업에서 구현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했다.

2. 군사정책 및 전략

가. 정책기조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 총동원 태세를 견지하는 것이다. 북한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우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全民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국방 자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김일성은 “자위적 국방건설이란 권력을 장악한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국방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보편적 의의를 가지는 지도적 지침”이

라고 정의하고 “자위노선의 본질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체의 혁명무력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하며 모든 군사문제를 주도,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것”¹⁰⁾이라고 하면서 군사자위 노선을 강조하였다. 중·소에 의존하던 북한의 군사력 건설이 이처럼 자위 원칙을 주창하기 시작한 것은 쿠바사태와 중·소 이념 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결의하였다.¹¹⁾

이러한 국방자위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도로 체계화된 것이 바로 4대 군사노선이다. 북한은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로 제시되는 4대 노선을 1963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¹²⁾

4대 군사노선

노 선	정책목표
전군 간부화	군을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으로 단련하여 유사시에 한 등급이상의 높은 직무 수행
전군 현대화	군대를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무장, 최신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수행
전민 무장화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 계급을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으로 무장
전국 요새화	방방곡곡에 광대한 방위시설을 축성하여 철벽의 군사요새로 건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의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전체 인민이 총을 쓸줄 알며 총을 메고 있다. 모든 지역에 철용성 같은 방위시설을 쌓아 놓았으며 중요한 생산시설까지 요새화하였다. 자립적 국방공업기지가 창설되어 자체로 보위에 필요한 현대적 무기와 전투기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¹³⁾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북한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방향은 다음과 같다.

- 10 「김일성저작집 28」, p.534
- 11 「조선중앙연감」 (1963), pp.157~163.
- 12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 굴을 파놓아야 한다. 전연지대 뿐만 아니라 후방지대, 제2선, 제3선 할 것 없이 온 나라를 다 요새화하여야 하며 대공방어와 해안방어를 강화해야 한다. 공장도 땅속에 많이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 「김일성저작집 17」, p.446
- 13 「노동신문」 (1970.11.3); 「김일성저작집 5」, pp.437~475.

군사정책의 시기별 주요 실천방향

구분	내용	비고
1960년대	(4대 군사노선의 추진) ·경제건설과 군사건설의 병진 ¹⁾ ·전당·전민민의 전쟁동원 태세 확립 ²⁾	·중·소 의존정책에서 탈피 ·1969년 특수 8군단 창설
1970년대	(4대 군사노선의 관철) ·자립적 군사공업기지를 완성하여 획기적인 자위력의 육성 ³⁾ ·정규·비정규, 소부대·대부대 배합전술 위주 교리개발 ⁴⁾	·독자적 전쟁수행능력 향상 ·휴전선에 남침용 땅굴 굴설
1980년대	(4대 군사노선의 강화) ·전투동원태세 완비 ⁵⁾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⁶⁾ ·현대전 능력 보강 ⁷⁾	·기계화군단, 지구사령부, 민방위부 설치 ·SCUD미사일 개발 및 배치
1990년대 이후	(4대 군사노선의 발전) ·군민일치 강화 ⁸⁾ ·전국가적·전인민적 방위체계 강화 ⁹⁾ ·독자적 전략무기 체계 구축 ¹⁰⁾ ·국방공업의 선차적인 역량 집중 ¹²⁾	·군사중시, 군대원호기풍 진작 ¹¹⁾ ·노동미사일 개발·배치 및 대포동 1호 미사일 시험발사 ·방사포 등 장사정포 전방 배치

- ※ 출처: 1) 1962년 당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시 김일성 보고
 2) 1967년 김일성 신년사
 3) 1971년 김일성 신년사
 4) 제5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1971.11.2)
 5) 제6차 당대회에서의 김일성 보고(1980.10.10)
 6) 인민군 창건 56돌 기념보고(1988.4.24)
 7) 인민군 창건 57돌 기념보고(1989.4.24)
 8) 인민군 창건 58돌, 59돌, 60돌 기념보고
 9) 1993년 김일성 신년사
 10) 인민군 창군 63돌 기념보고(1994.4.24)
 11) 1994년 김일성 신년사
 12) 2003년 신년 공동사설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말하고 1980년대 인민군의 당면과업으로서 ①군대 내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②전투·정치훈련의 강화 ③군사기술 수준의 향상 ④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선언하였다.¹⁴⁾

1990년대에 들어 김정일은 ‘전군을 주체사상화 할 데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하고 동구권 몰락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군의 사상무

●●14
『노동신문』 (1980.10.11)
참조

장 강화를 주장하면서 ‘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 ‘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통일혁명 무력과 사회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증강이 정체된 가운데 선군정치 강화와 함께 전략무기 중점 개발을 통해 군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나. 군사전략

북한은 기회가 조성되면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 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만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계급투쟁과 민족해방 전쟁관에서 출발했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론을 전개하였으며, 6.25도 ‘조국해방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초기에는 항일유격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속공기동 및 포위섬멸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련군의 군사전략을 모방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6.25 전쟁의 경험을 응용하여 현대전과 혁명전의 배합이라는 기본전술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1962년 채택한 ‘4대 군사노선’(전 국토의 요새화, 전 인민의 무장화, 군장비의 현대화, 전 군의 간부화)을 토대로 양적으로 우세한 재래식 전력을 바탕으로 남한 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단기에 석권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 군사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 기습공격, 단기 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등으로 요약된다. 김일성의 군사 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1971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총정치국장 한익수가 한 보고이다. 한익수는 “집중과 분산, 적극적 방어와 배후교란의 배합, 대소 부대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 시적 반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 배후의 제2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탱크사냥 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전술법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경

제난 등 체제 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제안보 환경 역시 북한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김정일은 김일성의 군사전략을 이어 받아 전격전과 유생역량(有生力量) 말살, 정치사상 의식 고취를 강조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전략을 추가하였다. 즉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칭전략을 보다 강조하면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핵 및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 전략전술은 우리 사회의 혼란과 주한미군 철수 등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기습 및 전후방 동시공격으로 초전부터 대혼란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차·장갑차·자주포로 장비된 기동부대를 중심 깊숙이 돌진시킴으로써 미군의 증원 이전에 전 남한을 석권한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군사력, 한국의 잠재적 전쟁 수행 능력,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 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 도발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말하자면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 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군사력 전진배치와 기계화 군단의 편성, 그리고 대규모 특수전 부대 보유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통한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장사정포,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중심의 전력 증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요 전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교훈을 바탕으로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첨단전쟁 수행능력을 보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남북간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던 지난 2002년도 서해상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하는 등 평화와 무력행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의 군사력, 한국의 잠재적 전쟁수행능력,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방위태세, 유엔과 국제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전쟁도발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말하자면 연합군의 증원 이전에 전쟁을 종결시킴으로써 전쟁이 한반도 내부문제 해결을 위한 내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제여론을 왜곡시키고 유엔 및 연합군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끊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주한미군이 최대의 장애가 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이미 1980년대에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기계화 군단의 편성, 그리고 대규모 특수전 부대 보유 등을 통해 재래식 전력을 통한 전쟁준비를 완료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장사정포,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중심의 전력증강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주요 전력을 평양~원산선 이남에 집중배치하고 있다.

3. 군사조직과 제도

가. 군사조직

(1) 군 지휘체계

북한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이며 국방위원회는 전반적인 국방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기관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의 지휘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인민무력부는 과거에 비해 위상과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군의 대표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2) 군사기구

(가)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시 중앙인민위원회의 사업을 돕는 부문별 위원회로 신설되었다. 1992년 4월 구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일의 군권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분리되고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승격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주석이 행사하였던 일체의 무력 지휘·통솔권을 국방위원장이 행사하게 되었다. 1998년 9월 개정 헌법¹⁵⁾에서는 기존의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중요 군사간부 임명 또는 해임’, ‘군사칭호 제정 및 장령급이상 군사칭호 수여’, ‘전시상태와 동원령 선포’ 외에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설치하거나 폐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는 등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강화되었으며,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군사·경제 역량의 총체를 지휘·통

●● 15
사회주의 헌법 제100~
105조 참조.

솔하는 ‘국가 최고직책’으로 격상되었다.¹⁶⁾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로 구성된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연형묵·이용무, 위원 김영춘·김일철·전병호·최용수·백세봉 등 총 9명으로 되었다.

한편 2007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에서 연형묵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부위원장에 김영춘을 승진 임명한테 이어 2009년 2월에는 오극렬 당작전부장을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하였다.

최근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었는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김정일, 1부위원장 조명록, 부위원장 김영춘·이용무·오극렬, 위원 전병호·김일철·백세봉·장성택·주상성·우동측·주규창·김정각으로 되었다(총 13명).

(나) 당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군 단위에도 각급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1982년 11월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 기능을 강화해왔으며 1997년 10월 당중앙위원회와 공동명의로 김정일을 당총비서로 추대하기도 하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은 당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고 당규약 제27조에 규정되어 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은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출되는데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당시 위원장 김일성을 비롯하여 오진우 등 18명의 위원이 선출(총 19명)되었으며 현재 위원장은 김정일,¹⁷⁾ 위원으로는 조명록, 김영춘 등 10명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

각급 지방 당위원회의 군사위원회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노동적위대 등 민병조직의 정치사상교육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체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16
1998년 9월 5일 제10기 제1차 회의시 김영남은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직책으로 발표하였다.

●● 17
2004년 3월 10일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10015호 「무기탄약들에 대한 징역과 통제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당중앙군사위원장을 김정일로 명시하고 있다.

(다) 인민무력부

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과거에 비해 위상과 기능은 약화되었으나 군의 대표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했으며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시 인민무력부로 개칭되고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에서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게 되었다. 인민무력부는 1998년 9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9월 9일 다시 인민무력부로 바뀌었다.

오진우 사망(1995.2) 이후 공석이던 인민무력부장에 1995년 10월에 총참모장 최광이 임명되었으며, 최광 사망(1997.2)으로 다시 17개월간 공석이었던 1998년 9월 인민무력성 제1부상이던 김일철이 인민무력상에 임명되었다. 최근 2009년 2월에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제1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이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군사제도

(1) 병역제도

북한은 헌법 제86조의 규정과 전민군사복무제¹⁸⁾를 법제화한 군사복무법 제정(2003년) 등으로 법제도상 의무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군의 입대절차에 따르면 만 14세가 되면 징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시·군 인민병원과 도 인민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징병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키 150cm, 체중 48kg, 시력 0.8이었으나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화되자 1994년 8월부터 키 148cm, 체중 43kg, 시력 0.4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신체검사 불합격자, 성분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 18

전민군사복무제는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되었던 대학생 등에 대해 '무조건적인 군사복무'를 지시한 것으로, 이와 같은 조치는 적정 규모의 초모대상 인원의 유지와 군사복무와 관련된 계층별 위화감 해소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2003년 5월 31일 조선중앙방송은 "인민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반영하여 공화국 정부는 전민군사복무제를 법령으로 채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형복무자 등), 특수분야 종사자 및 정책수혜자(인민보안성 요원, 과학기술·산업 필수요원, 예술·교육·행정요원, 고령의 부모 독자 등)들은 정책적 이유로 징집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체검사 합격자는 중학교 졸업 후인 17세를 전후하여 각급 행정단위 군사동원부의 초모(징집)¹⁹⁾ 통지에 따라, 지상군은 군단 또는 사단 신병훈련소에서 병종(병과)별로 약 2개월간 교육을 받으며, 해군은 전대 신병교육대에서, 공군은 비행기지별 신병교육대에서 각기 2~3개월간 교육후 배치된다. 하사관은 당성이 강한 현역사병이나 전문학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선발되며 6개월(공병하사관은 10개월)간의 교육후 하사관 결원시 보직과 동시에 진급한다.

군관은 2~5년 이상 근무한 현역사병이나 하사관 중에서 선발하는데 강건종합군관학교, 해군군관학교, 비행군관학교 등에서 양성되며 고급군관 양성 및 보수교육은 김일성종합군사대학 등 각급 군사대학이 담당한다. 한편 여자들은 중학교 졸업반이 되면 군입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식량난 등으로 여성들의 군입대 지원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복무기간은 내각결정 148호(1958년)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만 10년을 복무해야 제대할 수 있는 ‘10년복무연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6년 10월 군복무 조례를 다시 변경하여 사병들의 복무연령을 남자는 30세, 여자는 26세로 연장하였다가, 2003년 군사복무법 채택을 통해 복무기간 단축(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으로)과全民군사복무제를 법제화하였다.

(2) 군대 복무

군복무에 있어서는 정신적 무장과 기율이 강조되고 있는데 1975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①강인한 혁명정신 ②기묘하고 영활한 전술 ③무쇠같은 체력 ④백발백중의

● 19

북한은 징집이란 말 대신 초모(招募)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전사에는 17~45세까지 초모 대상이 된다. 이 용어는 조선시대 병조에서 군병을 모집할 때 사용되었다.

● 20

『노동신문』(1975.2.8) 참조

● 21

『김일성저작집 7』, pp. 418~423.

● 22

제6차 당대회에서 총참모장 오국렬은 토론을 통해 “70년대는 우리 혁명 무력 건설 력사에서 군의 전투력 강화 5대 방침과 군무 생활 10대 준수사항의 관철로 새로운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시기이다... 인민군대는 이제 무적의 군대로 강화 발전되었고 우리의 국방력은 사실상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 23

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1977.11.30)에서 김일성은 인민군대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 데 대한 전군 주체사상화 방침을 제시하였다. 『노동신문』(1983.2.15) 참조

사격술 ⑤강철같은 규율 등 ‘전투력 강화 5대 방침’을 제시하였다.²⁰⁾

또한 1977년 11월 인민군 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①군사규정의 철저한 준수 ②무기의 정통과 철저한 관리 ③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당 및 정치조직들에게 준 분공(分工)의 어김없는 집행 ⑤국가기밀·당조직비밀의 엄숙한 유지 ⑥사회주의적 법과 질서의 철저한 준수 ⑦군사 정치훈련의 어김없는 참여 ⑧인민에 대한 사랑 및 인민재산의 침해금지 ⑨국가재산과 군수물자의 철저한 보호 ⑩군대 안의 일치단결 등 ‘군무강화 10대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²¹⁾

이와 같은 ‘전투력 강화 5대 방침’과 ‘군무 강화 10대 준수사항’은 인민군의 복무규율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²²⁾ 군기 및 부대관리를 위해 동지심판, 경고, 권한정지, 출당 등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인민군대 내의 주체적 혁명사상 확립을 강조하였고²³⁾ 경제사정 악화로 군이 경제건설 현장에 대거 동원되면서부터는 ‘군민일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 등이 특징이다. 복무중에는 규정상으로 연1회의 정기휴가(15일)와 본인의 결혼이나 부모 사망시 특별휴가(10~15일), 표창휴가(10~15일) 등이 있다. 정기휴가는 19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이후 정세긴장을 이유로 실시하지 않아 휴가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본인 결혼(군관 해당)이나 직계가족 사망시 실시하는 특별휴가는 사정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직계가족 사망의 경우 사망통지서가 지연 배달되고 휴가수속이 까다로워 사망 후 20일이 지난 후에나 귀향하는 사례도 있다.

인민군의 급여는 전시에는 평시의 2배 지급을 제도화하고 있고 전방 근무시에는 1인당 군관 30%, 하전사 100%의 봉급에 준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부대급식에 있어 주식은 보급되나 부식은 부대 자체영농 등으로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식 조달에 애로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군대에서도 부대운영에서 자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아 상당수의 부대가 외화벌이 및 영리활동, 근로동원 등 수익사업을 위한 비군사적 업무가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군 계급구조

북한군은 계급을 ‘군사칭호’로 호칭하고 있으며²⁴⁾ 1952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제정된 후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①원수급에 대원수, 원수, 차수 ②장령급에 대장, 상장, 중장, 소장 ③군관급에는 좌급군관으로 대좌, 상좌, 중좌, 소좌, ④위급군관으로 대위, 상위, 중위, 소위로 구분되어 있다.

대전사의 경우는 특무상사, 상사, 중사, 하사로 지칭되는 사관과 상등병, 전사로 지칭되는 일반병으로 구분되었으나, 일반병의 경우 1998년 4월 계급체계 세분화 작업을 통해 상급병사, 중급병사, 초급병사, 전사로 세분화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병사들이 입대후 상등병 계급으로 5년 이상 장기근무를 함에 따라 입대연수가 낮은 신참 상등병과 고참 상등병간에 문란해진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복무기간 연장에 따른 장기 근무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다.

북한군 차수 이상의 고위간부 현황을 보면 1992년 4월 13일 ‘대원수’로 추대된 김일성의 사망으로 현재 ‘대원수’는 없다. ‘원수’에는 김정일, 이을설이 있으나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고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구분하고 있으며, ‘차수’에는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장성우, 이용무 등 군부실세와 혁명1세대 등이 포진하고 있다.

(4) 군내 당조직

인민군 내에는 노동당 조직과 노동당 외곽단체인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이루어진 정치기구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해 당이 군을 통제하고 정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군대 내 노동당 조직은 6.25 기간중 설립되기 시작하여²⁵⁾ 1958년에 이르러 ‘인민군 당위원회’로 정식 발족되었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는 당규약에 군대 내의 당조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게 되었다.

구성을 보면 중앙에 인민군대 내의 전체 당조직을 총괄하는 ‘조선인

●● 24

「조선말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에는 군사칭호를 “군인들의 자격과 상하관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 제정하는 칭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 25

「조선노동당 역사교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285) 1950년 10월 당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대 내의 당조직 설립이 시작되었다.

●● 26
노동당 규약 제47조, 제48조, 제50조 참조

●● 37
노동당 규약 제51조, 제52조 참조

●● 28
청년동맹 규약 제48조 참조

●● 29
국방부, 「2008 국방백서」(2009.1), pp.24~28

민군 당위원회'가 있고 대대급 이상에는 당위원회가, 중대·소대 단위에는 당세포와 당분조가 구성되는데, 이들 기구는 군지휘관과 정치간부 등이 참여하여 군내 사상교육 등 정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집행방향 등을 토의·결정한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그 지도 밑에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군대 내 각급 노동당 조직은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대열의 확대 강화, 군사사업의 당적 지도 강화, 당 군사노선 관철, 청년동맹의 조직 강화·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²⁶⁾

또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인 인민군 총정치국은 대대급까지 정치부를 두고 있으며 연대급 이상에는 정치위원을, 대대급 이하에는 정치지도원을 파견하여 각급 군지휘관의 사업을 당적으로 조정·통제하면서 그 사업결과를 정기적으로 당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²⁷⁾ 군대 내의 모든 교육계획, 명령서는 군지휘관에 이어 정치간부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정치간부들은 군지휘관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정치·군사 이원화 체제는 정치간부와 군지휘관간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인민군 내에는 부대단위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도 조직되어 있는데 청년동맹 조직은 각급 당위원회와 정치기관의 지도하에 군대 내의 비노동당원을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속시켜 군인들의 사상통제와 군무수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⁸⁾

4. 군사력

가. 지상군²⁹⁾

북한 지상군은 9개 전·후방군단, 2개 기계화 군단, 평양 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등 15개의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있다. 이는 2006년 말에 비해 2개 기계화군단이 2개 기계화사단으로, 1개 전차군단이 기갑사단으로, 1개 포병군단이 포병

사단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전력 면에서는 군단급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큰 변화는 없다.

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다. 특히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170밀리 자주포 및 240밀리 방사포는 우리의 수도권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현 진지에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사격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군은 성능이 개량된 전차(천마호)를 생산하여 이를 기갑·기계화 부대에 배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방지역의 1제대에 화력을 보강하는 등 전쟁초기에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기습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대구조를 재편하였다. 또한 전방군단에 경보병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여 특수전 병력이 18만여 명에 달한다. 한반도 작전환경을 고려하여 야간·산악·시가전 훈련을 강화하는 등 특수전 수행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특수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이라크전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유사시 땅굴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함으로써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판단된다. 북한군은 특수전 부대를 활용하여 주력부대의 공격작전을 지원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후방지역에 대해 생존성 보장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시설 및 장비를 대대적으로 위장하고 다수의 모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다양한 전파 교란기와 기만기를 개발하여 정밀 유도무기 회피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전 국토의 요새화라는 구호 아래 장기간 전·후방의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갱도를 건설한 결과 대부분의 장비와 시설의 대피가 가능하다.

나. 해군³⁰⁾

북한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동·서해의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 및 2개의 해상 저격 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정은 경구축함,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지원정 등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0%가 전진 배치되어 있다.

잠수함정은 로미오급·상어급 잠수함과 침투용 잠수정 등 7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뢰 부설, 수상함 공격 및 특수전 부대의 침투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원함정은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상륙함 등의 상륙용 함정과 소해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북한 해군은 2개의 해상저격여단과 공기부양정 130여 척, 고속상륙정 90여 척 등 260여 척의 병력수송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북한 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으며, 지대함 및 함대함 유도탄과 신형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지휘자동화 체계를 구축하여 함대사에서 함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력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있다.

다. 공군³¹⁾

북한 공군은 공군사령부의 중앙통제 아래 4개 비행사단과 2개의 전술 수송여단 및 2개의 공군 저격여단 그리고 지상 방공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전투임무기는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지역별로 전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중 약 40% 정도가 평양-원산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기습 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하여 저공·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비행 기지는 약 20여 개의 작전 기지를 포함하여 예비 기지, 비상 활주로 등 다수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작전 기지는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 격납고 등 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지대공 미사일 부대는 장거리 고고도 SA-5 미사일을 동·서부에 배

●● 31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 pp.24~28

치하고 SA-2/3 미사일을 비무장지대 일대와 동·서해안 및 평양권 방어를 위해 밀집 배치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대공 미사일은 고정 발사 진지에 배치되어 있으나 이동식 미사일 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추세에 있다.

레이더 탐지 부대는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남·북한 지역 및 중국 일부까지 항공기 탐지가 가능하다. 방공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방공 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 현황

구분		한국	북한	
병력 (평시)	계	65만 5천여 명	119만여 명	
	육 군	52만 2천여 명	102만여 명	
	해 군	6만 8천여 명	6만여 명	
	공 군	6만 5천여 명	11만여 명	
주요 전력	부대	군단(급)	10(특전사 포함)	
		사단	46	
		동여단	15	
	장비	전차	2,300여 대	3,900여 대
		장갑차	2,400여 대	2,100여 대
		야포	5,200여 문	8,500여 문
		다련장/방사포	200여 문	5,100여 문
		지대지유도무기	30여 기(발사대)	100여 기(발사대)
		수상함정	120여 척	420여 척
	해	상륙함정	10여 척	260여 척
		기뢰전함정	10여 척	30여 척
		지원함정	20여 척	30여 척
		잠수함정	10여 척	70여 척
	항공	전투임무기	490여 대	840여 대
		감시통제기	50여 대(해군 항공기 포함)	30여 대
공중기동기(AN-2 포함)		40여 대	33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180여 대	
헬기		680여 대(육·해·공군 통합)	310여 대	
예비병력		304만여 명	770만여 명(교도대,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포함)	

※ 출처: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 p.260.

북한군 장비 현황

●● 32

김일성은 별오리회의(1950.12.31)에서 "민병대와 같은 예비부대를 더 많이 준비하지 못하였으며...후방공급사업들이 잘 조직되지 못하였다"고 언급,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분	내용
지상군	△전차 3,900여 대 △장갑차 2,100여 대 △야포 8,500여 문 △방사포 5,100여 문 △도하장비(K-61/S형 부교) 3,000여 대
해군	△수상전투함정 420여 척 △잠수함정 70여 척 △상륙함정 260여 척 △소해정 30여 척 △기타 30여 척
공군	△전투임무기 84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AN-2기 포함) 330여 대 △헬기 310여 대 △훈련기 180여 대

※ 출처: 국방부, 「2008 국방백서」(2009.1), pp.25~27. 각 표에서 재구성

라. 예비전력

북한은 "인민이 혁명적 군사사업의 주인이며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조직 동원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군사관에 기초하여 주민을 예비전력으로 동원하고 있다.³²⁾

주민에 대한 군사동원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것은 1958년 중국 인민해방군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에 '노동적위대'가 창설되고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이 제기되고부터이다. 곧 이어 '교도대'가 조직되었고 1970년 9월 김일성의 지시로 학생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가 창설되었다.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전인민의 무장화를 위한 군사동원능력의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1988년 4월에는 예비전력을 효율적으로 통할지휘하기 위해 당 민방위부를 설치하였다.

예비전력의 지휘체계는 인민무력부와 민방위사령부로 2원화되어 있는데 교도대는 전시와 평시 모두 인민무력부 예하 후방군단의 통제하에 있으며 노동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는 민방위사령부의 관할하에 있다. 전시에는 인민무력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다. 2008년말 현재 북한의 예비병력은 770여 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1) 교도대

북한의 예비전력중 가장 핵심체로서 1963년 노동적위대 병력 중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조직되었으며 17~50세의 남자와 17~30세의 여성으로 편성되며 총병력은 60여만 명이다. 인민무력부 예하 후방군단의 관할하에 60여 개의 교도사단·여단과 80여 개의 대학생 교도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도대의 지휘관과 공용화기 사수들은 현역군인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도대는 정규보병사단 및 여단에 준하는 편제와 무장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쟁 발발시 정규군에 배속되어 전방 전력으로 투입되거나 후방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훈련은 정규군과의 합동훈련 실시 등 현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각 제대별로 소속부대 현역군관이 실시하는 자대훈련 10일과 각도 위수군단 주관하에 실시하는 동원훈련 30일 등 40일 간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교도대는 연간 190여 시간의 교내훈련과 2학년 재학시 6개월간 군부대에 동원되어 실시하는 입영 집체훈련이 있다.

(2) 노동적위대

노동적위대는 46~60세의 남자를 위주로 하되 17~60세의 남자와 17~30세의 여성 중 교도대 미편성 인원도 노동적위대로 편성되며 총 인원은 570여 만 명이다.

부대편성은 각급 직장의 부서 및 인민반별로 단위제대를 편성하고 리·동 단위에 중대 및 소대, 시·군(구역) 단위에 연대 및 여단, 도(직할시) 단위에는 사단급으로 편성되며 제대별 지휘관은 당해 직장 또는 지역의 노동당 책임비서가, 부지휘관은 인민보안성 해당지역 안전국장이, 참모장은 해당지역 노동당 군사부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여 노동적위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한다.

노동적위대의 기본적 임무는 민방위업무와 함께 전시 직장 및 주요

시설의 경계는 물론, 지역방어와 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자
동보총 등 개인화기는 100% 지급되고 있으며 공용화기도 일부 지급되
어 있다. 훈련은 민방위사령부 주관하에 자체훈련 15일과 동원훈련 15
일 등 연간 30일을 받고 있으며 주말이나 월말에는 야외훈련, 연말에
는 정규군과의 합동훈련도 실시한다.

(3) 붉은청년근위대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들(14~16세)을 대상으
로 학교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며 총인원은 100여 만
명이다.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연간 90시간의 교내훈련과 중학교 5학
년 재학시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일간의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
련소 입영훈련과 비상소집훈련 등을 받는다.

(4) 기타 준군사부대

기타 준군사부대로는 주요 보안시설 건설을 담당하며 유사시는 정규
군에 편입시켜 공병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인민보안성 공병부대, 군수물
자를 관리 지원하는 군수동원지도국,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산하에
서 경제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청년돌격대, 호위사령부 등 약 40
여 만명에 이르는 인원도 즉각 동원가능한 예비전력으로 분류된다.

마. 군사비

북한은 과거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국방예산을 공표하였다. 1972년 이후에는 국방예산의 대부분
을 은폐한 채 북한군의 경상유지 부문만 국방예산으로 공표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비를 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북한의 군사비는 당국에
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2008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2008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

산의 15.8% 수준으로 공식발표했다. 최근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도 2009년 국방비가 예산지출총액의 15.8%로 책정되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과 예산체계를 고려할 때 실질군사비는 국민총소득(GNI)의 30%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³³⁾ 북한의 군사비는 발표된 군사비 이외에도 군수경제 운영체제와 무기수출, 군부대 외화별이사업 등 독자적인 군예산체계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군수산업

북한은 휴전 후부터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들을 건설해 오다가 특히 1960년대 중·소관계가 악화되자 더욱 군수산업에 주력하였다.

군수산업은 노동당 산하의 제2경제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데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의 여러 군수공장들을 통해 총포, 함정, 항공기 등 각종 군사장비 생산은 물론 군사장비의 개발과 수출입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군수공장 외에 내각소속의 민수공장에도 ‘군수직장’을 설치하여 제2경제위원회의 지도하에 군복, 군화 등 보급품을 비롯하여 소총 등 소화기와 군수부품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군수산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는데 1960년대에는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하면서 군수공장을 더욱 확장시키는 한편 주요 금속공장, 공작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 자동차공장, 트랙터공장, 통신기계공장 및 조선소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수품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그 동안의 모방생산 단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기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전차를 비롯한 장갑차·화포·공용화기 및 각종 탄약을 양산하여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함정은 잠수함을 비롯하여 각종 전함을 건조할 수 있으며, 주요 정밀 전자기기와 부품을 제외하고는 무기의 대부분을 자급체제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은 무기의 자체개발 단계에 돌입하여 양적 확장만이 아닌 질적 개선에도 힘을 기울여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무기, 최

신형전차 및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러시아의 기술지원으로 MiG-29기의 조립생산을 추진한 바 있으며, 전방지역 배치시 수도권까지 타격이 가능한 장사정포를 생산하는 등 재래식 무기 생산능력을 계속 축적해 왔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재래식 전력의 양적 증가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소형잠수함, AN-2기 등 기습침투장비 생산과 미사일, 화생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5월, 노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고 1998년 8월에는 대포동1호 미사일을 시험발사함으로써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은 약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강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 군수공장은 현재 200여개 소로 대부분 지하화되어 있다. 이외에도 110여 개소의 일반공장을 전시전환 공장으로 지정하여 전시에는 즉각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1978년부터 소련의 기술지원으로 T-62전차를 생산하여 아랍 등의 분쟁지역에 수출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스킨드 미사일 등을 중동지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북한의 군수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부문은 전자·통신 분야로서 1980년대부터 중·소계의 유무선 통신장비의 모방생산을 시도하여 연대급 이하 소부대용의 교환대 및 전화기, 저출력 무전기 등 재래식 장비의 양산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사. 대량살상무기 개발현황

(1) 핵개발³⁴⁾

북한은 1960년대에 영변에 핵시설을 건설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기술을 집중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 5MWe

●● 34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 pp.28~29.

원자료를 가동하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여 핵물질을 확보하는 등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였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30~40여 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데 이어,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서는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화학무기 개발³⁵⁾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화학무기 연구 및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학무기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부터는 독가스와 세균무기를 생산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약 2,500~5,000톤의 화학작용제를 분산된 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 천연두, 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탄도미사일 개발³⁶⁾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 사정거리 300km의 SCUD-B, 사정거리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하였다.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시험발사한 후 작전배치하였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는 사정거리 3,000km 이상의 신형 중거리미사일(IRBM) 개발에 착수하여 최근 작전배치하였다.

1998년 8월에는 대포동 1호를 시험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운반체의 엔진연소와 탄체의 다단계분리 등 제반 기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아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를 발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대포동 2호는 사정거리가 6,700km 이상으로 추정되며, 운반체의 무게를

●● 35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 p.30.

●● 36

국방부, 『2008 국방백서』 (2009.1), pp.29~30.

줄이거나 3단계 추진 로켓을 추가 장착할 경우, 사정거리는 더 연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아. 대외군사협력

북한은 1961년 김일성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방문하여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1961.7.6), 「조·중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1961.7.11)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두 조약은 다같이 계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하거나 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계약 상대국이 지체없이 군사 및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소 조약은 조약의 효력에 관해서 10년 유효의 시한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또 조약 체결 일방이 시한만료 1년 전에 해약 희망을 표시하지 않으면 5년간 효력이 지속되고 똑같은 절차로 유효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연방의 소멸직후인 1992년 1월 로가초프 러시아연방공화국 대통령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동 조약 제1조(피침시 군사 등 즉각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6월 러시아 방문시 정상회담을 통해 동 조약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후 러시아측이 1995년 9월 7일 동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통보함으로써 동 조약의 효력이 1996년 9월 10일 이후 상실하게 되었다.

그 후 북한과 러시아는 1999년 3월 17일 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안보위협 발생시 지체없이 상호 접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 조약을 가서명하고 2000년 2월 9일 평양에서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후 2001년 4월 북한 군사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방위산업 및 군수장비 분야 협력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이어 8월 4일 김정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BM조약³⁷⁾ 준수, 경제·군사 등 쌍무적 협

●● 37

탄도탄 요격미사일 조약(ABM: AntiBallistic Missile Treaty)은 가입국에 대해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전역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며, 허용된 전략 미사일 방어체제의 배치를 제한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1972년 5월 26일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 조인되었다.

조발전 등 8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비해 조·중 조약은 계약 쌍방이 수정 또는 폐기할 것에 관해 합의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도록 무기한 효력조항을 두고 있어 어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여전히 군사동맹조약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군사개입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1971년 8월 ‘군사교류협정’을 조인하고 매년 군사대표단을 상호 파견하여 군사현안 문제들을 협의하는 등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이외에 북한은 1982년 11월 리비아 원수 카다피의 평양방문시 「조선·리비아 우호 협력동맹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쌍방은 군사문제에 있어 상호협력과 군사정보·군사대표단의 상호교환, 무기제공 등에 합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간씩 자동 연장하게 되어 있다.

1986년 3월 쿠바 수상 카스트로의 방북시에도 체결 20년후 10년간 자동 연장되는 「조선·쿠바 친선 및 협력조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조약 역시 쌍방간의 정치·경제·문화·기술분야에서의 다방면적인 협조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원과 협조도 규정하고 있어 군사동맹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³⁸⁾

2001년 5월 북한 공군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하여 파키스탄 항공단지를 시찰한 바 있으며, 이어 6월에는 고위대표단을 구성하여 미얀마를 방문하고 방산협력문제를 논의하였다. 또한 2008년 9월에는 시리아 군사대표단이 방북하여 양국간 군사교류에 대해 협의하였다. 북한이 중동과 아프리카, 중미지역과 군사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은 비동맹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외교목적뿐만 아니라 무기판매, 군사기술지원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⁹⁾

●● 38

이 조약은 전문과 본문 1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7조에서 “쌍방은 제국 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어느 일방에 대해 그 어떤 위협이나 침략을 감행하는 경우 이것을 다른 일방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으로 인정하고 가능한 모든 지지와 원조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 39

통일교육원, 「2008 북한 이해」(2008), p.120.

04

외 교

- 1. 외교정책
 - 가. 정책기조
 - 나. 외교정책 전개과정
- 2. 외교활동
 - 가.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 나. 외교 현황
 - 다. 수교 현황
 - 라. 민간대상 대외선전 및 동포조직 현황





IV. 외교

1. 외교정책

가. 정책기조

(1) 외교정책의 이념과 목표

북한은 1998년 사회주의 헌법 제17조에서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¹⁾

이러한 입장은 노동당 규약에도 나타나 있다. 즉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운동과 자본주의 나라들의 노동계급과 그밖의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지하고 광범한 연합전선을 실현하여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한다”²⁾는 것이다.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 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해체되자 종전에 내세웠던

●●1

1998년 사회주의 헌법 제17조에는 “자주·평화·친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 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경제·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 헌법에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다.

●●2

당규약 전문 참조.

●●3
사회주의 헌법 제17조.

●●4
여기에는 이른바 '제국주의의 침탈'을 받고 있는 공동의 처지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이라는 용어를 외교정책의 원칙에서 삭제하였다.

1992년 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규정하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침략과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의 실현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권의 소멸을 반영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사라졌으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투쟁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것은 북한의 국제정세에 대한 대결론적 상황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북한은 자주·친선·평화라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 하에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 대외활동 방향

북한은 헌법 제17조에서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고 규정하고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외교활동이 사회주의권 및 비동맹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다. 미·소 양극을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라는 구조와 사회주의 국제주의라는 이념적 요인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를 중시하게 하였다. 비동맹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활발했던 이유는 북한이 반제국주의 이념⁴⁾을 내세우면서 비동맹국가들을 대상으로 남한과 수교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소련의 해체와 동구권 몰락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종래 사회주의권내 국가들을 지향한 진영외교 및 비동맹에 주력하던 외교활동은 변화를 맞고 있다. 경직된 통치이데올로기와 계획경제의 한계 및 내부자원 고갈에 의해 어려움을 겪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사회주의 국제시장이 사라진 현실에 직면하여,

생존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북한의 지역별, 대상별 외교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 실리획득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⁵⁾
- ②중국, 러시아 등과는 전통적 우호·친선관계를 유지·발전시킨다.
- ③전반적으로 비동맹외교의 퇴조 속에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자원외교를 강화한다.
- ④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과는 1995년 이후 계속된 식량난 해소 차원에서 유대강화를 도모한다.

요컨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외교활동은 이념·정치 위주에서 벗어나 실리·경제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적인 전방위 외교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나. 외교정책 전개과정

(1) 1948년 정권수립~1950년대 초반 : 중·소 의존

북한의 외교관계는 1948년 9월 정권수립시기부터 1953년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만 해도 사회주의 진영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당시의 외교활동은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는 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가 거의 전부였으며, 수교국도 소련, 중국, 동구 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에는 전세계적으로 공산권 내에서 소련의 리더십이 확고하였던 반면 중국은 국공내전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소련의 한 위성국으로 지원을 받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소련이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하였다.

그러나 1950년 10월 중공군의 6.25전쟁 참전은 북한의 대중·소 외교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은 근 100만 명에 달하는 중공군을 참전시켜 북·중은 혈맹적 유대를 맺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 5

이러한 노선은 이미 1970년대에 표명된 바 있다.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차 회의(1972.12.10)에서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대해 침략적 성격이 없는 균등한 정책을 실시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평화공존 5개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표방하였다.

참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시에 중국 편향으로 기울지 않고 중·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북한의 중·소 등거리외교는 결과적으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경제 원조를 받는 외교적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2) 1950년대 중반~1960년대 후반 : 비동맹외교 강화

후전협정이 성립되자 북한은 전후 복구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중·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력관계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5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 29개국이 참가한 반동회의에서 ‘평화 5원칙’이 발표되고⁶⁾, 흐루시초프가 평화 공존정책을 거론하게 되자 북한은 중, 소, 동구 등 공산국가에 국한하였던 진영외교를 탈피하여 다변외교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중립국들과의 외교적 접근을 시도한 것은 1956년 4월에 개최된 제3차 당대회에서 다변외교로의 전환방침을 밝힌 때부터이다.⁷⁾ 이와 동시에 1956년 4월 대외문화연락위원회라는 ‘인민외교’ 수행담당 기관을 노동당 외곽단체로 만들어 대중립국 외교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58년에는 알제리, 기니 등과 수교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대중립국 외교를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것은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고 1960년 제15차 UN총회에서 남북한 동시초청문제가 제기된데서 비롯되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①사회주의 국가와의 단결 ②제국주의 진영에 대한 반대투쟁 ③신생독립국가에 대한 접근⁸⁾ 등을 강조하였으며, 같은 해 6월과 7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고 「조·소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과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각각 체결하여 사실상의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62년 중·소 국경분쟁과 쿠바사태 이후 중·소 분쟁이 격화되자 북한은 중국에 밀착하였다가 1965년 2월 코시긴 소련 수상의 방북을 계기로 중·소 균형외교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중·소 양다리 외교에서 북한은 그들의 외교적 활로를 찾고자 1966년 8월 ‘내정불

●●6

‘평화 5원칙’이란 영토 주권의 상호 존중,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하게 평화적 공존 등이다.

●●7

김일성은 총화보고에서 “상이한 사회체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평화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여 자주권의 상호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국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 주요 문헌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 p.2

●●8

「김일성 저작선집 3」, pp.194~197.

간섭과 호상 평등'을 표방한 자주노선을 선언하고⁹⁾ 이를 대중립국 외 교활동의 지침으로 삼았다.

(3) 1970년대 : 자주외교의 실현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북한은 내외환경에 중대한 변화들이 발생 하자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를 표방하면서 이른바 '자주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자주외교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중국 편향 외교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중·소 중립입장으로 선회하는 가운데 보다 다변화되고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이 실리외교를 정책노선으로 채택한 것은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의제가 토의되면서부터였다.¹⁰⁾

이러한 배경에는 대외적으로 1971년 9월 중국의 UN가입과 1972년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 미국·중국의 관계개선, 일본·중국의 국교정상화 등 국제적 화해분위기의 성숙, 그리고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대결에 대비한 지지국의 확보 필요성 등이 작용하였다. 또한 대내적 배경으로는 새로운 6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도입을 위해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북한은 1970년 제5차 당대회 이후 1980년 제6차 당대회까지 66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한은 외교에서의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제3세계 지역에서 중국이나 소련의 외교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독자적인 외교활동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초청, 방문 등의 외교노력을 통하여 아시아·아프리카 등지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과의 유대를 확대·강화할 수 있었다.

1975년 이후 북한의 제3세계 외교의 성과로는 무엇보다도 1975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 외상회의(8.25~30)에서 '비동맹회의'에 가입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어 같은 해 제30차 UN 총회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서방측 안과 공산측 안이 동시

●● 9
「자주성을 옹호하자」, 「로동신문」(1966.8.12) 참조

●● 10
「조선중앙연감」(1972), pp.269~270.

에 통과되는 등 그 영향력이 대유엔외교에까지 미치게 되자 북한의 외교는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전략의 지속,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더 이상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4) 1980년대 : 서방외교 추진

북한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자주·친선·평화’로 표방하고 외교다변화를 모색하였다. 특히 ‘친선’이라는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 국가, 제3세계 국가들과의 단결강화를 강조하면서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대외개방을 모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경제와 ‘자력갱생’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탈피와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함을 뒤늦게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1978년부터 추진된 중국의 개방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인해 서방국가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자 실추된 위신을 회복하고자 1984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를 열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라는 의제를 토의하고, 미국과 남·북한이 참여하는 3자회담 개최,¹¹⁾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한은 1984년 1월 대외무역의 확대방안을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1984년 9월에는 외국인의 직접투자·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합영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87년 4월에 채택된 ‘제3차 7개년계획’에는 대외무역 확대와 경제합작·합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자주·친선·평화’ 외교는 실제 정책추진의 내용면에

●● 11

『로동신문』(1984.11) 참조

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북한 외교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다주었을 뿐이었다. 북한의 대외개방도 실질적인 성과는 미약하였고, 오히려 북한은 1987년 10월 서방 채권은행단에 의해 '채무불이행국가'로 지목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더욱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개방정책의 진전은 북한에게는 부담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졌다.

(5) 1990년대 : 미·일과의 관계 정상화 추진

냉전시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동맹국이었던 국가들의 한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북한에 대한 개방압력 가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국제사회의 구도변화는 북한에게 새로운 변화에 맞춰 돌파구를 찾게 만들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한 국제적 고립탈피와 내부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일본을 비롯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였다.

특히 김일성 사망(1994.7.8) 이후 북한은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부 중심의 비상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탈피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자원확보에 전력을 경주하였다.

미국과는 1988~1992년 사이 베이징에서 28차례의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 '제네바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관계개선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9년 3월 금창리 지하핵 의혹시설의 성격 규명을 위한 협상을 타결지음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식량 60만톤을 지원받기도 하였다. 그 후 미사일 재발사문제와 관련하여 베를린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후속회담이 11월 15일 베를린에서 재개됨으로써 대미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일본과는 1991~1992년 사이 8차례에 걸친 국교정상화회담을 개최하고, 1995년 3월에는 북한 노동당과 일본의 연립여당이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50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처 고향 방문사업’을 추진하여 두 차례 고향방문을 실현시키고, 1998년 3월에는 일본 자민당대표단이 방북하여 관계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8년 8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양국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기도 하였다.

1999년 8월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일본이 관계개선과 과거사 보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북·미간 관계개선을 골자로 한 ‘베를린 합의’(1999.9)가 마련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방북한 일본 정당대표단과 북한측은 12월 3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국교정상화회담 재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19일부터 개최된 적십자회담에서 양측은 제3차 재북일본인 여성 고향방문 재개 등 4개 항에 합의하였으며, 이어 열린 수교회담을 위한 국장급 예비회담에서도 2000년 3월에 국교정상화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중국이 1992년 8월 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자 한동안 냉랭한 관계를 보였으나, 1996년 5월 「북·중 경제기술협조협정」 체결과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중국 방문, 그리고 1999년 10월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의 북한방문을 통해 쌍방간 우호관계를 회복하였다.

러시아와는 1999년 3월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대체하는 신조약에 가서명함으로써 일반국가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8~1999년 사이 유럽연합(EU)과 2차례에 걸친 정치대화를 개최하였으며, 1999년 9월에는 제54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백남순 외무상이 유럽국가 등 20여개국과 외무장관 회담을 가짐으로써 그 동안 소원하게 지내왔던 유럽연합 여러나라와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6) 2000년대 : 전방위 외교 추진

1998년 9월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변화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체제유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고 이로 인해 국제적 고립 탈피 및 국제사회의 지원확보를 외교활동의 주요목표로 설정하여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북한은 체제안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핵·미사일 문제 등을 고리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과 '반테러 공동성명' 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회담을 하는 등 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양측 관계는 후퇴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확보를 위해 핵카드를 활용, 대미관계 정상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는 북한은 2000년 수교회담을 재개하고 동년 9월에는 제3차 일본인 처 고향방문사업을 실시하는 등 수교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어 2002년 4월 북·일 적십자 회담과 국장급 회담을 거쳐 같은 해 9월 17일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및 공작선 침투' 를 인정·사과하고 「북·일 공동선언」 을 채택하는 등 대일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2004년 5월 제2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일본인 가족들을 송환하는 등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일본의 지원을 얻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메구미 사건' 등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색국면이 지속되었다.

북한의 전방위 외교활동은 대 EU 외교활동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월 이후 EU국가와의 외교관계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현재 총 27개 성원국 중 프랑스·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국과 수교하였으며, EU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지원 획득 및 경험추진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

이는 외교 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실리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국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등 도발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난 하는 등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EU 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확고하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장국 결론이 채택(6.19)되었다.

북한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001년 7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방문한데 이어 2002년 3월에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순방했다. 또한 메가와티 인도네시아 대통령(2002.3), 천득령 베트남 주석(2002.5) 및 분양 라오스 총리(2002.5)를 초청하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9년도에도 북한은 미얀마·베트남 등 ASEAN에 대한 외교를 중시, 군사·경제협력을 통한 경제 실리 획득을 도모하고 있으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의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한(韓)·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는 북핵 실험 규탄 언론 성명이 채택(6.2)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중국·러시아와는 정상외교를 통해 전통적 우호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해 가고 있다. 중국과는 김정일의 방중(2000.5, 2001.1, 2004.4, 2006.1) 및 장쩌민(江澤民) 주석(2001.9)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2005.10)의 방북을 통해 기존의 우호관계를 회복한 이후,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대응하면서 다방면적 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대중국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와도 정상간 상호방문(2000년 7월 푸틴 대통령 방북, 2001년 7~8월 김정일 방러)을 통해 전통적 친선관계를 회복하였고 특히 2002년 8월 김정일의 러시아 극동지방 방문 시에는 TKR-TSR 연결 사업 및 북한과 러 극동지역간 경제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대중·러 관계는 불편한 국면

을 맞고 있다.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 참여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2005년에 열린 제4차 6자회담에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원칙과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제재로 북한 자금이 동결되자 북한은 이에 격렬히 반발, 2006년 「대포동 2호」를 발사하고 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를 주도,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채택하였다. 이후 「부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 과정을 재개하고자 하였고, 북·미 양자 접촉 이후 2006년 12월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2007년 2월과 10월 각각 6자회담 관련국들은 북핵문제에 관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조치' ('10.3 합의')에 합의하였다. '2.13 합의' 채택 이후 비핵화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7년 7월 영변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IAEA 요원의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2007년 10월 이후 불능화 작업도 시작되었다. 핵 프로그램 신고서에 대한 북·미간 의견 차이로 신고는 지연되었으나, 2008년 4월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동년 6월 북한은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미국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상응조치 이행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이행하지 않자, 북한은 2008년 8월 불능화 작업 중단 및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하였으며, 결국 10월 「힐」 차관보의 방북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였다. 2008년 12월 시료채취 등 북·미간 검증 합의를 문서화하기 위한 6자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북한이 시료채취의 문서화를 끝내 거부함으로써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북한은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어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2월부터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4

월 5일 발사하였다. 이에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개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동(同) 의장성명 채택에 격렬하게 반발,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고, 자체 경수로 건설을 적극 검토하며,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끝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이에 또 반발,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 핵 포기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우라늄 농축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체제 안보 및 경제 협력을 위해 전방위 실리 외교를 전개하고자 하였으나, 미사일 발사·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외교 활동도 다소 축소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 외교활동

가. 정책결정 및 집행기구

북한에서 대외정책의 결정은 헌법상으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당우위 체제특성상 실제로는 외교정책 결정에 관해서는 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¹²⁾

노동당에서는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이를 심의·결정하며 그 중심역할은 대외문제를 관장하는 비서국의 국제부가 담당하고, 여기서 결정된 문제가 최고인민회의에 통고·추인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와 같은 결정과정을 거쳐 그 집행은 형식상 당과 정권기관인 내각이 분담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요 책임을 맡는다.¹³⁾

●● 12
사회주의헌법 제91조 4항

●● 13
사회주의헌법 제110조

과거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외교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대폭 이관되었는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외교사절의 신임장과 소환장을 접수한다.

외교정책의 결정 및 집행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하며,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 발표한다.¹⁴⁾

정부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주로 관장하고 있으며, 정당외교는 당 국제부가, 의회외교는 최고인민회의가, 민간외교는 노동당 외곽단체인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맡고 있다. 내각의 외무성은 과거 정무원 외교부에 비해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는 등 권한이 강화되었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국교 수립, 협정 체결, 재외공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상과 다수의 부상들이 30여개에 이르는 지역국과 기능국을 분담해 업무를 관장하며 산하에 '군축 및 평화연구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외업무는 당과 내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 의해 다양하게 분담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4

사회주의헌법 제110조, 제111조.

●● 15

김일성은 “공산주의자들은 정세를 혁명에 유리하게 전변시키기 위해 적들과 일시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주장, 대서방 접근을 정당화하였다: 「김일성 저작선집 6」, p.161.

●● 16

하남,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 데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보고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Ⅲ」 (서울 국토통 일원 1988), p.844.

민간외교는 주로 당 외곽단체인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등이 담당하고, 직총 등 기타 근로단체들도 대외활동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나. 외교 현황

(1) 미국

북한이 대서방 접근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닉슨 미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미·중, 미·소의 화해 등 동서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부터였다. 북한은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흐름에 자극받아 1971년 11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대서방 접근을 정당화하는 ‘당면한 제문제에의 전술적 전환’을 결의하였다.¹⁵⁾ 그러나 1980년대 말까지 이어진 미·소 냉전은 북한의 대서방 외교가 활발히 전개되기 힘든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의 미·일관계 개선노력은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일 양국과 유대를 통해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 한국 열세를 만회하며 이들 두 나라로부터 식량지원 획득 및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방 선진제국에 접근하는 발판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접근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내세우면서 시도되었다. 북한은 1974년 3월 25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후¹⁶⁾ 유엔총회, 비동맹회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를 주장해왔다.

1984년 1월 10일 북한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간 불가침 선언을 하자는 이른바 ‘3자회담’을 제의하는가 하면, 1986년 6월 17일에는 남북한 및 미국과의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를, 1988년 7월 20일에는 북·미간 ‘국회대표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또한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을 미국측에 제의한데 이어 수 차례의 외교부 대변인 담화, 비망록 및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 등을 통해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1996년 2월에는 평화협정의 과도적 조치로서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지난 40여년간 한반도 평화보장 장치로 기능해왔던 정전협정 체제를 무실화시키기 위해 군사정전위에서 일방적으로 중감위 공산측 대표단을 철수하고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하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잇따라 취하였다.¹⁷⁾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시도하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미 안보동맹 체계를 와해시키고 연방제통일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1990년대부터 북한측의 미군유해 발굴 및 인도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유해의 신원확인 문제가 제기되어 1996년부터 공동 발굴작업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7년부터 4회 작업으로 7구의 미군유해가, 1998년에는 5회 작업으로 22구의 미군유해가 각각 발굴되어 미국측에 인도된 바 있다. 1999년 10월 이후부터 북한군과 유엔사측간에 유해를 인도인수해 오던 관계에서 벗어나 미군과 북한군간에 직접 미군유해를 인도인수하고 있으나 2005년 5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다.

북·미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이다. 북한이 1992년 1월 30일 ‘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임시사찰을 실시하고 북한측이 미신고한 영변지역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1993.2.25)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¹⁸⁾ 국제적인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단계에 걸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마침내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¹⁹⁾ 북·미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 17

북한측은 정전체제를 무실화시키기 위해 중립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 철수(1993.4.20),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설치(1994.5.24), 군사정전위원회 중립측 대표단 소환(1994.12.15), 중립국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 철수(1995.2.28), 판문점 북측 지역 사무실 폐쇄(1995.5.3)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18

「노동신문」(1993.3.13) 참조.

● 19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측은 NPT 완전복귀, 특별사찰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 수용, 핵활동 전면동결 및 기존 핵시설에 대한 해체를 약속하였고, 미국측은 2003년을 시한으로 북한에 2000MWe 경수로 지원, 중유제공 및 경제제재 완화, 연락사무소설치 등에 합의하였다.

● 20

미사일 협상은 이후 2000년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 21

『조선중앙통신』(1998.6.16).

● 22

한·미 양국이 1996년 4월 16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차회담을 제안한데 대해 북한측이 호응. 1997년 3월 5일 공동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예비적 성격의 회담을 가진 이후 1997년 12월~1999년 8월 사이 6차례의 본회담이 제네바에서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 23

미국은 1995년 이후 매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을 지원해 오고 있다.

● 24

페리 조정관은 보고서에서 미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첫째,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개발 포기 및 함께 미국의 포괄적인 대북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고 둘째, 북한의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하여 북한 위협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봉쇄 전략은 위협하므로 첫 번째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6월 13일 콜라룸푸르에서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노형 및 주계약자를 선정한다는 등 주요 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과 미국은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폐연료 봉 보관·처리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표(1995.1.20), 대북 중유제공 및 북·미간 직통전화 개설(1995.4.10) 등이 이루어졌다.

핵문제가 제네바합의로 해결되는 듯 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1996년 4월부터 북·미간에 미사일협상이 진행되었다.²⁰⁾

그러나 북한은 협상에서 “미사일 문제는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미국이 진실로 미사일 수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미사일 수출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

1998년 8월에는 미사일(광명성 1호) 발사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급격히 위기를 고조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1998년 8월에 평북 대관군 금창리의 지하 핵의혹 문제가 제기되어 북·미간에 1998년 11월부터 1999년 3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북한은 미국측의 현장방문을 허용하는 대가로 약 60만톤의 식량을 제공받았고 1999년 5월 미국의 현장방문단이 금창리 터널을 현지 조사함으로써 금창리 지하 핵의혹시설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7개월 만에 일단락되었다.

이와 같은 긴장상황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여하는 4차회담이 개최되었으며²²⁾ 1995년 이후 지속되어온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도 계속되었다.²³⁾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1월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 한·미·일과의 공조하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할 경우 북한에 외교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대북 포괄적 협상틀을 마련하였다.²⁴⁾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1999년 9월의 북·미 베를린합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두번째의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발표했으며, 북한 역시 ‘미사일 재발사 유보입장’을 밝혔

다.²⁵⁾ 그리고 동년 11월 베를린에서 후속회담이 재개됨으로써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 등 현안문제와 함께 북·미 관계정상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0년 10월에는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한 후 ‘적대관계 종식’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과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 김정일과 회담을 하는 등 북·미간 관계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고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하였다. 2001년 9.11 테러사태는 미국의 안보 특히, 핵확산에 대한 우려를 급격히 증대시키면서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2002.1)과 비핵국가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핵태세 보고서’ (2002.3) 등은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2002년 10월 켈리 국무부 동아태지역담당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하였다. 켈리 차관보는 방북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측이 자신에게 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 개발계획을 시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을 먼저 포기한 후에야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KEDO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제재로 12월부터 중유 지원을 중단하였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북·미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면 미국의 안보상 우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이후 IAEA의 감시하에 있던 핵관련시설의 동결을 해제(2002.12)하고, 사찰관을 추방하는 등 일련의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며,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탈퇴를 선언하는 등 미국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보유 시인이 제네바합의, 한반도비

●●25

외무성 대변인은 1999년 9월 24일 제54차 중앙통신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 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회담 기간에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미사일 재발사 유보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핵화 선언 등 쌍무적 약속 뿐 아니라 NPT·IAEA 핵안정협정 등 국제 사회와의 합의위반 행위이고, 핵포기는 합의 위반 전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미국은 북핵문제가 WMD를 생산·확산시키려는 ‘불량국가’의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평화를 수호하려는 국가들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고 북·미 양자가 아닌 다자간 문제라며 다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안하였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정권교체 음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본인은 미국이기 때문에 오직 미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리로 북·미간 직접협상 입장을 견지하였다.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중재노력 또한 집중되었다. 그 결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 3자회담이 2003년 4월 23~2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 (4단계 일괄타결안)를 제안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 이후 5월 24일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선(先) 북·미회담’, ‘후(後) 다자회담’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과 G-8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외교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비확산안보구상’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통해 대북압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이에 대해 북한은 6월 18일 외무성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이 북·미간 회담을 직접 반대하면서 다자회담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핵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등 관련 국가의 외교적 노력에 힘입어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남북한과 미·일·중·러가 참가한 6자회담

이 개최되었다. 북한은 회담개최 이전부터 여러 차례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미국을 압박하였다.²⁶⁾

북한은 6자회담 종료일인 8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자회담 참여국의 기초발언문 요지를 공개하였다.²⁷⁾

이에 따르면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가 자신들의 ‘총적 목표’이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위협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간 필요한 조치들을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베이징 3자회담시 제시하였던 단계별 해결방식을 재차 제기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담보 및 정치·경제적 혜택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미사일, 재래식무기, 위조화폐, 마약, 테러, 인권, 납치 등 문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와 북한이 제기한 안보 우려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며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공고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격화를 해소시키기 위한 긴급대책과 상호간 조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한국은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일본은 핵문제와 함께 미사일, 납치 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중국대표단 단장인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이 의장 요약문 형식으로 회담 참여국들이 대화지속을 통한 이견 조율, 가능한 빠른 시일내 차기회담 재개,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 금지,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비핵화, 북한 안보 우려 해소, 동시병행을 통한 해결 등 6개항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²⁸⁾ 설명하였다.

북한이 벼랑끝전술을 구사하면서도 양자회담이 아닌 6자회담에 응

●● 26

북한은 8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①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의지에 대한 명백한 확인을 요구하고, ②동시행동 원칙에 의한 핵문제 해결방식 수용을 촉구하며 ③대북 적대시정책 포기 전 조기사찰불가 입장을 밝혔다.

●● 27

「조선중앙통신」(2003. 8.29).

●● 28

「조선중앙통신」(2003. 8.29).

한 것은 미국의 대북압박 강화 등 주변환경의 악화와 경제사정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2004년 초 잭 프리처드 前 대북교섭 담당대사와 헤커 핵물리학 박사 등 민간대표단은 영변 핵시설을 방문하여 북한의 폐연료봉 8,000여 개의 재처리 및 5MWe원자로 가동실태를 확인하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신년 연두교서에서 리비아의 선례에 따라 핵개발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제2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CVID)으로 폐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5년 취임식에서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확산과 폭정의 종식이 미국의 목표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에 앞서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시켰다.

이에 북한은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6자회담을 무기연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외무성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핵무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조선중앙방송은 5MWe원자로에서 8,000여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성과적으로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에 재개된 제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 원칙에 관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NPT와 IAEA에 복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핵 공동성명 발표 이후 북·미관계는 기대만큼 순탄하게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제5차 6자회담이 개최(2005.12)되어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한 갈등으로 차기회담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폐회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화 위조지폐 제조와 돈세탁을 문제삼아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고, 이후 BDA문제로 북핵문제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고,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 채택에 대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즉각적으로 반발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10월 9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단행했다.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11월 베이징 북·미 양자회담 결과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하였고, 힐 차관보는 5MWe 원자로 등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 IAEA사찰 수용,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시설 폐쇄 등 북핵폐기를 향한 북한측의 '초기 이행조치'와 에너지·경제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 등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제안했다.

이후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2006.12)에서는 북·미간 양자접촉이 진행되었고, BDA문제도 북·미간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다루어졌다. 양국은 미국이 제시한 초기조치 이행방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BDA문제에 막혀 합의에 실패했다.

2007년 1월 북·미간 베를린합의에 따라 개최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BDA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5개국의 대북 상응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2.13 합의」가 도출되었다. 「2.13 합의」 이후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 관계정상화 W/G회의(2007.3)에서 BDA문제,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문제가 다루어졌다. BDA문제는 러시아의 협조 아래 6월말 사실상 해결되었으며, 2007년 7월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봉인함으로써 1단계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었다.

2007년 10월 3일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와 '안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약속하였고 미국은 이에 상응하여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8년 4월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북한은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맞추어 부시 대통령은 적성국교역법의 적용을 중단하고 테러지원국에서 북한을 해제하겠

다는 방침을 미의회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45일이 경과한 8월 11일까지 북한과 미국은 북핵신고에 대한 검증체계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연기하였다. 북한은 8월 26일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9월 19일 외무성대변인 성명을 통해 “얼마전부터 핵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해제를 바라지도 않고 우리대로 나가면 될 것” 이라고 하였다. 8월 26일 성명은 북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우선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의 핵불능화에 대한 대가이며 검증은 테러지원국 해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9.19 공동성명」은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핵무기 폐기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검증 역시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에 대한 남북한 상호검증을 강조하였다.

이후 북한은 9월 22일 국제원자력기구에 영변 핵시설의 감시카메라와 봉인의 제거를 요구한 데 이어 일주일내 재처리 시설을 재가동 하겠다고 하였다. 긴박한 상황에서 10월 1일 평양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일차적으로 북한이 신고한 영변 핵시설에 국한해서 검증을 하고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핵확산, 핵무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증하기로 하는 분리 검증안을 북한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은 11월 12일 담화를 통해 ‘현장 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 만 검증에 포함되며 쟁점인 시료채취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12월 8일~11일 개최된 제6차 6자회담에서 시료채취를 포함한 북핵 검증의정서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합의도출에 실패하였다.

북한은 2009년 1월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및 회견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대북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어야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비핵화 검증은 북한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9년 2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 및 취임을 즉각 보도하고 6자회담 진전을 희망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북미관계 개선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구체적 대응보다 북핵 문제 관련 6자회담 병행,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 UEP·핵확산 의혹 제거 해소 등 북핵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미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북미 핵군축 회담을 주장하는 등 대미 강경책으로 나아갔다.

2월말부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면서, 우주 이용권리의 보편성을 주장하였고, 미국이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도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발사 관련 정보를 국제기구와 유관국에 사전 통보하는 등 나름대로의 국제규범을 준수하였다.

북한은 4월 5일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안정보장이사회는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3개의 북한기업²⁹⁾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북한도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불참 선언과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하겠다고 맞대응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 의무를 준수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5월 25일 오전 제2차 핵실험을 전격 실시한데 이어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다른 나라의 핵보유국 인정여부는 상관없다”며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구도를 선언하였다. 아울러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규탄 배격하며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응 조치³⁰⁾를 천명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

(2) 일본

북한의 대일 접근노력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도되었는데 1955년 2월 25일 남일 외상이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과 평화공존

●● 29

제재 대상 기관은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연봉총회사 등

●● 30

대응조치로는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유라늄 농축작업 착수, 봉쇄시도는 전쟁행위로 간주, 군사적 대응” 등

●●31

3당 공동선언 의주내 용으로는 ①소민지 지배 35년 및 전후 45년에 대한 보상 ②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국교관계 수립 ③교류 협력 발전과 위생통신 이용 직항로 개설 ④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존중 ⑤조선은 하나, 남북대화에 의한 평화통일 인정 ⑥핵위협 제거 ⑦국교수립 실현을 위한 정부간 교섭권고 ⑧상호 당적 관계강화 및 협조발전 등이다.

●●32

합의한 4개항은 ①조기 국교정상화 실현에 적극 노력 ②전제조건 없는 대화 및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③자주적·독자적 입장에 서의 회담진행 ④양국 정부의 국교정상화회담 추진 지원 등이다.

●●33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1998. 6.5).

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1955년 5월 조총련을 조직하고, 1956년 3월에 일·조무역협회를 설립하여 경제교류를 실시하는 가운데 1959년 8월부터는 재일교포의 복송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1977년 9월 5일에는 ‘민간어업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1981년 9월 10일 대일접근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북한 내에 ‘조·일 우호·친선촉진협회’를 결성하였다.

일본은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의 질서변화 및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전개를 계기로 가네마루 신(金丸 信) 자민당 전 부총재를 단장으로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1990.9.24~28)하여, 노동당과 양국간 조기수교를 촉구하는 3당 공동선언문³¹⁾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1월 30일에서 1992년 11월 6일까지 8차례에 걸쳐 수교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문제, 북한의 핵개발문제, 이은혜(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일어선생)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이로 결렬되었다.

소강상태에 빠졌던 북·일관계는 1990년대 중반에 접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는데, 북한 노동당과 일본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여당은 1995년 3월 28~30일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 국교정상화를 위한 4개항³²⁾에 합의하였다. 쌍방은 국교정상화회담 재개를 위한 몇 차례의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지만 합의서 해석문제, 일본의 배상문제 등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은 1995년 6월 일본으로부터 쌀 30만톤(무상 15만톤, 유상 15만톤)을, 1995년 10월에는 20만톤의 쌀을 추가 지원받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북·일관계는 1997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수교 예비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활기를 되찾았다. 양측은 ‘일본인 처’ 고향방문에 합의함으로써 1997년 11월과 1998년 1월 2차례에 걸쳐 북송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이 실현되었다. 또한 1999년 3월 28~31일간 나가야마 마사야키(中山正暉) 자민당 중의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자민당대표단이 방북해 일본인 납치의혹문제 등 쌍방 수교교섭의 걸림돌이 되었던 현안을 논의, 북·일간 수교협상이 재개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같은 해 6월 “북한 내에는 일본인 행불자가 없다”³³⁾

고 주장하면서 “일본이 고향방문 사업에 인위적으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³⁴⁾고 비난하자 일본내 대북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일본인 처의 고향방문은 물론 수교교섭 협상도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더욱이 1998년 8월 북한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한 미사일(광명성1호)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정부는 같은 해 9월 ‘북·일 수교교섭 중단, 대북식량지원³⁵⁾ 유보, KEDO 분담금 합의서 서명보류, 직항전세기 운항중지’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단행, 쌍방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게 되었다.

이후 북·미간 베를린회담(1999.9.7~12)에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가 해결된 것을 계기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직항 전세기 운항중지 조치를 해제(1999.1.13)하고, 무라야마 총리의 방북(12.1~3)을 통해 국교정상화회담 재개 문제 등에 합의함으로써 북·일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4월(9차), 8월(10차) 및 11월(11차)에 걸쳐 국교정상화 본회담이 재개되었으나, 일본인 납치문제, 북한의 과거청산 요구 등에 대한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종결되었다. 이후 북·일관계는 일본 경찰의 조총련계 은행수색, 괴선박 사건 등으로 더욱 경색되었다.

그러나 북·일수교를 향한 양측의 물밑 접촉은 지속되고 있었으며, 2002년 4월 일본인 납치문제, 재북 일본인 처 문제 등을 다룬 적십자회담 및 8월의 국장급회담을 거쳐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간에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동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일 공동선언’에서 북측은 일본인 납치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경협방식에 의한 대북 경제지원 용의를 표명하였다.³⁶⁾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³⁷⁾

북한이 같은 해 10월 15일 납치 생존자 5명에 대해 일시 고향방문을 허용하여 일본방문이 실현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10월 24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을 북한에 귀환시키지 않고 일본에 영구 귀국시키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일본으로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요

● ● 34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담화(1998.6.7).

● ● 35

일본 정부는 WFP의 3차 어필(1997.4~1998.3)에 호응해 2,700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었다.

● ● 36

북·일공동선언의 요지는 ①2002년 10월 중국 교정상화 교섭 재개 ②일본의 식민지 지배 반성과 대북경협 제공 ③북한의 피랍 일본인문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④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합의 준수 및 미사일 발사유예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할 용의 표명 등이다.

● ● 37

「조선중앙통신」(2002.9.17).

●● 38

「만경봉-92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 입항을 취소한 이후, 7개월여 만인 2003년 8월 25일 니가타 항에 입항하였다.

구하였다.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일본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북한의 새로운 핵개발 의혹에 대해 일본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2년 만에 개최된 제12차 북·일 수교협상(2002.10.29~30, 쿠알라룸푸르)은 성과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2003년 4월 중국의 중재로 열린 북·중·미 3자회담에서도 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고 일본내 대북여론 악화 등으로 대북제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6월에는 ‘만경봉-92호’ 등 일본에 출입하는 북한선박에 대한 일본정부의 검사활동이 강화되자 ‘만경봉-92호’의 운항일정이 조정되기도 하였다.³⁸⁾ 북한은 일본당국의 선박검사 활동 강화와 2003년 6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된 ‘유사시 법제’ 등을 ‘대북제재, 조선에 대한 재침야욕’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이후에 열린 6자회담(8.27~29, 베이징)에서 일본이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언급한데 대해 북한은 “일본이 앞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10.7 외무성 담화)고 주장하였다.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이 2004년 5월 22일 평양에서 개최되어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한 핵포기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동결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양 정상은 납치생존자 8명 중 5명은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고 미군 탈영병 가족인 쟈킨스씨 가족은 후에 제3국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합의하였다. 또한 일본이 납득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들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재조사를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며, 북한이 평양선언을 준수하는 한 제재법안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상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쟁점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납치피해자 가족 8명 중 5명만 귀국한데 대해 일본국민들은 실망하였으며, 또한 납치위험자 10명의 재조사를 약속받았지만 새로운 사실이 없어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북한에 납치됐던 13세 일본 여중생 요코다 메구미가 유골로 귀환(11.15)했으나, 유골이 가짜로 확인(12.9)된 이후 일본의 대북여론이

강경해짐에 따라 양국관계는 경색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북·일관계는 2005년 하반기 들어 제4차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9월 11일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고이즈미 총리가 대북접근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오는 듯했다. 그러나 제4차 6자회담의 타결을 계기로 재개된 북·일 국교정상화회담(11.3~4)에서 상호 입장의 차이만 확인하였을 뿐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다. 일본측이 가짜 유골 의혹과 일본인 납치 생존자의 귀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교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비하여 북한측은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태도를 고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북한측은 과거사 청산 등도 요구하였다.

2006년 재개된 제13차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2.4~7, 베이징)에서도 양국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였으며, 회담결렬 이후 북·일간에는 대화채널이 단절되고 상호 비난을 강화하는 등 대립국면이 지속되었다.

북한은 6월에 접어들면서 일본과의 교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 김영남의 언론 인터뷰 허가, 요코다 무덤 및 생존 당시 거주지 공개, 요코다 주변인물들의 증언과 일본 언론인들의 평양 방문 허가 등 전향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7월 5일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10월 9일 핵실험을 하게 되자 북·일관계는 더욱 냉각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대북 비난결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9월 19일에는 일본 내 북한계좌를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정부는 유엔안보리가 10월 14일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표명하였으며, 11월 14일에는 대북 추가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사치품 24종을 대북 수출금지 품목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 합의’)가 도출됨으로써 북·일관계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 합의서 제2조 4항은

●● 39

일본 정부는 납북자는 총 17명(생존자 5명)은 20029 歸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북측이 주장하는 '사망(8명), 미입북(4명)' 주장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40

2007.6.18 도쿄지방법원은 일본정부의 부실채권 정리기관인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을 상대로 낸 소송(2005년 제기)에서 조총련에 청구금액 전체 약 627억 엔(약 5천 억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청구금액에 변제를 위한 가집행도 인정하여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 및 소유자산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하게 되었다.

●● 41

“일본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76 외무성대변인)

북·일 양국이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2002년 「북·일 공동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나갈 것을 목표로 북·일 양자대화를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3 합의」에 따라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제1차 회의가 3월 7~8일 베트남 하노이에게 개최되었으나, 납치자 문제 등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하여 아무런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일본측은 ‘납치문제 진전 없는 대북 수교·지원 불가’ 방침³⁹⁾을 견지하였고, 북측은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회의일정을 일방 취소하는 강경자세를 취하였다.

특히 북한은 일본정부가 ‘납치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자 조총련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⁴⁰⁾하면서, 이는 ‘주권 침해행위이자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북일관계를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6월 들어 BDA문제가 해결되면서 「2.13 합의」이행에 진전이 있게 되자, 북한은 일본정부의 조총련 탄압을 ‘금융제재에 못지않은 자주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일본이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6자회담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¹⁾

북한과 일본은 9월 5~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제2차 회의를 개최, 북한은 ‘과거청산 문제를, 일본은 ‘납치문제’를 중점 제기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국교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상호 관심사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은 조선신보를 통해 아베 일본 총리의 사의표명(9.12)에 대해 사퇴배경으로 ‘대북 강경정책 고수’를 지적하면서, 후임 정권에서는 대북 강경정책이 보다 유화적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후임 후쿠타 정권이 ‘대북경제제재 시한의 6개월 재연장’을 결정(10.9)함으로써 북한의 기대는 무산되었다. 후쿠타 정부는 2단계 비핵화 이행방안에 대한 6자회담 합의(10.3)에 대해서도 ‘완전한 신고가 아니고 불능화도 전부가 아닌 몇 개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08년 북·일관계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007년 올란

바르르에서 북·일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열린 이래 처음으로 북·일 쌍방은 2008년 6월 11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교착상태에 있던 북·일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동 회담에서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고 일본은 인도적 물자 수송에 한해 전세편의 입항과 인적왕래는 허용하기로 하는 등 대북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였다. 그러나 만경봉호를 포함한 북한 국적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것은 계속 금지하였다.

8월 11일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가 재개되어 납치 피해자 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납치문제의 미해결을 이유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등 대북 제재안을 4월에 이어 10월에도 6개월씩 연장하는 등 대북 압박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일본의 에너지 지원 불참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일본의 6자회담 참가자격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2009년 북일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4.5)와 핵실험(5.25) 등으로 대결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등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국내적 조치로서 독자적 추가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3) 중 국

북한은 1949년 10월 6일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면서부터 공식적 외교관계를 시작하였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에는 소련 일변도 외교를 추진하다가 중국의 '6.25' 참전을 계기로 대중관계에도 같은 비중을 두어 왔다. 중·소 협력시기인 1950년대에는 오로지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정치, 안보,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 중·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즉 1953년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경제·문화 협조 및 지원협정」을 체결하고,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북한의 전후복구를 위해 3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무상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소 관계가 항상 안정되고 균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른바 ‘북방 삼각관계’의 균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것은 중·소간의 분쟁이었으며, 북한이 ‘외교에서 자주’를 선언하고 나선 이유도 결국은 중·소 분쟁으로부터의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격하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북한·소련관계는 소원해지고 북한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1년 7월 북한이 소련·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의 대중·소 관계는 다시 균형을 이루게 되었지만, 적어도 1958년에서 1964년 소련의 흐루시초프 실각까지는 북한과 중국은 ‘밀월관계’라고 할 정도로 밀접한 외교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 방북(1958.2), 김일성 주석 방중(1961.7), 류샤오치(劉少壽) 국가주석 방북(1963.9) 등 정상급 인사교류가 진행되었다. 1961년 김일성의 중국 방문시 군사방위조약에 해당하는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과학기술합작협정’(1957.12.31), ‘항공운수협정’(1959.2.28), ‘문화합작협정’(1959.2.21), ‘국경조약’(1962.10.12) 그리고 ‘국경에 관한 의정서’(1964.3.20) 등의 조약·협정·의정서가 조인되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은 국방·경제 병진노선에 따라 소련의 지원이 시급하였고, 베트남전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북한지도부를 ‘수정주의’, ‘기회주의’ 등으로 몰아붙인 문화혁명 등으로 인해 중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류샤오치(劉少壽) 국가주석의 방북(1963.9)을 끝으로 1975년 4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은 중단되었으며, 북한은 중국 공산당을 ‘교조주의’, ‘종파주의’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9년에 들어 중국 문화혁명이 종료되고 미국에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미·중간에 대화가 시작되고 소련의 대북한 내정 간섭에 대한 반발 등이 계기가 되어 북·중 관계는 점차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소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점차 안정적으로 되었으며 자주노선도 정착단계에 들어갔다. 즉

중국으로부터는 이념적 결속을, 소련으로부터는 경제·군사적 실리 획득을 추구하는 등 대중·소 양면외교를 유지하였다.

1969년 10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용건이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간 인사 교류가 재개되었으며, 그 후 정상급 인사교류도 이루어졌다. 김일성의 3차례 방중(1975.4, 1982.9, 1984.11), 화궈펑(華國鋒) 당주석 겸 총리의 방북(1978.5), 중국 군사우호대표단의 방북(1978.8), 평전(彭眞)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북(1983.9), 후야오방(胡耀邦) 총서기의 방북(1984.5),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의 방북(1988.9) 등 고위급 교류와 경제·군사·친선·과학기술 등 분야별 대표단의 상호교환을 통해 우호 관계를 강화하였다.

1978년 12월 출범한 덩샤오핑(鄧小平) 체제가 ‘4대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자 1982년 9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여 덩샤오핑(鄧小平)의 실용주의체제를 확인하였고, 1983년 6월에는 김정일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胡耀邦)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덩샤오핑(鄧小平)과 면담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김정일 후계체제를 사실상 양해받았다.

1985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개혁·개방과 1990년 9월 한·소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북한은 소련의 외교활동에 대해 ‘배신행위’, “사회주의 대국으로서의 존엄과 체면, 동맹국의 리익과 신의를 팔아먹은 행위” 등으로 극렬히 비난하면서⁴²⁾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1991.11)과 연형묵 총리 등 당·정 고위인물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였고,⁴³⁾ 1990년 11월 압록강다리를 ‘조·중 친선의 다리’로 개칭하는가 하면 각급 보도매체들은 ‘불멸의 조·중 친선관계’를 대대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장쩌민(江澤民) 총서기 방북(1990.3), 리펑(李鵬) 총리 방북(1991.5), 양상쿤(楊尙昆) 국가주석 방북(1992.4) 등 중국측 최고위인사의 방북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소 수교에 이어 1992년 8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자 북한은 “제국주의에 굴복한 변절자·배신자”⁴⁴⁾라고 중국을 비난하면서

●● 42
「로동신문」(1990.10.5)
참조.

●● 43
김일성은 한·소 수교가 발표되기 직전인 1989년 11월과 1990년 9월 두 차례, 그리고 연형묵 총리는 1990년 11월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다.

●● 44
반제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완성을 위한 근본요구, 「조 선중앙방송」(1992.9.21).

● 45

당시 북한의 홍상남 부총리와 중국의 리난칭 부총리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재일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1996.12.17)에서도 확인되었다. '조선신보'는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 채 "향후 5년간 석유와 코크스를 무상 혹은 우호가격으로, 6월에도 1996년도 무역경제교류에 관한 교환문서를 통해 쌀과 원유, 코크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주중대사를 소환하였으며, 양국간의 고위급 인사교류도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까지 8년간이나 중단되었다.

1995년 북한이 '100년 만의 자연재해'를 이유로 중국측에 경제 원조를 요청하자 중국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원조가 재개되었다. 나아가 1996년 5월 '경제기술합작협정', '상품차관협정', '경제군사원조협정' 등을 맺어 본격적인 대북 경제지원에 나섰다. 특히 1996년 5월 22일 베이징에서 체결된 '경제기술협조협정'⁴⁵⁾은 중국이 5년간(1996~2000년) 북한에 곡물 50만톤, 유류 130만톤, 석탄 250만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제가격의 1/3 값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북·중관계 강화에 큰 계기가 되었다.

이어 1996년 7월에는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 체결 35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중국군함이 남포항에 입항하는 등 동맹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중국이 4자회담의 한 축으로 참여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도 이루어졌다.

1999년 6월 북·중수교 50주년을 맞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이는 김일성의 방중 이후 8년 만의 일이며, 김정일 시대 개막 이후 정부대표단의 첫 공식방문이라는 점에서 한·중 수교 이후 소원해졌던 북·중관계 회복의 전기가 되었다. 이어 중국의 탕자쉬안(唐家璇) 외교부장이 1999년 10월 5일 북한을 방문하여 '조·중 외교관계 설정 50돌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함으로써 김정일 시대의 북·중 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1999년 김영남 방중시 합의에 따라 북·중 지도부 사이의 교환방문이 확대되었으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주북 중국대사관을 전격 방문(2000.3.5)함으로써 중국과의 우호관계 강화 의사를 내외에 천명하였다.

북한의 대중국 관계개선 의지는 2000년 5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이 방문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문제, 남북한 정상회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전통적인 친선을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에 식량과 원유·석탄 등 물자를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방중기간 중 주룽지(朱鎔基), 리펑(李鵬), 후진타오(胡錦濤) 등과의 회담하였다.

이어 10월 9일에는 장쩌민 주석이 북한 노동당 창당 55주년 기념일을 기해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여 남북관계 및 북·중관계 개선, 북한의 대서방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과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방중(6월), 다이빙궈(戴秉國)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9월), 중국 국방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군사대표단의 방북(10월)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1년 접어들면서 중국을 비공식 방문(1.15~20)하여 장쩌민(江澤民) 주석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친선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회담 전 김정일 위원장은 일행과 함께 상해를 방문하여 포동신개발구, 상해증권교역소, 장강첨단기술개발구 등을 4일간 참관하고 중국의 개혁성과를 '상전벽해(桑田碧海)'로 표현하는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어 9월에는 김정일 방중의 답방형식으로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하였다. 이 방북은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1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탈냉전 이후 양국 동맹관계가 정상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장쩌민(江澤民) 주석 방북시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의 3개 대표론(당이 사회생산력 발전, 선진문화의 진전방향, 광범한 인민의 이익을 대표)을 인정함으로써 중국의 개혁노선을 둘러싸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장쩌민 주석은 식량 20만톤과 디젤유 3만톤을 무상으로 원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후 2001년 7월 장춘윈(姜春雲)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중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4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였고, 2002년 5월 자칭린(賈慶林) 중국 공산당대표단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양형섭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친선 방문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우방귀(吳邦國)상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국가대표단이 북한을 공식 친선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였다.

2004년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4.19~21)하여 새로 출범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정점으로 한 중국정부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일 위원장 방중 이후 북·중간 인사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리창춘(李長春) 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및 정부대표단의 북한 공식 친선 방문(2004.9), 김영남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국가대표단의 중국 공식 친선 방문(2004.10),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방문(2005.1), 박봉주 내각총리의 중국 공식 친선방문(2005.3), 탕자쉬안(唐家璇)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의 북한 방문(2005.7), 우이(吳儀)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대표단 북한 방문(2005.10)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2005.10.28)에서 북·중 관계 발전을 위해 ‘전통의 공고화’, ‘상호신뢰의 강화’, ‘호혜협력의 확대’를 천명하였고, 김정일 위원장도 “조·중 친선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는 것이 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였다.

2006년에 접어들면서 북핵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1.10~18)하여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재차 확인하였으나,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5)와 핵실험(10.9)으로 양국관계는 다시 소강상태에 직면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도 반대하지 않았다.

2007년 김정일 위원장이 주북 중국대사관을 방문(3.4)한 이후, 중국 당 대외연락부대표단 방북(4.17~21), 양국 당 대표단 교환방문(6.5~9),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 방북(7.2~4) 등 활발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소원했던 양국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

2008년에도 북·중간 친선과 협력의 강화 노력은 계속되었다. 1월 11

일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김정일의 중국 방문 2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당·정·군 간부들을 초청하여 기념연회를 개최하였다. 1월 30일에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인 왕자루이(王家瑞)가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을 예방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북한도 적극적으로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3월 1일 김정일이 중국 대사관을 방문하였으며 3월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티베트 사태 관련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4월 28일 평양에서 거행된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행사를 적극 환영함으로써 북·중 우의를 과시하였다.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남은 주북 중국대사를 만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 친선의 강화발전을 다짐하였다.

6월 17일~19일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창건 60주년을 축하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하였다. 시진핑(習近平)의 북한방문은 2005년 10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방북 이후 이루어진 중국의 최고위급 방문으로 핵실험 이후 소원해졌던 북·중관계를 상당히 복원한 것을 의미한다.

북·중간 협력은 경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북핵 실험 이후 가해진 대북 경제제재가 모두 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북·중 경무역의 안정 및 관리를 위해 위안화 결제제도를 단둥을 비롯한 접경지역에 도입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의 훈춘과 북한의 나선을 일체화하는 계획을 북한과의 주요 경협외제로 상정하였다.

2009년 북한과 중국은 수교 60주년 계기 ‘친선의 해’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등을 추진하여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1.22~24)하여 김정일과 면담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김영일 총리가 수교 60주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3.17~21)하여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을 갖는 등 양국간 밀착외교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5.25)으로 양국 관계는 불편한 국면을 맞고

있다. 중국은 핵실험 직후 반대 성명 등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동참하였다.

(4) 러시아

구 소련은 군사적·이데올로기적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정권의 수립을 지원하였다. 1961년 이전 소련은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긴밀화되는 것을 견제하면서 북한의 전후복구 및 군사력 증강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1961년 7월에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이 체결되고, 1965년 1월 코시긴 수상이 평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돈독해졌다. 1965년 5월 「조·소 군사원조협정」이 체결되고, 1966년 6월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1965년 후반기부터 1967년 말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 경제지원 등을 받았다. 이어 1970년대 데탕트 시기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 어느 편에도 편향되지 않는 자주노선을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신냉전이 시작되자 북한과 소련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1980년대 2차례에 걸쳐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1984.5, 1986.10)하였고, 국경협정(1985.4), 원자력발전소 건설협정(1985.12) 및 수산분야 협조협정(1987.7) 등 각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12월 소연방이 해체되고 11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독립국가연합(CIS)이 출범하자 북한은 곧바로 모든 공화국들과 수교함으로써 구 소련권과의 관계 재정립에 주력하였다. 북한은 1992년 이래 차관급 이하의 인사교류를 통해 구 소련시절과 같은 관계복원을 모색하였으나 1995년 9월 7일 러시아가 「조·러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과거의 군사 동맹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북·러 양국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1996년 4월 평양에서 ‘조·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린 것은 그 서막이라 할 수 있다. 당시 북·러는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외무, 대외경제, 농업, 철

도, 경공업, 임업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방향을 모색했으며, 이 회의는 정례화되었다. 양국은 이 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1996년 11월 러시아의 나진-선봉지대 투자확대와 대북 원유제공, 금속공업 제품교환 등을 통한 무역확대를 목표로 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과 러시아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려는 저변의 바탕에는 국제정치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이 깔려있었다. 1997년 1월 21일부터 리인규 외무성 부부장과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북·러 신조약 회담이 시작되어 1998년 12월까지 평양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4차례 진행되었다. 양측은 이를 통해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 폐지와 ‘고려연방제 지지’ 조항을 삽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1999년 3월 17일 평양에서 「북·러 우호선린 협조조약」에 가서명하였으며, 2000년 2월 9일에 정식 서명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 한동안 냉각되었던 러·북한 관계는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다음 해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되었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는데,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언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북·러 공동선언」요지

- ① 쌍방의 협조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북·러 신조약 정신 확인
- ② 상호 침략 또는 안전위협 상황 발생시 지체없이 접촉
- ③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남북의 자주적 통일노력 지지
- ④ 유엔헌장 목적·원칙 존중, 이 헌장을 위협하는 ‘힘의 사용·위협’ 반대, 인도주의 미명하에 내정간섭 반대
- ⑤ 「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 ‘72년」 준수, 「전략공격무기감축조약-2 (START-2)」 이행 및 「START-3」 체결 촉구, 북한 미사일의 평화적 성격 강조, 아태지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TMD)」 구축 반대

●● 46

통일부, 「북한동향」, 제 496호(2000.7.15~21), pp.7~10.

- ⑥ 국제테러와 마약 등 다국적 범죄 반대
- ⑦ 국제 경제협조 확대, 쌍방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연계 적극 발전
- ⑧ 동북아 평화·안정에 협조,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기여 의향
- ⑨ 국방, 과학, 문화, 관광 등 분야별 협조, 김정일 위원장의 방러 초청 등⁴⁶⁾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를 공식 방문(2001.7.26~8.18)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러 수교이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완전 정상화하고 러시아와 외교·경제 등 전방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특히 양국 정상이 발표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2001.8.4)에는 양국간의 협력관계 복원과 TKR(한반도 종단철도)과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 사업 등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

특히 2002년은 북·러관계의 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해였다. 러시아측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폴리코프스키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2회(2월, 4월), 야코블레프 상페테르부르크시 시장(4월), 이바노프 외무장관(7월), 아무르주 행정부대표단(8월), 하바로프스크 정부대표단(10월) 등이 방북하였고, 북한측에서는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3월), 조창덕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4월)에 이어 백남순 외무상이 외무상으로서는 15년 만에 러시아를 공식방문(5월)하였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기념하는 상징물인 ‘조·러 친선각’이 3월 7일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에 개관되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8월 러시아 극동지역을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3년 연속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과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2003년 북·러간 정치대화는 고위급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우호협력 관계가 유지되었다. 로슈코프 외무차관이 푸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1.18~21)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하였으며,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8.27~29)에 북한측의 요청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도 북·러 양국은 정상간 친서교환과 외무장관회담 개최 등을 통해 선린협조관계를 강화하였다. 7월 초에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서울방문에 이어 방북하여, 백남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다. 이들 외상은 최고 지도자들간의 3차례 회담으로 고위급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점에 만족을 표시하고 양국간 친선협조관계 강화, 국제문제와 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2월 9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두만강지역의 국경선 획정에 합의하고 국경조약 의정서에 서명하였다.⁴⁷⁾ 또한 러시아는 세계식량계획(WFP)과의 협조 아래 곡물 35,000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6.25)하였다. TSR과 TKR 연결과 관련해서는 같은 해 7월 열린 청진 철도국과 러시아 극동 철도국 국장간 실무회의에서 나진-햇산 철도 현대화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⁴⁸⁾

북·러 양국은 2005년에도 정상간 친서전달이나 특사파견, 고위인사 교류 등을 통해 기존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북한 외무성이 '핵보유 선언' (2.10)을 하자, 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6자 회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제4차 2단계 6자회담(2005.9.13~20,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자 러시아 외무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한 6자회담의 향후 성공가능성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경우 러시아형 경수로가 지원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제면에서는 세계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러시아 가스프롬사 대표단이 방북(1.20), 박봉주 내각총리 및 정철윤 원유공업성 부상 등과 면담하여 시베리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 및 대북 가스제공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콘스탄틴 폴리코프스키 극동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방북시에는 교역확대 방안과 TSR-TKR 연결사업, 임업 분야에 대한 북한 노동력 유치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였다.

● 47

1990년 9월 소·북한은 국경조약에 합의했지만, 두만강 하구와 동해안에 이르는 40.3km 구간에 대한 접경선 획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1998년 러·중·북한은 두만강 중간선을 경계로 국경선을 획정하기로 했지만 매년 강의 모습이 변화돼 국경선을 획정하지 못했었다.

● 48

북한과 러시아는 2001년 8월 정상회담에서 TKR-TSR 연결에 합의한 뒤 철도협력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2년 11월 2일에는 양해문을 체결하고 '두만강-원산-금강산' 구간 현대화 추진, 합동 타당성 조사(실세 러시아 부단), 자원조달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 등에 합의한 바 있다.

●● 49

블라디보스톡에서 청진간 370km 길이의 초고압(500kV) 직류 송전선을 건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이 계획은 약 2억 달러 공사비와 3년의 공사기간이 예상되고 있다.

●● 50

이 위원회는 장관급 경제협력체로 1996년 4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가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TSR-TKR 연결과 관련해서는 4월에 모스크바에서 제1차 남·북·러 철도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2006년의 북·러관계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주로 안보·군사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7.5)를 한 직후 러시아 외무부는 즉각 박의춘 대사를 소환해 미사일 발사유예의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이는 지역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행동이며, 핵위기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러시아의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10.9)하자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북한을 비난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였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는 김영재 신임 북한대사를 소환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이 NPT 체제에 복귀하고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북·러 양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30~50만kW 잉여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였으며,⁴⁹⁾ 야쿠닌 러시아 국영철도회사 사장이 방북(7.19~20)하여 김용삼 철도상과 TSR-TKR 연결문제, 나진-하산 40km 구간 철도 현대화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밖에도 2003년에 착공된 북한내 최초의 러시아 정교회인 정백사원(성삼위일체성당)이 완공되어 개원(8.13)되었다.

2007년에는 「2.13 합의」 이행을 계기로 양국간의 전통적인 선린관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동북아의 안정 및 러시아 극동·시베리아지역의 경제발전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자회담 참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제4차 북·러 경제공동위원회(3.22~23, 모스크바)⁵⁰⁾가 7년 만에 재개되어 양국 대표는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러시아측은 양국간 경제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의 대러 채무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지속되었다. 4월 모스크바에서 나진-두만강 철도와 나진항 현대화를 위한 북·러 협조 협정이 체결되었고 8월초 평양에서 나진-두만강 철도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 특히, 수교 60주년을 맞아 10월 4일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 개건 착공식을 성대히 진행하였다. 박의춘 외무상은 10월 15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치·경제·문화 교류를 강화키로 합의하였다.

2009년 북한과 러시아는 러시아 외무상 방북(4월) 등 양국간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핵실험(5.25)으로 러시아의 태도가 다소 강경하게 변화되었다. 러시아는 핵실험을 공개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도 동참하였다.

(5) EU 및 동구권

북한은 대외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1984년 9월 ‘합영법’ 제정,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선포 등의 조치를 통해 서방기업과의 합영·합자사업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스웨덴·덴마크·이탈리아를 순방(1993.3.25~4.26)하기도 하였다.

한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차원에서 1995년 3월에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 1996년부터 매년 1,500만 유로를 KEDO에 지원하였고, 1997년 9월 EU가 KEDO의 집행이사국이 되면서부터 북한과 EU간의 관계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1998년부터 북한과의 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EU대표단이 5월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방문하였고, 12월에는 유럽의회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한은 1999년 9월 제54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EU 회원국들에게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유럽 관계개선에 나서기 시작하여⁵¹⁾ 2000년 1월 EU 회원국이자 서방 선진 7개국인 이탈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서방접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51

유럽 의회 대표단은 1998년 12월 7~12일 방북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백남순 외무상 등과 회담을 가졌으며 양측은 “계속 고위급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1998.12.10) 참조.

이어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이 북한과의 수교방침을 천명하였고, 이에 따라 북한은 영국(2000.12.12), 독일(2001.3.1) 등 2000년 이후 8개 국가와 수교하였으며, 2007년 현재 EU의 27개 회원국 중 프랑스·에스토니아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2001년 5월 2일 당시 EU의장이었던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EU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시험 유예', '북한·EU간 인권문제 논의', '북한측 경제조사단 유럽파견' 등에 합의하였다. 페르손 총리의 방북 직후인 2001년 5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대북수교 결정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EU-북한간 인권대화가 200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초로 개최되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였다. EU는 이후 별도로 인권대화를 개최하지 않고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EU-북한간 정치대화에 인권협의를 포함시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U는 1998년 이래 북한과 정치대화를 매년 개최하여 핵문제, 인권문제, 인도적 지원문제, 북-EU 지원확대 및 남북관계 등의 이슈를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 정치대화는 2004년 11월 제7차 회의까지 매년 개최되어 왔으나 2005년에는 EU의 북한인권결의안 유엔상정에 반발한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으며, 2006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EU측이 회의를 보류하였다. 북한과 EU간의 대화는 2007년 3월 및 12월 EU Troika 대표단의 북한방문으로 재개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EU는 2008년 11월 22일 유엔 총회에서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다시 한번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 52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2002년 12월 2일 “북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국민들은 며칠 내로 달러 구좌를 이전시키고 현금을 다른 나라 화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북한 무역은행이 선포했다”고 하면서 “북한내 모든 은행들은 달러 구좌를 유로 구좌로 이전시키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경제면에서도 EU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2002년 3월에 유럽순방에 나선 리광근 무역상을 포함한 경제대표단이 벨기에,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수시로 단기 연수생들을 EU국가에 파견하고 있다. 또한 북한-EU간 경제워크숍이 세 차례(제1차: 2004.6.31~9.4, 제2차: 2005.10.11~14, 제3차: 2007.10.23~24) 개최되었다. 북한은 2002년 12월 대외 결제수단으로 미국 달러화 대신 EU의 유로화를 사용하기로 결정⁵²⁾하는 등 EU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북한·EU간 교역량은 아직 상징

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EU는 대북지원 주요 공여국으로서 북한의 홍수피해가 발생한 1995년 이후 2007년 12월까지 식량 및 농자재 지원, 식수 및 위생상황 개선, 의약품 제공 등에 총 4.8억 유로를 지원하였다. 또한 EU집행위는 EU이사회의 2000년 11월 대북행동지침에 의거 2001년 2월 북한내 기술지원 필요성 및 시범사업 가능 분야를 조사하여 북한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한 시장경제교육 및 에너지분야 기술지원 프로젝트를 계획한 바 있으며,⁵³⁾ 교역상 특혜조치로서 북한 수출품의 EU시장 접근 확대정책⁵⁴⁾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는 북한·EU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EU의 기본입장은 △북한 핵문제는 WMD 비확산 차원의 범세계적 문제이고, △EU가 북핵문제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용의가 있으며, △EU는 KEDO 사업 참여, 대북원조의 주요 공여자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기회가 되면 6자 회담에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2002년 11월 19일 채택된 EU 외무장관회의 결론(Council Conclusion)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 촉구, △EU의 기술지원 및 교역상 특혜조치를 포함한 대북지원 재검토(단 식량 및 인도적 지원은 유지), △한반도 화해과정 지지, △필요시 EU의 대북정책 재검토,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 등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동유럽정책은 중·소관계의 변화속에서 대소관계와 함수관계를 가지고 변화해왔다. 중·소분쟁 이전 북한의 대동유럽관계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의 참여와 협조를 명분으로 하여 전후복구를 위한 경제 및 기술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다.⁵⁵⁾

중·소분쟁 과정에서 북한이 동유럽 국가들과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관계가 다소 소원한 적도 있었으나 북한의 대중·소관계가 균형적 관계로 들어서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가 급진전 되었고 중·소분쟁 시기부터 대소 자주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루마니아와의 관계도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1972년 2월 외교부장 허담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소련, 루마니

● 53

2002년 2월 EU집행위는 대북 기술지원을 위한 국가전략보고서를 채택, 2002-2004년간 EU-북한간 기술지원 협의 틀을 마련하고, 동 기술지원 프로젝트 운영에 3년간 총 1500만 유로를 배정하였으나, 2002년 11월 EU 이사회의 결론에 의거 현재는 추진이 중단 중에 있다. 외교통상부 「EU개황」(2006.9), p.84.

● 54

EU 집행위는 2000년 12월 북한 수출품의 EU 시장접근 확대결정에 따라 2001년부터 북한 섬유류 수입 쿼터를 60%까지 확대하였다. (외교통상부 「EU개황」(2006.9), p.84.

● 55

동유럽 국가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소련·중국에 비하면 규모면에서는 현저하게 적은 것이었으나, 대부분이 1954~1956년 사이의 전후 복구 37년계획 기간과 1957~1961년 사이의 5개년경제계획 기간 중에 제공되었다.

● 56

북한은 한국·헝가리 수교 다음날인 1989년 2월 2일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헝가리의 배신행위에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극렬히 비난한 다음, 헝가리와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후 연이은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서는 커다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57

북한은 동유럽 국가들의 변혁에 대해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은 일시적 현상이며 중국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라며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변하였다. 1991년 및 1992년 김일성 신년사 참조.

아, 유고, 체코, 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을 순방하여 상호 친선과 협력을 다짐하였다. 김일성은 1975년 중국 방문길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를 순방하였고 1984년 5월 소련 방문을 마친 뒤 폴란드, 동독, 체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7개국을 방문, 동독 및 불가리아와 우호 및 협력조약을 각각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와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 강화에 합의하는 등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동유럽 국가들이 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하고 1989년 2월 헝가리를 선두로 하여 1990년 이후에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북한이 그동안 누려온 외교적 독점은 사라지게 되었다.⁵⁶⁾ 특히 1989년 12월에 발생한 루마니아 사태로 차우체스쿠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은 북한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⁵⁷⁾

한편 북한이 정전체제 무실화 책동의 일환으로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대표단을 철수(1993.4.20)시킨데 이어 1995년 2월 28일에는 폴란드대표단을 강제로 철수시키자, 폴란드도 동년 3월 30일 바르샤바 주재 북한대사관 인원을 반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평양주재 폴란드 대사를 소환한다고 발표하는 등 북한과 변화된 동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졌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정치·이념적 동맹관계 대신 경제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발전으로 대동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방향을 선회하였다.⁵⁸⁾ 그러나 북한이 EU 중심의 서유럽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주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동유럽과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2000년 이후 동유럽국가와의 교류는 2000년 2월 요바노비치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의 평양방문, 2001년 3월 폴란드와의 대사급 관계 회복, 2004년 5월 폴란드 외무성대표단 평양 방문, 2004년 6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의 폴란드·불가리아 방문 등 소수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는 2004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7개국,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EU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성격이 변화되었다. EU에 가입한 이들

동유럽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EU의 대북정책 기조와 큰 틀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관계개선을 모색할 요인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한편, 북한은 2009년 연초부터 외교역량 확충을 위한 EU와의 접근 노력에 주력하였다. 북한의 박경선 당 국제부 부부장(1월) 영국 방문, 영국 국회 대표단(2월) 방북, EU 트로이카대표단 방북(3월), 유럽의회 사회당대표단 방북(3월) 등을 통해 EU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핵실험 정국으로 북한과 EU 사이의 외교관계는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핵실험(5.25) 이후 EU 정상들의 의장국 결론(유엔 안보리 제재 조속 이행) 채택(6.19) 등 대북 강경입장이 지속되고 있다.

(6) 비동맹 국가

북한은 1955년 ‘반동회의’ 이후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설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 4월 제3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반동회의의 기본원칙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레닌적 원칙을 견지하며 자주권의 호상 존중과 평등권에 입각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 국가들과의 정치적 및 실무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비동맹외교 방향의 전환을 밝혔다. 이후 북한은 ‘반제·반미 공동전선’의 형성과 이에 따른 북한 통일방안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목표를 두고⁵⁹⁾ △평화 공존노선 표방, △반제·반식민주의 및 민족해방투쟁지원 선전, △국제 공산주의 선전기구 가입, △인민외교, △문화 및 경제교류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비동맹 나라들과의 외교관계 확대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이 비동맹 국가들과의 관계강화에 주력한 것은 다수가 신생 독립국으로 이루어진 비동맹 그룹국가들이 UN에서 수적 우세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UN 문제화와 관련하여 비동맹회의 국가들의 협조를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부상하였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 외상회의에서 정식 회원

● 58

북한은 1995년 들어 외교부 대표단을 동유럽에 파견 루마니아(1995.11.23), 유고(1995.11.15), 마케도니아(1995.11.20), 불가리아(1995.11.23) 등과 '외교부 사이의 협조 의정서'를 각각 체결하는 가 하면, 1996년 1월 19일에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대시급 외교관계를 수립 이 지역에서의 외교적 토대를 새롭게 마련하였다. 또 당시의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중공업과 군수공업 분야에서의 선진기술을 획득코자 루마니아(1994.9.25), 유고(1995.10.23), 불가리아(1996.12), 폴란드(1996.11.27), 헝가리(1996.12.10)와 과학기술협조의정서를 각각 체결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1997년부터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실험에 들어간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 증진을 위한 대외정책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마케도니아(1997.10.15), 루마니아(1998.1.23), 유고(1998.8.26), 슬로바키아(1998.10.27), 불가리아(1999.6.16) 등의 국가들과 투자보장협정 및 이종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였다.

● 59

「노동신문」(1974.8.11)에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의 제지지 세력은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국으로 가입한 이래 비동맹회의에 지속적으로 한반도문제를 상정하여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등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1978년부터는 비동맹회의가 열리기 전에 당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의 연석회의를 열어 비동맹회의에 임하는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방침까지 취하였다. 이러한 결과 1980년대에는 ‘비동맹 식량 및 농업분야 조정국회의’ 등 비동맹 관련회의를 평양에서 16회 개최하였고, 제8·9차 정상회의에서 부의장국으로 피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비동맹 국가들이 대결보다는 협조를,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도 대폭 향상됨에 따라 비동맹회의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1989년 9월 유고에서 개최된 제9차 비동맹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문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수정안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로 비동맹 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협조가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1992년 9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0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 비동맹운동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1995년 10월 콜롬비아에서 개최된 제11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문제 결의안’에 대미 평화협정 체결내용을 삽입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철회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은 비동맹 국가들과의 우호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⁶⁰⁾ 비동맹 운동의 약화와 변화된 분위기 등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2003년 2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제13차 비동맹정상회의에 참석하여 NPT 탈퇴 등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였으나, 주최국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북한의 NPT복귀를 촉구하였다. 또한 최종문서의 한반도 조항에 당초 북한이 의도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규탄 및 북·미 불가침협정 체결 촉구 등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대했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2006년 9월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제14차 비동맹정상회의에서도 미국

●● 60

백남순 외무상은 2001년 8월 평양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40주년 기념연회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비동맹운동의 이념과 근본 목적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의 대북제재를 미국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지지여론을 유도하였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는 못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8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비동맹운동 각료회의 선언문 ‘한반도 조항’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만을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6.15, 10.4선언을 포함한 모든 남북간의 합의와 핵문제에 관한 『9.19공동성명』 및 6자회담에 관한 합의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2009년 북한은 미얀마, 베트남, 몽골, 중동국가 등 비동맹국가 순방외교 등을 통한 협력 외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중남미의 쿠바·페루·브라질을 순방(4-5월)하였으며,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의 남아공·짐바브웨를 순방(5월)하는 등 비동맹 외교활동에 주력하였다.

그간 동남아 국가들은 북핵 문제를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북한을 설득하기 보다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여 왔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을 계기로 태도 변화가 일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5.25) 이후 ASEAN·EU 외교장관회의(5.27~28)에서 대북 규탄성명을 채택한데 이어 한(韓)·ASEAN 특별정상회의(6.1~2)에서도 북핵 관련 언론 성명이 채택되었다.

(7) 유엔 등 국제기구

북한은 1948년 제3차 UN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되고 1950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이 침략자로 규정되자 UN의 권위와 기능을 부인해 왔다. 1953년 휴전회담에서 북한은 UN군사령관과 휴정협정을 체결한뒤 UN을 미국과 동일시하면서 남북한을 포함한 유관국회의를 제의하는 등 한국문제를 UN으로부터 분리시켜려 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이 이른바 자주외교를 강조하면서부터 UN에 대한 자세는 경색되어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UN을 부정하는 입장을 더욱 강화하였다.

● 61

김일성은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차 회의 사정연설(1990.5.24)시 발표한 '조국통일 5개방침 제3항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우선 단일의식 아래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 62

북한은 외교부 성명(1991.5.27)을 통해 최초로 UN가입 방침을 밝히면서 "남한만이 단독으로 가입한다면 UN무대에서 전체민족의 리익과 관련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 부득이 가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였다. 그리고 남북한 UN동시 가입이 결정된 9월 18일에도 외교부 성명을 발표, "하나의 조선으로 조국과 민족을 통일할 데 대한 기본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UN대표권 획득과 남북한 UN동시 초청안이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유리하게 형성되자 북한의 UN외교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6월 23일 한국이 남북한 UN 동시가입 불반대를 선언한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발표하자, 북한도 같은 날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여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을 내세우면서 UN외교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73년 9월 5일 UN본부 상주대표부를 개설하였고 제네바에 있는 UN사무국에도 상주 옵서버대표부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부터 각종 UN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등에도 가입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급속한 경제력 신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외교역량이 강화되고 동서화해 분위기와 소련 및 동유럽의 개혁·개방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북한은 국제외교 무대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UN 전략도 크게 위축된 경향을 보였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일시 단일의식하의 공동가입⁶¹⁾을 주장하는 등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은 날로 심화되는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북한 동시가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에서 남북한이 나란히 UN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⁶²⁾

2000년대 들어 전방위 외교활동을 강화한 북한은 유엔외교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띠어 왔다. 2002년 9월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연설에서 8~9월에 개최된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미국도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실천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였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유엔의 주요위원회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반테러활동, 군축 및 핵무기의 완전 파괴, 개도국들을 위한 공정한 국제경제·무역질서 구축 등을 촉구하였고 '인권개념의 상대성'을 이유로 내세워 서구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면서 북한의 유엔외교는 약화되었고, 각종 기구의 북한지원도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또

한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 상황 개선촉구 결의안’ 채택과 PSI구성 등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및 불법행위에 대해 유엔과 각종 국제기구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자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에 의해 제기된 북한의 UNDP 자금 전용의혹도 유엔에서의 북한의 입지를 크게 흔들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규탄 의장성명이 채택되었고, 6월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결의되었는 바,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유엔의 조치들이 부당하다고 비난하였다.

시기별 대UN관계 변화과정

시기	연도	주요입장	비고
한반도문제에 관한 유엔 간섭 거부	1948 ~ 1953	유엔간섭 거부 - 유엔에 의한 남한 지역 단독선 거 반대	· 1949, 1952 유엔가입 신청 · 1950. 6.28 안보리,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 · 1953. 7.27 유엔군사령관과 휴전협정 체결
한반도문제의 유엔상정거부	1954 ~ 1970	· 유엔을 미국과 동일시 · 통일을 위한 남북한 포함 유관 국회의 제의 · 유엔관능 부인	· 1960. 8.14 김일성, 남북 연방제 제의 · 1966. 8.12 자주노선 선언 · 1969. 10.29 서독 할슈타인 원칙 폐기
한반도문제의 선별적 유엔 상정	1971 ~ 1991.8	· 유엔과 미국 분리 시도 - 주한미군의 유엔명칭 사용 배제 · 한반도문제의 유엔 문제화 시도 · ‘고려연방국’ 국호로 유엔 가입 제의 · ‘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반대 - 유엔의 목적·원칙 존중 · 단일의식 공동가입 제안	· 1971. 4.12 허담, 평화 통일 8개항 제시 · 1972. 7. 4 남북 공동성명 · 1973. 9. 5 유엔대표부 개설 · 1974 제29차 유엔총회, UNCURK 해체 안 결의 · 1975 9.22 제30차 유엔 총회, 남북한 지지 두개 결의안 동시 통과 · 1976. 9 공산측 결의안 철회
유엔 동시 가입	1991.9 ~ 현재	· 단일의식 입장 견지 · 핵문제관련 IAEA 결의에 유엔의 추종반대 · 새로운 평화체제 창설에 유엔 관심 촉구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 요구 · 국제관계에서의 자주권 존중 · 유엔활동의 민주적 개혁 · 안보리에 개도국 포함 요구	· 1991. 9.17 남북한 UN 동시가입 · 1999. 9.25 제54차 총회 기조연설 및 백남순 외무상, 유럽국가 등 20여 개국과 외무장관회담 개최 · 2003. 4. 9 UN안보리 북핵 문제 토의

남북한 국제기구 가입 대비

(2009.1 현재)

구분	UN 체제 기구	정부 간 기구	합계
한국	38	75	113
북한	28	18	46

※ 출처: 외교통상부, 「2009 외교백서」, p. 247

남북한 동시 가입한 국제기구

(2009년 현재)

기구명	한국	북한	소재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이탈리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1978	1986	로마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비엔나
만국우편연합(UPU)	1949	1974	베른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제네바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4	1974	뉴델리
FAO·WHO 공동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1981	로마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제네바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프랑스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8	파리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1987	마드리드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위성기구(APT)	1979	1994	방콕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워싱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04(준회원)	제네바
국제수역국(OIE)	1953	2001	파리
섬유수출국 개도국 기구(ITCB)	1984	1999	제네바
인도양 수산위원회(IOFC)	1967	1974	로마

기구명	한국	북한	소재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생물다양성협약(CBD)	1994	1994	캐나다
개도국 간特惠무역제도(GSTP)	1989	1989	제네바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비엔나
유엔환경계획(UNEP)			나이로비
유엔아동기금(UNICEF)			뉴욕
유엔개발계획(UNDP)			뉴욕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뉴욕
유엔봉사단(UNV)			본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뉴욕
유엔인구기금(UNFPA)			뉴욕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HR)			제네바
세계식량계획(WFP)			로마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가자 등
유엔정주계획(UN-HABITAT)			나이로비

※ 유엔 산하기구(Funds and Programs)의 경우, 유엔 회원국 모두가 회원국으로 간주되므로 가입연도 미표기

※ 출처: 외교통상부, 「2009년 외교백서」, pp. 247~248

남북한 모두 가입한 유엔 및 산하·전문·독립기구

(2009년 현재)

기구명	한국	북한	소재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로마
만국 우편연합(UPU)	1949	1974	베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국제통화기금(IMF)	1955	-	워싱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	워싱턴
국제개발협회(IDA)	1961	-	워싱턴
국제금융공사(IFC)	1964	-	워싱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CSID)	1967	-	워싱턴

기구명	한국	북한	소재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비엔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1978	1986	로마
국제노동기구(ILO)	1991	-	제네바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1987	마드리드
세계무역기구(WTO)	1995	-	제네바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1994 탈퇴)	비엔나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	칠레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제네바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비엔나
유엔환경계획(UNEP)			나이로비
유엔아동기금(UNICEF)			뉴욕
유엔개발계획(UNDP)			뉴욕
유엔여성개발기금(UNIFEM)			뉴욕
유엔봉사단(UNV)			본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뉴욕
유엔인구기금(UNFPA)			뉴욕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HCHR)			제네바
세계식량계획(WFP)			로마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UNRWA)			가자 등
유엔정주계획(UN-HABITAT)			나이로비

※ 출처: 외교통상부, 「2009년 외교백서」, p. 249

남북한 모두 가입한 정부 간 기구

(2009년 현재)

기구명	한국	북한	소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	파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	싱가포르
개도국 간特惠무역제도(GSTP)	1989	1989	제네바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	필리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0	-	영국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980	-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	코트디부아르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	칼라룸푸르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	호주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1982	-	칼라룸푸르

기구명	한국	북한	소재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	서울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	부산
국제무역센터(ITC)	1964	-	제네바
국제결제은행(BIS)	1997	-	스위스바젤
세계관세기구(WCO)	1968	-	벨기에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	도쿄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4	1974	뉴델리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	뉴델리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	방콕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1961	-	마닐라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1981	로마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	스리랑카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	마닐라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제네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04(준회원)	제네바
국제도량형국(BWM)	1959	1981	프랑스
지구환경금융(GEF)	1994	-	워싱턴
국제남·아연연구그룹(ILZSG)	1987	-	포르투갈
상품공동기금(CFC)	1982	-	제네바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1984	1999	제네바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헤이그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1971	-	대만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	워싱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마드리드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ROM)	1968	1986(1996 탈퇴)	로마
국제이동위성기구(IMS0)	1985	-	영국
국제전기통신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워싱턴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8	파리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1950	-	방콕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	바베이도스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	가나 아크라
인도양수산위원회(IOFC)	1996	1974	로마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67	-	세이셸
동남대서양수산위원회(ICSEAF)	1981	-	-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	-	캐나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985	-	호주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	영국

기구명	한국	북한	소재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	캐나다
국제이주기구(IOM)	1988	-	제네바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	로마
국제사탕기구(ISO)	1993	-	영국
생물다양성협약(CBD)	1994	1994	캐나다
국제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	로마
국제수역국(OIE)	1953	2001	파리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	런던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	일본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국제해저기구(ISA)	1995	-	멕시코
Wassenaar 체제	1996	-	오지리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	헤이그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	파리
국제식물신품중보호연맹(UPOV)	2002	-	제네바
미주개발은행(IDB)	2004	-	워싱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2006	-	알마티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06	-	벨기에
국제미작연구소(IRRI)	1991	-	필리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1956	폴란드
아시아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퇴치를 위한 지역협력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 ISC)	2006	-	싱가포르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6	-	오지리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	대만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	호주

※ 출처: 외교통상부, 「2009년 외교백서」, pp. 250~251

다. 수교 현황

북한은 2008년 현재 160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나 한국의 188개국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다.

남북한 수교현황

(2009년 현재)

지역	총국가	총수교국		동시 수교국	단독 수교국		미수교국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아주	36	36	25	25	11	0	0	11
미주	35	34	24	23	11	1	1	11
구주	54	53	49	48	5	1	2	6
중동	20	19	17	16	3	1	1	3
아프리카	46	46	45	45	1	0	0	1
계	191	188	160	157	31	3	4	32

※ 출처: 외교통상부, 「2009년 외교백서」, pp. 242~244

남북한 수교관계의 특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초기의 남북한은 내부 정치체제의 정비와 전쟁 피해복구에 전념함으로써 외교활동은 진영내 국가들에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1953년까지 한국은 미국을 위시하여 유럽·아시아의 자유진영 국가 6개국과 그리고 북한은 소련·중국 및 동구 등의 12개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 또한 1953년 7월 휴전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에도 한국은 반공노선 고수와 할슈타인 원칙⁶³⁾ 준수 등으로 중립국과의 수교는 제한되었으나 자유진영 국가와의 관계발전에 주력하여 1960년까지 16개국과 수교하였다. 북한도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 외교에만 노력하여 1960년까지 한국과 같이 16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소대립의 심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가들의 국제적 지위향상 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배경으로 한국은 중립국들과의 외교 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외관계를 급격히 신장시켜 나아갔다. 그 결과 1961년부터 1971년 사이에 한국은 아프리카 21개국 및 미주권 국가를 비롯하여 총 67개국과 새로 수교함으로써 1971년에는 총 수교국이 83개국에 달해 1960년의 16개국에 비해 무려 5배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에 북한은 이른바 반제·반식민 해방을 내세우면서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제국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1966년 8월에는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을 선언하면서 다변외교에 치중하였다. 이

●●63

야당이 다른 나라와는 정치·경제적 교류를 하지 않는다는 외교정책 원칙을 지칭한다. 1966년 서독 외무차관 할슈타인이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서독은 1960년대에 이 원칙을 폐기하였다.

기간 동안에 북한도 대외활동에 많은 성과를 보여 1971년에는 총 수교국이 35개국에 이르렀다.

197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에서 제3세계 국가들의 영향력 증대, UN의 성격변화 등으로 한국의 수교국 확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동서 화해라는 새로운 국제정세에 힘입어 1973년 6월에는 비적성국가에 대해 문호개방을 밝히는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을 천명하는 등 이념을 초월한 실리외교에 박차를 가하여 1980년 말에는 114개국과 수교하게 되었다.

북한도 1972년을 ‘외교의 해’로 정하고 세계 각국에 여러 형태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대외활동을 강화하여 1980년 말에는 총 수교국이 98개국에 달하였다.

1980년대의 한국은 경제발전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으로 국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7·7특별선언」을 발표하고 꾸준히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때마침 민주화개혁을 추진하고 있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달아 국교를 맺고 1990년 9월에는 소련과 수교함으로써 총 14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수교국 확대에 있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1983년의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등 잦은 국제테러 행위와 북한 외교관들의 밀수행위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단교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진출을 꾸준히 시도하여 콜롬비아(1988), 페루(1988), 안티구아 바부다(1990) 등과 새로 수교하였다.

1990년대 들어 한국은 소련 및 모든 동유럽 국가, 그리고 그동안 친북 일변도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수교함으로써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의 외교역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1992년의 한·중 수교는 북한에 충격과 함께 국제정세의 변화를 실감하게 하였다. 북한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소연방 탈퇴국가들과 1993년까지 수교를 마쳤으며 유럽의 마케도니아(1993.11.2), 그루지아(1994.11.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996.1.19), 아프리카 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1998.8.10), 동남아시아의 브루나이(1999.1.7)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실제공관의 설치·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사정 악화로 1998년 3월 외무성의 재외공관 30% 정도 감축방침 발표 이래 공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⁶⁴⁾ 1998~2001년간 폐쇄된 공관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이 7개로 가장 많고 유럽지역이 6개, 중동 2개, 중남미 2개, 아시아 1개 공관이 감축되었다.⁶⁵⁾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EU 8개국을 포함,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터키, 캐나다, 브라질, 뉴질랜드,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바레인 등과 수교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신생독립국인 동티모르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 시기에 대외관계를 확대하면서 주요 거점지역에 공관을 새로 개설하였는 바, 2000년에 홍콩총영사관 및 이탈리아대사관, 2001년에 독일대사관, 2002년에 오스트레일리아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2003년에 영국대사관을 개관하여 2008년 11월 현재 총 49개 재외공관을 유지하고 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16개, 유럽이 15개, 중동·아프리카가 13개, 미주가 5개이고, 상주대사관 42개, (총)영사관 3개, 대표부 4개 등이다.

●● 64

북한은 이미 1998년에 지메리카, 베네수엘라, 포르투갈, 나카라과, 튀니지,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라트비아, 콩고, 부룬디, 모잠비크, 헝가리 등 11개 공관을 폐쇄하였다.

●● 65

1998~2001년간 아프리카에서는 가나, 세네갈, 말리, 짐바브웨, 토고, 앙골라, 유럽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유고,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중동에서는 요르단과 알제리, 아시아에서는 몽골,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기아나의 북한 공관이 폐쇄되었다.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09년 현재)

지역	총재외공관		구분	구분별 재외공관	
	남한	북한		남한	북한
아주	44	16	대사관	24	14
			총관영사관	20	2
미주	35	5	대사관	21	4
			총관영사관	13	0
			대표부	1	1
구주	44	15	대사관	34	12
			총관영사관	7	1
			대표부	3	2
중동	19	6	대사관	17	5
			총관영사관	2	0
			대표부	0	1
아프리카	13	7	대사관	13	7
계	155	49			

※ 출처: 외교통상부, 「2009년 외교백서」, p. 245

라. 민간대상 대외선전 및 동포조직 현황

●● 66

현 국제정세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제5기 제3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허담 보고(1971.11.15) 참조: 1991년도 및 1992년도 김일성 산책사에서 이 같은 기본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외국의 민간을 주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대외선전은 공식적 외교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국제혁명역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북한은 ①주한미군 철수 등 한반도에서의 공산화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 ②북한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한국의 고립화, ③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④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및 세습체제의 당위성 선전, ⑤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주장 등을 대외선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민간외교 활동은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지역별 외교목표에 맞춰 전개되어 왔다. 사회주의권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 견지'와 '사회주의운동의 통일단결 강화'를 주장하였다. 비동맹권에 대해서는 '반제·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연대성을 표방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선전에 주력하였다. 서방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 평등과 주권존중'을 내세워 인민들의 단결을 주장하면서 평화이미지 부각에 중점을 두었다.⁶⁶⁾

대민간외교 활동도 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노동당의 지도와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외교 및 대외선전 활동의 총체적인 계획은 당 선전선동부가 담당하며, 집행은 당 국제부가 지휘·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의 선전활동은 대부분 해당지역의 친북단체들을 주로 동원하고 있다. 주요 민간외교 조직으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대외문화연락위원회가 있다. 1994년 10월에 창설된 '아·태평화위'는 미국과 일본 등 서방권은 물론 대남업무도 담당하며 1990년대 후반들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 기구의 활동범위는 한반도 통일, 핵·군축, 지역민족간 분쟁, 환경 보호와 같은 정치·경제·문화·체육·관광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1956년에 설립된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당의 외곽기구로 민간차원

의 학술·문화교류를 통해 상호간의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당 국제부의 지도하에 주로 민간외교를 담당하는 대외문화연락위원회는 친선대표단을 구성, 해외각국을 순방하기도 하고 문화교류협정을 조인하는 일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기타 외곽단체로는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위원회, 각국과의 친선협회 등이 있으며 직충, 청년동맹, 여맹 등의 근로단체도 각각 대외사업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밖에 북한의 해외 친북단체 조직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경제난 등으로 북한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실질적 활동은 매우 미미한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⁷⁾

북한의 주요 대외활동 조직의 하나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을 들 수 있다. 1955년 5월 25일 조직된 조총련은 재일교포들을 친북성향으로 전향시키고 한반도의 공산화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김일성저작선집’과 ‘혁명전통교양’ 자료들을 각국어로 번역출판하는가 하면 ‘김정일 장군 약사’ 등 김정일 우상화 자료를 출판하였으며 신문·잡지·정기간행물들을 발간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⁶⁸⁾ 뿐만 아니라 조총련에 대해서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대를 이어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북한은 조총련에 대해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1957년부터 2003년 4월 15일까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명목으로 149차에 걸쳐 총 451억 616만 3,000엔을 송금했다고 밝히고 있다.⁶⁹⁾ 그러나 북한이 조총련으로부터 갖가지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과 물품을 헌납받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조총련계 실업인들과의 합영을 통해서도 적지 않게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은 조총련을 통해 1959년 12월 14일부터 1984년까지 187차에 걸쳐 총 93,342명의 조총련계 재일동포를 북송시켰다.⁷⁰⁾ 그런가 하면 1967년 제4기 최고인민회의부터는 조총련 대표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북한도 시대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조총련의

● 67

친북단체는 ①친선협회 ②김일성연구소 ③연대성위원회로 크게 나뉘는데 친선협회는 상대국의 좌경 또는 친북인사들로 구성된 인민외교의 전위단체로서 집회, 성명, 전시회 등을 통해 북한의 우월성 선전에 활용되고 있다. 김일성연구소는 ‘김일성 노작’에 대한 학술과 토론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일성 선전과 주체사상의 해외 전파에 이용되고 있다. 연대성위원회는 친북·반한 활동을 위한 정치단체로서 집회, 성명 등을 통해 북한 통일방안 선전과 지지회 등에 활용되고 있다.

● 68

조총련의 간행물로는 「조선산보」, 「조국」, 「조선화보」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인민조선」 등의 정기간행물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국에 배포되고 있다.

● 69

「조선중앙방송」(2003. 4.15).

● 70

북한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25년간 187차에 걸쳐 10만 여명의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 안겼다”고 선전하였다. 「조선중앙연감」(1985), p.210.

● 71

학습조는 1957년 5월 김일성에 대한 충성과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투사집단 양성을 목적으로 조총련 산하에 결성된 비밀 조직이며 2002년 현재 조총련 본부, 지방본부, 산하단체, 사업체 등에 약 천여 개의 개조는 3~7명으로 구성가 활동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상화 철거는 조총련계 학교가 교조적 정치교육으로 인해 학생이 자습적으로 감수, 조총련 자녀들의 충원이 위협받고 있던 상태에서 진학률을 높여 보려는 취지에서 지시된 것으로 보인다.

변화를 시도하였다. 1998년 5월 22일 제18차 전체대회를 열어 한덕수 의장-서만술 제1부의장-허종만 책임부의장 체제를 정립하고,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의장단을 4명으로 줄이는 등 조직정비를 단행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였다.

또한 1999년 4월 서만술 제1부의장 방북시 ‘조총련을 일본실정에 맞게 개혁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동년 9월 중앙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 동포생활과 권익옹호를 최우선시하는 사업방침을 확정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1년 조총련을 결성한 이후 46년간 의장으로 재임하여 온 한덕수가 사망하고 서만술이 의장에 공식적으로 취임함에 따라 더욱 활발해졌다.

서만술 의장은 2001년 7월 일본 각지에서 열린 각 지부별 정기대회에 참석, 조총련의 기층조직인 지부와 분회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조총련의 ‘애국사업’은 앞으로 “동포밀착, 동포복무, 동포주인형으로 혁신될 것이다” 라면서 동포 중심의 조총련 활동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일본의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조총련의 돈줄인 조은(朝銀)신용조합들의 파산이 잇따르고 2001년 11월에는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일본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조직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1972년부터 외교기관에 준해 ‘고정자산세’와 ‘부동산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던 조총련 시설에 대해 2003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2002년 8월 방북한 허종만 조총련 책임부의장을 통해 조총련의 조직과 교육을 개혁할 수 있도록 학습조를 폐지하고 조총련 산하 초·중등학교에서의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대신 자연스러운 활동사진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였다.⁷¹⁾

이와 같이 북한과 정치·사상·경제적으로 깊은 연계를 맺고 있는 조총련은 북한의 대외선전기구 및 한반도 공산화혁명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던 기능에서 일부 벗어나 동포권익옹호 단체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등 현실 적응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6년 9월에 출범한 아베정권이 ‘만경봉호’ 입항금지, 대북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조총련의 재정은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7년 초부터는 대북지원이 의심되는 조총련 인사들을 ‘불법행위 단속’을 명목으로 체포하고 조총련 사무실을 수색하는 등 대 조총련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⁷²⁾

북한은 이에 맞서 외무성대변인 성명(2.19) 및 각급 언론보도 등을 통해 “조총련 탄압은 곧 북한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이자 반인륜적 범죄라고 주장” 하면서, 아베정부가 “조총련 탄압을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중국에도 재일 조총련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했는데, 1998년 8월 15일 통일대축전을 전후한 시점에서 1991년경 결성된 기존의 친북단체 ‘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재중 조총련)로 확대·재편하였다.⁷³⁾ 재중 조총련의 의장은 재중조선공민총연합회 의장이었던 양영동이 승계하였다. 북한의 평양방송이 “재중 조총련이 2001년 3월 조직 결성 10돌 기념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영도아래 통일애국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도⁷⁴⁾한 것으로 볼 때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밖에도 북한은 미국 내에서 여러 단체로 흩어져 친북활동을 벌여왔던 한인단체들을 규합해 1997년 1월 뉴욕에서 ‘재미동포 전국연합회’를 결성, 함성국(미국명 마이클 함) 목사가 초대회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중앙회와 3개 지역위원회로 구성됐으며 주로 정치외적인 재미동포의 북한 방문과 식량지원 같은 인도적 활동에 치중하고 필요시 미국정부에 대해 대북 경제제재의 완전 해제와 같은 일종의 로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들 외에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단체로는 ‘국제고려인 통일연합회’ (고통련), ‘재독일 동포연합회’와 ‘재호주 동포연합회’ 등이 있다.

● ● 72

2007.6.18 도쿄지방법원은 일본정부의 부실채권 정리기관인 「부실채권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을 상대로 낸 소송(2005년 제기)에서 조총련에 청구금액 전체 약 627억 엔(약 5천억 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627억 엔의 변제를 위한 가집행도 인정하여 조총련이 변제이행을 하지 못하면, 중앙본부 건물 및 소유자산에 대한 강제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본부 건물·토지 매각의혹 등과 관련하여 허준만 조총련 책임 부의장 등 고위간부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 73

「노동신문」(1998. 8.13) 참조.

● ● 74

「평양방송」(2001.4.11).

05

경 제

- 1. 경제체제
 -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 2. 경제정책의 기초
 -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 나. 중공업 우선정책
 - 다. 군사·경제의 병진
 - 라. 경제관리 개선
- 3. 경제관리
 - 가. 관리원칙
 - 나. 관리방법
 - 다. 관리체계
- 4. 경제계획 및 실적
 -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 나.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 다. 내부정비 조치 및 부문별 경제계획 추진
- 5. 분야별 현황
 - 가. 국민소득
 - 나. 재정
 - 다. 화폐·금융
 - 라. 산업부문별 실태
 - 마.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V. 경 제

1. 경제체제

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¹⁾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1998년 개정헌법에 의하면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²⁾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³⁾ 북한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소유는 축소하는 대신 개인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범위는 확대하였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 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여성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⁴⁾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⁵⁾

사회협동단체 소유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협동적 소유이

●●1
『조선대백과사전 1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88.

●●2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3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4
사회단체는 1998년 개정 헌법에서 최초로 소유주체로 규정되었다.

●●5
사회주의 헌법 제22조.

●● 6

「조선대백과사전 13」, p88.

●● 7

사회주의 헌법 제23조는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협동단체 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 8

사회주의 헌법 제24조, 이 중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1998년 헌법에서 개인소유의 대상을 확대한 부분이다.

●● 9

사회주의 헌법 제24조.

●● 10

「조선로동당력사교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16.

다.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는 동일한 유형에 속하지만, 북한은 전인민적 소유형태를 더 고차원적 소유형태로 본다. 즉 두 소유 형태는 “사회화 수준에서 차이를 가질 뿐 사적 소유의 폐절에 기초하여 발생한 사회적 소유로서 동일한 유형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다.⁶⁾

그러나 협동적 소유는 “소상품 생산을 기초로 하는 사적 소유로부터 전인민적 소유어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소유형태”로서 사회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전인민적 소유로 이행하게 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⁷⁾ 현재 북한에서 협동적 소유의 지배적인 분야는 농업 부문이며 협동농장이 그 전형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개인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개인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사회주의에서의 개인소유’라고 강조한다.⁸⁾

개인소유의 대상은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에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로 구성된 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소득과 저축, 가정용품, 일용소비품 등이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소유물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⁹⁾ 그리고 각종 수매기관과 농민시장은 개인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에서 북한기관, 기업소, 단체 등이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 창설운영을 장려한다”고 하여 주로 경제특구에서의 외국인의 개인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1946년에 착수하여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같은 해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¹⁰⁾ ‘민주개혁’이라는 이름의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법령을

발표,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의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 부문을 계속 확대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1953년 휴전 이후부터 사회주의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¹⁾

북한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사유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소유제도는 북한 주민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경제의식, 경제기구의 조직과 기능 등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현격한 차이를 갖게 되는 근본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시장관계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소유제도의 엄격한 틀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개인소유가 단지 소비품의 범주를 넘어서, 소규모이지만 일부 장사 자본의 형태를 띠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국·공유 및 사유화 비율

구분	연도	1949	1953	1956	1957	1958.6	1958.10
	공 업	국·공유	90.7	95.1	98.3	98.7	100.0
사유		9.3	3.9	1.7	1.3		
농 업	국·공유	3.2	32.0	80.9	95.5	98.6	리단위 통합완료
	사유	96.8	68.0	19.1	4.5	1.4	
상 업	국·공유	56.5	67.5	84.6	87.9	100.0	
	사유	43.5	32.5	15.4	12.1		

※ 출처: 「통일조선년감」(동경: 통일조선신문사, 1967·1968), p.830.

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원칙 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경에 이르러 경제난에 따른 물자부족 때문에 조직과 운영에서 많은 변화를 맞이했다.

북한경제는 “중앙집권화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11

구체적인 생산수단의 집단화 과정은 이 책의 제Ⅳ장-제4절의 경제계획 및 실적 중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 구축기' 참조.

●● 12

「조선대백과사전」(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433.

●● 13

앞의 책, p.437.

●● 14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582~608.

경제”이다.¹²⁾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화체제는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체제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 계획의 일원화체제는 경제계획의 작성 및 집행에 있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공장·기업소 등 하부 경제단위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내각의 각 위원회 및 성(省)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계획의 세부화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리도록 하기 위해 취해지는 계획의 원칙적 체계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중요한 것만을 계획화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경영활동을 빈틈없이 맞물리게 함으로써 사소한 자연발생적인 요소도 허용하지 않는 계획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¹³⁾

이러한 계획의 세부화는 계획의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계획의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4단계를 거쳐왔다.¹⁴⁾

제1단계는 예비숫자 작성단계로서 하부 생산단위에서 상향으로 작성 제출된 계획 숫자를 지구계획위원회 및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省)에서 통합, 국가계획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이다.

제2단계는 당중앙위원회가 별도로 제시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기초로 하여 보고된 예비숫자를 통제숫자로 작성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통제숫자는 계획시기의 경제발전 방향과 규모 및 균형을 규정한 정부의 지령이며 계획작성의 기준으로서 예비숫자와는 달리 당의 지령으로서 거의 법적 의무성을 띠게 된다.

이 단계에서 공업총생산액과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규모, 농업생산 규모, 수송규모, 상품유통액, 각종 소비재 생산관련지표, 기본건설 투자규모 등이 통제숫자를 통해 명시된다. 통제숫자는 국가계획위원회

가 하부로부터 올라온 예비숫자를 참고로 작성하며 당의 비준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3단계에서는 비준된 통제숫자가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해 다시 하부단위기관으로 시달되는데, 이 통제숫자를 근거로 해당 계획부서에서 계획초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국가계획위원회는 종합적인 계획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때 각각의 하부단위기관들은 하달된 통제숫자에 의거하여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다. 통제숫자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획초안에 그 근거를 밝혀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통제숫자가 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4단계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출한 계획초안을 내각 전원회의나 당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확정하는 마무리 과정이다. 전망계획¹⁵⁾에 대해서는 형식상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은 후에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확정된 계획의 수행은 법적 의무로 되며, 이러한 전 과정은 국가에 의해서 지도·통제된다.

이러한 체제는 1990년대초부터 경제난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었다. 중앙정부가 기관기업소에 계획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변화한 상황에 맞게 계획체계를 변형시켜야 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의해 계획체계에 수정이 가해졌다. 전략적·국가적인 중요계획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수립하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해당 기관·기업소·지방행정단위 등이 수립토록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장·기업소에 대한 독립채산제 강화, 국가경제기관의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기관, 기업소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세부계획의 신속적 운영도 허용하고 있다.

● 15

전망계획은 계획기간이 2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을 말하며, 1년 이하의 단기계획은 현행계획이라고 한다.

2. 경제정책의 기초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기본정신이 되고 있는 자력갱생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대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에서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이란 정책기조는 국가간 자원과 상품의 교류에서 오는 국제분업의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이거니와, 선진기술과 해외자본의 도입을 비롯한 국제협력의 부진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내자동원에 의한 경제개발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자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자유치를 시도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북한이 의존해왔던 주요 경제협력기반을 상실하게 되자, 1991년 12월 ‘나진·선봉자유경제 무역지대’ 개발계획을 공식발표하고 외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¹⁶⁾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대외무역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데 이어, 꾸준히 대외경제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해왔다. 한편 남북교역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는 남북교역 및 경험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나아가 북한은 2001년 이후 대외협력확대, 선진기술 도입, 기술혁신과 과학기술발전을 ‘자력갱생’의 범주에 포함하는 개념확장을 시도해오면서, 2007년부터 ‘21세기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 16

북한은 1991년 12월 28일 ‘장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고 나진·선봉·청진 등 3개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21세기가 정보산업시대이며,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질 중시, 과학기술 발전, 실리추구, 대외경협을 골자로 하는 자력갱생 노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북한은 특히 “오늘의 자력갱생은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¹⁸⁾이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북한은 2009년 신년사설에서도¹⁹⁾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기초로 삼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함”, “국가적으로 과학기술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현대화를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가야 함”, “실리를 철저히 보장함” 등을 강조했다.

나. 중공업 우선정책

북한은 ‘중공업 우선 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을 전통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는 실제에 있어서 중공업 우선 노선이었다. 경제가 자급자족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석탄, 전력 등 에너지 산업과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 중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공업을 “생산수단을 주로 생산하는 공업부문들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공업부문에는 전력공업, 석탄공업, 광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등의 기간공업부문들과 임업이 포함된다.²⁰⁾

북한은 경제체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하는 초기과정에서부터 시종일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김일성은 “중공업은 인민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중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는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할 수 없다”고 강조해왔다.²¹⁾ 그러나 이와 같은 중공업 우선정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하여 산업부문간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그 시행에서 끊임없이 소비재와 식량부문에서 애로를 발생시켰다. 그리하여 북한은 경공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 시기도 있었다. 북한이

●● 17
조선신보, 200819

●● 18
중앙방송 논설, 20071212

●● 19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 발표, “중진문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
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자”, 2009.11.

●● 20
『조선대백과사전 19』(명
양 백과사전출판사, 2009)
p445

●● 21
『김일성저작집 19』, p294

1989년에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1989.7~1992.6)을 발표하고 1989년도를 ‘경공업의 해’로 설정한 것이나²²⁾ 제3차 7개년 계획의 완충기 (1994~1996) 중점과업으로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등 3대 제일주의 방침을 제시한 것을²³⁾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직면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북한의 중공업 우선주의 기본 노선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이는 매년 북한이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등 경제의 선행부문을 끊임 없이 강조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다만 극심한 에너지난과 식량난을 우선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력공업과 석탄 공업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선행부문’을 강조하는 것과 함께 ‘인민생활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먹는 문제 해결’과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를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다. 군사·경제의 병진

북한은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로선’을 채택하였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중·소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김일성은 국방에서의 자위를 제창하고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이 군사력 강화와 경제건설의 병진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²⁴⁾

경제발전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이 정책은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되었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된 이래²⁵⁾ 지금까지 경제운용의 기본방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66년까지는 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67~1971년 동안은 군사비가 30% 이상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동서화해와 남북대화가 시작됨에 따라 북한은 군사비를 종전의 절반 정도(예산총액의 17% 이하)로 축소시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²⁶⁾ 북한이 군사비 지출규모를 실제로 감

●● 22
1989년도 김일성 신년사 참조.

●● 23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 보고(1993.12.8) 참조.

●● 24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5), p.79.

●● 25
『로동신문』(1966.10.8) 참조.

●● 26
이책의제Ⅳ장제5절 분야별현황 중 재정 부문 참조.

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대외적으로 평화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수산업이 대부분 기계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과 계열화되어 있어 민수산업과 엄격히 구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군사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병력이나 장비 등 군사력은 매년 강화되어 왔다는 사실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 없이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논리를 기초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²⁷⁾

북한이 한정된 자원으로 군사력의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민의 소비부분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이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선군정치’를 내세웠고, 2002년에는 선군시대의 경제건설 노선을 제기하였다. 선군정치란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²⁸⁾이다. 선군시대의 경제노선이란 선군시대의 요구에 따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그 후 매년 국방공업 발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2009년에도 신년사설에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²⁹⁾고 주장했다.

라. 경제관리 개선

경제관리개선 조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와 그 후속 조치들이다.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2000.6)과 서방과의 수교 확대 등 대외환경 개선 및 중국과 러시아의 개혁·개방 현장을 시찰하여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당·경제기관 일꾼들과의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원칙 고수 아래 최대의 실리도모,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경제관리 방식을 혁신할 것”을 강조하는 ‘경제관리 개선지침’을 하달하였다.

●● 27
『김일성저작집 9』, p294

●● 28
승재순, 김홍룡, “로속하고 한명한 정치로 사회주의를 빛내여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로동신문』, (1998. 10.19).

●● 29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 발표, “총진군의 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올해를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이자,” (2009.1.1).

그 이후 8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2년에는 대대적인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단행하였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주요 내용은 ①물가 및 임금 인상, ②환율현실화 및 관세조정, ③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④식량·생필품 등의 배급제 단계적 폐지, 개인경작지 확대 등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물가는 쌀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가격을 전면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하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원칙’을 바탕으로 차등지급하게 되었다. 또한 종래 고평가되어온 북한 원화환율의 경우 달러당 150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입관세를 2배로 인상하였다.

북한은 7.1 조치 이후 여러 후속조치를 취했다. 이를 보면, 기업 부문에서 2002년 7월 이후 국가계획의 범위를 축소하고 지배인이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 자율권을 강화해 왔다. 농업부문에서는 집단영농의 틀은 유지한 채 곡물 생산 분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하고 협동농장의 자율권 강화 및 영농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다. 또한 국가재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화해 왔다. 이 일환으로 2005년에는 국가예산 수입법이 제정되었다. 상업부문에서도 종합시장을 중심으로 국영·일반상점 등 유통망을 다양화하고 있고,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 수입물자교류시장을 허용하고 있다. 북한은 대외무역 활성화를 위해 무역 분권화와 조직 정비 등 무역관리 체계를 개편하였다. 무역권한은 시·군 기업소 단위까지 확대되었다. 대외경제관련 법규와 제도도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경제 적응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외자유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10월 배급제 정상화 조치 이후 2007년 10월부터 장마당에서의 불법적 상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상행위 연령 및 품목 등을 제한함으로써 상업·유통분야를 중심으로 일련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들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 들어서는 대외여건 약화 속에 내부자원 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경제관리를 강조하는 한편, ‘150일 전투’라는 50~60년대식 속도전을 전개함으로써 북한내 시장부문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3. 경제관리

가. 관리원칙

북한은 전통적으로 경제관리원칙으로, 네 가지를 견지해왔다.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도의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넷째, 독립채산제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에 의하여 많은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첫째,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이다.

이것은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장, 노력조직, 협동생산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에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지도·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근로자 등에 대한 동기부여도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이다.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위원회는 각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해당조직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당조직사업과 사상교양사업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은 경제관리 운영과 생산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당위원회는 집체적 지도의 역할을 한다. 한편 행정지휘관은 당위원회에서 그 방향과 방도가 토의·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유일적으로 지휘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

셋째,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이다.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계획화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세부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은 계획경제체제의 취약점인 경제부문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를 절약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원리상 중앙집권적 계획체제하에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해 하부단위의 책임성을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급 관리기관으로부터 강요된 계획과 주어진 생산요소의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공장·기업소가 경영활동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상과 같은 원칙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당의 중앙집권적 지도 강화’, ‘군중로선 관철’ 등을 통해 생산자 대중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 열의’를 고취시킴으로써 물질적 자극의 결여로 야기되는 생산성 저하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관리 원칙들은 2002년 7.1 개선조치를 계기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평균주의 철폐, 인센티브제 도입, 지배인의 권한 강화 등은 정치·사상 우선 원칙과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보다는 독립채산제와 하부 단위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2009년부터는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150일 전투’라는 속도전식 대중동원체제로 회귀함으로써 7.1 조치를 통해 부여되었던 하부단위의 자율성과 재량권은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관리방법

(1)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북한의 경제관리에 있어 기본적 지침이 되고 있다.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대한 현지지도를 실시한 데서 비롯된 것인데, 북한은 이를 “주체사상과 혁명적 균중로선에 기초한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과 대중지도원칙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과학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대중지도 사상이며 방법”이라고 주장한다.³⁰⁾

청산리정신과 방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②늘 현지에 내려가 현지실정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며, ③모든 활동에서 정치활동을 선행함으로써 노동자 각자의 열의와 창의를 발휘시키며, ④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결부시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내며, ⑤사업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⑥모든 사업은 계획화하여 힘있게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³¹⁾

이러한 청산리방법은 북한 농업부문의 관리방법인 동시에 북한 공업 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다.

(2) 대안의 사업체계

대안의 사업체계는 1961년 12월 남포시 대안구역 대안전기공장 현지지도시 김일성이 지시한 공업부문 관리방법으로서 공장·기업소에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청산리정신·청산리방법을 구현한 새로운 공업관리 형태라고 강조하고 있다.³²⁾

대안의 사업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관리책임 아래 생산활동이 이

●● 30
「조선대백과사전 21」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57.

●● 31
위의 책, 같은 페이지.

●● 32
「조선대백과사전 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136.

루어지며, 공장당위원회에는 당간부·행정간부·지배인·기사장·기술자·근로자(생산 핵심당원) 등이 참여한다.

둘째, 계획작성, 생산 및 기술지도사업은 기사장의 지도하에 집중적으로 수행되며 자재공급과 후방공급사업 등 공장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경제활동은 지배인의 지도하에서 통일적으로 수행된다.

셋째, 중앙집권적인 자재공급체계로서 각부 관리국, 공장·기업소, 직장, 생산현장의 순으로 생산을 조직 지도하면서, 상급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해 자재를 책임 공급한다.³³⁾

넷째, 종합적 후방공급체계로서 기업소가 근로자들의 후생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종래에는 근로대중의 생활문제는 기업관리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상으로는 근로자의 물질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대안의 사업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지배인의 의사결정권이 강화되었다. 한편, 1990년대 경제난을 거치면서, 중앙집권적 자재공급체계가 약화되었고 기업들 간에 수평적 물자교류시장이 허용되었다. 식량난과 함께 기업의 후방공급체계도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경제관리에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150일 전투' 등 전국가적인 총동원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기업간 자율적인 물자교류시장보다는 중앙의 자원배분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3) 독립채산제

●● 33

직장 이란 북한에서의 생산단위조직의 하나로서 규모가 큰 공장·기업소의 경우 공장·기업소 아래에는 몇 개의 직장이 있고 각 직장은 다시 몇 개의 작업반으로 나누어진다.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에 독자성을 일부 허용하여 사회주의체제에서 제기되는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소하려는 경영관리 기법으로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중앙의 국영기업소와 지방의 공장·기업소를 포함한 공업부문은 물론 농업부문과 비생산적 부문인 유통부문에 이르기까지 독립채산제를 확대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모든 국영 공장·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때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대상기관과 실시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이중독립채산제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독립채산제에서는 각 국영기업이 은행신용을 이용하고 독자적인 대차대조표를 보유하며, 물자구입과 판매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지니게 된다.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는 화폐지표를 활용하며 이익금은 국가가 먼저 ‘국가기업 이익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이 있을 경우 기업소의 운영상태 개선과 종업원의 물질생활 제고에 활용하게 된다.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영활동의 독자성, 물질적 자극과 가치법칙의 형태적 이용과 관련되는 사회주의 국영기업소의 가장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⁴⁾ 말하자면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 체제의 과도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관리방법이라는 것이다. 1998년 9월 개정된 북한 헌법과 1999년 4월 공포된 ‘인민경제계획법’에서도 이와 같은 독립채산제의 양면성(계획성 및 독자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개정 헌법 제33조에서는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가격·수익성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옹계 이용하도록 한다”라는 조문을 명시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독립채산제는 더욱 전향적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03년 회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2004년에는 재정법을 제정하여, 기업 경영의 최종 목표를 ‘원가 절감’에서 ‘순소득 증대’로 수정했다. 재정법은 또한 기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완화하고 국가납부 방식의 비율 방식에서 정액납부 방식을 병행하여 기업의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4) 사회주의 노력경쟁

북한에서 근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운동이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다. 이 노력경쟁은 개인별, 작

●● 34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381.

업분조별, 작업반별, 직장별, 공장·기업소 또는 협동농장별로 진행되는데, 노력경쟁의 주된 기준은 부과된 생산과제를 얼마만큼 초과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1946년 12월부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이라는 경쟁운동을 시작한 이래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은 늦어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 증산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었다.

1950년대 전쟁기간 중에는 ‘증산돌격대 운동’ 으로부터 ‘3·1절 증산운동’, ‘5·1절 증산운동’, ‘상시증산돌격대운동’ 등이 전개되었고³⁵⁾ 전후의 1954년 초부터는 3개년 복구계획과 함께 ‘복구돌격대운동’, ‘민청순회우승기쟁취운동’ 등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력경쟁으로서의 사회주의경쟁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56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부터이다.³⁶⁾

북한은 노동강화를 통한 생산증대의 도모는 무엇보다도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개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천리마운동을 전개하였다. 노동당의 총노선으로 채택된 이 운동은 1959년 3월 ‘천리마작업반운동’ 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1961년 8월까지 2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이 운동에 동원되었다고 한다.³⁷⁾

1975년 말부터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노력경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혁명과 건설에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3대혁명을 촉진하자는 것으로 검덕광산과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1975년 12월 1~2일에 각기 쫓기대회를 가짐으로써 발단되었다.³⁸⁾ 이때부터 노력경쟁운동은 작업반 단위가 아닌 공장·기업소, 협동농장과 같은 광역 단위로 전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종래의 천리마운동에 ‘속도전’ 의 의미가 추가되었는데 1982년 7월 9일 김책제철소의 쫓기모임을 시발로 하여 김정일의 주도하에 추진된 ‘80년대 속도창조운동’ 이 그것이다.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는 1998년 1월 강계정신을 강조한 이후 일련의 경제슬로건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1998년 1

●● 35
「조선중앙년감」 (1949), p.97.

●● 36
「김일성저작선집 3」, p.101; 「김일성저작선집 4」, p.115.

●● 37
「김일성저작선집 5」, p.426; 천리마작업반운동은 1959년 3월 강선제강소에서 발단된 것이며, 「민주조선」 (1965. 7.17)에 의하면 1965년 6월말 현재 87만 3,000명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 학생을 망라한 2만개의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 38
「로동신문」 (1975.12.2); 「근로자」 (1976. 1), p.12~17.

월 자강도 강계트랙터공장에 대한 현지도시 자력갱생에 입각한 강행군 사례를 ‘강계정신’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으로 구체화시켰다.

이후 김정일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도하면서 ‘성강의 봉화’ (1998년)라는 새로운 경제슬로건을 제시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락원의 봉화’ (2000년), ‘라남의 봉화’ (2001년) 등을 경제 슬로건으로 잇달아 제시하였고, 최근에는 ‘태천의 기상’ (2007년)³⁹⁾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노력 동원원칙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근로자의 노동 동기부여와 생산성 증대에서 부차적 지위로 격하되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에서 수익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생활비지급에서도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도급 지불제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7.1 조치 이후에는 과거 정액지불제가 적용되던 부문과 직종에서도 최대한 도급지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2009년 들어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대외관계 악화 등으로 내부동원을 통한 경제관리기조로 회귀함에 따라 노력경쟁을 위한 경제 슬로건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신년사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제시하고, 4.20~9.16 간 ‘150일 전투’라는 속도전을 통해 인민경제 각 분야의 증산운동을 전개하였다.

다. 관리체계

(1) 농업관리

북한의 농업관리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위 “주체농법을 실현시킨다”는 노동당의 정책노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형태에 따라 두가지로 대별된다. 국가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이며, 협동적 소유로는 협동농장을

● 39

‘태천의 기상’은 김정일 위원장의 2007년 1월 21일 평안북도 태천군 태천4호발전소 현지 지도에서 ‘발전소 건설자들의 투쟁정신과 본때(일하는 정신)’를 높이 평가하면서 “태천의 기상”이라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들 수 있다.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은 농업 전분야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 관리조직의 구성면에서는 협동농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 내세웠던 농업관리의 기본방향을 보면 ①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하에 정치사업을 앞세운 농촌 지도, ②군(郡)단위로 공업적·기업적 방법에 의한 농촌관리, ③중앙집권적 일원화체계의 원칙반영 등이다.

북한의 농업관리체계는 농업성, 도농촌경리위원회,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계획단위가 중앙집권적체제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성은 도 농업성은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종합농장, 관할 국영 농·목장과 농업기업소를 직접 통제·지도한다. 농업성 산하에는 각 도마다 농촌경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관할 국영 농·목장, 농업기업소의 생산 계획지표를 맡아 작성한다.

도 농촌경리위원회 산하에는 15~20여개 협동농장을 관리하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있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종래의 군 인민위원회에서 농촌경리부를 분리하고 국영 농기계작업소, 농사시험장 등 농업지도기관을 흡수재편한 것으로⁴⁰⁾ 1961년 12월 12일 내각결정 157호로 군 단위 국가농업 지도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협동농장들의 생산계획과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종자관리소, 자재공급소를 비롯한 국가농업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에 나타난 북한 ‘농촌경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군을 단위로 한 기업적·종합적인 관리 : 군내 협동농장들의 생산 활동과 관련 기업소의 재정활동 등 모든 기업활동을 총괄적 집체적으로 지도한다.
- ② ‘협동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 협조 강화 : 군내의 농기계작업소, 농기계수리공장, 수의방역소 등 국가단위의 기업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 이용함으로써 군협동경리 전반에서 생산의 조직성을 제고시키

●● 40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 관리문제에 대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144.

고 군을 단위로 하여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준비를 갖춘다.

1962년 말부터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농촌경리의 말단 단위로 하여 이를 도 농촌경리위원회, 중앙의 농업위원회와 일원적으로 연결시켰다.

북한에서 농업 기본단위가 되고 있는 협동농장의 관리운영은 농장 관리위원회가 담당하며 협동농장 생산조직의 기본단위는 작업반이다.

협동농장의 작업반은 일정한 경지, 노동력 및 작업도구를 가지고 부과된 연간 생산과제를 수행한다. 작업반은 몇개의 분조로 다시 나뉘어 지고 있으며 분조단위로 작업을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부분적이거나 농업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부 협동농장을 전인민적 소유(국유)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김일성은 199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 발표 30주년 기념서한'에서 협동농장들을 전인민적 소유형태인 '농업연합기업소' (또는 국영농장)로 점차 전환시켜 농업의 공업화를 실현하도록 지시하였다.⁴¹⁾

이에 따라 북한은 같은 해 12월 평양시 만경대구역 내 협동농장들과 평남 속천군 내 협동농장들과 농업관련 기업소들을 각각 통합하여 전인민적 소유 형태의 '만경대구역 국영농장' 및 '속천군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하였다.⁴²⁾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분조관리제'이다. 분조관리제란 1965년 5월 김일성이 강원도 회양군 포천협동농장 현지지도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노동당 중앙위 제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것으로서 연간 농업생산계획을 10~25명으로 구성된 분조에서 책임지고 수행하며, 분조에 대한 분배는 연말 생산실적에 따라 확정, 지급하는 일종의 책임노동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이후 '협동경리'의 약점인 책임성과 노동의욕의 결여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1960년부터 '작업반 우대제'를 실시하였다. 분조관리제는 분조의 책임성 제고의 측면에서, 작업반 우대제는 노동의욕 고취의 측면에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 대책은 보다 많은 초과분 할당을 의식한 생산실적 과대

●● 41
「로동신문」(1994,2,25).

●● 42
「조선중앙방송」(1994, 12,20, 12,31).

●● 43

2002년 6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3호로 수정 보충되었다.

●● 44

2002년 6월 농업법을 개정하면서 “협동농장은 농업관리운영에서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제12조)하여 기존의 작업반우대제 부분을 삭제하였다.

●● 45

협동농장에 분조를 보다 작게하거나 포전담당제를 조직할 권한을 부여(2004.12, 김용술 무역상 부상)

평가 및 비현실적인 생산목표량 설정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1970년대 초반 이래 유명무실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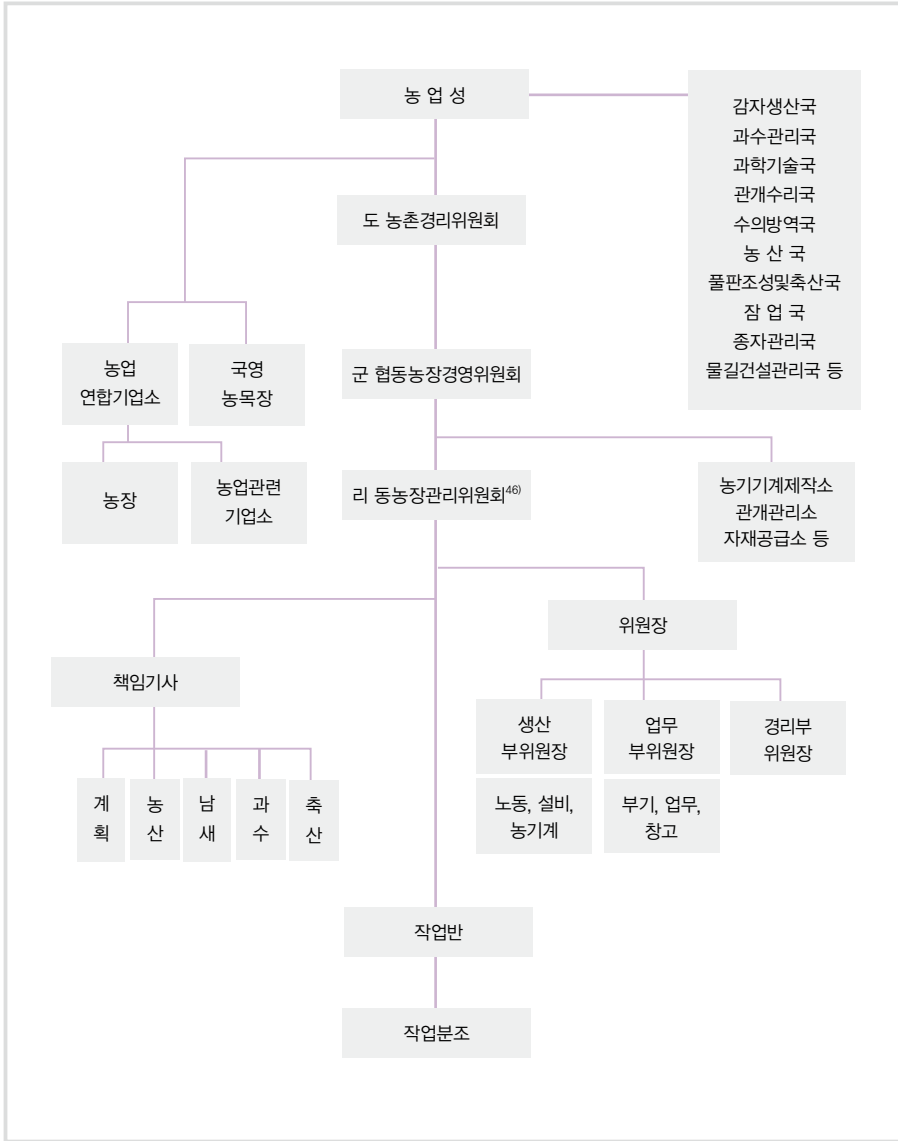
북한은 집단영농방식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 계속된 자연재해, 경제침체로 인한 영농자재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증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련의 농업관리 개선조치를 실시하였다. 1996년 3월 ‘분조규모의 축소 및 우대제 적용’,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분 자유처분권 인정’ 등 기존의 분조관리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였고 1999년 1월에는 벼를 제외한 나머지 작물을 각 협동농장의 실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작목선택권을 일부 부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농업법 개정⁴³⁾을 통해 협동농장 농업관리운영에서 기존의 ‘작업반우대제’를 삭제⁴⁴⁾하고 분조관리제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국가수매량을 축소하고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하였다. 2004년 1월에는 황해북도, 함경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가족단위 영농방식인 「포전담당제」를 도입하는 등⁴⁵⁾ 농업관리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농업관리 개선조치는 국가 및 협동적 소유에 의한 집단영농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협동농장의 자율권 강화, 성과주의 도입 등을 통해 농민들의 생산동기를 유발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포전담당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2005년 10월 양곡전매제 실시와 배급제 정상화 조치로 농업관리 개선조치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경작지를 강제 수매하고 사적 경작을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허용된 폐기밭에서도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업관리조직 체계



●● 46

청산리협동농장 기준

(2) 기업관리

북한의 경제(공업·수산업·임업)관리는 ‘대안의 사업체계’ 하에서 집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이 모두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의 초점은 근로자들의 책임과 역할제고를 위한 정치사업(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결합)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을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⁴⁷⁾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관리운영에 있어서 집단적 지도체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공장 당위원회에서 경제관리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함으로써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공업을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집중적인 생산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해 1985년 7월 연합기업소 조직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연합기업소는 중앙계획기관의 지도하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생산하는 계획·생산·집행의 단위이다. 연합기업소는 내각의 성·위원회가 수행하던 일부의 지도기능을 직접 인수하여 수행하고 자재상사(하부단위)를 장악하고 있으며 하부의 공장·기업소에 대한 물질적, 기술적 보장을 책임진다. 따라서 연합기업소는 하부 공장·기업소의 생산활동 및 경영활동을 통제·장악하고 있으며, 북한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단위이다.⁴⁸⁾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모체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생산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공장·기업소를 편성해 조직한 형태이다. 또 다른 형태로는 일정지역 내에 있는 동일한 부문의 기업소와 보조부문의 공장·기업소를 구성해서 조직된 형태이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동일부문이나 상이한 부문을 망라해서 조직된 것도 있다. 현재 북한의 연합기업소는 명칭도 연합기업소, 회사(특급~1급), 연합

● 47

「경제사전」 1권(1985), p.707: 「김일성저작집」 17권, p.493.

● 48

「주체의 경제관리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p.103~105.

회사(대외무역), 총회사 등 다양하게 분리워지고 있으며 그 기능도 다소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0년 두 차례에 걸친 산업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1차 개편시에는 연합기업소 조직을 통·폐합, 축소하였으며, 2차 개편시에는 연합기업소를 재복원함과 동시에 연합회사 조직을 확대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은 종합적 생산체제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산업전문화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북한의 공업관리는 그 내용에 따라 기본적으로 설비관리, 자재관리, 노력관리, 재정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분류는 공업관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는 공장·기업소 뿐만 아니라 농업건설 등의 생산조직 체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관리주체별로 보면, 내각이 직접 관리하는 국영 공장·기업소와 도·시·군 지방공업관리국(과)이 관리하는 지방 공장·기업소로 나뉘고 있으며, 규모에 따라 단일기업소, 종합기업소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공정별, 생산품목별로 직장이 조직되며, 각 직장은 여러 개의 작업반으로 나뉘어 진다.

공장·기업소의 관리 운영은 공장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집체적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실무적 차원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을 따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운영상의 이원적 구조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계기로 당의 행정간섭 배제 및 지배인의 전문성이 강조됨으로써 지배인 중심의 운영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실시 이후에는 기업소 자체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생산계획과 가격제정,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및 분권화 조치, 가격결정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도입 등 경제관리방법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기업소들은 과거와 달리 비용, 판매, 수요 개념을 인식하여 원가 절감, 품질제고, 마케팅 등을 중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임금인상 및 성과급 강화조치로 생산활동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2002년 경제개혁 조치 이후 북한은 경영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 노무관리 분야별로 기업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가) 경영관리 : 지배인의 권한강화와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7.1경제관리개선조치시 북한은 종래 공장 당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의 경영권한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였다. 이에 따라 당비서의 역할은 정치적 지도로 제한되었고, 지배인이 기업경영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2003년에 「회계법」 제정 등 관련법제를 정비하면서 김책공대, 전문대학 졸업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30~40대를 기업책임자로 대거 기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4년부터는 일부 공장·기업소를 대상으로 생산계획 수립·임금결정·노무관리 등에 대한 지배인의 경영권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보조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독립채산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영방식과 분배방식을 수익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생산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나) 생산관리 : 국가계획 범위 축소, 기업의 자재조달여건 개선

북한은 2002년 경제개혁조치에 따라 중앙계획 대상을 중요지표(공업 총생산액·건설투자·전력·철강 생산량 등)로 축소하고 세부 계획의 수립권한을 지방과 기업에 위임하였다.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초과 생산품 및 계획외 생산도 생산실적으로 반영하면서 국영 공장·기업소의 경우 종합시장의 매대의 5%를 배정하여 공장부산물로 생산한 생필품을 30% 한도 내에서 시장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2004년에 들어서는 기업운용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계획 위원회는 전략지표·중요지표의 경우에만 「현물계획」⁴⁹⁾으로 하달하고, 나머지는 「금액계획」으로 하달하고 있다. 또한 물자교류시장에서의 자재거래에 대한 기업간 직접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원자재 및 부품 구입여건을 개선하였다.

●● 49

현물지표는톤·미터·마리·대수 등 현물단위로 표시되는 사용 가치량을 일컫는다.

(다) 재무관리 : 기업의 재정운용권 확대, 효율적 자금사용 유도

북한은 「회계법」을 제정(2003.3)한 후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를 ‘원가 절감’에서 ‘순소득 증대’로 수정(2004.4, 「재정법」 제 34조)하여 이윤 중심의 기업운동을 지향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의 국가납부 및 투자·경영자금 조달체계를 개선하고 자금운용에 관한 기업 재량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완화하고 국가납부방식도 기존의 비율 방식에 정액납부방식을 병행함으로써 기업부담을 축소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법」 제28조를 개정하여 기업의 재정계획 수행실적 평가대상으로 국가예산 납부실적만 적시하고 구법에 규정한 원가·이윤계획은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 생산전문화로 자력갱생의 원칙을 완화, 소비자 수용을 고려한 품질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의 실적을 ‘계획물량의 달성’에서 ‘번수입(이윤+임금)’ 위주로 평가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흑자기업은 상여금, 적자기업은 지배인 책임 및 구조조정으로 분배의 평균주의를 지양하고 실질적 독립채산제를 추진함으로써 공장·기업소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적자기업 3개월까지 지배인 책임제, 6개월 이상은 지배인 교체 또는 통폐합).

한편 북한은 기업의 현금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재정지출 한도 이상의 추가지출도 허용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자재의 적기구입 등 경영활동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기업의 유동자금을 국가 재정을 통해 공급해 왔었으나 이제는 기업이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함으로써 자금낭비 등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있다.

(라) 노무관리 : 임금지급과 노동력 관리에 대한 자율권 확대

노무관리에 있어서도 북한은 2002년 7월 경제개혁조치를 통해 기업이 임금을 상·하한선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허용하고 있다.

7.1 조치 이전 북한은 임금의 기준·등급·조정 등의 결정을 모두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집행되었으나, 2004년부터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 외 나머지 이윤 내에서 자체배분을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임금결정 및 지급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생계비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⁵⁰⁾

또한 북한은 그동안 국가가 직접 공장·기업소에 노동력을 배치해 왔으나 최근에서 노무관리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기업이 유휴 노동력을 탄광·농장 등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시에 사무직·관리직 근로자를 감축한다는 방침 하에 인력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 유통관리

북한경제에서 유통은 국가의 계획과 통제 속에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상업이란 '주민에 대한 배급'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상업과 기능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즉, 북한에서의 상업은 자본주의 경제와 같이 시장구조가 존재하는 상업이 아니라 국가유일체제 하에서 상품공급을 위한 유통 내지 관리수단으로 기능하는 상업이다.

상업체계는 원칙적으로 행정지도 기능과 관리기능, 그리고 도매상업과 소매상업이 분리되어 있는데 도매상업은 중앙에서, 소매상업은 지방에서 관리하도록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이는 상품유통의 전 과정을 국가에서 유일적으로 지휘함과 동시에 특히 소매상업의 지방관리를 통해 지방관리(官吏)들로 하여금 상품공급에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⁵¹⁾

북한의 상업망은 도매상업망, 소매상업망, 사회급양망, 수매망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소매상업망으로서 이를 규모에 따라 상점·매점·매대로, 취급품종에 따라 전문상점과 종합상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기업소의 운영은 상업부가금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상업부가금은 상업기업소의 유통비와 이익금을 고려하여 상품에 반영하는 부가

●● 50

이와 관련 조총련 일간지 「조국」(2004.6)은 「평양산발공장은 임금을 1만 원으로, 선교면직공장은도 현재 4000원에서 3~5배 인상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51

앞의 책 같은 페이지

금을 말한다. 이를테면 생산기업소에서 상품을 넘겨받을 때 적용되는 도매가격에 상업부가금이 첨가되어 소매가격을 이룬다.

상업부가금은 국가에서 상품가격을 정할 때 그 상품의 유통비와 상업기업소의 이윤 규모를 감안하여 계획적으로 책정한다. 그러나 상품이 생산지에서 최종소비지에 전달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상업부가금을 1회만 적용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⁵²⁾

상업부가금의 수입은 상업기업소들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자체수입으로 지출을 맞추고 수익을 보장하는 원천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상업부가금의 증대는 국가기업이득금을 늘이고 재정수입을 확대시키는 기본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상업유통 부문에서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상업유통에 자본주의적 상업유통 기능이 상당부분 가미된 것이다. 이제 상업의 기능은 '주민에 대한 배급'에서 '각종 제품의 유통·판매'라는 자본주의형 상업의 형태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12월부터 공식 공급망의 공급능력 부족으로 '시장'의 보완적 기능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초기에는 국영상점망을 강화하고 농민시장·장마당 등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물자공급 부족으로 인해 같은 해 12월 초순부터는 장마당에서 농산품 외에 공산품 거래까지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3월말부터는 평양에 종합시장의 개설을 추진하고, 북한 전역으로의 확대를 도모해 왔다.⁵³⁾ 또한 영업이 부진한 국영상점은 기관·기업소 등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영상점'과 '일반상점(위탁·수매·직매상점)'으로 상점의 형태가 이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허용조치들은 일반 주민들의 국영상점보다 종합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7년 10월 이후 시장에서의 불법적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상거래 연령 및 유통품목을 제한하고 수익률이 높은 일반상점을 다시 국영상점화하는 조치 등을 취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환원시키고, 상설시장

● 52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711.

● 53

「조선중앙통신」(2003, 6.10): "시장의 운영이 처음인 만큼 다른 나라로부터 전문가 양성, 경험 도입을 비롯한 협조를 가능한 받으려고 한다."

을 10일장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보이는 등 상업·유통분야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 가격관리

북한에서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필요노동'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제정된다.⁵⁴⁾ 투하된 노동비용을 근간으로 하여 산출되는 사회적 필요노동 지출이 상품가격 결정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가격제정의 중요한 원칙 중 다른 하나는 가치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리시키는 것이다.⁵⁵⁾ 대중소비품의 가격은 낮게 정하되,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는 소비품에 대해서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노동지출과는 관계없이 높게 정하였다. 이와 같이 가격결정에 있어서 임의성이 크게 작용하는 까닭에 가격은 시장가격과 큰 차이가 있다.

가격제정은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 때에 요구되는 것이 가격제정사업을 중앙집권원칙에서 유일적으로 정한다는 가격의 일원화이다. 가격의 일원화는 국가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생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동경영에서 생산되는 일부 채소와 과일, 수산물의 가격은 일원화하지 않고 국가가격 제정기관에서 정해진 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었다.⁵⁶⁾

그러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가격개혁을 추진하면서 가격제정 방식 변경, 가격 결정권의 일부 분권화, 가격체제의 다원화 등 가격제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모든 가격과 임금이 핵심필수품인 쌀을 기준으로 실제 생산비와 수급상황 및 국제가격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가격체계를 현실화하였다. 물가는 식량·생필품의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과 비슷한 평균 25배로(쌀1kg당 8전→44원, 옥수수 1kg당 6전→24원, 세수비누 1개당 2원→20원 등) 인상하였으며, 공공요금도 버스·철도요금을 20배 이상(버스·지하철 요

●● 54 「김일성저작집 23」, p.462.

●● 55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p.11~12.

●● 56 "가격의 일원화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1. 3.26, 김일성담화), 앞의 책, p.10.

금 10전→ 2원, 전기료 kW당 3.5전→ 2.1원) 인상하였다.

7.1 조치 이후 북한은 가격 결정에서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대중 소비품이라 할지라도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높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부터 허용되었던 ‘종합시장’의 경우 품목별로 최고한도가격을 고시함으로써 비록 국가에 의한 가격결정원칙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10일에 한 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결정해오고 있다. 또한 가격 결정에서 부분적 분권화도 이루어져 지방공장들도 자신들이 생산하는 소비재에 한해 가격결정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일부 생산재 기업의 경우 국가계획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물자교류 시장’을 통한 거래에서는 상호 합의하여 가격을 제정하는 관행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는 국정가격, 시장가격, 합의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격 현실화 조치는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생산활동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급 애로가 타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시장 통제조치의 연장선상에서 각종 포고문을 통해 가격 상한선을 고시하는 등 일정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5) 분배관리

북한의 소득은 “사회의 공동적인 소비(기관관리·과학·교육·보건·기타)와 예비의 조성, 기타에 돌려지는 몫과 직접 근로자들에게 돌려지는 몫으로 구분되어 계획적으로 분배”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산수단은 기자재 공급계획에 의거하여, 노동임금은 노동보수계획에 따라 분배·관리된다. 특히 노동보수계획은 노동자·사무원들에게 지불할 노동보수의 규모와 수준을 규정하는 노동계획 기본항목의 하나인데 주로 노동자·사무원의 생활수준, 상품유통규모, 소비와 축적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된다. 이 노동보수계획은 보수의 형태에 따라 생활비

계획·장려금계획·상급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 57

『조선대백과사전 1』(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634.

● 58

『조선대백과사전 1』, p634.

생활비계획에는 기본적으로 계획기간 내 지출되는 생활비의 총규모를 미리 규정하는 ‘총생활비계획’이 있고, 계획시기에 노동자·사무원 1인당 평균지출 규모를 규정하는 평균생활비계획이 있다. 장려금계획은 ‘국가기준 노동정량’보다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에 지불되는 ‘노동보수계획’이다. 이 계획은 장려금계산 노력수와 기준평균생활비, 계획년도의 노동정량제고율, 장려금을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또한 상급계획은 노동정량을 높이게 되면 기본생활비 이외에 추가로 지불하는 근로자의 노동의욕 제고목적의 보수계획이다.

이와 같은 노동자 사무원들의 노동정량을 기준으로 한 노동보수 분배방식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농장원들에게는 노력일을 기준으로 분배되고 있다.

연말(보통 10월~12월)에 각 협동농장을 단위로 결산분배를 진행, 농업협동경리에서 연간 생산실적 및 재정활동을 총결산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한다.

결산분배사업은 ①결산분배의 준비, ②결산서의 작성과 비준, ③결산분배총화회의의 진행, ④현물 및 현금 분배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⁵⁷⁾

결산분배를 위한 준비사업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확정, 노력일의 확정과 재평가, 채권·채무의 청산, 재산 실사 등이 진행된다.

결산서에는 생산계획 수행과 관련한 지표들과 수입분배 관련 지표들, 그리고 생산 및 재정성과를 평가하는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결산서는 농장원총회(대표자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다음 해당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는다. 상급기관은 제출된 결산서를 심의하고 매개 단위의 생산 및 재정활동을 평가하며 경리운영상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준다.

상급기관의 결산서 비준절차가 끝나면 협동농장 결산분배총화회의에서 총화보고에 이어 결산분배서를 통과시키고 감사위원장이 결산기간중 감사위원회가 진행한 검열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현금 및 현물분배가 실시된다.⁵⁸⁾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북한은 보수체계에도 변화를 보였다.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도 평균 18배 인상하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원칙’ 아래 차등지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임금의 평균주의를 철폐하고 인센티브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번수입 지표’를 도입하여 임금책정에 연동시킨 점이나, 협동농장의 실적평가 단위를 보다 작은 단위인 분조로 전환하여 농민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또한 2004년부터는 임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가납부금을 제외한 기업의 이윤범위 내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의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59
사회주의 헌법 제21조.

●●60
사회주의 헌법 제22조.

4. 경제계획 및 실적

가. 사회주의 경제체제 기반구축

북한은 분단 직후 토지개혁, 주요산업의 국유화,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등 사회주의화 개혁을 단행하여 계획경제 추진의 기초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1958년 8월에 농업의 협동화와 수공업 및 중소상공업의 협동화를 끝냄으로써 생산관계의 사회주의화를 완료하였다.

북한에서의 국가적 소유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⁵⁹⁾ 협동단체 소유를 제외한 토지, 지하자원, 산림자원, 기타 자연자원, 주요 공장과 기업소, 은행, 항만시설 그리고 그 밖의 교통운수 및 체신시설 등이 포함된다. 협동적 소유에는 농업·어업부문의 협동단체에 소속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등이 포함된다.⁶⁰⁾

사회주의 경제 구축과정

시기	개혁내용
1946.3.5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공포
1946.8.10	주요 산업의 국유화 법령 공포
1946.12.22	지하자원·산림·수역 국유화 법령 공포
1954.4	협동조합화에 착수
1958.8	농업·수공업·중소상공업의 협동화 완료
1958.10~12	협동조합을 리단위로 확대·개편(협동농장으로 개칭)

- 61 「조선로동당력사교재」 (1964), p.16.
- 62 「조선중앙년감」 (1949), p.71.
- 63 「김일성저작집 4」, p.21.
- 64 「정치경제학(하)」 (동경학우서방, 1967), pp.66~67.

(1) 토지개혁과 농업의 집단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3월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⁶¹⁾에 의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당시 북한 지역의 농경지 약 200만 정보중 100여만 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었고, 이 중 90여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고 나머지는 모두 국유화되었다.⁶²⁾

그 후 ‘토지관개관리령’ (1946.9), 국영 농·목장의 규모확장 (1949.12), 농기계 임경소 설치(1950.2) 등을 거쳐 1953년 8월 5일에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2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1954년부터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⁶³⁾

노동당은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형태를 규정하였는데,⁶⁴⁾ 제1형태는 고정적인 ‘노력협조반’ 이고, 제2형태는 출자한 노동과 토지에 의하여 분배를 실시하는 ‘반사회주의적 형태’ 이며, 제3형태는 토지·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통합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의해 분배하는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이다.

북한 당국은 표면적으로는 이 세가지 형태 중 농민들의 실정에 따라 농민들이 스스로 적당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53년 말부터 1954년 초에 걸쳐 1개 군에 1~2개씩의 농업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예비적 단계를 거쳐 1954년부터 집단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북한은 1958년 8월에 전 농가를 협동조합에 가입시켜 농업집단화를

완료하였다. 당시의 농업협동조합의 수는 13,309개였는데, 1개 협동조합은 평균 80호의 농가로 조직되었고, 경지면적은 130정보였다. 그러다가 1958년 10월 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하게 됨으로써 3,843개 조합으로 그 수가 줄어든 반면, 1개의 협동조합은 농가 300호, 경지면적 500정보로 그 규모가 커졌다.

1961년에는 11월 군(구역) 인민위원회로부터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 기능을 분리시켜 전문적 농업지도기관인 군(구역) 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내에 있는 농기계작업소, 농기계공장, 관개관리소, 자재공급소, 수의방역소 등을 직접 운영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62년부터 농업협동조합도 협동농장으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오늘의 협동농장 경영체계가 확립되었다.

농업의 집단화

연도	농업협동조합총수(개소)	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호수		협동조합에 편입된 경지면적	
		호 수	총농가호수에 대한 비율(%)	경지면적(1,000정보)	총경지면적에 대한 비율(%)
1953	806	11,879	1.2	11	0.6
1954	10,098	332,662	31.8	576	30.9
1955	12,132	511,323	49.0	885	48.6
1956	15,825	864,837	80.9	1,397	77.9
1957	16,032	1,025,106	95.6	1,684	93.7
1958	3,843	1,055,015	100.0	1,791	100.0
1963	3,732	1,066,896	100.0	1,837	100.0

※ 출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경제발전 통계집(1946~63)」(동경 :조선연구소, 1965) 참조

(2) 산업의 국·공유화

1946년 8월 10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주요산업 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주요 공장·기업소, 광산, 발전소,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했다.⁶⁵⁾ 그 결과 전체 산업의 90% 이상인 1,034개소의 산업시설이 사회적 소유로 전환되었다.⁶⁶⁾

한편 개인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공장·기업소와 상업에 대해서는 한 국전쟁 이전은 물론 휴전 후까지도 부족한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생산

●● 65
「조선로동당력사교재」
(1964), p.17.

●● 66
「조선중앙년감」(1949),
p.73.

과 유통을 위해 ‘장려·이용·제한’이라는 일련의 정책과정을 거쳐 국유화를 추진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개인상공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는 농업의 집단화와 같이 다음 세 가지 형태가 활용되었다. 즉 제1형태는 도시의 수공업자들에 대한 생산협동반화이며, 제2형태는 중소상공업자들의 협동반화이며, 제3형태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된 완전한 사회주의적 형태 등이었다.

북한은 농업의 집단화와 마찬가지로 개인 상·공업의 협동조합화를 1958년 8월에 완료하였다.

소매상품 유통액의 소유형태별 구성 (단위:%)

구분	1946	1949	1953	1956	1957	1959
국영 및 협동단체상업	3.5	56.5	67.5	87.3	87.9	100.0
개인상업	96.5	43.5	32.5	12.7	12.1	0.0

※ 출처 : 「조선중앙년감」(1959), p.355.

공업 총생산액의 경제형태별 구성 (단위:%)

구분	1946	1949	1956	1959	1960	1963
사회주의경제형태	72.4	90.7	98.0	100.0	100.0	100.0
(국 영)	(72.4)	(85.5)	(89.9)	(89.5)	(89.7)	(91.2)
(협동경영)	(-)	(5.2)	(8.1)	(10.5)	(10.3)	(8.8)
소상품 경제형태	4.4	1.5	0.7	-	-	-
자본주의 경제형태	23.2	7.8	1.3	-	-	-

※ 출처 : 「조선중앙년감」(1964), p.171.

(3) 단기 경제계획의 실시

북한의 경제계획은 1947년부터 실시되었다. 당시는 단기계획으로서 1947년과 1948년 2회에 걸쳐 1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며, 1949년에는 2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2개년 계획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일제의 식민지적 잔재와 폐해를 제거하고, 각 부문의 생산을 급속히 늘릴 목표를 세웠으나, 2개년 계획은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

전후 북한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복구에 목적을 둔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과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구축에 목적을 둔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1954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 회의에서 채택된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은 생산수준을 전쟁 이전인 1949년 수준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 계획은 중·소의 원조 등에 힘입어 4개월 조기 달성되었다고 발표되었다.⁶⁷⁾ 그러나 실제로는 석탄·시멘트·곡물 등 대부분이 계획에 미달되었다.

1957년부터 착수한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의 공업기반 구축과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 계획은 전후복구 3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중국·소련 및 기타 공산국의 지원에 힘입어 계획기간을 2년 앞당겨 조기달성하였다고 발표되었다.

경제계획의 목표

시기	과업	계획목표
1차1개년계획 ¹⁾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소 복구조업 국영상공업 확대 생산의 급속한 증대와 생활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총생산 : 1946년 비 약 2배 곡물수확고 : 1946년 비 30만톤 증산
2차1개년계획 ²⁾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의 편파성 극복 생산품의 품질 제고 및 원가 절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총생산 : 1947년 대비 41% 증가 곡물수확고 : 1947년 대비 13.5% 증가
2개년계획 ³⁾ (194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전지역의 경제복구 토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영산업총생산 : 1948년 대비 194% 곡물총생산 : 1946년 대비 158%(쌀 잡곡)
전후복구 3개년계획 ⁴⁾ (1954~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 이전 수준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953년 대비 75% 증가 공업총생산 : 2.6배 곡물수확고 : 1949년 대비 119%
5개년계획 ⁵⁾ (1957~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화의 기초구축 식의주문제 기본적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약 2.2배 공업총생산 : 2.6배 곡물수확고 : 376만톤

※ 출처 : 1)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 보고(1947.2.19)

2) 인민위원회 4차회의(1948.2.6)

3) 1948년 계획실행 총화 및 1949~50년 2개년계획 법령 발표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1954.4.23)

5) 제3차 당대회 보고(1956.4.23)

●●67

제3차 당대회 보고(1956.4.23)

나. 사회주의 경제계획 추진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제계획을 추진한 것은 1961년 제1차 7개년 계획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북한은 6개년 계획, 제2차 7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1993년까지 제3차 7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는데, 각 계획기간별 당면과업과 계획 목표 및 실적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계획의 목표와 실적

구분	기본과업	주요목표	실적
제1차 7개년 계획 ¹⁾ (196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공업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전국적 기술혁신 •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국방·경제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2.7배 •공업총생산 : 3.2배 •곡물수확고 : 600~700만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총생산 : 3.3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8.4% •노동생산성 성장률 : 147.5% ※계획기간 : 3년 연장
6개년 계획 ²⁾ (1971~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 견고화 •산업설비 근대화 •기술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8배 •공업총생산 : 2.2배 •곡물수확고 : 700~750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7~1.8배 •공업총생산 : 2.5배 •기계·금속공업 성장률 : 19.1% •노동생산성 성장률 : 155% •곡물수확고 : 800만 톤 ※ 1976~1977 완충기 설정
제2차 7개년 계획 ³⁾ (1978~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생산원가 인하 •절약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주민생활 향상 •독립채산제 강화 •대외무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9배 •공업총생산 : 2.2배 •곡물수확고 : 1,000만 톤 •'80년대 10대전망목표와 4대 자연개조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총생산 : 2.2배 •전력생산 성장률 : 178% •철강생산 성장률 : 185% •공작기계 생산 성장률 : 167% •곡물 수확고 : 1,000만 톤 •시멘트·합성수지·직물생산 목표달성 •철도 60% 전철화 ※ 1985~1986 완충기 설정
제3차 7개년 계획 ⁴⁾ (198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 주체화·현대화·과학화 •기술혁신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소득 : 1.7배 •공업총생산 : 1.9배 •농업총생산 : 1.4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생산 : 1.5배 •전력 : 1.3배 •석탄 : 1.4배 •유새금속광물 : 1.6배 •강철 : 1.3배 •화학비료 : 1.5배 •지방공업 : 1.7배 •주택건설 : 100여만 세대 ※ 1994~96 완충기 설정

※ 출처 : 1) 제4차 당대회 보고(1961.9.1)

2) 제5차 당대회 결정서(1970.11.12)

3) 최고인민회의 제6기 1차 회의(1977.12.5)

4)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1987.4.12) 및 제6기 21차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93.12.8)

(1)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

북한은 1950년대 후반의 5개년 계획에서 구축된 공업기반의 견고한 발전과 주민생활의 향상을 목표로 1961년부터 제1차 7개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는 기계제작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공업화를 위한 초보적인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와 함께 대내지향적 공업화정책의 한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욱이 1962년 10월의 쿠바위기를 계기로 북한은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중·소 이념분쟁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북원조가 격감함에 따라 계획달성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에서 계획기간을 3년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을 맺었다.

(2) 6개년 계획(1971~1976)

북한은 1970년 11월 12일 제5차 당대회를 통해 3대 기술혁명 수행과 산업의 체질개선을 목표로 한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71년부터 착수하였다. 6개년 계획 기간 중에는 서구로부터의 자본·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서방제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연불수입대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1975년 이후부터는 심각한 외채문제가 야기되었다. 또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당초 계획목표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북한은 1975년 8월 갑자기 동 계획을 1년 6개월 조기 완수했다고 발표하고, 그 후 무려 2년간의 완충기를 설정, 부진한 부문을 조정하

는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계획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제2차 7개년 계획의 초기부터 공업생산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3)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1978년부터 착수된 제2차 7개년 계획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표방하고, 1977년에 비하여 국민소득 1.9배, 공업총생산 2.2배, 알곡 1,000만톤 생산 등을 주요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계획종료 연도인 1984년이 지나도록 동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해 발표가 없다가 1985년 2월16일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이 1984년말을 기해 동 계획이 완료되었다고 뒤늦게 발표하였다.⁶⁸⁾

한편 북한은 ‘1980년대말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 ‘4대 자연개조사업’⁶⁹⁾ 등 별도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기간중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확대 발전방침 채택,⁷⁰⁾ 합영법 제정 공포 등을 통해 경제적 대외개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제2차 7개년 계획 역시 당초의 목표달성에는 실패하였으며 동 계획이 종료된 이후 제3차 7개년 계획에 착수하기까지 2년간의 조정기를 거처야 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점은 제2차 7개년 계획 후반기부터 북한에서도 주민들의 소비생활에 대한 욕구충족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제3차 7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은 제2차 7개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두고 국민소득 1.7배(연평균 성장률 7.9%), 공업생산 1.9배, 농업생산 1.4배 등 성장목표와 이미 발표되었던 10대 전망목표를 일부 수정하여 주요 생산 및 건설 목표를 설정

● 68

이 발표에 의하면 동 계획기간의 주요 성장지수는 기준년도에 비해 공업생산액 2.2배를 비롯하여 전력 178%, 석탄 150%, 강철 183%, 공작기계 167%, 트랙터 150%, 자동차 120%, 채탄기 4.2배, 화학비료 156%, 화학섬유 180%, 시멘트 180%, 천 145% 등으로 생산이 증가되었다.

● 69

4대 자연개조사업이란 20만정보 새땅찾기, 30만정보 간석지 개간, 태천발전소 건설, 서해갑문 건설 등을 말한다(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 1981.10)

● 70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1984.1.25~27)

하였다.⁷¹⁾

제3차 7개년 계획은 그 추진방침이 제2차 7개년 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고, 특히 계획목표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경제계획에 비해 하향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당시 북한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동 계획에서 주목할 것은 ①기술혁신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고 있고, ②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기술혁신을 경제개발의 관건으로 보고 있으며,⁷²⁾ 또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이 기술혁신의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1991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을 발표,⁷³⁾ 대외개발면에서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제3차 7개년 계획은 계획초기부터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1987~1989년 기간중에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경제계획수행률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준비와 관련하여 기본건설 및 연관산업부문에 집중적으로 노동력과 투자재원을 투입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부터 지나친 정치우선적 경제운영과 기본건설부문 중심의 성장전략은 재정부족→투자부진→기본건설 부진→여타 산업침체 확산 등의 경로로 후유증이 확대되었다.

특히 구소련 및 동구제국의 붕괴 이후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유대에 기초했던 북한의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기반이 무너짐으로써 북한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과 세계 사회주의 시장붕괴로 이 나라들과 맺었던 장·단기 무역협정들이 헝클어지고 그 이행이 거의 중단되게 되었다” 고 하면서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를 스스로

●● 71
최고인민회의의 제8기 제2차회의(1987.4.21)

●● 72
김일성 신년사(1986.1.1)

●● 73
이 계획은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74호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⁷⁴⁾

●● 74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수행 정형에 대한 보도.

제3차 7개년 계획의 실질적인 수행실적을 보면 국민소득이 목표대비 61% 수준, 연평균 대외무역실적은 목표의 52.5%, 그리고 기타 주력산업 부문의 목표수행률은 20~5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 75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 수행 정형에 대한 보도.

(5) 완충기 경제계획의 추진(1994~1996)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주요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 3년간(1994~1996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추진할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제시했다.

북한은 과거 제1차 7개년 경제계획(1961~1970년) 이후에도 실적부진을 이유로 계획기간을 1~3년간 연장하거나 완충기를 두어 왔는데 경제계획 실패를 인정한 후 완충기를 설정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다.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 및 수행실적 평가 (1993년 현재)

구분	목표	실적	수행률(%)
국민소득	1.7배	1.04배	61.1
공업생산	1.9배	(1.5배)	(78.9)
무역	3.2배	0.74배	연평균 52.5
곡물	조곡 1,500만 톤	조곡 571만 톤	38.1
쌀	700만 톤	183만 톤	26.1
수산물	1,100만 톤	109만 톤	9.9
전력	1,000억kwh	221억kwh (676억kwh)	22.1 (67.6)
석탄	12,000만 톤	2,710만 톤 (10,710만 톤)	22.6 (89.3)
철강	1,000만 톤	186만 톤 (875만 톤)	18.6 (87.5)
비철금속	170만 톤	16.4만 톤	9.6

구분	목표	실적	수행률(%)
화학비료	720만 톤	160.9만 톤 (560만 톤 이상)	22.3 (77.7 이상)
합성수지	50만 톤	(9.2만 톤 이상)	(18.4 이상)
시멘트	2,200만 톤	398만 톤 (1,200만 톤 이상)	18.1 (54.5 이상)
지방공업	2.5배	(1.7배)	(68.0)
직물	15억m	1.9억m	12.7
화학섬유	22.5만 톤	5.3만 톤	23.6
주택건설	매년15~20만 세대	매년4.1~4.9만 세대 (총100여만 세대)	20.7~32.4 (71.4~95.2)

※ 출처 : 통일원, 「북한의 제3차 7개년계획 종합평가」(1994), p.145.

※ 주 : ()내 수치는 북한발표치에 의거 산출

이와 같이 완충기를 설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사회주의권 시장상실로 경제협력과 무역거래가 거의 단절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계도 보장할 수 없을 정도로 경공업부문이 낙후되는 등 산업구조 불균형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완충기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의 공업화·현대화 실현을 통해 식량부족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 생산을 증대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외무역부문에서는 수출을 촉진시키고 대외경제협력관계의 확대를 도모하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완충기 설정을 통해 경제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소해 보겠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북한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었다. 처음부터 경제관리방식이나 국가예산지출상의 우선순위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제회복의 실질적인 추진원동력이 부재한 완충기의 설정만으로는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한 구소련과 중국의 우호

●●76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각년도 참조.

●●7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1998.9.5).

●●78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7차 회의(1994.4) 이후 북한은 김일성 사망,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다.

가격 철폐와 경화결제 요구조치가 각각 1991년과 1992년 이래로 지속되었는데, 이것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완충기 첫 해인 1994년에 -2.1%, 1995년에 -4.1%, 그리고 1996년에는 -3.6%를 기록함으로써 1990년 이후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이 3년간의 완충기 동안에도 계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⁷⁶⁾

이에 따라 북한은 1997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의 철저한 관철을 재천명함으로써 1996년 종료하기로 한 완충기 경제 전략을 사실상 또 다시 연장하였다.

다. 내부정비 조치 및 부문별 경제계획 추진

북한은 완충기가 종료되는 해인 1996년 이래 종합적인 중장기 경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의 자체해결 능력 부족, 대외경제여건 불리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998년부터 북한은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내부적 정비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이완된 계획부문의 질서회복을 통해 체제내부를 정비하려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⁷⁷⁾ 경제관련 헌법조항들을 수정하여 변화된 내부의 경제현실을 공식화하고 향후 대외 지향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유구조의 조정, 경제관리운영에서의 자율성 확대, 재산성 원칙의 중시 그리고 대외 경제개방의 확대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관련부서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운영 및 경제효율성 제고를 모색했다.

둘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회의(1999.4.7~9)에서 국가예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였다.⁷⁸⁾ 5년 만에 발표된 1999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전력·석탄·광업·금속·기계 등의 기간산

업 부문과 철도운수부문의 예산증가율이 10~15%에 이르렀는데, 이는 북한이 농업 및 중공업부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향후 경제정책운용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인민경제계획법 채택은 비계획부문의 확산을 차단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계획기능을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1998년에 경제과업 관철을 위한 '내각결정'을 채택한 이후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오고 있다.⁷⁹⁾ 이 내각결정은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 이후 최초로 설정된 종합적 경제대책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주요 실천적 대책은 석탄·전력·금속·공업 등 선행부문 역량집중, 식·의·주문제 해결, 이완된 계획질서 정비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각결정은 2002년까지 성(省)·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등이 달성해야 할 경제적인 목표의 성격을 갖는다.

넷째, 내부정비조치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2년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실리주의'를 앞세우면서, 가격과 임금의 현실화, 경제단위의 분권화, 자율성 강화, 독립채산제의 강화(번수입지표 도입), 가격체계의 현실화 등을 주조로 하였다. 또한 종합시장 허용 등 사적 상업활동을 허용했고, 보조금 제도의 폐지와 재정 금융 부문을 개혁을 포함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한이 에너지·농업·과학기술·도시건설·기간산업 등 경제정상화를 위해 집중해야 할 당면부문에 대한 단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에너지부문에서 '연료·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2003~2005년)을 수립·추진하였다.⁸⁰⁾ 공업경제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에너지난에 있다고 보고 발전소 기술개선, 석탄 증산, 관련 기계설비 조달 등을 포함한 에너지 증산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계획완료가 예정되어 있던 2005년 이후에도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영농사업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보농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여, 최근에는 각 시도별로 일부 시·군들을 과학농사 도입을 위한 집중단위로 정하는 등 과학영농의 성과를 내기 위해

●● 79 「민주조선」(1998. 10.17).

●● 80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인터뷰, 「조국」(2003.4)

부심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에서는 1998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1차 : 1998~2002년, 2차 : 2003~2007년, 3차 : 2008~2012)을 추진해오고 있다. 북한은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연속 추진할 것을 밝혔다.⁸¹⁾ 북한은 1차 계획 5년간 “과학기술의 기초기반을 구축하고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며 과학중시 분위기를 확산” 시켰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첨단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천명⁸²⁾하였다. 그러나 투자재원, 인적자원, 기초기술 부족으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는 큰 성과는 없었지만 생산정상화에 일정하게 기여했다. 3차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발전의 기여율을 30% 수준에 올려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정보산업 발전’을 내세우고 있다.

도시건설부문에서도 ‘평양시 현대화계획’ (2002~2004년)을 수립하여 영광거리 등 평양시 중심거리 보수·정비, 통일거리 등에 종합시장 건설, 평양시에 2만 2,8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였다.⁸³⁾

한편 최근에는 ‘기간공업과 농업 3년 연속계획’ (2006~2008년)을 새로이 추진했다. 북한은 기간공업과 농업에서 달성해야 할 생산목표를 “1980년대 후반의 경제발전수준의 재현”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구체적인 생산목표는 알 수 없으나,⁸⁴⁾ 농업과 경공업을 강조하면서도 4대 선행부문 등 경제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 정상화에 계속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2010년까지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사업을 결합한 ‘장기 환경정책 전망계획’의 작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사회발전 보장을 위한 10~20년 기간의 연차별 계획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러한 전망계획은 현행 경제발전계획 및 도시건설계획과 연계되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이와 같은 부문별 중장기 경제계획은 실질중시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⁸⁵⁾ 그러나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 및 대외환경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부문별 계획 추진에는 적지 않은 애로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1
리의구 과학원부원장 인터뷰, 월간 「조국」 (2008.11)

●●82
리성욱 과학원부원장 인터뷰, 월간 「조국」 (2004.3)

●●83
국가건설감독성 강태흠 부상 인터뷰, 월간 「조국」 (2002.11)

●●84
「조선신보」 (2006. 1.13)

●●85
국가계획위원회 최홍규 국장은 일본 아사히신문과 가진 인터뷰(2002. 10.25)에서 “이번에 마련하고 있는 경제계획 초안은 지금까지의 입안 방식과는 달리 실질을 중시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 분야별 현황

가. 국민소득

북한에서는 총량부문의 경제지표로서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이란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사회총생산물(GSP : Gross Social Product)이란 “일정한 기간(보통 1년)에 사회의 모든 생산부문들에서 창조된 물질적 부를 전사회적 범위에서 개괄한 총량”을 말한다.⁸⁶⁾

즉 사회총생산물은 공업·농업·건설·화물수송 등 물질적 생산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적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사회 생산물의 총계이므로 국가관리, 교육·과학·예술, 여객수송, 주택건설 등 많은 비생산적 부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개념상의 특징이다.⁸⁷⁾

이러한 사회총생산물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소유의 두 형태인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에서 생산되며 극히 적은 부분은 개인부업 경리에서 생산된다. 사회총생산물은 현물형태로는 생산수단과 소비재로 이루어지며, 가치형태로는 생산과정에서 소모된 생산수단의 가치 또는 가치형태와 노동에 의해 새로 창조된 가치 또는 가치형태로 구성된다.⁸⁸⁾

한편 국민소득(NMP : Net Material Product)은 “사회총생산물 중에서 생산하는데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이 창조된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이란 사회총생산물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충당금과 중간재 투입비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북한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국민순생산(NNP : 협의의 국민소득 NI + 순(純)간접세 개념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북한의 국민소득에는 비생산적 서비스부문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본질상 간접세에 해당하는 ‘거래수입금’과 농업생산이나 생필품생산 등에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가감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의 국민소득과 개념상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차이점을 합

●● 86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688.

●● 87

북한의 사회총생산물(GSP)에 상품생산만을 포함하고 서비스 부문은 모두 제외하고 있다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며,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예컨대 과학·교육·문화·보건과 같은 비생산 부문의 생산도 일부 포함되고 있으며, 물자수송과 물자통신, 그리고 무역 등은 GSP에 포함되는 서비스 부문이다.

●● 88

『재정금융사전』(1995), pp.688~689.

●● 89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ountryName=Korea,%20Democratic%20People's%20Republic%20of#Economic>

●● 90

<http://data.un.org/Data.aspx?q=Gni+per+capita&d=SOWC&f=inID%3a94>

●● 91

GNI(Gross National Income)는 소득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1993년부터 UN이 중심이 되어 개발하여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동 개념을 1998년부터 도입 적용하였다.

리적으로 조정하여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되는 국민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거래수입금이나 보조금의 규모, 비생산적 부문의 생산액 등)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북한은 그들 개념에 의한 국민소득조차도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간혹 발표되는 1인당 국민소득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되고 있어 통계적 신뢰도는 극히 낮은 형편이다.

예컨대 북한은 1997년 5월 UN회원국 분담금 결정시 회원국 분담금을 최빈국 수준으로 인하시킬 목적으로 1988~1995년 기간중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과거보다는 이례적으로 대폭 축소시켜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1년 뒤인 1998년에는 UNDP·IMF 등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 획득을 목적으로 1992~1996년 기간중 5년간의 1인당 국민소득 통계를 UN분담금위원회에 제출한 통계보다 다소 높여서 제출하였다. 이들 통계자료는 모두 같은 조선중앙통계국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시기·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UN DATA의 Country Profile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GNI는 2000년에 461.3달러로 2006년에는 577달러로 기록되어 있다.⁸⁹⁾ 반면 UNICEF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2006년도 GNI는 905달러로 기록되어 있다.⁹⁰⁾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정보 또는 군사분야 전문연구기관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나름대로 자본주의적 개념에 부합하는 북한의 GNI⁹¹⁾와 1인당 GNI 추정을 시도하였다.

북한의 GNI를 추정할 바 있는 대표적인 외국의 정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SIPRI Yearbook),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 The Military Balanc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외국의 각 기관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GNI 평가치를 대외에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발표하지 않거나 추정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북한이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

연도	1인당국민소득	근 거
1946	64.44원	“1967년 소득은 1946년대비 9배” ¹⁾ 에서 산출
1949	131.82원	“1967년 소득은 1949년대비 4.4배” ²⁾ 에서 산출
1962	416.67원	“1966년 소득은 1962년대비 1.2배” ²⁾ 에서 산출
1966	500원 ²⁾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 보고(1967.12.16)
1967	580원	조선중앙방송 보도(1979.9.17)
1970	605.73원	“1970년 소득은 1946년대비 9.4배” ³⁾ 에서 산출
1974	1,029.75원	“1974년 소득은 1970년대비 1.7배” ⁴⁾ 에서 산출
1979	1,920달러	김일성 신년사(1980.1.1)
1982	2,200달러	1983.9.12, 김우중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 일본기자와의 회견
1986	2,400달러	방완주, 「조선개관」(1988)
1987	2,400달러	사회과학원 교수 이명소, 서방기자단과의 회견(1988. 9)
1988	2,530달러	뉴욕타임즈(1989.7 평양발기사)
1988	868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89	911달러	”
1990	835달러	”
1991	2,460달러	김정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일본기자와의 회견 (연합통신, 1992.2.24)
1991	753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2	659달러	”
1992	1,005달러	UNDP·IMF 제출자료(1998.5)
1993	547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3	994달러	UNDP·IMF 제출자료(1998.5)
1994	432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4	721달러	UNDP·IMF 제출자료(1998.5)
1995	239달러	제57차 UN총회시 분담률위원회에 북한대표부가 제출한 자료(1997.5)
1995	590달러	UNDP·IMF 제출자료(1998.5)
1996	481달러	”
1998	467달러	APEC 각료회의의 제출자료(2001.1)

※ 출처 : 1) 「조선중앙년감」(1970), p.276.

2) 「조선중앙년감」(1968), 문헌자료편, p.2.

3) 「조선중앙년감」(1974), p.242.

4) 「조선중앙년감」(1976), p.371.

※ 주 : ‘원’화는 북한화폐 기준임.

● 92

「조선대백과사전 20」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272

그 주된 이유는 북한의 원화표시 생산액을 달러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 국민소득 개념상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각종 조정계수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추정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또한 GNI나 1인당 GNI 자체도 추정상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후생수준이나 분배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물며 경제체제가 다르고 경제이론상 개념도 상이한 북한의 국민소득을 지극히 제한된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의 GNI 개념에 맞게 추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그만큼 오차 발생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GNI 또는 1인당 GNI를 가지고 북한의 후생수준을 평가하거나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1990년부터 UN의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북한의 국민소득을 추정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연도별 GNI 및 1인당 GNI는 다음 표와 같다.

북한의 GNI 추정결과

구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GNI(억달러)	94	135	151	231	223	168	157	170	184	208	242	256	267	248
인당 GNI(달러)	579	758	757	1,142	1,034	757	706	762	818	914	1,056	1,108	1,152	1,065

※ 출처 : 1985년 이전은 통일원, 1990년 이후는 한국은행 추정결과
 한국은행 추정치는 북한의 생산량 데이터에 남한의 가격·환율을 적용한 것임
 ※ 주 : 1998년 이전의 통계는 GNP 개념

나. 재정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북한은 재정의 개념 “국가 및 기관, 기업소들이 화폐자금을 형성·분배·이용하는데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⁹²⁾ 즉

북한에서는 재정을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자본주의 재정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북한경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인 만큼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범위는 자본주의국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경제는 집단적(사회주의적) 소유를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소유 또는 협동적 소유로 된 경제조직까지 모두 포함하여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우 재정이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주의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북한은 재정의 기능을 분배적 기능과 통제적 기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⁹³⁾

재정의 분배적 기능이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기업소와 기업소간, 인민경제부문간,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간, 그리고 축적과 소비간에 합리적으로 분배” 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의 통제적 기능이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을 동원,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통제” 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의 분배적 또는 통제적 기능 수행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정의 주체들이 수립하는 재정계획이다. 재정계획은 크게 기본재정계획과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으로 구분된다.

기본재정계획은 사실상 ‘국가예산’ 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인민경제부문 및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은 국가적 또는 협동적 소유의 사회화된 기업 및 경제조직의 개별적 재정계획으로서 연차별 경제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업무적 계획을 말한다.

국가에 의한 재정의 통제·감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를 비롯하여 내각에 재정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을 통제·감독하는 방법으로는 ‘재정총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재정총화는 인민경제 각 부문의 말단 직장단위에서부터 내각의 위원회·성(省)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기업소가 일정기간 동안(월별·분기별·연간)에 수행한 재정보산 집행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2004년 수정된 북한 ‘재정법’에서는 “재정총화를 인민경제계획실행정형총화와 맞물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들어 탈법적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은행 기관들과 검열·통제기관의 재정검열활동을 강화시키고 있다. 즉 2급 이상 공장·기업소들은 적어도 2~3년에 한번씩 재정검열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위원회와 성을 비롯한 중앙기관들과 연합기업소 재정부서들은 산하 기업소들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1년에 1, 2개 이상의 대상기업소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재정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원에 의한 통제’를 통해 재정을 관리해 왔다. ‘원에 의한 통제’란 주로 재정은행기관이 기관·기업소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거나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재정계획과의 연계 하에 기관·기업소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화폐적 통제를 말한다. 이는 하부단위 기관·기업소의 운영에 까지 중앙계획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통제 시스템에 다소간의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2) 예산제도

북한 헌법에 의하면 ‘국가예산’은 내각이 편성, 제출한 예산초안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심의한 후 ‘법령’의 형식으로 채택함으로써 성립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내각이 제출하는 국가예산 초안을 심의·승인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권도 가지고 있다.⁹⁴⁾

지방인민회의는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으로 승인한 지방예산에 근거

●● 94

북한에서는 이를 ‘예산총화’라고 부르는데 이는 재정의 통제기능 기운에 사후적 통제기능을 의미한다.

하여 구체화된 자체예산을 심의·승인한다.

내각은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데 부문별 집행기관의 하나인 재정성을 통하여 국가예산 초안을 편성한 다음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이 승인 되면 분기별 집행계획과 집행대책을 세우며, 지방인민위원회의 예산 집행을 지도한다.

또한 내각은 재정성을 통해 국가예산 집행에 관한 분기별 결산과 연간 결산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연간 결산내용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예산편성 과정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연차별 예산편성이 재정계획 작성과 동시에, 또는 이들 재정계획 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내각에서 제출한 예산 초안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내부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심의·승인 이전이라도 내각이 최초로 작성한 예산 초안 혹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함으로써 최고인민회의의 심의가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년도(북한은 이를 ‘예산년도’라고 부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산편성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예산수입부분과 예산지출부분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수입·지출 항목은 각각 행정기관 조직별, 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되고⁹⁵⁾ 다시 관, 항, 목으로 세분된다. 예를 들면 국가예산수입 중에서 거래수입금(관)은 경공업성(항)으로, 그것은 다시 방직공업총국(목)으로 구분된다. 이들 예산의 항목별 내용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임의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다.

북한의 예산체계는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성되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이 합쳐진 전체예산을 국가예산이라고 부른다.

중앙예산은 “국가 중앙기관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전국적인 규모에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예산의 기본을 이룬다. 이에 반하여 지방예산은 “일정한 행정지역 단위의 범위에서 지방

● 95

북한에서는 행정기관 조직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관할별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하며, 성질별로 편성하는 것을 경제적 징표에 의한 구분이라고 한다.

●● 96

조선대백과사전 1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544.

●● 97

Russia Encyclopaedia (London: 1982) 참조.

●● 98

『김일성저작집 7』, pp. 240~241.

●● 99

소련과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경제연구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모스크바: 1986)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 (서울: 국토통일원, 1988) 참조.

살림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형성, 이용하는 예산”으로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하에 지방행정기관 자체로 편성, 집행된다.⁹⁶⁾ 지방예산제의 기본 단위는 ‘군’ 단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예산은 중앙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하며, 전국적 단위의 경제·문화건설과 국방건설, 대외활동, 인민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예산에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방예산은 지방경제부문에서 창조된 사회순소득을 기본수입원천으로 하며, 지방경제발전과 살림살이에 예산을 지출한다.

예산체계를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주의 재정 원칙상 공통적인 현상이다.⁹⁷⁾ 북한은 지방예산제를 1972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으나, 1973년 당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지방예산 실시에 관한 방침을 제시하고⁹⁸⁾ 지방예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독려한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7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 김일성이 “지방 예산제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데 대하여” 라는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지방예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78년 12월에는 지방재정체계에 관한 특별법규가 채택되었는데, 이 법규는 지방공업기업소에 대한 지방 정권 기관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규의 주요 내용은 소비재 증산, 지방공업 기업소의 재산성 향상, 지방 행정기관의 감축, 은행의 재정 감독 기능 강화, 화폐 상여기금의 조성·승인·사용 방법, 지방예산·결산 제도의 강화 등이다.⁹⁹⁾

오늘날의 지방예산제는 경제난으로 경제건설 투자재원 마련에 큰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중앙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행정 단위별 경쟁의식 고취로 경제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의 구분

구분	대상기관	주요 수입원천	주요 지출대상
중앙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적 국영 기업소와 기관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 기업소와 사회문화기관 •사업상 특성을 가지는 사회 안전, 사법, 검찰, 재판기관, 철도 운수기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집중적 순소득(거래수입금) •국영기업소의 국가기업이익금 •지방예산으로부터의 이전금, 가격 편차 수입, 국가재산판매수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에 대한 지출 (기본건설, 유동자금 등) •사회문화사책에 대한 지출 (교육, 의료, 연금 등) •군사비 •중앙기관의 관리비
지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규모의 기관·기업소 •지방적 의의를 가지는 기관·기업소와 사회문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예산 대상기관·기업소의 거래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편의 봉사료 •중앙예산의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산업 및 농촌경리와 지방산업 건설 •지방의 도시경영, 교육, 문화, 보건부문 •지방기관 관리비

(3) 예산의 수입과 지출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지출구조는 재정구조의 합리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2002년 7.1조치를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2001년까지 예산수입은 국가기업이익금, 거래수입금, 봉사료수입금, 협동단체이익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사회보험료 수입,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7.1조치로 일부 항목이 통합 또는 폐지되어 지금은 국가기업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사회보험료 수입, 토지사용료 수입, 국가재산판매 및 기타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관련 개선조치 전후 예산수입 비교

변경전	2002년	변경후
국가기업이익금	통합	국가기업이익금
봉사료 수입금		
거래 수입금	통합	협동단체이익금
협동단체이익금	변화	사회보험료 수입
사회보험료 수입	없음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국가재산 판매 및 기타수입	신설	토지사용료 수입
—		

※ 출처 : 문성민, 「북한 재정제도의 현황과 변화 추이」 (2005)

국가기업이익금은 독립채산제 국영기업소의 이윤 중에서 기업소 내 부유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직접세이다. 거래수입금은 기관·기업소의 생산제품을 다른 기관·기업소에 판매할 때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간접세이다. 거래수입금은 국영기업소는 물론 협동단체 생산제품에도 부과된다. 봉사료수입금은 편의봉사부문 기업소의 봉사요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서비스 부문에 대한 거래수입금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은 2002년 7.1조치에 의해 국가기업이익금으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예산수입 원천이 단순화되었으며, 이는 2004년 재정법 개정에서 예산수입 원천을 ‘국민소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명문화되었다.

협동단체이익금은 부과대상이 국영기업소가 아닌 협동단체라는 점 외에는 국가기업이익금과 성격이 같다. 협동단체이익금 납부대상은 생산협동조합, 편의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이며 협동농장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협동단체이익금과 생산협동조합의 생산물에 부과되었던 거래수입금 역시 7.1조치에 의해 협동단체이익금으로 통합되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근로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항목이다. 국가재산판매 및 기타수입에는 국가재산 판매수입, 가격편차수입, 무상 노력동원 수입, 국가수수료 및 관세수입, 벌금수입, 합영회사 및 외국인 소득세수입 등이 있다.

2002년 이후 신설된 예산수입항목으로는 토지사용료와 부동산사용료 등이 있다. 토지사용료 수입은 재정관련 개선조치에 따라 부과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경작물을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기업·군부대·협동농장·개인의 토지를 대상으로 징수된다. 부동산사용료는 2006년 이후 처음 등장한 항목으로서, 토지를 비롯해 건물·임야 등에까지 사용료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세원 발굴에 부심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7.1조치 이후에는 예산수입 항목뿐만 아니라 철도·버스요금, 전기사용료, 주택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대폭 인상됨으로써 예산수입

의 주요 원천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오늘날 북한의 예산수납체계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예산을 징수하는 '지역별 수납체계'이다. 북한은 2000년 후반부터 성·관리국이 예산을 징수하던 '부문별 수납체계'를 실시하다가, 2002년 상반기에 다시 '지역별 수납체계'로 환원하였다. 과거 부문별 수납체계가 중앙정부의 경제담당지도기관인 성·관리국을 수납체계의 기본단위로 하고 있었던 데 비해, 지역별 수납체계는 예산 소속과 부문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해당 거주지역 지방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예산수입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결국 '지방예산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지방에 대한 보조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¹⁰⁰ 지역별 수납제로 전환하면서 북한은 지역 내 기업소에 대한 예산 징수 권한을 지방인민위원회에 일임함과 동시에 지방에 대해 사전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중앙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할당된 지방 납부금을 수행한 이후에 지방은 예산 편성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중앙이 담당해 온 주민들의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도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이 부문에 관하여 지방은 더 이상 중앙의 보조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사회보장을 방기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이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국가예산지출은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군사비, 국가관리에 대한 기관관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인민경제비는 생산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기본건설자금, 원자재나 중간재를 생산·유통하는데 소요되는 유동자금, 기타 식량이나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보조금, 독립채산제 공장·기업소 지원자금, 농촌에 대한 지원자금,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도시경영사업비, 지방사업비, 대외경제사업비 등이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지출항목이다.

이 가운데 기본건설자금은 1980년대 말에 조금씩 축소되기 시작하
뒤 2002년 7.1조치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유동자금공급은 2000년대
이전에 이미 폐지된 뒤 오늘날에는 자체자금이나 은행대부로 충당하
도록 변화되었다. 또한 먹고 입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주민들에게

●●100

『경제연구』 2002년 제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 101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제 10기 제6차 회의(2003. 3.26)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2002년 예산집행 결과는 계획의 99.8%를 지출, 2003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4.4%를 증액 지출한다고만 발표하였다.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던 추가적 시책비가 7.1조치의 물가 현실화로 인해 사실상 폐지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종래에는 예산에서 기업소에 지원하던 예산을 대부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결과물로 해석된다.

인민적 시책비는 2001년 기존의 사회문화시책비에 인민경제비 항목이었던 추가적 시책비를 포함하여 새로 만들어진 예산지출항목으로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추가적 시책,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체육,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등 사회의 공동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소요되는 자금이 포함되며, 군사비는 군수공업 발전과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투자, 장비 현대화, 병력유지 및 전인민무장화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포함한다.

국가관리비는 국가관리기관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인민회의, 각급 행정기관, 사회안전 및 사법기관 등의 경비예산이 포함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제4차회의(2001.4.5)에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예산의 비목별 예산지출 구성비를 다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르면 2001년부터 북한의 예산지출비목을 일부 변경하는 등 새로운 결산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인민경제비’에 포함하던 ‘추가적 시책비’를 ‘인민적 시책비’로 변경 계상하고 있고 세부비목 변경에 따라 각 예산항목의 비중도 많이 달라졌다.

북한은 매년 4월경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소위 ‘재정보고’의 형식을 빌어 내각의 재정상이 전년도 국가예산의 결산내용과 당해년도 국가예산을 공개한다. 그러나 국가수입예산이나 지출예산의 총규모 및 성질별 내역의 총괄적 사항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뿐이다. 예컨대 2003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당해년도 계획을 구체적 절대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지·배수 형태로 발표하였다.¹⁰¹⁾

북한이 매년 재정보고시 발표하는 자료와 ‘조선중앙년감’을 토대로 파악된 연도별 예산현황은 표와 같다.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북한 만 원)

구분	세입	세출	성질별 지출내역			
			인민경제비	인민적사책비	군사비	관리비
1965	357,384	347,613	236,376	68,422	27,809	15,006
1970	623,220	600,269	282,126	119,394	187,884	10,805
1975	1,158,630	1,136,748	650,688	275,762	186,427	23,872
1980	1,913,923	1,883,691	1,139,777	417,434	275,019	51,461
1985	2,743,887	2,732,883	1,762,789	535,387	393,535	41,172
1990	3,569,041	3,551,348	2,399,145	669,279	426,162	56,762
1991	3,719,484	3,690,924	2,504,707	692,704	446,602	46,911
1992	3,954,042	3,930,342	2,662,504	750,891	448,058	68,879
1993	4,057,120	4,024,297	2,929,067	765,908	462,794	66,528
1994	4,160,020	4,144,215	-	-	472,440	-
1998	1,979,080	2,001,521	-	-	292,222	-
1999	2,038,172	2,038,172	-	-	295,535	-
2000	2,090,343	2,095,503	840,297	800,482	299,657	155,067
2001	2,163,994	2,167,865	917,007	825,956	312,172	112,729
2002	-	-	-	-	-	-
2003	-	-	-	-	-	-
2004	33,754,600	34,880,700	14,405,729	14,231,325	5,441,389	-
2005	39,188,000	40,570,000	16,755,410	-	6,450,630	-
2006	40,920,889	41,928,172	17,106,694	17,064,776	6,708,508	1,048,204
2007	43,393,690	44,065,427	18,060,000	17,980,000	6,920,000	1,100,000
2008	45,129,438	45,167,063	18,580,000	18,270,000	7,130,000	1,130,000
2009	48,260,000	48,260,000	19,880,000	19,550,000	7,630,000	1,210,000

※ 출처: 북한의 각 연도별 결산 발표 내용, 2009년도는 예산(균형예산 가정)

※ 주: 2002~2003년도 예산집행 결과는 절대수치 없이 지·배수로만 발표

북한이 발표하는 세출예산중 군사비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군비증강에 노력해왔으며, 김일성은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4대 군사노선을 재강조한¹⁰²⁾ 이래 1978년 북한정권수립 기념행사에서 이의 완성을 공언한 바 있다.

북한이 발표한 군사비의 세출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1967년부터 30% 수준을 상회하다가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부터는 20%

●● 102

제5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1970.11.2).

●● 103

보유 군사력(장비, 병력 포함)을 기준으로 적정 군사비 소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OB(Order of Battle) 방식이 있다. 북한에서 군사비의 범주에 포함되는 비목은 '국가 예산지출' 항목을 참조.

이하로 급격히 하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전체예산액의 12% 수준으로 낮추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2차 회의(1999.4.7)에서는 군사비 비중을 14.5%로 다시 상향 책정한 이래 14~1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나 군사비로 분류되는 지출대상의 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 규모는 신뢰성이 없으며,¹⁰³⁾ 세출예산에 대한 군사비 구성비의 증감추세는 인민경제비의 구성비 증감추세와 역(逆)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인민경제비 등 여타 비목에 은폐·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 사후 5년만에 처음으로 발표된 예·결산안의 특징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반영하여 예산을 현실화했다는 점과, 1998년도 결산을 적자처리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1999년도 예산은 1994년도의 예산수입총액 416억 2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일 뿐 아니라, 1994~1998년의 4년 동안 연 평균 6.6%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식량이나 생필품 등의 배급체계가 붕괴되어 실물 경제에서 국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음을 반증해 준다. 재정수지는 2004~2007년까지 4년 연속 적자재정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 흑자재정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화폐·금융

(1) 화폐·금융의 기능과 제도

(가) 화폐·금융의 기능과 결제방식

실물공급경제인 북한경제에 있어서 화폐·금융부문은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통제적인 기능이 매우 강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정부문과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북한은 화폐에 대해 “상품세계에서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표현해주고 교환을 증대해주는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는 특수한 상품”으로 정의하고 가치척도와 유통수단·축재수단·지불수단·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종래에 북한은 국가에서 경제부문별 균형유지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화폐가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화폐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1차례의 화폐개혁과 3차례의 화폐교환을 실시하였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는 1992년 7월 북한이 사장 통화 환수를 통해 부족한 재정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새로 발행된 화폐들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¹⁰⁴⁾ 제3차 화폐교환의 주요내용은 신·구화폐를 1 : 1로 교환하되 주민보유 현금은 일정한도까지만 교환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 후 지불토록 하였으며¹⁰⁵⁾ 기관·기업소·단체도 필요한 만큼만 교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104

중앙인민위원회 정령(1992.7.15) “새 돈을 발행함에 대하여” 참조.

●● 105

당시 가구당 신화폐의 교환 한도액은 399원이었으며, 400~5,000원까지는 일정기간 동결조건으로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5,000~10,000원까지는 5년간 예치조건으로 예금이 허용되었으나, 30,000원 이상은 교환해 주지 않았고 예금으로도 받지 않았다.

화폐 개혁·교환 현황

구분	시기	내용
1차 화폐개혁	194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제시대 발행·통용되던 화폐중 보조화폐를 제외한 전 화폐를 1 : 1 비율로 교환 1949.5 이후 새 보조화폐 발행, 1949. 8.15이후 「조선중앙은행」 발행 화폐만 통용 ※ 북조선인민위원회 법령 제30호에 근거
2차 화폐개혁	195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증방지, 새로운 재정금융 토대 구축 및 새 경제계획 실시에 따른 투자자원 확보 목적 구화폐 100원 : 신화폐 1원 비율로 교환 ※ 내각 결정 11호에 근거
3차 화폐개혁	19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액의 제한없이 1 : 1 비율로 교환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는 보유화폐를 은행에 입금시킨 후 필요한 만큼 새 돈을 지불받음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4차 화폐개혁	199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화폐제도의 공고화, 화폐유통의 원활화 100원, 50원, 10원, 5원, 1원 등 5종의 중앙은행권 발행·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전은 계속 유통 신·구권 교환비율은 1:1 ※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근거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물가 및 임금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1,000원권, 5,000원권 등 고액권 화폐를 발행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물가인상·임금인상 등으로 고액권 화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한다. 또한 2005년에는 200원권 지폐와 100원짜리 주화(100원권 지폐는 기존 통용)를 새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는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폐 9종과 주화 6종 등 일반화폐 15종이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화와 교환해주었던 조선무역은행 발행의 특수화폐(‘8종의 외화와 바꾼 돈표’)는 폐지되었다.

한 때 북한에서는 주민 개인이나 기관·기업소의 ‘외화와 바꾼 돈표’에 대한 선호 및 사용확대로 상품유통상의 왜곡과 혼란이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태환성 화폐사용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5년 11월 21일 부터 1개월 동안 새로운 ‘외화와 바꾼 돈표’를 발행·교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97년 6월에는 경제개혁·개방조치의 하나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북한 원화와 미 달러화를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종래에 고평가되었던 북한 원화의 환율을 달러당 2.2원에서 153원으로 현실화했다. 아울러 전지역에서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외화를 통용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2002년 12월 1일부터 대외결제 기준통화를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화폐 종류

구분	종류	비고
지폐 (9종)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7월 제4차 화폐교환 실시 • 조선중앙은행 발행 • 500원권은 1998년부터 발행 • 1000원권, 5000원권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발행 • 200원권은 2005년부터 발행
주화 (6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전, 5전, 10전 주화는 1959년 2월부터 사용 • 50전 주화는 1979년 4월, 1원 주화는 1987년 10월부터 유통 • 100원 주화는 2005년부터 발행

특수화폐 종류

구분	종류	비고
외화와 바꾼 돈표(8종)	1전, 5전 10전, 50전 1원, 5원 10원,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조선중앙은행권으로 발행, 1988년 9월부터는 조선무역은행권으로 발행 • 1995년 11월 새로운 돈표로 교환 • 1997년 6월 1일부터 나진·선봉지대에 국한하여 '외화와 바꾼돈표' 제도 철폐 •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전지역에서 '외화와 바꾼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바로 외화를 통용

한편 결제방식은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형태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등 국가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결제적용 장소에 따라 국내결제와 국제결제로 구분된다.

국내결제는 현금이용 여부에 따라 현금결제와 무현금결제로 구분되며, 무현금결제는 은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자금이체뿐 아니라 기본계약내용의 정당성 여부까지 심사하고 있어 지불결제는 인·허가와 같은 행정심사 성격을 갖는다. 한편 2000년대에는 기업 간의 비공식 거래에서 달러가 직접 교환수단으로 직접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달러가치가 안정적인 데 비해 북한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결제는 거래내용에 따라 무역결제와 비무역결제로 나뉘는데, 무역결제는 상업신용장, 보증장, 대금청구서, 송금 및 지불위탁서에 의한 결제 등의 방식이 적용되며, 비무역결제는 송금결제방식과 증권결제방식이 적용된다.

(나) 금융의 개념과 형태

북한에서의 금융이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관계”를 말한다.¹⁰⁶⁾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는 생산·투자·소비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경제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자금의 이동은 실물이동과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지므로

●●106
「재정금융사전」(1995),
p.242.

실물순환에 따라 수동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즉 금융은 국가경제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실물부문의 목표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됨에 따라 비생산적 경제활동분야로 인식된다.

북한에서 금융은 자금유통이 이루어지는 지역적 범위에 따라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된다. 국내금융은 북한 원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로서 화폐자금이 이동하는 성격과 형식에 따라 신용·자금공급·화폐유통으로 다시 구분된다.

신용이란 서로 다른 소유형태들 사이에서 일시적인 유희 화폐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대부·저금·국가보험 등)을 말하며, 자금공급이란 같은 국가적 소유 안에서 정상적인 경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수요에 대해 계획적으로 국가자금을 동원·이용하는 일방적(불반환적) 성격의 자금이동(기본건설 자금이나 유동자금의 공급, 경비예산의 지급 등)을 말한다. 화폐유통이란 신용과 자금공급 관계에 기초하여 화폐자금이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서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나뉘어 진다.¹⁰⁷⁾ 한편 국제금융은 외화유통에 기초하여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동 형태로서 외국환자거래, 국제신용, 국제결제, 국제보험으로 구분된다.

북한은 금융의 기능을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¹⁰⁸⁾ 즉 사회주의 금융의 기능은 생산과 유통을 자금적으로 보장하여 경제건설을 도와주는 자원배분적 기능, 올바른 독립채산제 시행을 위한 감독 등 재정통제적 기능, 외화거래의 합리적 조직기능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북한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단기 자본시장, 증권시장, 기타 유사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책당국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정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주의국가에서 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게 된다.¹⁰⁹⁾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되어 있고 중앙집권적 경제체제인 북한에서는 재정계획과 예산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직접 자원배분 기능을 맡고 있으므로 이자율과 수익률·환율 등을 매개로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하의 금융기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107

현금유통이란 주로 기관·기업소와 주민간 또는 주민들 상호간에, 특별한 경우는 기관·기업소 상호간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하며, 무현금유통이란 주로 국가기관·기업소들 사이에서 인민경제계획과 맞물린 재정계획에 따라 현금의 직접 이동없이 은행에 설치된 예금돈자리(계좌)에서 계산상으로만 화폐자금을 이동, 상호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제거래를 말한다.

●● 108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242.

●● 109

북한은 은행에 의한 재정통제를 '원에 의한 통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금융의 주임무를 맡고 있는 은행들이 기관·기업 소에게 화폐자금을 공급하거나 이들로부터 수입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관·기업소 재정계획과의 연계하에 예산집행의 적절성, 경영활동의 타당성 등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바,¹¹⁰⁾ 금융은 오히려 재정의 한 부분으로서 재정통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상품부족으로 주민들이 잉여화폐를 보유함에 따라 야기되는 인플레이 압력을 없애기 위하여 강제저축, 공채발행, 임금수준 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금융체계

2006년 법적으로 상업은행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북한의 금융체계에 변모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도 그 근간은 전통적 사회주의 금융제도이다. 즉 북한의 금융체계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통제와 감독에 의해 움직여지는 단일은행제도(mono banking system)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금융체계는 대내금융사업을 관장하는 조선중앙은행 등의 은행금융기관과 국가보험기관, 체신저금기관, 협동적 신용기관, 투자기관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업무의 일부도 은행이 취급하고 있어 북한의 금융체계는 곧 은행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은행은 조선중앙은행과 전문분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무역은행 등 몇 개의 특수은행들이 있다.

1946년 10월에 설립된 조선중앙은행은 종래 발권은행으로서 명목상 타 은행을 지도·감독·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 기업소들에게 기본건설자금, 유동자금 등 일체의 자금수요를 보장하고 국가수입금을 수납하며, 고정자산의 형성·보수·이용사업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해왔다.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의 본점,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는 총지점(도), 지점(군) 등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한 저금·보험사업은 물론 귀금속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 110

J. Wilczynski, *The Economics of Socialism*(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p.146.

특수은행으로는 무역은행·대성은행·금강은행 등이 있다. 무역은행은 대외무역에 따르는 결제업무, 외국환업무, 무역기관들을 위한 지불보증, 환율의 결정·공표업무 등을 수행한다. 금강은행과 대성은행은 1970년대 후반에 대외무역 증대방안의 하나로 설립된 무역결제업무 전담은행이다. 대성은행은 노동당 39호실 경리부 소속이다.

합영·합작 은행에는 대동신용은행, 고려글로벌 신용은행 등이 있다. 대동신용은행(구 페레그린-대성은행)은 대성은행이 홍콩회사와, 고려글로벌신용은행은 고려은행이 영국회사와 합영·합작한 은행이다.

북한 은행제도의 최상위기구인 조선중앙은행은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 직속의 독립기관에 위치해 있으나, 수행업무의 특성상 재정성의 직접적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각 은행들은 소속된 경제체계의 관할 하에 상급기관의 지도·통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저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재산증식을 위한 자발적 저축이라기보다는 주로 재정계획상의 자금동원 목표달성을 위한 강제저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축의 종류로는 보통저금, 준비저금, 저금권저금, 당첨금을 지급하는 추첨제저금 등이 있다.¹¹¹⁾

일반주민들은 저축 또는 저금 인출시 조선중앙은행의 총지점이나 지점 이외에 우편·전화업무를 취급하는 체신소를 이용한다.

최근 들어 북한 금융분야에도 몇가지 변화조짐이 발견되고 있다. 우선 2004년 중앙은행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으로는 조선중앙은행이 기존에 수행하던 일반 상업은행 업무와 보험업무는 상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이로써 조선중앙은행은 화폐발행,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 지급결제 업무 등 일반적인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재정과 관련한 국고대리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상업은행이 설립될 것을 대비하여 금융감독 업무를 신설하고 금융기관과의 외환매매, 채권발행 등록관리, 금융 통계·조사 등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다.

2004년 중앙은행법 제정 이후, 2006년 상업은행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이원적 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업은행법의 골자는 국가의 재정기능을 축소하고 하부단위 기관·기업소의 운영자금을 상업은행의 대출에 의

● 111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532

거하여 조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업은행법의 제정은 본격적인 금융분야의 변화라기보다는 재정개혁과 연동된 후속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상업은행 설립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 어두었다는 점에서 금융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대상에 따라 국영기업소 대부, 협동단체 대부, 기타 대부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영기업소 대부는 국영기업소에 대해, 협동단체 대부는 협동농장이나 협동조합에 대해 행해지며, 기타 대부는 외화별이 자금이나 부업경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부, 부업반과 가내작업반, 기타 기업들에 대한 대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부의 이자율은 대상에 따라 2~6%를 적용하고 있으나 대부 신청자의 대부사유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기도 하나 실제로는 은행의 준비금 고갈로 대부가 어려운 실정이다.

(2) 환율 및 외환관리

주요 은행의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비고
조선중앙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폐발권 및 현금유통 조절 국고대리업무 상업은행 간의 지급결제 및 對상업은행 대부·저금 업무 금융감독업무 금, 은 등의 귀금속의 수매와 관리 금융기관과의 외환매매 및 채권발행등록관리, 통계·조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46년 10월 설립 발권은행으로서 타 은행 지도, 감독, 통제 평양 본점, 200여 개의 지점 설치 2004년 중앙은행법 제정으로 '일반 상업은행 업무 및 보험업무' 이관, 금융 감독 기능 등 신설
조선무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과 비무역거래 결제와 지불, 보증 외화의 수납 및 지출에 대한 통제 환율 결정 및 공포, 이율 결정 외국은행과의 협정 체결과 집행 대외거래 관련 기관·기업소에 대한 재정적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9년 11월에 중앙은행의 외환부문이 분리 독립되어 설립된 대외결제 전문은행 평양 본점과 각도에 지점 배치, 세계 주요 은행과 거래
조선금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주의 및 개도국과의 무역결제 조선봉화무역총상사, 조선평양무역회사 등의 대외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8년 8월 설립된 외국환 전문은행
조선대성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회사의 대외결제 등 외국환업무 귀금속거래와 신용카드업무에도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8년 11월 설립된 외국환 전문은행 세계 여러 은행과 코레스 계약 체결

그 동안 북한의 환율 및 외환관리에는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환율은 원래 공정한율·무역환율·비무역환율(여행자환율) 등 세 가지로 구분되는 복식환율제였다. 이것이 1990년대 후반들어 공정한율 및 무역환율로 단순화되었다가 2002년 7월 이후부터는 공식환율로 단일화하였다.

외화 관리법(2002.2.21)에 따르면, 북한의 재정성이 대외결제에 사용되는 외화를 정하고 북한 원화에 대한 환율의 종류·범위 및 고정환율을 정한다. 조선무역은행은 재정성이 정한 고정환율을 기초로 하여 현찰매매율(외화현금환자시세)·전신회매매율(결제환자시세) 등의 외화교환시세표를 작성·고시한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타국과의 협정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결정한다. 북한처럼 국가가 외환을 엄격히 통제하는 경제에서는 공식환율이 실제 구매력보다 훨씬 높은 것이 특징이다.

7.1조치와 함께 북한은 그 동안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던 북한 원의 공식환율을 현실화하였다. 북한의 공식환율은 2002년 7.1조치 이전 1달러 당 2.2원선이었는데, 150선으로 70배 이상 인상하였다. 새로운 달러 환율은 이미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 거래되는 달러당 200원인 환율과 다른 지역의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준을 고려하고 달러화의 수급을 함께 포괄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는 외환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시장기능을 일정한 정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그러나 환율을 현실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 이후 화폐 가치 하락으로 비공식 환율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공식환율 변동은 소폭에 그쳤다. 이처럼 북한의 국정환율이 비공식환율(암시장환율)에 비해 과대평가됨에 따라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의 괴리현상이 고착화되고 외화가 비공식 경제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환율에 준해 환전(2주간격으로 환율공시)해주는 외화교환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외화암거래는 주로 대도시 외화상점 부근에서 이루어지며 중국 인민폐, 일본의 엔화, 미국 달러, 유로화 등을 환전한다. 북한 주민들은 환전수수료가 높고 달러만을 교환해주는 '외화환전

●●112
중국 「신화사통신」
(2002.11.23)

소' 보다 암거래상을 더 선호한다. 장마당에서의 달러 환율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2008년경에 이르면 3,000원대에 도달했다.

한편 북한은 2002년 7.1 조치의 일환으로 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였다. 이 돈표는 원래 외화현금유통에 대한 장악과 외국인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기능해 왔었다. 돈표의 사용은 폐지되었지만 북한의 외화관리법에 의거 외화 현금은 조선 원으로 바꾸어서 사용되어야 한다.

북한이 '외화와 바꾼 돈표' 를 폐지한 것은 이미 북한내의 일반거래에서도 북한 원화의 사용을 회피하고 달러나 엔화, 유로화 등이 직접 이용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외화를 내는 고객에게 먼저 상품을 판매하여 오히려 외화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외화와 바꾼 돈표' 제도를 폐지하고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2002년 12월 1일 미 달러화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대외 거래를 유럽연합(EU) 단일화폐인 유로화로만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¹¹²⁾ 외국기업들과의 모든 대금 결제를 유로화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로화의 강세로 수입물가 등귀와 무역회사 손해가 발생했고, 은행들은 자금관리, 유로 도입에서 환차손과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또한 유로화 부족으로 인해 미 달러화·일본 엔화의 유로화 교환에 차질을 빚었다. 아직도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외화는 달러화·엔화·중국위안 등이다.

북한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추이

(북한 원/미 달러)

구분	1980	1985	1990	1992	1994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공정 환율	0.87	1.07	1.01	0.99	1.01	0.96	1.02	1.02	-	-	-	-	-	-	-
무역환율/ 2002이후 공식환율	1.79	2.43	2.14	2.13	2.16	2.05	2.19	2.21	153	145	139	140	141	135	130

※ 출처 : 한국은행·통일부

북한 원화 환율

구분	단위	현금매입	현금매도
유럽연합	EUR	156,000	160,000
스위스	CHF	105,000	108,000
스웨덴	SEK	17,000	17,400
영국	GBP	228,000	235,000
홍콩	HKD	18,900	19,500
싱가폴	SGD	83,000	85,000
호주	AUD	87,000	89,000
일본	JPY	1,210	1,250
캐나다	CAD	98,000	101,000
중국	CNY	17,500	19,000
서아프리카	XAF	0,200	0,230
미국	USD	147,200	151,000

※ 출처: 조선무역은행 발표자료(2003.3.24)

라. 산업부문별 실태

(1) 농림수산업

(가) 농업

북한은 국토가 거의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경지면적은 약 191만ha(논 61만ha, 밭 130만ha)로 추정되고 있다. 주요 재배작물은 벼·옥수수·콩·감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중 쌀·옥수수가 전체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농업은 협동농장방식의 집단영농체제 고수, 주체농법의 획일적인 적용, 농업기반시설 및 영농자재의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은 1990년대부터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대규모 홍수와 가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대규모

연도별 식량작물 생산량

(단위 : 만 톤, 정곡기준)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생산량 (쌀)	359 (142)	395 (168)	413 (173)	425 (172)	431 (180)	454 (202)	448 (189)	401 (153)	431 (186)

※ 출처 : 농촌진흥청

모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의 식량난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1946년 토지개혁으로부터 시작된 북한 농업정책은 생산 및 경영방법의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주로 열악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소위 ‘대자연개조사업’에 초점을 두어 왔다. 북한은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라는 농업강령을 발표하였다.¹¹³⁾ 이 강령은 사회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농업문제의 본질을 농업의 낙후성과 도·농 격차로 규정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한 3대 기본원칙으로 농촌에서의 기술·문화·사상혁명 수행, 농업에 대한 공업의 지원과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 강화, 협동적 소유형태를 포함한 ‘전인민적 소유화’(국유화)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이의 실천방안으로 농업의 수리화·전기화·기계화·화학화를 추진하였으며, 1976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12차 전원회의에서는 ‘자연개조 5대방침’을 결정하고¹¹⁴⁾ 곡물증산을 위한 장기적인 자연개조사업에 착수하였다. 1981년 10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회의에서는 30만 정보의 간석지 개간, 20만 정보의 새땅 찾기, 남포갑문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사업 등 ‘4대 자연개조사업’을 새로이 제기하기도 하였다.

최근 북한의 농업정책은 주체농법의 재해석,¹¹⁵⁾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방침, 농업의 정보화·과학화 등 실용주의에 입각한 농업증산 정책과 토지정리사업과 관개체계 개편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주체농법의 재해석을 통해 과거의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벼·옥수수 위주의 단순한 알곡생산구조에서 감자·밀·보리·콩 등으로

●● 113
「조선중앙년감」(1975), p.12.

●● 114
「자연개조 5대방침」이란 ①밭 관개의 완성 ②토지정리·토지개량 ③다락밭 건설 ④치산 치수 ⑤간석지 개간 등을 말한다.

●● 115
주체농법이란 ‘농민들의 의사와 자체실정에 맞게 농사짓는 과학농법’이라고 재해석(1999년 농촌태제 발표 35돌 기념 중앙보고회)

재배작물을 다변화하고 있다. 감자 재배면적은 1999년 12만ha에서 2008년 20만ha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이모작 재배면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4년 이래 콩농사에도 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해오고 있다. 두류 생산은 2004년 13만 톤에서 2008년 14만 톤으로 증가했다. 또한 새로운 농작물 재배방식인 영양냉상모와 소식(疎植)재배 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일부지역에서는 벼농사에서 수직파¹¹⁶⁾를 시도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전국에 키위를 재배하고 있는데, 특히 개성에 2004년부터 키위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고 있다.¹¹⁷⁾

한편 북한의 농업은 큰물막이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1995, 1996, 1999년 그리고 2002, 2004, 2005, 2006, 2007년에 연달아 6~8월경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농작물 생육과 작황에 타격이 발생했다. 2007년에만 해도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의 발생으로 황해도 등 곡창지대 농경지 30여만 정보가 침수 또는 매몰되고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토지정리사업은 전국적으로 총 60만 정보의 토지정리를 목표로 하여 1998년 10월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 7월까지 강원도, 평안남·북도, 황해남도 등 총 28만 정보에 대한 토지정리를 완료하고 7,600 정보의 경지를 추가 확보하였다. 또한 북한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기존의 '양수관개체계'를 중력을 이용한 '자연흐름식 관개체계'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PEC의 차관을 제공받아 2002년 10월 「개천-태성호 물길」을 완공한데 이어 2005년 10월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완공한 바 있으며, 2006년 3월에는 세번째 대규모 자연흐름식 물길인 「미루벌 물길」사업을 새로이 착공하여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 자연흐름식 물길사업은 2007년에도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농업정보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농업정보화는 기존의 획일적인 주체농법의 적용에서 탈피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과학적 영농공정을 산출하고 이를 농업현장에 적용시킨다는 것으로서 농업과학원 컴퓨터센터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황해남도 일부지역을 시범단위로 지정하여 추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각 시도별로 일부 시·

●● 116

대계도 간석지별 농장들이 수직파로 벼농사 시작(2006.5.22, 조선중앙방송).

●● 117

「조선신보」(2008.7.14).

군들을 과학농사 도입사업을 위한 집중단위로 정하는 등 과학적인 영농기술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은 과학화·현대화·집약화를 통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영축산(국영농목장), 협동축산(협동농장), 농민부업축산(농가)의 3원체제¹¹⁸⁾로 확립되어 왔다.

북한의 가축사육 두수는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사료부족 등으로 인해 협동축산과 부업축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한 사료부족 등으로 급속히 와해된 축산업부문의 강화를 위해 1996년부터 별도의 사료가 필요하지 않은 초식가축 중시의 축산업 발전정책을 실시하면서 초식가축을 중심으로 가축사육 두수¹¹⁹⁾는 꾸준히 증가¹²⁰⁾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가금류 사육을 장려하고 축산시설의 개선·현대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6년과 2007년에는 “고기생산을 늘리기 위한 과업”으로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지에서 돼지공장의 건설, 개선·현대화사업이 증가했다.

북한의 과수정책은 1961년 4월 함경남도 북청군 문화협동농장에서 개최된 이른바 당 중앙위원회 ‘북청확대회의’에서 김일성이 지시한 30만 정보의 과수원 조성 과수종의 다양화 방침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북한의 주요과수는 사과·배·복숭아·감·포도 등으로 전체 과수재배면적은 총 16만ha 내외이며 그 중 사과가 43%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배 30% 복숭아 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별로는 황해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에서 과수를 많이 재배하고 있다. 특히 황해남도 과일군은 경지면적의 63%가 과수원이며 약 8,000ha 규모인 북한에서 가장 큰 과수종합농장이 있다.

북한은 2002년 12월 과수법을 제정함으로써¹²¹⁾ 과수부문을 현대화·과학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기후 풍토에 맞고 수확고가 높은 우량품종의 개발·보급에 주력¹²²⁾하고 있다.

● 118

1963년 9월 9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 회의 결정.

● 119

소 57.8만頭, 돼지 320만頭, 염소 275만頭, 양 17만頭, 닭 2,100만필, 오리 550만필, 토끼 1,967.7만頭(2005, FAO)

● 120

1996년에 비해 풀판조성은 2배 이상, 염소는 3배, 토끼는 2배 이상 늘었다.(2006.8.9, 조선중앙방송)

● 121

2002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3호로 채택된 과수법은 제6장 제50조로 구성되어 있다.

● 122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열쇠는 종자혁명으로 과일 생산을 과학화, 현대화하는데 있다.(2004.4.11, 노동신문)

(나) 임업

북한의 임야면적은 총 920만 정보로 북한지역 전체면적의 약 74%에 달한다. 특히 주요 원목생산지인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과 백두산 지역에는 침엽수 및 활엽수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요 원목 생산지에는 60여개의 임산사업소, 갯목생산사업소를 설치하고, 기타 지역에는 임산협동조합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93) 기간중 150만 정보의 조림사업 목표를 세워놓고 경제림 위주의 산림조성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요수종은 낙엽송·포플러·은행나무·분홍꽃·아카시아나무 등이다.

북한의 목재수요량은 산업용재를 비롯해서 연료재, 농업 및 자재용 목재 등 연간 약 900만³m에 달하는데 반해 연간 생산량은 약 300만³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자원의 복구를 위해 1999년 3월 산림조성과 수종교체를 주내용으로 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¹²³⁾ 1999년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 주관하에 15만 5,400여ha의 산림조성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¹²⁴⁾

2000년부터는 전국의 수림화, 원림화 방침에 따라 이용가치가 높고 성장이 빠른 수종의 나무들을 중심으로 경제림·용재림·보호림·떨나무림 조성¹²⁵⁾을 추진하는 등 삼림자원의 복구 및 녹화사업을 보다 체계화·세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2001년 10월부터 산림조성 10개년 계획기간(01~10)을 수립하고 매년 15만ha의 식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주요 수종으로서는 잣나무, 은행나무, 수삼나무 등 속성수이면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장려되고 있다.

(다) 수산업

북한의 근해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수산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만나고 있어 세계적인 어장으로 꼽힐 만큼 어족이 풍부하다.

● 123

「노동신문」(1999,3,4)

● 124

「조선신보」(1999,3,12)

● 125

i. 경제림 : 잣나무, 수유나무, 기름밤나무, 개암나무 등

ii. 용재림 : 아카시아나무, 이깔나무, 오동나무 등

iii. 보호림 : 은행나무, 느티나무, 수삼나무, 너도밤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현재까지 밝혀진 유용 수산자원은 약 650~800여 종으로 해면어류 640여 종, 패류 및 조류 100여 종, 기타수산동물이 40여 종이 분포한다. 주요 수산자원은 명태·조기·멸치·꽁치·이면수 등 연근해 어족과 잉어·붕어·초어·숭어 등 담수어, 기타 김·미역 등 해조류와 게 등 갑각류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서해안 간척사업의 추진에 따른 어장감소와 연근해 지역의 환경오염 및 남획으로 인한 주요 어족자원의 감소, 어로장비 및 기술낙후, 선박용 유류부족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어족자원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김정일은 1997년 6월 황해남도 용연군을 시찰하면서 양어사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후 북한은 과학원 수산과학분원 산하 양어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양식어종의 개발·보급, 양어장 보수 및 건설에 치중해왔다. 또한 동시에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1997.7), 「물자원법」(1997.8), 「바다오염방지법」(1997.12) 등 양어사업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양어사업의 대대적인 전개¹²⁶⁾로 수산물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여 왔으나 2003년 이후 양어장 건설 실적이 급감하면서 최근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내륙 양어에는 아직도 관심이 있지만, 북한당국의 수산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설비 낙후 등으로 어선 출어일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정책 관심이 농업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에는 어로방법과 고깃배 어구 갱신, 바다나물 양식과 재배업을 발전시켜 수산물 증산을 강조한바 있다.¹²⁷⁾

●● 126

2003년 6월 현재 인공 양어단위는 근 8,000개나 되고 인공양어못면적은 1995년에 비하여 근 3,700정보나 늘어났음(2005, 경제사상해설, p177).

●● 127

최고인민회의의 11차 5기 회의에서 광범기 부총리 보고, 내각의 2006년 사업 정형과 2007년 과업(2007.4.11)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 만 톤)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4	109	100	105	88	65	63	66	70	75	81	84	117	91	92	93	83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2) 광업

광업은 북한에서 채취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채취공업은 “자연부원을 노동대상으로 하여 시초원료와 연료를 생산하는 공업부문의 총체”로서, 석탄공업, 광업, 원유 및 가스채굴업, 임업, 어업 등이 이에 속하며, 그 중심은 석탄공업과 광업이다. 채취공업이 가공공업보다 시간적으로나 순차상으로 먼저 발전하여야 가공공업에 원료와 연료를 제 때에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 하에 북한은 채취공업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즉 새로운 탄광과 광산개발을 위한 지질탐사의 강화, 갱도굴착 및 채취공정에서의 기술혁명, 채굴설비 및 탐사에 관한 과학연구사업의 추진 등이 그것이다.¹²⁸⁾

북한은 1970년대 이후 광물의 획기적 증산을 정책적으로 촉구해 왔고, 1985년과 1993년에 각각 「채취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및 「지하자원법」(1999.2 개정)을 발표·제정하여 ‘지하자원의 국가소유 및 지하자원의 탐사·개발·이용에 대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 향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한다’는 광업정책의 토대를 확립함으로써 광업의 중요성 및 광업진흥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광업정책 목표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민족경제의 확립을 위한 원료자원의 자급체제 구축이며, 둘째는 외화획득을 위한 광물 정광 및 광물성 제품류의 수출진흥이다.

북한의 광업은 정권수립 이후 핵심적인 원료공업으로 중시되어 온 결과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 중 광업의 비중이 0.3%에 불과한데 비해, 북한은 8.7%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1경제개선조치 이후 광업분야의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외화획득을 위한 광물성 제품의 수출진흥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광물 및 광물성 제품(금속·비금속 제품)은 북한 최대의 외화가득 원료로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제외한 2008년도 대외무역 총액(38억 불) 중 광물 및

● 128

「조선대백과사전 2」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382.

광물제품이 11.6억 불(수출 4.66억 불, 수입 6.95억 불)로 대외무역 총액의 4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광물 및 광물제품 수출은 수출 총액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도 북한의 광물 교역현황

(단위 : 백만\$)

구분	광석/광물성연료	귀금속류	비금속류	광물성 계	무역총액	광물비중
수출	466	35	190	691	1,130	61.2%
수입	695	-	177	872	2,685	32.5%
계	1,161	35	367	1,563	3,815	41.0%

※ 출처: KOTRA

북한의 부존자원 현황을 개관하면, 총 220여종의 유용광물의부존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경제적 개발가치가 있는 광물은 40여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매장량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석·몰리브덴·흑연·중정석·형석·금·운모·형석, 철·아연 등의 부존량도 풍부하다.

이처럼 북한지역에는 금속광물과 에너지광물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어 공업원료 및 연료의 70%를 국내에서 자급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이나 에너지산업의 기초자원인 석유는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으며, 석탄도 무연탄과 갈탄의 매장량은 풍부하나 제철·제강·제련공업 등에 필요한 역청탄(코크스의 원료)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추정 매장량

광물별	매장량(추정)	
	북한	남한
철광석	30억 톤	0.2억 톤
석탄	79억 톤	13.7억 톤
흑연	25억 톤	69천 톤
금	2,000톤	41톤
연·아연	3억 톤	946천 톤
구리	1억 1,600만 톤	56천 톤
마그네사이트	36억 톤	-
석회석	165억 톤	85억 톤
텅스텐	1억 3,200만 톤	127천 톤

※ 출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북한의 광업에서 생산비중이 큰 부문은 석탄,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연·아연과 석회석 등이다. 금속공업의 주원료인 철광석은 자철광·적철광·갈철광·능철광의 형태로 부존되며,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철(Fe) 50% 기준으로 30억톤으로 추정된다. 주요 철광석산지로는 동부 지역에는 무산광산을 비롯하여 이원·덕성·허천·단천·만덕·풍산광산 등이 있으며, 서부지역에는 은율·재령·안악·개천·하성·천동·용원광산 등이 있다.

철광석 및 석탄 생산량

(단위 : 천M/T)

구분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철광석	9,800	8,430	4,221	3,793	4,208	4,078	4,433	4,579	4,913	5,041	5,126	5,316
석탄	37,500	33,150	23,700	22,500	23,100	21,900	22,300	22,800	24,060	24,680	24,100	25,060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무산광산은 자철광으로 매장량이 약 13억 톤(Fe 24%)이며, 선광법은 건식과 습식 자력선광법을 이용하며 연간 선광처리능력은 연 850~1,000만 톤, 채광능력은 연 1,000만 톤에 이르는 북한의 최대 노천 철광산이며, 북한 1위의 야금생산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 정광을 공급한다.

철광석 생산량은 철광석 광산의 지속적인 확장 및 개발로 1970년대 이후 매년 2%씩 증가하여 1985년에 최대 980만 톤에 도달하였으나, 198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도에는 289만 톤만 생산하였다. 1999년부터 생산실적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광업 전반적인 생산기반 복구에 진전이 없어 철광석 생산량은 생산능력의 30%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부진은 설비 노후화, 광산 기자재 부족 및 유류·전력 등 에너지 부족, 인력에 의존한 생산의 한계 등에 기인한다.

북한에 부존되어 있는 석탄은 무연탄·초무연탄·유연탄의 일종인 갈탄, 니탄(토탄)이며 코크스용 역청탄은 부존되지 않는다. 북한의 석탄 총 매장량은 약 79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무연탄은 평안북부탄

전(개천·덕천·순천·득장·북창·구장지구)과 평안남부탄전(강동·강서지구), 함남 고원·수동지구, 강원 천내, 자강도의 전천 그리고 평양 등지에 대량 매장되어 있다. 갈탄은 평남 안주탄전, 함북 북부탄전(온성·경원·경흥지구), 함북 남부탄전(명천지구)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중 석탄생산을 1억 2천만 톤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평안남도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각지의 탄광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나 석탄생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북한은 석탄생산량을 1989년도에는 8,500만 톤, 1993년도에는 10,710만 톤(1986년 대비 1.4배)으로 발표¹²⁹⁾한 바 있으나 1993년의 실제 생산량은 2,710만 톤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후 신규탄광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전력 및 자재 부족, 1995년 수해 시 침수탄광 미복구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 석탄생산량은 1998년 1,860만 톤으로 최저점에 도달했다. 그 후 점차 증가하여 2008년 현재 2,506만 톤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석탄생산의 부진은 원유도입량 감소와 함께 북한의 에너지부족을 심화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북한은 저열탄과 초무연탄을 취사와 난방용 및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의 에너지원으로 개발·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석탄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료·동력문제 해결을 위한 3개년 계획' (2003~2005년)을 추진하는 등 석탄증산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내수용 석탄공급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무연탄 수출은 해마다 증가하여 북한의 중요한 외화소득원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현황

(단위 : 만M/T, 백만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40.7	7.4	74.5	15.4	157.1	49.1	280	108.2	248.5	97.1	374.0	162	253.7	201

●●129
제3차 7개년 계획 수행
정형에 대한 당중앙위 전
원회의 보도(1993.12.9)

비철금속 공업의 필수 원자재인 연·아연광은 전력·화학 등 여타 산업부문 발전에 필요한 기본토대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연·아연 광물의 주요 부존지역은 검덕광산연합기업소(함남 단천시), 청남광산(함남 허천군), 계생광산(자강 용림군), 성천광산(평남 성천군), 화풍광산(자강 송원군) 등이 있으며 검덕광산연합기업소는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광산으로서 연간 선광처리 능력은 1,420만 톤(Pb 2~5%, Zn 6~8%), 정광생산능력은 40만 톤(Pb 70%, Zn 58%)이며, 2004년도 생산량은 연정광 52,000톤(Pb 70%), 아연정광 124,000톤(Zn 58%)에 이른다. 이 광산은 1983년에 연간 1,000만 톤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선광장(제3선광장)을 건설하였다.

그 외에도 중석은 만년광산(황북 신평군), 경수광산(평남 대흥군), 전창광산(평북 창성군), 쌍룡광산(평남 신양군)에 부존되어 있으며, 금·은광으로는 운산광산(평북 운산군), 대유동광산(평북 동창군)이 유명하고 수안광산(황북 수안군), 홀동광산(황북 연산군), 성흥광산(평남 회창군) 등이 알려져 있고, 사금은 평남·함남에 많은 편이다. 동광은 양강도의 혜산청년·운흥·갑산광산을 위시하여 황북 홀동·수안, 함남 허천광산 등이 있다. 특히 양강도는 개발가능성이 큰 동광산의 2/3가 밀집되어 있고 확인된 동 매장량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동광생산의 주력기지이다. 내화물 원료의 대표적인 비금속광물자원인 마그네사이트광은 함경남·북도 및 양강도 지역에 집중 매장되어 있고 채굴조건도 유리한 편이다. 주요광산으로는 함경남도 단천시의 용양광산, 대흥광산, 백암군의 남계광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용양광산은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품위 또한 수준급으로, 연간 원광 300만 톤(Mgo 30%)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의 특징을 보면 지하자원 개발을 광물 수급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보다는 경제의 주체성·자립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가계획경제와 자급자족의 원칙에 따라 광물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가가 지정한 용도 이외의 자원이 용을 할 수 없고, 개발신청과 개발승인도 등록된 매장량에 한해 가능

하다. 또한 북한당국은 광물자원을 전략물자로 인식하여 개발권 불이익 등 외부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광업관리체계를 보면 내각 소속의 지하자원개발지도국이 국가 지하자원개발심의기관의 역할을 하며 매장량 계산기준을 제정하고, 매장량 심의·등록 및 개발승인을 한다. 채취공업성은 일반광물의 탐사·생산 및 제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광업관리체계는 「채취공업성-광산연합기업소」, 「채취공업성-도인민위원회 광업관리국」 라인으로 이원화 되어있다. 석탄공업성은 석탄의 탐사·채굴, 수급 업무를 담당하며 하부에 석탄생산지도국, 채굴공정심사국, 대외석탄관리국, 중소탄광지도국 등이 있으며, 석탄공업관리국 산하에는 16개의 탄광연합기업소¹³⁰⁾가 있다. 금속공업성은 철광석 생산과 제철·제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광산연합기업소, 산하기관으로 흑색금속관리국이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과정 및 현황에 근거해 볼 때 북한에서 광업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본 전제요소이자 견인차로 규정되면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대체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이후에는 광업부문 역시 생산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원인은 체제의 폐쇄성으로 첨단기술의 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채굴기술의 후진성을 면할 수 없었고, 광산시설의 개보수·교체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광산의 생산효율성이 크게 저하된 데 기인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신규광산 적극 개발, 생산토대 정비·복구, 채탄기술 도입, 탄광근로자 임금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통해 석탄 및 광물 등 경제선행부문 공급증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광업분야 해외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남북 쌍방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 등 경제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남한은 북한에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에 대해 광물자원 개발투자를

●●130

강동지구·개천지구·강원지구·구장지구·덕천지구·득장지구·명천지구·문천지구·북청지구·순천지구·안주지구·온성지구·천내지구·전천지구·함남지구·함북지구 등 16개의 탄광연합기업소가 있다.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5월 「제2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협력 실무협약」에서 북한은 검덕·용양·대흥광산의 지질도 등 광물관련 자료를 우리측에 제공하고, 남북 공동조사단(각기 15명 이내)이 검덕·용양·대흥광산 등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단천지역의 검덕(아연), 용양 및 대흥(마그네사이트) 등 3개 광산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북측과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3) 공업

(가) 금속공업

북한에서는 금속공업을 흑색금속공업과 유색금속공업으로 구분¹³¹⁾하고 있는데, 전자는 철광석을 주원료로 하여 선철·입철·강철·압연강재·2차금속 가공품 등을 생산하는 제철·제강공업부문을 말하며, 후자는 금·은·구리·연·아연·알루미늄 등을 생산하고 그 가공품을 제조하는 비철금속부문을 의미한다.

금속공업 중 철강공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조선과 건설 등 주요산업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설비투자를 요하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인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 환경오염 유발 산업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철강공업의 발전이 나라의 공업화 수준과 경제력, 군수공업의 잠재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철은 산업의 쌀이다”라는 구호 아래 철강공업의 육성과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¹³²⁾

북한은 자체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한 금속공업의 발전, 흑색금속 생산과 유색금속 생산의 균형발전 및 금속 생산공정의 완비, 금속공업의 기술적 토대 강화 등을 금속공업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흑색금속공업 실태를 보면 주요 제철·제강공장으로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함북 청진), 황해제철연합기업소(황북 송림), 성진제강연합기

● 131

「조선대백과사전 3」(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6) p531

● 132

북한은 김일성이 1945년 만경대의 강선제강소(現 천리마제강소)를 방문하였던 10월 9일을 금속노동절로 제정한 사실 등에서 철강산업을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4년 7월 17일에 개최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철강재의 증산과 함께 시설 현대화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함북 김책),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남포), 청진제강소(함북 청진),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이 자체건설한 것은 4.13제철소, 8호제강소, 대동강제철소 뿐으로 나머지는 일제 때 건설된 시설들을 개건·확장한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에 들어 6개년 계획기간(1971~1976년)에는 구소련의 경제기술 협조에 힘입어 「대야금(大冶金) 기지 구축」을 위한 김책제철소의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조강의 경우 연산 100만톤 규모의 제강공장과 압연공장을 동시에 갖춘 일관된 제철시설을 갖추으로써 철강공업의 체질개선과 근대화를 향한 전환점을 이루었다. 1979년 이후에는 코크스 수입에 따른 외화지출을 억제하고 철강공업의 자립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삼화철 방식에 의한 제철에 주력하는 등 자체연료를 이용한 야금로를 많이 건설하고 새 야금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금속공업의 주체성을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김책제철소에 북한 최초로 연산 40만톤 규모의 냉각 압연공장을 구 소련의 지원으로 건설하였다.

1984년에는 철강생산 목표를 기존 수준의 2배인 740~800만톤으로 책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김책제철소를 비롯한 청진·성진제강소를 대폭 확장하였다. 제2차 7개년 계획기간(1978~1984)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주요공장에 대해 원격조종화를 추진하였다.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년)에 금속공업의 기본정책 방향으로서 ‘자체의 원료·연료에 의존한 금속공업의 주체화·현대화’를 제시¹³³⁾하고 철강 1천만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능력 확장, 철강생산의 과학화·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와 고강도 제품 생산을 추진하였다. 1989년에는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김책제철연합기업소 2단계 확장공사(철강 생산능력 240만톤, 압연능력 140만톤) 완료 및 천리마제강소내 10월9일강철공장(철강 연산 200만톤 규모)을 착공하였고, 1990년대에는 10월3일제철소 신설(1993), 김책제철소 압연롤 생산개시(1994), 황해제철소 설비를 확장하였다.

1995년 이후부터는 투자재원 부족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제철·제강시설의 정비·보수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는

● 133

이 기간에 북한은 금속공업부의 발전이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와 함께 사회주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기본열쇠라는 인식하에 금속공업부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선행부문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데 주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 등을 통해 4대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철강산업발전을 위하여 무산광산에서 철정광 생산증가, 검덕광산 광물증산, 성진제강소 대형산소분리기 설치, 김책제철소 용광로·소결로·해탄로 보수를 통한 철강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연간 철강생산 능력은 선철 546만톤, 강철 650만톤, 압연강재 404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북한 최대의 제철소로서 연간 생산능력이 제선 217만톤, 제강 240만톤, 압연강재 147만톤에 달한다.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제선 113만톤, 제강 145만톤, 압연강재 75만톤이며, 성진제강연합기업소는 제선 48만톤, 제강 82만톤, 압연강재 42만톤이며,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는 강철 76만톤, 압연강재 55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철강 생산능력

(단위 : 만M/T)

구분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선철	308.7	541.4	541.3	541.3	541.3	541.3	541.3	541.3	546.1	546.1	546.1
강철	598.0	598.0	598.0	600.2	600.2	600.2	600.2	600.2	649.6	649.6	649.6
압연강재	279.7	403.7	403.7	403.7	403.7	403.7	403.7	403.7	403.7	403.7	403.7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김책제철연합기업소는 철광석을 무산광산에서 파이프라인(또는 철도)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며, 황해제철연합기업소는 은율·재령·태탄 광산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코크스는 선철·주물·구리·아연과 크링커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선철·주물과 합금철 등 철강부문에서만도 코크스의 수요비중은 약 70%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북한은 철강생산에 필수적인 코크스의 수요가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코크스의 원료가 되는 강점결성 코크스 용탄이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아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1996년 4월 러시아와 제1차 경제공동위 개최시 경제협력관계 복원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코크스탄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북·러 합작으로 「에르침」 탄광(사하공화국 소재) 공동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나 자금난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은 코크스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코크스 대용의 알탄(무연탄) 제조이용, 코크스를 무연탄으로 대체하는 '산소열법용광로' 도입 등 코크스 절약에 부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자체개발했다고 선전하는 '주체철' 생산법은 생산성이나 품질 면에서 낙후되어 있다. 주체철 방법은 종전의 회전로 방법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철법으로서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사용하고, 석회석 대신 시멘트를 사용하며 생산성을 입철보다 1.5~2.5배로 증대시키고 품위도 90~95% 정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성과 생산원가 면에서 용광로 방법보다 매우 불리하다.

북한은 제강기술면에 있어서 일반강과 특수강 제조는 상당한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반면, 2차 정련시설 미비로 고청정도를 요구하는 베어링강, 극저탄소의 고내식강이나 고순도를 요구하는 고강도 특수강의 제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¹³⁴⁾

북한의 압연부문 기술수준을 보면 설비의 낙후로 인해 우리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제철·제강소의 원재료 조달 및 제품 공급 현황

공장명	생산능력	주요 원자재 조달			제품공급
		철광석	전력	수자원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선철, 철강, 압연강재	무산	북창화력	수성천	성진제강소, 금속·기계공장, 천리마제강소(선철)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선철, 강재, 금속 가공품	은율, 재령, 하성, 안악	자체발전 평양화력	대동강	강판, 형강, 레일, 선재 등 여러 부문
천리마제강소	일반강재, 특수합금재, 전기 용접관	용원, 천동, 개천	평양화력	대동강	건축과 건설용 자재에 투입

●●134

산업연구원(1993), 「북한의 주요산업 분석」

북한의 철강산업은 각 공장의 시설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의 공장이 일제하에 건설된 소규모 시설을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시설의 개진확장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일관공정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기술적 측면은 물론 구조적으로도 낙후하여 기존설비의 교체나 현대화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

유색금속공업에 해당되는 비철금속은 철을 제외한 금속을 총칭하며 기계, 전기·전자 및 군수공업 등 여러 산업분야의 기초소재로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외화가득률이 높다. 또한 기계·전기·전자 및 군수공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특성 때문에 전방연관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주요 공장의 철강 생산능력

(단위 : 만M/T/년, %)

공장명	제선		제강		압연	
	생산능력	비중	생산능력	비중	생산능력	비중
김책제철소	216.7	40.0	240.0	40.0	147.0	36.4
황해제철소	113.4	20.9	144.5	24.1	75.0	18.6
성진제강소	48.0	8.9	72.6	12.1	41.5	10.3
청진제강소	96.0	17.7	-	-	-	-
천리마제강소	-	-	76.4	12.7	55.0	13.6
4.13제철소	51.6	9.5	-	-	-	-
덕현제철소	9.6	1.8	9.0	1.5	9.0	2.2
평양강철공장	-	-	10.5	1.7	10.0	2.5
해주강철공장	-	-	5.2	0.9	5.0	1.2
성간제강소	-	-	10.0	1.7	8.0	2.0
함흥강청공장	-	-	5.2	0.9	5.0	1.2
강계강철공장	-	-	5.2	0.9	5.0	1.2
원산강철공장	-	-	5.2	0.9	5.0	1.2
주원강철공장	-	-	5.2	0.9	5.0	1.2
기타	6.0	1.1	11.2	1.8	33.2	8.4
계	542.1	100.0	600.2	100	403.7	100

※ 출처: 「북한의 산업」 등

반면 비철금속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며, 공해유발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환경친화적 기술개발이 절실한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공급탄력성이 낮아 제품의 가격 변동이 심한 편이다.¹³⁵⁾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비철금속 제품은 연·아연·동과 알루미늄을 비롯하여 니켈·몰리브덴·금과 은 등 귀금속이 있다. 최근에는 탄탈·나오브와 세륨 등 희귀금속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북한 내각의 채취공업성 산하 유색공업관리국에서 비철금속 부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비철금속 공장은 문평제련소, 흥남제련소, 해주제련소, 북창알루미늄공장, 단천제련소, 9.21 제련소, 평북제련소 등이 있다.

북한은 1970년대 들어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철금속공업 분야에 대한 시설확장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80년대부터는 주요 외화가득 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1984년 구소련 및 서방 등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해 건설된 북창알루미늄공장¹³⁶⁾(연간 2.4만 톤)은 원료인 알루미늄을 평남 순천에 있는 부산알루미늄공장(연간 4만 톤 규모)으로부터 공급받아 알루미늄·텅스텐·니오브와 세륨 등의 희유금속 생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는 유색금속 170만 톤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단천지구, 양강도 지구의 주요 광산들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비철금속 산업 발전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재원 부족으로 생산시설의 확장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비철금속공업은 생산능력의 정체 또는 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90년대 이후에도 에너지 공급의 감소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비철금속의 원재료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가동률 및 생산실적이 부진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비철금속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대의 비철금속생산기지인 검덕광산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수출용 납과 아연정광 증산을 독려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생산량 확대를 위한 검덕광산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추진해오고 있다.

● 135

이외에도 남포제련소가 있었으나, 2002년 12월 설비노후화, 공해문제 등으로 폐쇄·철거되었다.

● 136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 기술부족으로 니켈, 몰리브덴, 알루미늄의 생산이 불가능하여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북창알루미늄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알루미늄, 텅스텐 및 기타 희유금속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 2월에는 스테인레스강, 내열강 등 합금특수강 생산의 주요 원료인 니켈광산이 함남 정평군에서 새로 조업되었는데, 연간 약 20만 톤의 원광(Ni 0.5%)을 처리하여 약 3만톤의 니켈정광(Ni 3%)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991년 4월에는 북한에서 채굴되는 희유 광물의 정련과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조총련계 회사와 함흥화학합영회사를 설립하여 조업(이트륨 등 연 1,000톤 생산)하였으며, 1998년 4월에는 금속 가공품과 주물품 등을 생산, 수출하는 북·중 합작공장인 청진금속합작회사가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북한경제가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에너지 부족에 따른 원부자재의 공급감소, 자금부족에 따른 코크스 수입감소, 제련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비철금속 분야의 가동상태가 매우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비철금속산업의 생산효율 증대를 위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외자도입을 통한 문평제련소, 단천제련소 등의 노후생산설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0년 12월에는 설비 노후화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남포제련소와 211호 제련소를 철거하고, 사용 가능한 핵심 설비들은 2004년 11월에 신설된 문천전기아연제련소로 이전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경제복구를 위해 비철금속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생산증대를 도모하였다. 2002년 제10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연·아연·구리를 비롯한 유색금속의 생산 확대를 위해 검덕·혜산지구의 광산들과 제련소 등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또한 7.1조치 이후 광업 분야에서 대폭적인 임금인상, 누진 성과급 지급, 시설보수 및 확장, 수출시장 확대 등 강도 높은 지원 및 개혁을 추진하였다.

(나) 기계공업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기계공업은 “생산도구 및 기술수단을 생산 포함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 농촌경리, 기본 건설과 운수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기술장비를 강화할 수 있게 하

는 중공업의 핵심부문이며 기술적 진보의 기초”¹³⁷⁾이다. 기계공업은 군수산업 및 자립경제노선과 연계된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라 북한의 가장 핵심사업으로 육성되어 왔으며, 그 수준도 다른 산업 부문에 비해 가장 앞서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기계공업부와 금속공업부를 통합하여 금속기계공업성을 만들었으나, 2005년 5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에서 금속기계공업성을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다시 분리하였다.

북한의 기계공업 정책의 추진과정을 보면, 1950년대에는 동구권 등의 지원을 받아 희천공작기계공장(1954), 운산공구공장(1956), 구성공작기계공장(1959년)을 건설하였으며, 구소련의 기술을 도입하여 평양정밀공장(1960년)에서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60년대에는 북한의 공작기계 최대 생산중심지인 희천공작기계공장과 구성공작기계공장을 중심으로 범용공작기계를 생산하였으며, 희천에 정밀기계공업을 집중 육성하였다. 특히 1965년에 희천정밀기계공장에 유압직장을 신설하여 정밀기계 제작능력을 확대시켰다.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는 기계공업 생산을 1986년 대비 1993년까지 2.5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 아래 기존 생산기반의 개진·확장과 함께 기계설비의 정밀화·대형화·고속도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의 생산시설 건설실적은 희천정밀분사구공장 신설(1988),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시설확장(1989.8)¹³⁸⁾, 후라이스(fraise)반 5,000대 생산능력의 희천-고리끼합영회사 완공(1989.10), 구성공작기계공장내 수치제어 공작기계 생산기지 조성(1993), 천리마 제강연합소내 5월18일 대형 단조공장 조업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기간 중 로봇·집적회로 등 전자·자동화에 필요한 부품생산부문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동 기간 동안 북한의 기계공업은 시설 확장보다는 북한 자체 수요에 따라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와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등 북한의 대표적 중기계공장들에서도 공장·기업소 생산시설에 필요한 각종 기계·장비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생산시설 건설실적은 극히 부진했던

●●137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 연구소, 『경제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p. 268.

●●138

북한은 확장된 승리자동차공장이 연건평 10만여㎡에 30여개 생산건물이 건설되어 있고 '자주-82형'의 자동차를 계열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정이 갖추어졌다고 한다.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구성공작기계공장 내 104호분공장이 1991년에 완공됨으로써 공작기계의 정밀도를 제고시키고 공정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기계공업 부문의 자동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2년 4월에는 남포시에 남북한 합영공장인 평화자동차종합공장이 준공되어 피아트(FIAT) 등 자동차 조립생산을 하고 있다.

주요 공장으로는 각종 공장건설에 필요한 대형설비를 제작하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낙원기계연합기업소,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북중기계연합기업소, 광산기계를 생산하는 낙원탄광기계연합기업소, 회령탄광기계공장, 공작기계를 생산하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 정밀기계를 생산하는 희천정밀기계공장(2월26일공장), 농기계를 생산하는 금성트랙터종합공장을 비롯하여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 남포조선소, 함북조선소 등이 있으며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자동화기계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10월5일자동화종합공장 등이 있다.

북한은 기계공업을 중점 육성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투자재원 부족과 설비노후화로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되었으며 둘째,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새로운 기술정보 도입이 부진하여 기술적인 낙후를 초래하였다. 셋째, 기계공업 각 부문 간에도 불균형적인 성장정책으로 체계적인 공업화와 기술적 발전이 저해되어 공작기계, 광산 및 건설기계, 철도차량 등은 비교적 발전하였으나 기술변화속도가 빠른 정밀기계공업이나 전기·전자공업 부문은 북한의 폐쇄정책에 따라 기술적인 낙후가 더욱 심화되었다. 넷째, 지역간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기계공업의 연관효과가 차단되어 기계공업의 효율성 향상과 체계적인 발전이 저해되었다. 다섯째, 군수산업과 민간 산업과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이밖에도 경제성보다는 정치·사상을 우선하는 북한의 경제정책, 군사부문의 집중육성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사회간접자본 미비로 인한 자원낭비와 생산성 하락 등을 기본적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계공업분야의 생산능력을 살펴보면 5천m 천공기, 3천마력 불도

저, 1만톤 프레스, 5만kw 발전기, 20만kw의 변압기, 3천마력 기관차, 3천톤 선박, 7천마력 전동차 및 1m³ 굴착기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기계공업부문 생산량

(2007년 현재)

자동차	공작기계	트랙터	화차	조선*
4.6천대	8.2천대	8.9천대	1,216량	21.4만G/T

※ 조선 능력은 06년 수치임

※ 출처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한) 및 통계청(남한) 자료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의 기계공업은 일부 대형기계 및 공장설비의 생산은 질적으로 국제수준에 미달되나, 내부적으로 필요한 공정설비들은 자체생산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동차·조선·통신기계공업의 수준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2007년 주요 기계공장인 용성기계연합기업소, 희천·구성 공작공장 등 주요 공장의 현대화·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다) 화학공업

화학공업은 '식·의·주' 문제의 해결과 밀접히 관련된 공업부문으로, 북한은 식량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 및 농약공장 건설과 화학섬유 증산을 위한 비날론공장 건설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다.

북한의 화학공업은 화학공업성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화학공업성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중소규모의 공장은 중소화학연합회사에서 관할하고 있다.

북한은 화학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자급이 가능한 석탄과 석회석 등을 원료로 이용하는 석탄화학공업을 채택하였고 원료수입이 필요한 석유화학공업은 자력갱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가급적 배제하였으며, 지역적 자급자족의 원칙에 따라 원료산지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화학공장들을 건설하여 상호 독립적인 생산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화학공업이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사업

●● 139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는 「3차 7개년 계획」 기간인 1986년 9월에 착공하여 1992년 3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채 2004년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 140

산업은행(2005.12), 「북한의 산업실태 분석」, p. 335, (요소 18만 톤, 질산 칼슘 35만 톤, 황산암모늄 40만 톤, 과인산석회 40만 톤)

이라는 특성을 무시한 산업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경공업·자동차 등 후방산업의 침체로 소재산업인 화학공업의 발전 역시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요 공장으로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승리화학연합기업소, 신흥화학연합기업소,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2.8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이 있다.¹³⁹⁾

북한은 농업생산 증대를 통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의 화학화를 채택하고, 비료증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비료공장의 가동률은 20~30%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최대의 화학비료공장인 흥남비료연합기업소는 연간 생산능력이 133만 톤¹⁴⁰⁾이나 큰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화학비료공업은 1990년대 들어서 설비 노후화,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현재 화학비료 생산량은 47.9만 톤에 불과하였다.

특히 화학비료 생산체계는 단비(單肥)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소별 생산능력의 불균형이 심하며, 카리비료의 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2007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석탄가스화 공정건설 추진, 흥남비료연합기업소, 2·8비날론 연합기업소 등 주요 화학공장의 생산활성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화학비료 생산능력 및 생산량

(단위 : 만 톤)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생산능력	261.2	261.2	261.2	235.2	235.2	235.2	237.2	237.2	237.2	194.9	194.9	194.9
생산량	88.9	67.6	57.2	53.9	54.6	50.3	41.6	43.4	45.0	45.4	45.4	47.9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석유화학부문을 보면 정유공장은 중국의 지원으로 건설된 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군)과 구소련의 지원으로 건설된 승리화학공장(나선

시)이 있는데, 각각 150만톤, 200만톤의 정유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솔린·나프타·등유·경유·제트연료·중유·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봉화화학공장은 신의주 남방 14km 지점에 위치해 있어 중국의 다칭(大慶)원유를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 나프타를 공급하기 위하여 경질유 위주의 제품 생산을 위한 수첨분해(Hydrocracker) 설비¹⁴⁾를 보유하고 있다.

승리화학공장은 1973년에 건설된 북한 최대의 정유공장으로 러시아로부터 철도를 이용한 원유도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접한 선봉항을 통해 원거리 산유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러시아로부터의 원유도입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1998년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이다.

북한의 원유 도입은 주로 구소련과 중국 등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러시아로부터의 원유도입은 1991년 경화 결제로의 전환 이후 거의 도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도입량도 현저히 감소되어 1990년에 연간 252만 톤에 달하던 원유도입량이 지금은 50여만 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 141
 감압경유를 촉매가 채워진 고온·고압의 반응기에서 수소와 반응시켜 분해하는 시설로 LPG·나프타·등유·경유 등을 생산한다.

원유 도입량

(단위 : 만 톤)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10	252	110	38.9	57.9	59.7	57.4	53.2	52.3	52.4	52.3	52.9

※ 출처 : KOTRA

북한의 정유공장 가동률이 16~17% 정도로 극히 낮은 것은 북한이 석탄·수력 등 자력갱생에 입각한 주탄종유(主炭從油)의 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다 외화난으로 석유수입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에너지 확보를 위해 유전개발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고 외국 석유개발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여 내륙과

● 142

「경제사전」 1권(1985),

p75

해저탐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경제성 있는 유정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으로는 1971년부터 프랑스 등 서구로부터 설비를 도입하여 건설한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평남 안주)가 있는데, 이 공장은 봉화화학공장으로부터 나프타 등을 공급받아 요소비료·폴리에틸렌·에틸렌글리콜·아니론섬유(폴리에스텔 섬유)·펄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라) 건재공업

북한에서의 건재공업이라 함은 “기본건설에 이용되는 시멘트·철재·목재·벽돌을 비롯한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물질적 생산부문”¹⁴²⁾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멘트공업, 목재가공공업, 금속건재공업, 요업건재공업, 화학건재공업, 유리건재공업, 돌건재공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철근·형강·관강 등의 압연강재는 금속공업에 속하고, 통나무는 임업부문에 속하므로, 건재공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자재는 시멘트·유리·기타 내화물 등이다.

풍부한 석회석 자원을 보유한 북한은 전후 산업시설 복구와 주택보급 확대를 위해 시멘트공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코자 노력하여 왔으나 자본부족과 전력난 등으로 시멘트공업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북한의 시멘트공업은 1970년대 후반에 완공된 순천시멘트공장, 1989년 4월에 완공된 상원시멘트공장을 비롯하여 2.8, 해주, 승호리, 천내리, 만포, 고무산, 부래산, 구장 시멘트공장 등 10여개의 주요 공장과 50여개의 중소규모 시멘트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시멘트공업은 생산설비가 낙후되어 있고, 자체 제작한 저급한 내화벽돌 사용 등으로 장기운전이 곤란한 실정에 있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이 끝나는 1993년말까지 총 2,200만 톤의 시멘트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생산능력은 1,202만 톤 수준이다. 시멘트 생산은 1991년 이후 시설 노후화, 전력난 및 유류난 등으로 1998년까지 감소하다가 1999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08년 현재 641만 톤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개천-

태성호 물길공사, 미루별 물길공사, 주택보급 확대정책에 따른 주택 건설 및 평양시 등 도시 개건 현대화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건설용 시멘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시멘트공장과 생산능력

공장명	지역	연간 생산능력	소성로수(기)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	평남 순천시	300만톤	3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	평양시 상원군	200만톤	2
28 마동 시멘트 연합기업소	황북 봉산군	160만톤	8
해주 시멘트 연합기업소	황남 해주시	125만톤	5
승호 리 시멘트 연합기업소	평양시 승호구역	95만톤	5
천내리 시멘트 연합기업소	강원 천내군	80만톤	4
만포 시멘트 연합기업소	자강 만포시	60만톤	2
고무산 시멘트 연합기업소	함북 청진시	57만톤	4
부래산 시멘트 연합기업소	함남 고원군	30만톤	2
구장 시멘트 연합기업소	평북 구장군	20만톤	2
기타 중소규모 공장	부산리, 해산 등	75만톤	11
합계		연1,202만톤	48

시멘트 생산량

(단위:만 톤)

1991	1993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517	422	315	410	460	516	532	554	563	593	616	613	641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북한의 판유리공업은 제조기술 및 품질 면에서 크게 낙후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양질의 규사가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개 공장을 제외한 대다수 공장이 연산 10만 상자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며, 판유리 이외에도 광학유리, 유리병 등도 생산하고 있는데 판유리의 경우 평활성이 낮아 자동차용 또는 산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 9월 남

● 143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최첨단 유리생산 기법인 Float 공법을 사용하여 일 3만톤(3mm 기준)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 원료 사용량은 중유 60톤, 규사 500kg, 망초 300kg이다(2007.5월 「평양봉철 국제상품전람회」 출장 기간 중 현지 공장 참관 시 공장 부지배인 안경덕 언급).

포유리공장 폐쇄와 시설낙후, 에너지 부족 등으로 2003년에 북한의 연간 판유리 생산량은 51만 상자로 극히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2005년 10월에 중국의 무상원조에 의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준공¹⁴³⁾됨으로써 현재는 292만 상자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안친선유리공장의 판유리 생산으로 평양시 등 아파트 창유리 공급이 원활해졌으며, 일부는 중국·러시아·한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내화물공업은 세계 최대규모로 부존되어 있는 마그네사이트에 힘입어 발전하여 왔는데, 이중 단천마그네시아 종합공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북한 최대공장이다.

북한은 해외 전략수출품목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자기공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주요 생산공장으로는 경성도자기연합회사, 문덕도자기공장, 안변요업공장 등이 있으며, 1990년 9월에는 경성도자기연합기업소 산하에 7.6도자기공장을 새로 완공하였다.

벽돌 및 기와공장은 북한의 주택공급계획에 부응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평양벽돌·순천벽돌·강남벽돌공장 등 25개 공장은 비교적 규모가 크다. 최근에는 표면이 고르고 단단해 별도의 외장공사가 필요 없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씨리카트 벽돌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안주씨리카트벽돌공장은 5억매, 함흥씨리카트벽돌공장은 3억매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 8월 완공된 강계기와공장은 자강도내 주택보급의 확대를 목적으로 자체 건설된 것으로 연산 300만 장의 기와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 경공업

북한의 산업정책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향된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이 분야에만 국가예산을 집중투자함으로써 경공업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부족현상도 심각한 실정이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경공업의 발전이 주민들의 소비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경공업 발전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 김정일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이른바 ‘8.3인민소비품증산 운동’¹⁴⁴⁾, 제3차 7개년 계획기간(1987~1993)에는 방직설비의 현대화, 지방공업부문에서의 공정 및 설비 현대화, 합영법에 의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 주요 목표 제시, 1989년의 ‘경공업의 해’ 설정과 ‘경공업발전 3개년계획’ (1989.7~92.6)의 추진¹⁴⁵⁾, ‘전국경공업대회’ 개최(1990.6),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한 경공업 제품의 공급증대 모색 등이 그 예이다. 특히 1994년부터는 당중앙위 제6기 21차 전원회의(1993.12.8) 결정에 따라 완충기(1994~96) 중점과업의 하나로 경공업 제일주의 방침을 설정, 왜곡된 경제구조를 조정하고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을 증대시키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었다.¹⁴⁶⁾

북한에서의 경공업제품 생산체계는 대규모의 중앙공업, 중·소규모의 지방공업,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자재·폐자재를 활용하여 소위 ‘8.3인민소비품’을 만들어내는 공장·기업소의 생필품직장이나 작업반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1973년부터 지방예산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주민생필품 생산은 지방행정기관 책임하에 중·소규모의 지방 경공업공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조달의 한계로 인해 지방 경공업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투자가 원활하지 못하였다.

북한 발표에 의하면 군(郡)마다 평균 25개 이상의 지방 경공업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고 하나,¹⁴⁷⁾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설비가 낙후하여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구 소련과 경공업상품 생산에 대한 중장기 ‘조·소 경공업협정’을 체결, 구 소련이 공급하는 원료로 각종 의류·신발 등을 생산하여 완제품을 구 소련에 납품하고, 일부제품은 노동력 제공대가로 북한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구 소련의 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악화 및 북한의 경공업 기술수준 낙후, 납기 지연 속출 등으로 양국간 경공업분야 협조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 144

1984년 8월 3일 김정일이 평양에서 개최된 경공업제품 전시회를 현지지도하면서 각지의 공장·기업소 내에 가내작업반을 확대 조직하여 폐설물과 부산물을 이용해 피복·일용품·신발·잡화 등 생필품을 공급할 것을 지시하면서 유래하였다.

● 145

동 계획은 제6기 16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1989.67~11)에서 채택되었다.

● 146

북한은 1989년 12월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를 자인하고 향후 2~3년을 완충기로 설정하였으며, 동 기간중에는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방침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 147

『조선중앙통신』(1990.10.8).

또한 북한은 일본의 조총련계 상공인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경공업분야(특히 섬유공업)의 위탁가공에 주력하였으나, 2006년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로 일본과의 섬유 위탁가공이 급격히 줄어들어 둔 상태이다.

최근에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목표로 경공업 공장들의 개건 현대화 추진과 원자재 보장대책을 세워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양산할 것, 인민소비품 종류를 늘일 것 등을 중점과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공업 발전을 위한 각종 운동전개나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의 영세성, 시설장비 및 생산 공정의 전근대성 등으로 여전히 제품의 질적 향상과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지 못해 2005년도 직물생산량은 1994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은 83년 이후 ‘경공업혁명’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해 왔지만,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경공업 제품은 수입 중국 공산품 소비재와의 경쟁에서도 밀려났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장마당에서 팔리는 공산품 소비재의 80~90%가 중국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공업 분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공업 실태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섬유공업은 주로 경공업성에 소속된 방직공업관리국, 은하무역총회사, 비단공업관리국 등이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의류공장이나 직물공장은 지방행정기관의 피복공업관리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원사로 사용되는 화학섬유는 화학공업성에서 관장하고 있다. 2000년 4월 내각 산하에 섬유·직물·의류 등의 생산 및 수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방직·피복협회」를 신설하였다.

방직공업관리국 산하에는 구성·평양종합·신의주 방직공장과 강계·선교·사리원 편직공장과 평양양말공장 등의 편직공장이 속해 있다. 선교편직공장은 2003년 8월 5일 김정일 위원장의 현지도 이후 개건현대화의 목표에 따라 수백 대의 설비들을 새로 도입하는 등 개건·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제품 생산과 수출증대 노력 등¹⁴⁸⁾으로 경공업부문에서 전국적인 본보기 단위로 알려졌다.

은하무역총회사 산하에는 신의주·성천강·원산 및 대동강 등 수출 피복공장과 동대원, 용성과 선교 피복공장 등 20여개의 의류공장들이 있다.

비단공업관리국은 성천·평양 제사공장, 금야·팔원·영변·박천¹⁴⁹⁾ 견직공장 등 제사 및 견직공장을 관할하고 있다.

섬유공업 관련 연구소로 과학원 함흥분원 산하 연구소(10개)와 경공업 분원 산하 연구소(11개) 일부가 섬유산업연구를 하고 있으며, 직속연구소인 신의주 소재 화학섬유연구소에서는 인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경공업성 산하 「피복연구소」에서는 주민들의 직업·체격·연령 등에 맞는 옷의 형태와 규격을 제정, 의복을 제작하고 있다.

다른 공업분야에 비해 비교적 발전한 섬유공업은 화학사(인견사와 화학섬유)와 모사, 면사를 혼방한 혼방직계열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석탄과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비날론 공업이 발달하였다.

직물부문은 3차 7개년계획기간(1987~1993) 중 생산목표를 15억㎡로 설정한 바 있으나 2005년 직물 생산량은 1억㎡로 직물 생산능력(6.7억㎡)의 14.9%에 불과하다. 화학섬유 생산량은 2.8만톤으로 생산능력(17.7만톤)의 15.8% 수준으로 설비가동이 매우 저조함을 나타내고 있다.

직물 및 화학섬유 생산량

(단위: 직물: 백만㎡, 화학섬유: 천M/T)

연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직물	210	180	108	101	98	99	94	100	104	125
화학섬유	54	56	29	27	26	26	25	28	29	30

※ 출처 : 통계청, 한국은행

북한은 전력사정 악화, 기술력 저하, 장비의 노후화, 원료난 등으로 전반적인 생산능력의 침체를 겪으면서 생산량도 1990년 이후 매년 줄어들다가 2005년에 들어 약간 회복되었다.

화학섬유공업은 함흥의 2.8비날론연합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

● 149

박천견직공장은 생산과정 현대화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2000년 6월에 이어 2007년 3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하였다.

소, 신의주화학섬유연합기업소, 청진화학섬유공장과 함흥모빌론공장 등이 있다.

북한의 방직공장은 대부분 방직(紡績)과 제직(製織)을 겸하고 있으며, 주요 방직공장으로는 북한 최대의 종합방직공장인 평양종합방직공장을 비롯하여 강계방직공장, 사리원방직공장, 개성방직공장, 구성방직공장 등이 있다. 특히 평양은 북한 최대의 방직공업 중심지로서 전체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평양종합방직공작은 원료에서 직물생산까지 일관 공정체계(방직+제직+염색)를 갖춘 북한 최대의 섬유공장으로, 정방기 20만추, 직기 3천여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물생산능력은 연간 1.38억㎡이다.

또한 모방직계열로 함흥모방직, 신의주모방직공장 등이 있고, 견직계열로는 평양비단합영회사(평양공장·박천공장), 영변견직, 함흥견직공장 등이 있으며, 헤산아마방직공장·평양제사공장·청천강합영회사(희천제사공장) 등도 중요한 섬유공장이다.

주요 방직공장 현황

공장	소재지	섬유사부문		직물부문			종업원 (명)
		생산능력 (만톤)	정방기 (만추)	생산능력 (억㎡)	생산량 (억㎡)	직기 (대)	
평양종합방직	평양	2.5	20.0	1.38	0.21	3,000	12,000
신의주 방직	평북	1.8	11.2	0.53	0.08	2,500	3,500
사리원 방직	황남	1.7	10.0	0.66	0.10	2,000	
강계(9월)방직	자강	3.0	21.0	1.23	0.18	4,000	5,000
구성방직	평북	1.3	9.0	0.67	0.10	700	5,000
개성방직	황남	0.3	7.5	0.25	0.04	1,500	3,000
헤산방직	량강	0.6	4.6	0.20	0.03	500	2,700
함흥 모방직	함남	-	5.0	0.15	0.02	500	5,000
안주아닐론방직	평남	0.7	5.0	0.27	0.04	-	-
평양방직	평양	-	1.0	0.20	0.03	1,400	-
영변견방직	평북	-	-	0.15	0.02	1,000	2,500
기타		-	-	1.0	0.15	-	-
합계		11.9	94.3	6.69	1.00	17,100	

의류공업은 1984년 9월 합병법 제정 이후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병·합작사업으로 봉제의류, 임가공부문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장설립을 활발히 추진하여 북한 최대의 합병회사인 모란봉합영회사의 대동강피복공장 등 15개 공장을 건설하여 임가공 수출상품 생산에 주력하였다. 이들 공장은 설비수준 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의 품질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내수용 의류생산은 각 지역의 중소규모 봉제·편직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산기술, 시설 낙후로 생산품목이 단순하고 생산 실적도 부진하다.

1992년에는 UNDP의 지원하에 은하무역총국이 컴퓨터 피복설계기술을 도입하는 등 5개 공장에서 현대화 공사가 추진되었다. 2002년에 들어와서는 ‘흐름식’ 생산공정을 갖춘 평성피복공장의 조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혁명’을 강조하면서 평양방직공장, 평양방직기계공장, 박천견직공장, 영변견직공장, 평양제사공장, 신의주신발공장, 평양일용품공장 등 경공업분야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공정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⁵⁰⁾ 특히 경공업 우선 지원의 국가적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가투자’에 의해 평양방직공장·평양편직바늘공장·박천견직공장의 개건·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¹⁵¹⁾

비단공업관리국에서는 견직공장들의 설비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조사업과 품질향상을 도모하면서 다색단과 비로도천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조선비단무역회사는 제사·견직공장의 수출입업무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면서 수출대금으로 생산공정 개건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¹⁵²⁾

북한의 신발생산은 경공업성 산하 신발공업관리국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신발공업관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공장으로는 평양신발공장·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신의주신발공장·순천구두공장 등 대부분의 신발공장과 신발연구소 등이다.

북한은 각지의 신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 도소재지들과 주요도시에 신발 생산공장을 배치하고 있으며 가장 큰 중심지는 평양과

- 150 「중앙방송」(2007.3.24)
- 151 「조선신보」(2007.1.23)
- 152 「조선신보」(2007.1.23)

신의주이다.

북한의 연간 신발생산능력은 약 9,300여만 켤레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평양과 신의주의 신발생산능력이 각각 2,200만 켤레씩으로 두지역이 전체 신발생산능력의 47%를 점유하고 있다.

신의주신발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2천만 켤레로 북한에서 제일 큰 신발공장이며, 1982년에는 전체 신발생산액의 16% 이상을 생산하였다. 주요제품은 천 신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운동화·노동화·농구화 및 편리화 등을 전국에 생산, 공급하고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발설계를 컴퓨터화하고 절전형 기름가열기를 도입하는 등 최신 설비도입에 의한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

평양염화비닐신발공장은 비닐화 생산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연 700만 켤레의 신발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생산제품은 가죽신발·비닐신발·사출운동화와 사출샌들 등이다. 1982년에는 북한 전체 신발생산의 8%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평양신발공장은 연간 600만 켤레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동화 샌달과 비닐신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03년에는 연산 100만 켤레의 운동화 생산공정을 새로 건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에서 생산된 신발의 대부분(약 65% 수준)은 염화비닐을 소재로 한 비닐신발이며, 그밖에 천, 고무, 가죽 등을 이용해 운동화·작업화·구두 등을 생산하고 있다. 신발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신발원자재 전문 공장들에서, 염화비닐과 천은 화학공장, 방직공장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고무는 중국·일본·싱가포르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북한의 신발제조 공정은 압피제조 및 조립부문의 생산과정을 무시하는 단순 성형과 접착공정이 특징이며, 신발생산 기술수준 및 설비가 낙후되고 전력난·원부자재난으로 공장 가동률이 저조하다.

2001년 평양 인근지역의 중 신발공장들을 대상으로 신발부문 기술개진사업을 추진하여 평성합성가죽공장, 유원신발공장에 설비 현대화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고, 생산 자동화와 관련하여 신발 디자인 종합설계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의 2003년에 대부분의 신발공장에 절전형 기름가열기를 도입하여 동년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약 900만켤레의 신발이 더 생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신발공업은 제조기술의 낙후, 생산설비의 노후화, 원자재 부족으로 신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최근에는 국영상점에서도 상당량의 신발을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¹⁵³⁾

최근 신발공업관리국에서는 신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발의 종류와 양을 늘리고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의류·신발·비누 생산을 위한 원자재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후 2007년 7월 남북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합의하였으며,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총 26항차에 걸쳐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하였다.

(4) 사회간접자본

(가) 전력

북한의 전력생산은 수력발전과 무연탄 위주의 화력발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수자원이 풍부한데다 지형상 산악지형이 많은 유리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일제 때부터 수풍·장진강·부전강발전소 등 수력발전소 위주의 건설을 추진한 결과 1960년대까지는 거의 수력의존적인 전력생산 구조였다.

그러나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발전량의 기복현상과 원거리 송·배전상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70년대부터는 자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무연탄을 이용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에도 중점을 두어 왔다.

이에 따라 1980년대까지 수력 대 화력의 설비 비율은 5:5 정도가 되었다. 북한의 발전소 건설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건설추진이 급속도로 둔화되어 왔다.

● 153

북한은 2004년에 중국으로부터 431.9만 달러, 일본으로부터 15.8만 달러치의 신발을 수입한 바 있다(KOTRA 북한경제정보).

북한의 수력발전시설은 시설용량 80만kw의 수풍발전소를 비롯하여 운봉·서두수·허천강·장진강·강계청년·부전강·대동강·태평만·위원·태천발전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수풍·운봉·태평만·위원 등 4개 수력발전소는 중국과 공동으로 관리·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5월 북한과 중국은 창춘에서 압록강 중류에 설비용량 42,000kw(연간 발전량 1억 6천kwh)급의 수력발전소 2개(문악·립토)를 공동건설하기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석탄생산량 감소, 발전설비 노후화 등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전력의 자체 수급」을 목적으로 김정일의 직접지시에 의해 중소형발전소¹⁵⁴⁾ 건설을 경쟁적으로 건설하여 2005년말 현재 총 6,800여개(도합 471,500kw)의 중소형발전소를 완공하였다.

●● 154

북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은 당 중앙위 제5기 19차 전원회의(1979.12) 결정에 따라 본격추진되었으나 낮은 발전효율, 빈번한 설비고장 등으로 1990년대 들어 정책적 관심이 약화되었다가 전력법(1996) 및 전력법시행규칙(1997) 채택시 중소형발전소의 '전군중적 건설원칙'을 법규로 명문화하는 등 최근 다시 강조되고 있다.

●● 155

김정일이 1999년 1월 18일 태천발전소 현지지도시 북한 전역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지시한 이후 금야강 발전소, 애성강발전소, 안변 청년발전소 등의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다.

●● 156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국가전력계통에 넣지 않고 지방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중소형발전소 건설 현황

(단위:kw)

구분	1996	1997~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국가계획		6,840	370	250	미발표	100	43	
완공 (건설중)	185	6,430	98	40	30	10	40	6,833
도합 설비용량	90,000	202,000	24,500	30,000	30,000	10	80,000	471,500
개당 평균출력	486	31	250	750	1,000	15,000	2,000	

※ 북한 보도자료 종합 추정(1995~2005)

그러나 중소형 발전소가 용량이 지나치게 작고 갈수기등 계절적 변화에 민감하여 전력 증산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1999년부터는 2만 kw 이상의 대규모 수력발전소¹⁵⁵⁾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계단식 발전소 건설 등 상대적으로 큰 용량의 '쓸모 있는' 중규모 수력발전소 위주로 건설하면서 지방공장과 주민용 전력난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¹⁵⁶⁾

북한의 화력발전소는 발전설비용량 160만kw의 북창화력을 비롯하

여 평양화력·선봉화력·청천강화력·청진화력·순천화력·동평양화력 등이 있다. 이중 평양·선봉·북창·청진화력은 구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된 것이며, 동평양화력도 당초 구소련 지원 하에 착공되었으나 이후 투자재원 부족으로 건설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가동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보다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설비보수에 주력하고 있다. 2007년에는 어랑천1호발전소, 삼수발전소, 태천4호발전소 등의 완공·조업으로 전력 생산이 증가되었다. 2008년말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총 750만kw로서 수력대 화력의 설비비율이 6 : 4 정도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 북한은 1992년 9월 과학원에 ‘자연에너지개발이용센터’를 창립하여 풍력·조수력·태양력 등 자연에너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1998년 10월 평양시 강서구역에 200여개의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황해남도 벽성군에 수천kw급 조수력발전소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아직 시험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전력공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먼저 수력발전소의 경우 산림황폐화에 따른 수자원의 감소, 기존 수력발전소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가동률이 낮고 계절에 따라 전력생산의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며, 화력발전소의 경우도 주된 연료인 석탄생산과 수송이 한계에 도달하여 발전소의 가동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발전설비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설비노후(20년 이상 경과 80%), 수주화중(水主火從)의 발전구조(수력 62%, 화력 38%)의 계절적 강수량 차이, 연료 및 자재부족 등에 기인한다.

발전설비능력 및 발전량

연도	발전설비능력(만kw)			발전량(억kwh)		
	계	수력	화력	계	수력	화력
1985	596.0	336.2	260.0	252.8	124.4	128.4
1990	714.2	429.2	285.0	277.4	156.1	121.3
1991	714.2	429.2	285.0	263.0	150.3	112.7
1992	714.2	429.2	285.0	247.0	141.9	105.1
1993	714.2	429.2	285.0	221.3	132.9	88.4
1994	723.7	433.7	290.0	231.3	138.4	92.9
1995	723.7	433.7	290.0	230.0	142.0	88.0
1996	738.7	443.7	295.0	213.0	125.0	88.0
1997	738.7	443.7	295.0	193.0	107.0	86.0
1998	738.7	443.7	290.0	170.0	102.0	68.0
1999	738.7	443.7	290.0	185.7	102.7	83.0
2000	755.2	459.2	295.0	193.6	101.6	92.0
2001	775.2	479.2	296.0	201.5	105.5	96.0
2002	777.2	481.2	296.0	190.4	106.2	84.2
2003	777.2	481.2	296.0	198	117	79
2004	777.2	481.2	296.0	206	125	81
2005	782.2	481.2	301.0	215	131	84
2006	782.2	481.2	301.0	225	126	99
2007	706.0	405.2	301.0	237	133	104
2008	749.7	448.7	301.0	254.6	140.7	113.9

※ 출처: 통계청, 한국은행

※ 2007년도의 발전용량(수력) 급감은 북한·중국이 공동운영하는 4개 발전소(수풍·운봉·태평만·위원발전소, 총 178만 kw)의 중국분 설비용량(89만kw)을 감한 데 기인

또한 전력부족으로 주파수가 현저하게 낮으며, 송·배전체계의 노후화와 불합리로 누전율이 높고 전압이 낮고 불안정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2003년에 스위스 다국적기업인 ABB사와 ‘초고속 송전망사업 양해

문'에 조인¹⁵⁷⁾하는 등 발전 및 송배전체계의 현대화를 모색한 바 있으나 성과가 없었다.

북한의 전력 공급은 수요량의 60~70% 수준으로 북한 전력난은 북한 경제회생의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석탄을 '경제 강성대국 건설의 생명선·선행부문'으로 제시하고 전력생산 정상화와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2002년 5월 태천 3호(1.5만kW)를, 2007년초 태천4호(1.5만kW)·어랑천1호(6만kW)·삼수(5만kW)를 완공한 데 이어, 2008년 예성강1호(4만kW)·안변청년(32.4만kW)·영원(9만kW)·원산청년(6만kW) 등 대형수력발전소를 완공하였으며, 현재 5개의 수력발전소(총 42.3만kW)를 추가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력사정은 발전 및 송·배전체계상의 구조적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자력갱생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외부와의 협력 없이는 획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겠다.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동향

발전소명	지역	규모(만kw)	착공
백두산 선군청년 (구 백암)	양강 백암군	6 (추정)	'02.10
어랑천 2-5호	함북 어랑군	2.3	'88년 초 착공, '00.8 본격재개
예성강 2-5호	황북	6 (추정)	'08.6
금야강	함남 금야군	18	'87.9 착공 '99.3 재개
희천	자강 희천군 (청천강 상류)	10 (추정)	'01.3
계	5개	42.3	

(나) 수송

북한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철도 및 도로망은 비교적 지대가 낮은 서해안지대에 발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대에는 해안선을 따라 철도와 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다.

북한 수송체계의 특징은 철도수송이 주축을 이루고 도로수송, 하천 및 해상수송은 철도수송과의 연계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의 운송부담율은 화물 86%, 여객 6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도망은 서해안축, 동해안축, 동서횡단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서해안 축으로는 경의선(개성-신의주), 황해청년선(사리원-해주), 평남선(평양-평남온천), 평덕선(대동강-덕천-구장청년), 평북선(정주-청수), 만포선(순천-만포국경)이 있으며, 동해안축으로는 평나선(간리-나진), 강원선(고원-평강), 신흥선(함흥-부진), 허천선(단천-홍군), 금골선(여해진-금골), 백두산청년선(길주-혜산), 함북선(반죽-회령-나진), 무산선(고무산-무산)이 있고, 동서횡단축으로는 평원선(평양-고원), 청년이천선(평산-세포청년)이 있다.

국제철도 노선으로는 현재 신의주-단둥(중국), 남양-투먼(중국), 만포-지안(중국), 두만강역-햏산(러시아)의 4개 노선에 화물열차 또는 여객열차가 운행되고 있으나, 만포-지안 노선은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며 최근 들어 운행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중국 철도노선의 경우 국제열차가 평양-베이징간 주 4회 정기운행되며, 22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된다. 청진-남양-투먼-옌지로 연결되는 노선은 청진항을 이용하는 중국과의 중계화물 수송에 이용되기도 한다.

북한은 철도수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1차 7개년 계획 이후 기존 철도의 전기화·광궤화와 함께 새로운 철도를 부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지역 내에서 수송수단이 가장 취약한 북부지구의 자강도 만포에서 양강도 혜산을 연결하는 북부순환선(북부철길)을 완공(1993.2)하였다.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 목표를 철도 전기화의 완성 및 철도운영의 과학화를 이루어 철도화물 수송량을 1.6

배로 늘린다는 것이었으나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그 성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말 북한의 철도 총연장은 5,242km(그 중 98%가 단선철도)이며 전철화 구간은 4,211km, 지하철 총연장은 34km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계속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의 철도는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철도차량의 수리·교체가 어려워 운행속도와 안전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북한은 철도운수를 전력, 석탄, 금속과 함께 4대 선행부문으로 설정하고 해마다 경제 정책 중점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도로는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사가 심하고 노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비포장으로 되어 있다. 북한의 도로운영체제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되는데 일반도로의 경우 1급에서 6급까지 나뉜다. 1급도로는 중앙과 도청소재지 사이를, 2급은 도청소재지와 군청소재지 사이를 연결하고 있으며, 3급은 군청소재지와 군청소재지, 4급은 군청소재지와 리, 5급은 리와 리, 6급은 마을과 마을 사이를 잇는 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관리하고, 1~3급도로는 도에서, 4~5급 도로는 군에서, 6급도로는 리에서 관리한다.

2008년말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2만 5,802km이며 이 중 포장도로는 4,454km로 평양, 남포, 원산 등 대도시 주변에 불과해 도로 수송능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주요 고속도로는 평양-순안국제비행장(15km), 제1 평양-남포(44km), 제2 평양-남포(42km, 청년영웅도로), 평양-원산(204km), 평양-개성(168km), 평양-향산(135km), 사리원-신천(30km), 원산-금강산(114km) 등 8개 노선 총연장 752km에 달한다.¹⁵⁸⁾ 이들은 대체로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평양-개성 및 평양-향산 구간만이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한다.

해상운송은 해안선이 동서로 단절된 불리한 여건과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러시아 모두 육상운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운부문의 수송분담률은 매우 낮다. 항만은 입지조건이 유리한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발달되어 있으나, 1986년 5만톤급 선박의 통과가 가능한 서해갑문(남포갑문)이 완공됨으로써 서해안의 해상수송능력은 물론 대

● ● 158

북한의 고속도로는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개념이다.

동강·재령강을 이용한 하천수송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항만 하역능력은 1970년대까지는 기존시설의 복구 및 정비 등 현상 유지에 그쳐 매우 빈약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외무역 증대 방침에 따라 주요 무역항인 청진·남포·해주·송림항 등의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한 바 있어 해운무역수송량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2008년 말 현재 항만하역 능력은 연간 약 3,70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항공의 경우 국내노선으로는 평양의 순안에서 삼지연·어랑·선덕, 원산 등의 11개 구간이 운영되고 있으나 승객이 적고 비용이 비싸 부정기적이다. 이용자는 주로 업무상의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용객은 주로 당 간부나 외국인 등이다.

국제공항으로는 순안비행장이 유일한데 북한의 고려항공은 총 3개 정기노선을 운항 중으로 중국과는 평양-베이징, 평양-센양 등 2개 노선, 러시아와는 평양-블라디보스톡 노선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3월부터는 중국 국제항공이 베이징-평양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58년 구소련과 처음으로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파키스탄·이라크 등의 서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유고·아프카니스탄·독일·불가리아 등 세계의 약 40여개 국가와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 통신

북한에서의 통신이란 일반적으로 신문·방송·잡지 등 각종 보도매체 및 이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사실의 전파를 의미한다.¹⁵⁹⁾ 따라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분류하는 통신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을 ‘체신’으로 부르고 있으며, “인민들의 통신 및 방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전신·전화·우편·방송 등 여러 가지 체신망을 설치·운영하고 있다.¹⁶⁰⁾

체신사업은 전기통신(유·무선 전신, 전화), 우편통신(편지·소포·송금·저금·정기간행물 배포), 방송(유·무선 라디오, TV) 등 3개부문으

● 159

「백과사전 4」(1983)
참조.

● 160

「경제사전 2」(1985),
pp.514~515.

로 분류되며, 내각의 체신성을 비롯하여 직할시와 도 단위의 체신관리국과 체신소, 전신전화국, 우체국, 체신분소와 방송국 등에 의하여 업무가 수행된다.

북한의 통신부문은 지금까지 그 기능이 행정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에게 정책을 전파하는데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대내전화망은 평양과 도·시·군·리간에 종적으로 연결된 중앙집중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2005년말 현재 총 110여만 회선 가운데 평양을 비롯한 주요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환수를 통하는 수동교환시스템에 의존하여 왔다.

북한은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기간중 평양을 중심으로 대도시간의 현대적인 통신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하였다. 1995년 1월에는 300km에 이르는 평양-함흥간 광케이블 공사를 완공하였으며, 1998년 2월에는 평양-신의주, 신의주와 평안북도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구 사이의 400km에 달하는 광섬유케이블공사 및 전화 자동화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같은 해 9월에는 50개 시·군 가운데 36개 시·군의 광섬유 통신망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¹⁶¹⁾ 2003년 10월에는 북한 전역의 시·군까지 동 공사를 확장·완료하였다.¹⁶²⁾

국제통신망은 1986년 3월 평양 근교에 일본·프랑스 기술진의 참여로 위성통신지구국이 건설되어 위성통신을 통한 직접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3년 10월 현재 총 6개국과 위성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타 국가들과는 이들 6개국을 통한 중계방식으로 통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북한의 조선체신회사는 태국 록슬리 회사와 공동으로 2002년 11월에 평양시·나선시에 유럽형 GSM방식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후 2003년 9월 남포·개성·해주·함흥·신의주 등 9개 도소재지와 평양-개성·향산, 함흥-원산간 도로 주변 지역에 이동통신망을 추가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 사고 소식의 외부유출을 계기로, 일부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낙후된 통신환경을 개선하기

●● 161
「평양방송」(1998.9.28)

●● 162
북한의 고속도로는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개념이다.

위해 2008년 12월 15일 이집트 오라스콤 회사의 지원으로 구축해온 WCDMA 방식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평양지역에 한정 개통하였다. 오라스콤은 1년 안에 평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도시에서 휴대전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망 분포와 같은 체계로 전 지역에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주요기관간 「광명」(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우편을 교환하고, 자료도 공유하는 등 인터넷처럼 사용하고 있다.¹⁶³⁾ 한편 2006년경부터 평양의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가 각각 인터넷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중이다. 나머지 여러 국제기구도 이 서버를 공유하여 사용 중이다.

한편 북한은 1990년 8월 정지위성과 궤도위성으로부터 기상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기상수문국 기상위성 수신소를 준공함으로써 중장기 기상예보가 가능하게 되었다.¹⁶⁴⁾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 감소 및 해상, 항공운수의 안전운항은 물론 해류분석으로 어족자원의 분포실태 파악 등 농수산업 분야에서 기상예보의 활용도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마.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1) 대외무역

(가) 대외경제정책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왔다.

국가독점의 원칙이란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모든 대외경제활동을 국가의 직접적 혹은 통일적인 통제와 사전적 계획하에 집행한다는 것이며, 자급자족의 원칙은 대외경제기능을 계획경제의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물자 조달을 위한 역할로 국한시킨다는 의미이다. 호혜평

●● 163 「조선신보」(2003.2.1)

●● 164 「평양방송」(1990.8.27)

등의 원칙이란 자본주의국가들과의 모든 무역관계를 선·후진국간의 불균등 교환을 통한 약탈적 관계로 인식하고, 북한과 정치적·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폐쇄적·소극적 대외경제정책 추진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은 국제분업에 의한 무역의 이익과 효율성이 경시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은 주로 수입에 필요한 외화획득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시기별로 보면 196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유·무상 원조정책을, 1970년대는 선진자본주의국가로부터의 차관 도입정책(기술 포함)을,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각각 합병법과 경제특구에 의한 외자유치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대내적으로 자본주의 풍토를 배격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대한 편입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대외무역 활성화 및 경제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등 변화된 국제환경에 부응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 서면서부터이다. 이 시기에는 대내적으로는 6개년 계획이 착수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1960년대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된 데 이어 원조가 대부분 차관으로 대체되었고 그 이전에 받았던 차관의 상환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심각한 외채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말부터 북한은 서방의 선진 기술과 자본의 도입과 함께 수출증대와 외화수입증대를 위한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외무역 전담회사인 대성무역상사와 봉화무역상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대성은행과 금강은행 등을 설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¹⁶⁵⁾

1970년대는 북한이 서방으로부터 상업차관 도입을 적극 추진한 시기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기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비철금속 가격이 급락하고 수입품목인 기계류와 석유 등의 가격은 급등함에 따라 북한은 외채지불 불능상태에 빠져 서방으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16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모스크바: 소련과 학원 세계사회주의체제 경제연구소, 1985)의 한글 번역판 『북한의 정치와 경제』(서울:국토통일원, 1988), pp.204~208.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제6차 당대회(1980.10),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1984.1) 등에서 자본주의국가 또는 제3세계국가와의 교역증대를 위한 여러가지 방침들을 제시하면서 대외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¹⁶⁶⁾ 특히 ‘합영법’(1984.9)을 통해 1970년대의 차관도입 형태를 넘어 북한내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1975년 이후의 외채상환 및 상업차관 도입불능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동시에, 중국의 중외합작경영기업법(1979.8) 제정과 경제특구 설치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으로의 변화는 1990년대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에서 계획착수 이전에 비해 무역량을 3.2배로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나, 완충기(1994~1996) 과업의 하나로 설정된 무역제일주의 방침, 그리고 새로운 무역체계 도입¹⁶⁷⁾ 등은 대외경제부문 강화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1991년 12월에 실시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 특구정책과 지대활성화조치(1997.6), 잇따른 외자유치 관련법령의 제·개정과 대규모 외자유치설명회, 개정헌법(1998.9)에서의 대외무역 및 경제개방 확대 강조 등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그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남한·동남아·유럽 등에 연평균 300여명의 경제시찰단·연수단을 파견하여 시장경제에 대한 학습을 실시하는가 하면,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는 신의주(2002.9),¹⁶⁸⁾ 금강산(2002.10), 개성(2002.11)등 경제특구를 잇따라 지정, 보다 개방적인 대외경제협력의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무역활동을 시·군과 기업소 단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부단위 경쟁을 통해 무역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북한은 2001년 이후 대외협력확대를 선진기술 도입, 기술혁신과 과학기술발전과 함께 ‘자력갱생’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 166

제6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에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천명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남남협조와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여 무역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 167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 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평양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4), pp.30~32.

● 168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 시도는 중국의 반대 등으로 2004년경 백지화되었다.

2007년부터 ‘21세기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외경협이 포함되어 있다.

(나) 대외경제담당기구

북한은 1998년 종래의 정무원을 내각체제로 바꾸면서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내각에 무역성을 신설하여 무역 및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무역성은 대외 상품 교역 및 용역·설비 수출입 업무와 기술·자본 유치 등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무역성은 계획국·수입국·수출국·1·2·3·7 국 등 중앙조직과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협조국, 대외건설지도국, 조선상업회의소, 조선합영은행 등 산하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경제협조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 및 개방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지대의 개발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산하에 많은 무역회사를 둔 무역업무 전담기구로서 당초에는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주로 맡아 왔는데 최근에는 전반적인 서방국가와의 무역뿐 아니라 외자유치 부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2004년 1월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 대북투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남교역은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2004년 6.9 지침에 의해 상급기관으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설치하고 이를 내각에 귀속시켰다. 민경협은 2005년 6월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정령으로 공식 출범했다. 내각의 성급(省級)에 해당하는 기관인 민경협은 남북교류협력의 규모와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대남사업관련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북한이 남북경협을 적극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었다.¹⁶⁹⁾ 민경련 산하에는 새별(피복·신발 등 섬유), 개선(농수산물), 광명성(경공업), 삼천리(전기전자 및 IT), 광복(철도·도로), 명지(광물) 등 분야별로 총회사를 두고 있다.

● 169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발표한 내각 성원 명단에는 민경협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2기 제1차회의에서는 내각기구에서 민경협이 보이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동기구를 축소 또는 폐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 거래형태와 결제방법

종래 북한의 무역거래 형태는 호혜평등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사회주의국가나 일부 개도국과는 쌍방간의 장기무역협정을 통해 매년 수출입 품목·규모 등을 결정하는 한편, 1년간의 교역결과에 대해서는 쌍방의 결제은행간에 청산결제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 및 동구제국의 붕괴로 사회주의권 시장이 상실됨에 따라 북한의 무역거래형태 및 결제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북한과 구소련은 1990년 11월 ‘조·소 무역결산체계 변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쌍방간에는 1991년부터 국제시장 가격에 의한 경화결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한·중국 간에도 1992년부터 이와 같은 결제방식을 적용기로 합의하였다.¹⁷⁰⁾

한편 서방권 국가와의 무역은 교역절차나 대금결제방식에서 자본주의 국가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역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자본주의 국가와는 청산지불협정을 거의 맺고 있지 않아 거래건별로 대금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해주는 일반 상업신용장 방식의 결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라) 대외무역 현황

북한의 무역추세를 보면 195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1980년도와 1980년대 말 무역규모는 1970년도 비해 각각 4.7배, 6.6배나 증가하였다.

다만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전반에는 다소의 기복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유류파동과 주력 수출품인 비철금속의 국제가격

●● 170
 '1992년도 조·중 무역협정' (1992.1.26)

하락으로, 1980년대 전반에는 대서방권 외채상환문제 및 광산물의 수요가격 폭락 등에 따라 무역이 전반적으로 침체상태를 보였다.

북한의 무역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1970	1980	1990	1995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	3.4	15.7	19.6	7.4	5.6	5.6	6.5	7.3	7.8	10.2	10.0	9.5	9.2	11.3
수입	4.0	18.8	27.6	13.1	8.8	14.1	16.2	15.3	16.1	18.4	20.0	20.5	20.2	26.9
계	7.4	34.5	47.2	20.5	14.4	19.7	22.7	22.6	23.9	28.6	30.0	30.0	29.4	38.2
증가율	9.1	16.6	3.2	△15.3	△11.3	33.1	15.1	△0.4	5.8	19.5	5.1	△0.2	△1.8	29.7

※ 출처 : 통일부 및 KOTRA 추정 결과

※ 주 : 증가율은 기간별 연평균 증가율

북한의 무역규모는 1988년의 52.4억 달러를 정점으로 1998년까지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1991년과 1994년에는 최대 교역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거래방식이 경화결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교역이 전년보다 각각 42.4%와 20.2% 급감하였다. 1998년 아시아지역의 외환위기, 중국과의 교역감소 등으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14.4억 달러로 1970년대 중반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북한의 무역을 1999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주다가 2006년, 2007년 정체상태를 거쳐 2008년에는 증가현상을 보였다. 2002년 이후 북한 무역의 특징을 보면, 중국 및 한국과의 무역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2002년 중국과의 무역 비중이 25.4%에서 2008년 49.4%로, 같은 기간 한국과는 22.1%에서 32.2%로 증가했다. 2008년도 북한의 주요 품목별 수출 비용을 보면, 광물성 생산품 41.3%, 비금속류 16.8%, 의류 10.6%이다. 수입에서는 광물성 생산품 25.9%, 섬유류 11.9%, 기계·전기전자 11.5% 등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과 관련하여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를 보면, 1988년 7월의 '7·7 특별선언' 및 동년 10월의 '남북한 물자교역지침' 시행 이후 집계된 지난 18여 년 동안에 교역건수 및 품목수, 교역량에 있어서 괄목한만한 성장을 보여 왔다.

1995년부터 남한은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00년 정상회담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교역규모는 2002년에 일본을 제치고 북한의 2대 교역국으로 올라선 뒤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8년 말까지의 남북교역 누계는 110.2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국가별 무역량 추이

(단위 : 억 달러)

구분	1990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중 국	합계	4.8	4.1	4.9	7.4	7.4	10.2	13.9	15.8	17.0	19.7	27.8
	(수출)	(1.2)	(0.6)	(0.4)	(1.7)	(2.7)	(3.9)	(5.9)	(5.0)	(4.7)	(5.8)	(7.5)
	(수입)	(3.6)	(3.5)	(4.5)	(5.7)	(4.7)	(6.3)	(8.0)	(10.8)	(12.3)	(13.9)	(20.3)
태 국	합계	0.4	0.1	2.1	1.3	2.2	2.5	3.3	3.3	3.7	2.3	0.8
	(수출)	(0.3)	(0.01)	(0.2)	(0.2)	(0.5)	(0.5)	(0.9)	(1.2)	(1.5)	(0.4)	(0.5)
	(수입)	(0.1)	(0.09)	(1.9)	(1.1)	(1.7)	(2.0)	(2.4)	(2.1)	(2.2)	(1.9)	(0.3)
일본	합계	4.8	3.9	4.6	4.7	3.7	2.7	2.5	1.9	1.2	0.09	0.07
	(수출)	(3.0)	(2.2)	(2.6)	(2.2)	(2.3)	(1.7)	(1.6)	(1.3)	(0.8)	(0.0)	(0.0)
	(수입)	(1.8)	(1.7)	(2.0)	(2.5)	(1.4)	(1.0)	(0.9)	(0.6)	(0.4)	(0.09)	(0.07)
러 시 아	합계	25.7	0.6	0.5	0.7	0.8	1.18	2.1	2.3	2.1	1.6	1.1
	(수출)	(10.5)	(0.1)	(0.1)	(0.1)	(0.1)	(0.03)	(0.1)	(0.1)	(0.2)	(0.3)	(0.13)
	(수입)	(15.2)	(0.5)	(0.4)	(0.6)	(0.7)	(1.15)	(2.0)	(2.2)	(1.9)	(1.3)	(0.97)

※ 출처 : KOTRA

2008년 말까지 남북교역 누계를 살펴보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은 51.7억 달러로서, 남북교역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1989년의 0.4%에서 2008년 32.2%로 크게 높아졌으며 2002년 이후에는 꾸준히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반출은 58.5억 달러로서 1997년 이전까지는 남한의 절대적 반입 위주의 교역구조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부터는 위탁가공 원부자재, 식량 등 대북지원물품, 금강산관광개발 등 경협사업 추진에 따른 물자 반출이 크게 증가하여 반출이 반입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남북간 연도별 반출입 통관현황

구분	반입			반출			합계		
	건수	품목수	금액(천\$)	건수	품목수	금액(천\$)	건수	품목수	금액(천\$)
1989	66	25	18,655	1	1	69	67	26	18,724
1990	79	23	12,278	4	3	1,188	83	26	13,466
1991	300	44	105,719	23	17	5,547	323	61	111,266
1992	510	76	162,863	62	24	10,563	572	100	173,426
1993	601	67	178,167	97	38	8,425	698	101	186,592
1994	827	73	176,298	495	92	18,249	1,322	159	194,547
1995	1,124	105	222,855	2,720	174	64,436	3,844	265	287,291
1996	1,648	122	182,400	2,980	171	69,639	4,628	280	252,039
1997	1,806	140	193,069	2,185	274	115,270	3,991	385	308,339
1998	1,963	136	92,264	2,847	380	129,679	4,810	486	221,943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6,510	488	333,437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7,394	578	425,148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7,754	549	402,95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8,796	572	641,73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11,209	588	724,217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12,893	634	697,040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21,215	775	1,055,754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33,451	757	1,349,739
2007	25,027	450	765,346	26,713	803	1,032,550	51,758	853	1,797,896
2008	31,243	482	888,117	36,202	813	932,250	67,445	859	1,820,367
총계	119,583	4,113	5,844,918	126,365	7,856	5,170,999	245,948	9,141	11,015,917

※ 출처 : 통일부

※ 주 : 1) 남한의 반·출입 기준이다.

2) 1995년 교역금액에는 대북 쌀지원 2억 3,721만 달러가 제외되었다.

2008년도 교역품목의 구조를 살펴보면 반입품목은 농림수산물(22.3%), 석유류(34.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출의 경우는 석유류(23.6%), 기계류(17.7%), 철강금속제품(15.7%)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외국 직접 투자 유치

북한의 직접투자 외자유치 사업은 합영사업으로부터 시작했다. 합영 기업이란 “한 나라의 회사·기업소와 다른 나라의 회사 기업소가 공동 투자, 공동경영, 이윤의 공동분배, 손실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을 말한다.¹⁷¹⁾ 이러한 합영기업은 국제간 경제합작의 한 형태이나 기업의 경영과 손실에 대하여 출자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기업이윤을 공동분배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북한은 1984년 9월 전문 5장 26개조의 ‘합영법’¹⁷²⁾을 제정하여 서방 자본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 회사·기업소가 북한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은 합영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1985년에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외국인 소득세법 시행세칙’ 등을 제정하였다.

1986년 8월에는 조총련과 합영사업의 주선·조정·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각각 60만달러씩 출자하여 조선국제합영총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1984년 합영법 발표 이후 주로 조총련 상공인을 대상으로 합영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모란봉합영회사, 평양피아노합영회사, 국제화학합영회사 등 일부 대표적인 합영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운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일 조총련계 기업의 취약한 자금사정 및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투자자금의 대부분이 100만달러 내외의 소액투자였기 때문에 실제 북한경제에 대한 발전 기여도가 낮았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당초 희망하고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중화학 및 첨단산업 관련부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생필품 중심의 소비재 경공업과 서비스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1989년을 고비로 감소세를 보이던 조총련과의 경험이 김일성 사후에는 급격히 냉각되었다. 결국 조총련과의 합영사업은 합영사업이라기보다는 조총련 동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현금·애국사업 성격의 태생적 한계로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171

「재정금융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5), p.1201.

● 172

동 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1994. 1.20)으로 이후 다시 전문 5장 47개조로 개정되었다.

한편 구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체제붕괴 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기반이 와해되고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했던 북한은 서방자본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서방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한편, 1995년부터 대내외 투자설명회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나진·선봉특구 설정을 통한 외자유치사업 역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또다시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하며 해외동포를 우대하는 정책을 다시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매년 평양국제상품전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외투기업에 세금우대조치를 취하고 합영·합작법 및 외투기업 관련법령의 하부 시행규정을 제정하였다. 2002년에는 한국자본을 유치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 착수했다. 2004년 9월에는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 외국 자본의 유치를 도모했다. 북한은 또한 1996년 9월 덴마크와 최초로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중국, 러시아, 스위스, 싱가포르 등 20여개국과 동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의 투자보장합의서는 2004년 1월 발효되었다. 한편 2003년 중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이후 유통, 광산개발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자본의 북한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3) 대외원조

해방 이후 197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무상원조 12.8억 달러, 유상원조 34.7억 달러 등 총 47.5 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들여와 전후복구사업·군사력 증강·경제개발 등에 투자하였다. 이 중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0.4억 달러는 1960년대 이전에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도입된 유·무상 차관이었으며, 12.4억 달러는 1970년대 들어와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유상차관이었다.

●● 173

국제기구를 통한 무상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은 UNDHA가 담당하였으나, 1997년에 UNDHA가 OCHA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는 OCHA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외채상환 불능상태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서방권 국가로부터의 차관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주로 구 소련·중국 등에서 약간의 차관이 제공되었을 뿐이다. 구 소련은 북한의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기간 중 약 1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쌍방간에 종래 군사장비·원유 등의 거래에 적용해 오던 소위 ‘우호가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물성 원조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 또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와도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UNDP는 1979년 6월 북한이 동기구에 가입한 이후 UNDP자금에 의한 대북경제지원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제3차 7개년계획기간 중에는 국제기구로서는 북한의 최대 경제협력상대가 되었다.

UNDP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주의권 붕괴 및 북한 핵문제 등으로 외국과의 경제협력이 거의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UNIDO는 북한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경제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그 지원규모가 점점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23일 북한의 UN대표부가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¹⁷³⁾ 긴급지원을 공식요청함으로써 개시되었는데,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창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95년부터는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무상지원이 재개되고 있는데,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체계는 UN산하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각국 정부의 직접 지원, 국제적십자사나 NGO(비정부기구) 혹은 개인·기업 등에 의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06

과학기술

- 1.과학기술정책
 - 가 정책기조
 -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 2.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계
 - 가. 과학기술 행정체계
 - 나.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계
 - 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 3. 최근 과학기술부문 동향
 - 가. 각종 과학기술 행사 강화
 - 나. 과학기술 대외협력 활동 강화
 - 다. IT산업 육성 동향





Ⅵ. 과학기술

1. 과학기술정책

가. 정책기조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7조는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 나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0조는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 세운다”고 하고 있고, 제51조는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였다.

북한헌법에 규정된 과학기술 관련조문을 근거로 하여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정리하면, ①기술혁명의 지속적인 추진, ②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 강화, ③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이다.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①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해소, ②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 해소, ③여성들의 가사 부담 해방 등 3대 기술혁명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과학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는 과학연구사업의 결과를 직접

생산기술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제 경제건설과 생산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과학기술자들과 생산노동자들이 협조하여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대중적 지혜를 발양하면서 소극성·보수주의·기술신비주의를 타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운다는 것은 주체사상 및 자력갱생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도 자체 연구인력과 독자적인 이론개발을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며, 연구사업의 중점과업도 내부의 원료·연료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우선을 둔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경제강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차 : 1998~2002, 2차 : 2003~2007, 3차: 2008~2012)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계속 5개년 계획이 추진될 것이라 한다. 한편 1999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제시하는 한편, 2000년 이후에는 과학기술과 실리추구를 강조하는 ‘개방형 자력갱생’, 여기에 대외개방이 포함된 ‘21세기형 자력갱생’이 내걸어지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IT산업 등 선진 첨단기술의 개발·도입 및 외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생산현장의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2009년도에는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과학자·기술자들의 문제해결 노력, 대중적 기술혁신운동, 인재양성 등을 과업으로 제시했다.

나.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1) 제1단계(1945~1960) : 과학기술기반 정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그들이 추진해온 경제계획 기간별 목표와 범위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해방 직후부터 6·25전쟁기간 중의 과학기술정책은 일제 하에서 일

본인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가동되던 각종 산업시설을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내부기술자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전문분야별로 재배치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¹⁾

북한은 1946년 8월 17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및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지령을 통해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 및 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북한은 당시 전문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기술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기술이 소용되는 기관에서 종사할 의무를 부여하고 같은 해 8월까지 조사등록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을 국영직장에 배치하였다. 같은 해 10월 2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89호로 ‘공업기술자 사정과 검정규정’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공업기술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을 크게 기술등급과 기수등급 2종으로 분류하고, 기술등급은 다시 고급기사, 기사로 기수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 관리하였다.²⁾

1947년에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정비에 착수하여 같은 해 2월 7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181호를 발표, 중앙연구소를 설치하였다.³⁾ 당시 중앙연구소는 지질·광업·금속·화학·섬유·기계·전기·서무 등 8개 부로 조직되었다.

같은 해 6월 20일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44호인 ‘기술교육진흥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 결정서는 “파행적인 일제 식민지적 경제조직을 숙청하고 자주적인 인민경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기술의 획득과 기술자의 확보는 가장 긴급하고 중대한 기본 임무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기술교육의 강화, 전문기술교육자의 이직 금지, 기술전문교육에 필요한 실험실·실험기구·기계자료·실습장 등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확보에 착수토록 하였다.⁴⁾

다음 해인 1948년 11월 12일에는 1946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에 의해 설치하였던 ‘국가기술자격검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 ‘국가기술자격심사위원회’를 내각결정 제71호에 의해 신설하고 기술자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⁵⁾

1952년 2월 28일에는 내각결정 제38호에 의해 교육성 산하에 있던

● 1
「북한법령집 4」(서울: 대륙연구소, 1990), p.232.

● 2
앞의 책, pp.234~236.

● 3
앞의 책, p.242.

● 4
앞의 책, pp.243~244.

● 5
앞의 책, p.237.

각종 기술전문학교들을 관련 성(省)과 내각 직속의 국(局)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산학(産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52년 4월 27일에는 평양 모란봉 지하극장에서 제1회 전국과학자 대회를 소집하고 토의결과에 따라 5월 7일에는 내각결정 제86호로 과학아카데미를 설치하였다.⁶⁾ 과학아카데미는 전후 시설복구를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과학연구사업의 통일적이고 계획적인 조직·지도를 위해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때 창설된 과학아카데미는 같은 해 10월 9일 또 다시 내각 결정 제183호인 ‘과학원 조직에 관하여’를 채택함으로써 과학원 조직에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⁷⁾ 전후복구 3개년 계획 기간 중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지원과 함께 기술협조를 얻어냄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전후복구를 마무리하는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구 소련을 비롯한 동독·체코·불가리아·중국·알바니아 등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과학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와 과학기술자의 상호파견을 통해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특히 북한은 1956년 3월 26일 구 소련과 ‘연합 핵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핵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1959년 9월 7일에는 ‘조·소 원자력 평화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원자력 연구의 기반조성에도 주력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당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를 개최하고 1960년대 이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인민경제 전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기술인재 양성 사업을 개선·강화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같은 해 11월 30일에는 과학원 직제변경을 위한 규정을 발표하였다.

●●6

앞의 책 p.228 '과학아카데미'의 실제 창립일은 1952년 8월 15일이다.

●●7

앞의 책 p.229 과학원의 실제 창립일은 1952년 12월 1일이다

(2) 제2단계(1961~1977) : 3대 기술혁명 추진

이 기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 계획과 6개년 계획 추진기간에 해당

하며, 중공업 우선정책과 4대 군사노선을 강화하기 위해 3대 기술혁명⁸⁾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된 과학기술정책을 보면, 짧은 기간 내에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자체 부존자원에 입각한 자립적 공업체계 확립에 과학역량을 집중하며, 새로운 과학분야의 개척과 원자력을 비롯한 최신 과학 연구성과들을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수행, 기초 과학부문의 적극적인 발전 추구하고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전반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⁹⁾

과학기술 연구의 세부목표는 첫째, 무연탄에 의한 제철방법 연구 둘째, 무연탄 가스화에 대한 연구 셋째, 산소열법에 의한 카바이트 생산 방법 및 갈탄의 고온 건류와 같은 과제의 완전해결 넷째, 방사선 초음파, 고주파 등의 연구 및 이를 생산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다섯째, 수학·물리학·화학·생물학 등 기초과학 연구 강화 여섯째, 기간중 46만 명의 기수 및 중등 전문가와 18만명의 기사 및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었다.

당대회 개최 직전인 1961년 7월 28일에는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시킬 데 대하여’ (내각 결정 제127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결정에서는 첫째, 교수 교양사업에 필요한 교과서·교재 및 출판사업을 뒷받침하는 문제 둘째, 대학에서 과학연구사업과 실험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 셋째, 대학교원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들을 공장·기업소에 파견하여 실습을 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¹⁰⁾

북한은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 계획의 과학기술 발전목표에 따라 과학자·기술자의 대량양성을 위해 40개의 4년제 공장대학을 새로이 설치하였다.¹¹⁾

1961년에는 고급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박사원을 증설한데 이어 그 이듬해인 1962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분야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어 1963년 12월 17일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정령으로 과학기술분야 사기진작을 위해 과학상을 제정하였다. 1964년부터는 학사(우리의 석사) 양성기관인 연구원의 연한을 종래의

● 8

「현대조선말사전」(1988)은 3대 기술혁명을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며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9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2」(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52~56.

● 10

「북한법령집 4」(서울: 대륙연구소, 1990), pp. 248~252.

● 11

40개 공장대학중 24개는 1960년대 말에 신설하였다.

3년에서 2~4년으로 조정하였고 1967년부터는 전반적 9년제 기술의 무교육을 실시하였다.¹²⁾

●● 12

9년제 기술의무교육의 실시는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 회의(1966. 11.12)에서 결정되었다.

●● 13

「조선노동당대회 자료집 3」(서울: 국토통일원, 1988), p.147.

●● 14

「북한법령집 1」(서울: 대륙연구소, 1990), p.448.

1971년부터 시작된 6개년 계획 기간중에는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요구되는 기술자·전문가 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낙후된 각종 산업생산기술의 개발에 주력할 것을 강조하였다.¹³⁾

특히 1972년 12월에는 ‘자연과학부문일군대회’를 소집하고 김일성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개년 계획기간 중 과학연구사업은 금속·화학공업부문의 자재와 설비의 질을 제고시키며, 특히 석유화학에 기초한 유기합성공업과 알루미늄 등 경금속기지 창설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반도체·원자력·전자공업 발전을 위한 첨단산업분야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사회주의 경쟁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상훈제도를 강조하였다. 1970년 4월에는 최고인민회의가 ‘인민설계가·공훈설계가 칭호’를 제정한 바 있고, 1972년 2월에는 ‘공훈기계제작 칭호’를, 1973년 7월과 9월에는 중앙인민위원회가 각각 ‘새 기술혁신 봉화상’과 ‘인민과학자·공훈과학자 칭호’를 제정하였다.¹⁴⁾

기술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기간중 기술자와 전문가의 수를 6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 국가의 대북경제지원 감소와 기술협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6개년 계획기간 중 서방으로부터 설비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3) 제3단계(1978~1994) : 3대정책(주체화·현대화·과학화) 추진

이 기간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제2차 7개년 계획의 기본과업인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등 3대 정책을 추진한 시기이다. 따라서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워 인민경제의 과학화를 다그치는 것”과 “기술혁명을 심화 발전시켜 인민경제

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푸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세부목표를 보면 ①공업의 주체성 강화를 위해 연료 및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②북한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기계설비 제작을 위한 기계공학의 연구발전, ③벼·옥수수 등 곡물과 원예작물의 품종개량 연구, ④과학연구 여건강화 등이다.¹⁵⁾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1978년 2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각 전문 분야별로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생산현장에 파견하고 기술혁신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1987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2차 회의는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중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화되고 생산의 종합적 기계화·자동화가 실현되는 등 생산기술 공정과 생산방법 개선에서의 과학기술적 문제해결에 큰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하였다.

제3차 7개년 계획의 과학기술정책은 사실상 제2차 7개년 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추진되었다. 다만 1980년대 중반까지 과학연구사업의 주체성이 강조된 결과 기술낙후가 심화되어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는 과학기술 투자를 증대시키고 첨단산업에 관심을 돌린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제3차 7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과학기술의 고도발전을 기본공업의 하나로 내세워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면적인 기술개조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기간 중 국민소득의 3~4%를 과학연구사업 강화에 투자하기로 계획하고 기존 산업시설의 기술개조와 함께 극소형 전자계산기·광통신·생물공학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강화하기로 계획하였다. 특히 북한은 과학기술의 낙후가 경제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김정일 주도하에 2차에 걸친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1차:1988.7~1991.6, 2차:1991.7~1994.6)을 추진하였다.¹⁶⁾ 이들 계획은 당초 기계공업, 전자·자동화공업, 화학공업, 농업 등 경제 주요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추진되었으나 그 성과는 부진하였다.

● 15

「북한 최고인민회의 자료집 4」(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42~47.

● 16

제1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1988. 3. 7~11)에서 결정되었으며,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의 내용은 「민주조선」(1991. 8)을 통해 보도되었다.

(4) 제4단계(1995~현재) : 과학기술중시사상 표방

북한은 단기간내 과학기술 발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1991년 10월 개최된 '전국과학자대회' 를 통해 중장기 계획인 '2000년 과학기술발전 전망목표' 를 제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①2000년까지 기초과학 발전토대 구축, ②컴퓨터·원자력 이용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 ③금속·전자·기계공업, 경공업, 농업 등 산업 전부분의 과학기술 발전, ④2000년까지 연간 국민소득의 5%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박사·준박사 등 200만명의 기술자·전문가 양성, ⑤UNDP 등 유엔산하 과학기술기구와의 교류증대 및 지원기금 확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 ⑥연구단지 조성, 공장·기업소 등 현장 연구소의 현대화 및 연구환경 개선 등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¹⁷⁾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발전을 강조하여 왔다. 1999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는 과학기술은 강성대국 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하면서 "온나라에 과학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도처에서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하고 '전국과학자·기술자대회' (1999.3, 2003.10), '전국과학자·기술자·돌격대운동 선구자대회' (2005.10.26) 등을 개최하는 한편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¹⁸⁾을 3차(1차 1998~2002, 2차 2003~2007, 3차 2008~2012)에 걸쳐 수립·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도 제11기 4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과학기술부문 성과로 ①국가 중점대상을 비롯한 1,050여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의 과제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인민경제의 기술개진·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 ②금융제제를 비롯한 경제봉쇄책동에도 불구하고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기술장비 수준을 향상시켜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 과시, ③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의 현대적 건설 및 교육조건·내용 개선, ④치료예방기관, 의약품 생산기지 건설 등을 보고하고 있다.

●● 17

『노동신문』(1998.6.5)은 "주체혁명위업을 과학기술로 담보해야 하는 것이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이라고 언급하였다.

●● 18

과학원 창립 50돌 기념 보고회(2002.11.29)에서 리광호 과학원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기술개진과 현대화에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제1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1998~2002) 주요과제

분야	중점과제
전 력	전력 손실감소기술 연구, 발전소 발전능력 향상과 운영 정상화
석 탄	채탄장 확대, 현대적 탄광설비·채탄기술 개발, 안주지구 석탄지하가스화
금속(광업)	철광생산 증대, 현대적 선철생산 등 제철기술 발전
철 도	현대적 전기기관차 개발, 수송조직과 지휘의 컴퓨터화
경공업	생필품 생산성 제고와 품질개선
보 건	의학과학기술, 의약개발 향상
국토환경	산림조성·관리 과학화
농 업	종자·감자농사·두벌농사연구 강화, 농업구조개선, 우량품종 개발
자원개발	지하자원 대대적 개발, 인공위성을 통한 자료해석기술 개발
화 학	시멘트 가공기술 완성, 기초화학 제품 증산
첨단기술	IT(컴퓨터·프로그램·자동화기구개발, 인민경제 컴퓨터화), BT(세포·유전자공학·집집승대량 증식기술 완성), 기계공학(자동설계·기계기술 발전, 자연에너지 이용 기술 개발), 신기술 적극 개발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 주요과제

분야	주요과제
전 력	수풍발전소 6~7만kw 추가 생산, 전력손실(21%→15%)감소기술 연구로 전력 증산
석 탄	탐사·굴진에 선진기술 도입, 운반기계·선탄기술 개발로 석탄 증산
금 속	갈탄제철법의 김책제철소 도입(6만톤 시험로 건설)
철 도	현대적 전기기관차를 개발하여 1.3배의 속도 제고로 수송난 해결
경공업	생필품생산의 질과 양을 현대화·정보화
농 업	농업과학화, 연간 알곡 800만톤, 계란 310만개, 과일 40만톤 생산 등
첨단기술	IT제품·프로그램·통신기술 자체개발, 나노·생명공학, 우주기술 발전
국방공업	최신군사장비생산을 위한 국방중공업의 현대화·정보화, 핵기술 연구강화

2000년대 들어서는 7·1 경제개선조치의 성과적 수행을 위해 「경제와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강조하면서 전반적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과학화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¹⁹⁾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21세기를 경제와 과학기술이 일체화 되어 발전하는 시대’로 규정하였고, 2007년 제11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금년도 주요과업으로 「인민생활 향상과 과학기술 발전」을 제시하고, 중점과업으로 ①농업·경공업 토대에 의거한 주민생활 향상,²⁰⁾ ②기간산업 생산 잠재력 활용 및 산업현대화 적극추진, ③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 해결, ④과학기술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및 선진기술 유치를 위한 대회 협력사업 추진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07년도 예산에서는 과학기술(60.3%), 경공업 부문(16.8%)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기업소 순소득의 2%를 자체 과학기술 발전사업비로 하는 새로운 조치도 시행하는 등 경제건설을 위해 과학기술기반 확충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3~2007)의 종결에 대해 북한은 “국가에 많은 이득을 주었으며, 지난해에만 하여도 주요 과학기술 성과들이 이룩되어 생산의 활성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이바지하였다”²¹⁾고 평가했다. 한편 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의 목표는 “인민경제 선행부문을 추켜세우고 식량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며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고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을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감으로써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율을 끊임없이 올려세울 것”²²⁾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3차 5개년 계획은 전력부문에서는 기존 발전소 및 송배전망의 정비, 금속공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 현대화,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비료증산을 위한 석탄가스화기술 및 원유 가공연구사업 등이 추진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²³⁾ 한편 5개년 계획은 2022년까지 계속되는데, 2022년에는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의 기여율이 50%이상, 국가총생산액에서 첨단사업의 비중이 20%이상에 달하게 되며, 발명특허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다.²⁴⁾

● 19

홍성남 총리는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5차회의(2002.3.27)에서 “현대과학과 기술에 토대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경제건설의 핵심과업은 전반적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과학화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 20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중사 천하지대본, 경공업 현대화, 인민소비품 향상, 살림집 건설” 등을 구체방안으로 언급하였다.

● 21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회의, 4.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중앙방송(2008.4.9)

● 22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6차회의, 4.9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중앙방송(2008.4.9)

● 23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원장, 월간 조국(2008.11)

● 24

리의구 국가과학원 부원장, 월간 조국(2008.11)

2.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체계

가. 과학기술 행정체계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마련된 기본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당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이 제시되면 내각의 국가계획위원회 과학기술계획처에서 당 정책과 합치되도록 성안되어 국가과학원²⁵⁾ 및 각급 연구기관과 각 성에 시달된다.

국가과학원 및 각급 연구기관은 하달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각 부문별로 수립하여 연구소·대학·고등전문학교 등에 하달하고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각 직할 연구소에서 자체연구를 추진하게 하는 동시에 타부서에 속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한편 각 성은 해당분야의 구체적인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 공장 및 농장에 시달하여 각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수립 체계나 계획·통제방식이 지나치게 당에 의존적이고 자율성이 배제되고 있다. 정책내용도 국가경제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도있는 기초과학 연구보다 실용적 차원의 응용적인 고안이나 기술개발에 치중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내각에서 경제관련 부서는 위원회·성 등의 각 행정부서로 독립 세분화되어있다. 과학기술부문은 각 행정부서내의 위원회·성별로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각종 생산 및 운용분야의 기술지도는 물론 품질 감독, 신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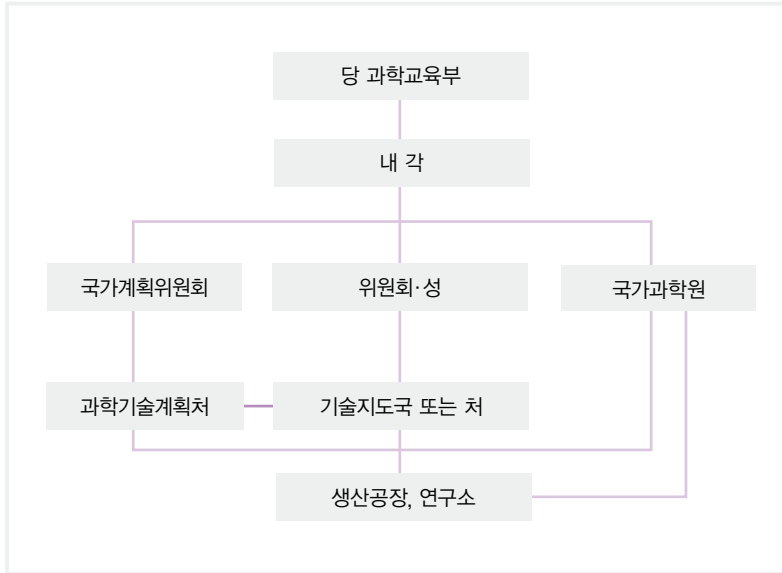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기술계획처는 내각에서의 과학기술 계획부서로서 당에서 결정한 정책이나 방침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각 행정부서의 기술지도국이나 처로 전달한다. 각 위원회·성의 기술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

● 25

북한은 종래의 과학원을 1994년 2월 국가과학원으로 개칭하였다가,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과학원으로 환원하였다가, 2005.11.2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다시 국가과학원으로 개명하였다.

구계획, 기술발전 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북한의 중앙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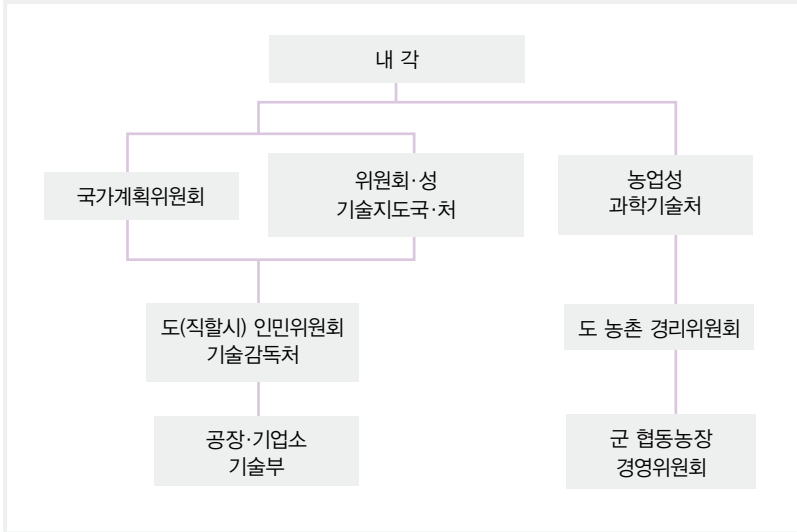
중앙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국가과학원은 국가의 기술정책에 의거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과학연구 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7 과학자·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 기술지도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지방기술행정은 주로 시·도에서부터 공장·기업소 등 생산현장까지 이르는 공업·농업·수산업 등의 기술보급체계를 말한다. 중앙 기술행정기관에서 수립한 정책과 세부지침·시행요령 등은 각 성마다 시·도의 기술감독처에 하달되며, 이러한 방침은 직접적으로 지방 공장·기업소의 기술부에 전달된다. 한편 농업성의 과학기술처는 농업과학원의 연구내용과 행정적인 계획을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거쳐 각 협동농장과 농업과학지식 선전실로 지시하여 추진한다.

지방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나. 과학기술 교육 및 연구체계

북한의 과학기술 교육체계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은 이후 정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규교육과정으로서의 고등교육기관은 3~4년제 단과대학, 4~6년제 대학 등으로 되어 있으며²⁶⁾ 의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입학시켜 인민경제 각 부문의 현장 기술간부·전문가·기술자 등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및 과학 부문의 중간 핵심간부 후보를 육성하는 기관으로는 연구원·박사원(2~4년) 등이 있다.

비정규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공장대학과 각 대학에서 생산과 사무에 종사하면서 교육을 받는 체계이다. 현재 북한에는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 공장대학이 있다.

●● 26

이들은 대부분 기계대학, 의학대학, 광산금속대학 등 단과대학들이다.

●● 27

『평양방송』(1995.5.29): 방원주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에서는 북한의 과학자·기술자 수를 13만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 28

『조선중앙통신』(1999. 29)

1994년 북한은 기술자·전문가 수가 총 170만명이며 노력인구 6명당 1명 이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²⁷⁾ 1999년에는 과학자·기술자들을 비롯한 지식인 수가 총 180여만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⁸⁾

북한의 고급기술자 및 과학자의 양성기관은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설대학, 평양체신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 등 16개의 공업대학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공업지역에 분산되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극히 전문화된 과목만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공업대학은 소재지역의 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완전한 산·학협동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박사원과 연구원은 각각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우리의 석사과정에 해당)을 가지며 대학뿐만 아니라 각종 과학원 산하 연구소에도 설치되어 있다.

연구원은 대학졸업 후 학사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2년, 통과하지 못하면 4년이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박사원은 대학교원, 과학기술분야의 지도자, 연구소의 고급연구원 등 고급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1961년 3월 내각 결정 제124호에 의거 설치되었는데 연구원과는 달리 통신연구생은 없고 전임연구생만 모집하고 있다.

박사원 및 연구원의 입학자격은 당성이 강하고 혁명과업 수행에 모범적인 사람중에서 선발된다. 박사원에는 학사학위 및 학직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자이고, 연구원에는 3년제 이상의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있다.

박사과정 및 학사과정을 밟으려면 박사원 및 연구원에 적을 두어야 하나 교육방법은 강의를 통한 방법은 채택되어 있지 않고 일정한 연구를 수행하고 나면 그 논문이나 학적의 결과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연구과정은 박사과정과 학사과정의 경우가 약간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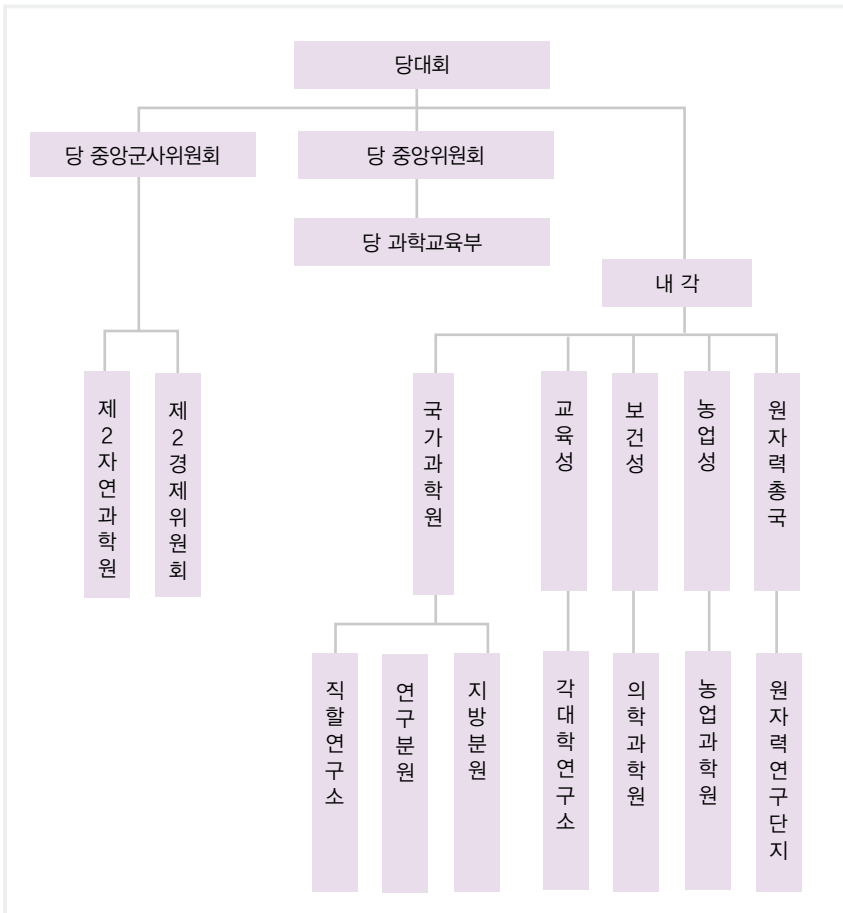
북한에는 박사·학사 등의 학위 외에도 원사·명예원사·후보원사 등 명예칭호가 있는데, 이는 학위보다 한 단계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 명예칭호 가운데 원사는 과학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원로학자를 과학

부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학위학직 수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여 수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북한의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은 국가과학원을 비롯 농업과학원, 의학과학원, 제2자연과학원, 각 대학 연구소 등과 각 성 산하 연구소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소는 연구실과 실험실 및 중간 실험공장 등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과학기술 연구기관 수는 약 300여개로 추산되며 확인된 것은 2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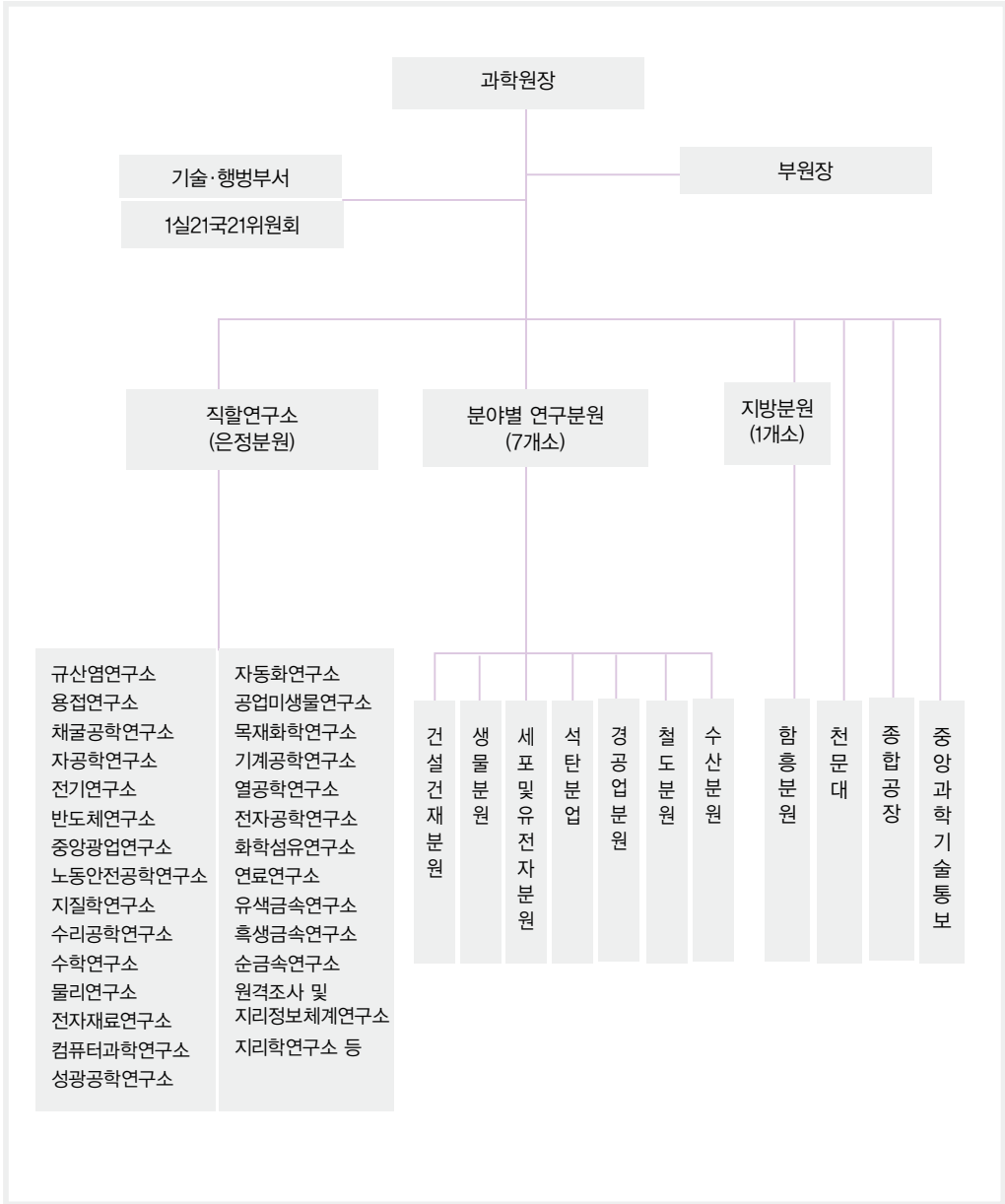


국가과학원은 북한 최고의 과학연구기관으로서 평양시 은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952년 10월 9일 「과학원 조직에 관한 내각결정 183호」로 창립되었다. 북한은 1982년 4월 과학원을 정부위원의 행정부서로 격상시킨 바 있으며, 1994년 2월에는 국가과학원으로 개칭, 각 부·위원회 산하 연구기관들을 통합하면서 기구를 확대하였으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명칭을 다시 과학원으로 환원하면서 일부 조직을 분리하였다. 그 후 2005년 1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과학원을 국가과학원으로 하고, 내각과 해당기관에서 후속 실무대책을 세울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령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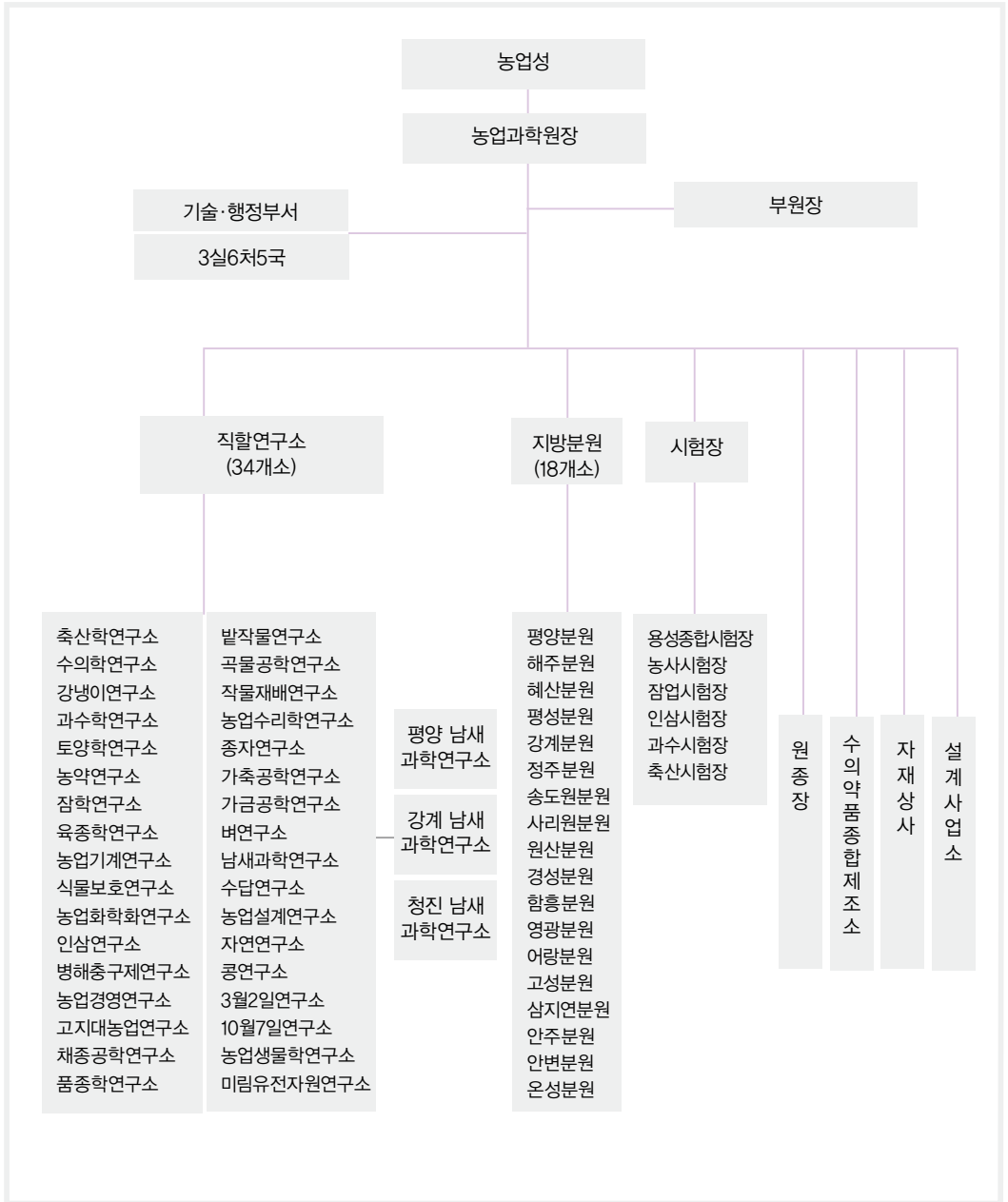
과학원의 기구로는 1실, 21국, 21위원회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그 아래에 직할연구소인 은정분원, 7개의 분야별 연구분원, 지방의 함흥분원, 자체 실험기구를 생산하는 종합공장과 천문대, 중앙과학기술통보사를 두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1952년 3월 농업성 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연구과학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과학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 8월 다시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농업과학원은 1994년 2월 국가과학원 확대 개편시 국가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농업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농업과학원의 기구로는 3실, 6처, 5국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에 직할연구소, 18개의 지방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원종장과 수의약품 종합제조소, 자재상사, 설계사업소가 있다.

과학원 체계



농업과학원 체계



의학과학원은 1958년 6월 과학원 산하의 의료과학연구소 및 약초원과 보건성 산하의 의학분야 연구소를 통합하여 의학과학연구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63년 11월 의학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본원은 1994년 2월에 다시 의학과학연구원으로 그 명칭이 환원되면서 국가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보건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의학과학원은 현재 산하에 18개의 직할연구소와 2개의 분원과 의약품소재관리소, 의학도서관, 의료기기 생산공장 등을 두고 있다.

의학과학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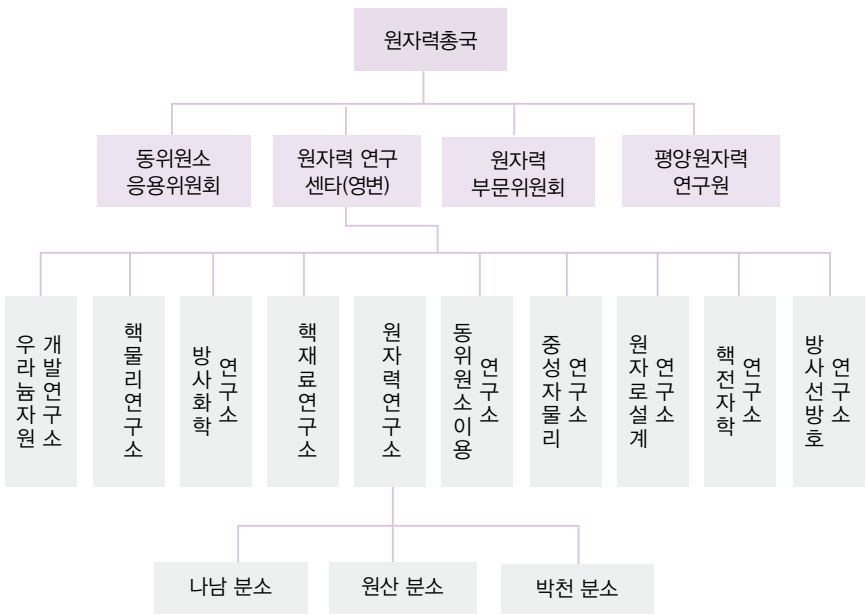


제2자연과학원은 1960년대 초에 설립된 국방과학원을 1970년대 중반 이후 개칭한 연구기관으로 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본원은 현재 당 중앙군사위원회(군수공업부)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본원에는 유도무기, 전기 및 전자, 금속 및 화학소재, 기술 경제 등 40여개의 부문별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1952년 12월 과학원 창설과 함께 부속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초기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업·농업·의학분야 이용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였다.

북한은 1974년 1월 23일 ‘원자력법’ 이 제정된 바 있으며, 원자력관련 연구소는 크게 2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원, 1개의 연구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력연구소는 행정체계상으로는 내각의 원자력총국에 소속되어있다.

원자력관련 연구소 체계



3. 최근 과학기술부문 동향

가. 각종 과학기술 행사 강화

최근 북한 과학기술부문의 주요한 특징중 하나는 각종 과학기술행사의 개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축전·경연·발표회·전시회·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의 대내외 과학기술 행사를 확대해 오고 있다.

북한은 과학기술행사의 개최를 통해 대학·연구소 및 각급 생산현장 일꾼들을 대상으로 부문별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시키고 기술혁신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효과도 유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학기술행사에는 중앙과학기술축전, 전국발명 및 새기술 전람회, 나노과학기술발표회 및 전시회,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 전국 청년과학기술 전시회 등이 있다.

북한은 이처럼 해마다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각종 선동과 함께 전람회, 축전 등 다양한 과학기술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 첨단 기술 도입, 신기술 개발, 과학기술 전문인재 양성 등에 있어서 이렇다 할 실적은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력갱생에 기초한 경제구조적 한계, 재정지원의 절대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과학기술 대외협력 활동 강화

생산설비 노후화는 생산성 저하의 주요 요인인데 7.1조치 이후 기업들의 자율권 확대로 공장·기업소들의 선진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²⁹⁾함에 따라 북한은 과학기술에 관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전통적 우방국인 러시아·중국 등과의 협력을 지속·강화하면서 독일·스위스 등 서방국가들과의 교류협력활동도 확대하고

● 29

2004년도에는 28직동청년탄광, 대안천선유리공장, 대동단추공장, 해산청년 광산 등에서 외국기술을 도입했다.

있으며, UNDP·ITU(국제전기통신연합)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³⁰⁾도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제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기술개진·신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과의 합영·합작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매년 평양과학기술도서전람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발전과 관련하여, 북한은 2006년에는 북·러 정보기술 공동전시회를 열기도 하였으며, 베트남과는 2001년부터 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쿠바와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회의위원회는 2006년 25차 회의가 열렸다.

이밖에도 북한은 자본주의 경제연수 수단으로 활용해온 해외시찰 및 파견을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수단으로 중점 활용하고 있다. 연수 분야도 IT·광업·농업 등 다양해 졌으며, 연수 대상국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 IT산업 육성 동향

2000년 들어 김정일 위원장이 2차(2000.5 베이징 중관촌(中關村), 2001.1 상하이 푸둥(浦東)지구)에 걸쳐 중국의 IT연구단지를 방문 이후 북한은 “21세기=정보산업시대”, “첨단과학기술=컴퓨터산업”으로 등식화하면서 인민경제 각 부문의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하는 가운데, 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중심고리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각종 과학기술행사, 언론선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IT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산업 각 부문의 정보화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기술·자본 여건 하에서는 본격적인 IT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인재양성 및 IT마인드 조성에 치중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계기로 전국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인트라넷 구축을 완료하여 2001년말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³¹⁾ 그리고 2002년 11월부터는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국적인 연결망으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 30

국제기구의 협력사업은 2002년 4건, 2003년 5건, 2004년 6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31

이하의 내용은 고경민 외 “북한의 IT 딜레마와 이중전략,” 정보화정책 제4권, 2007 겨울, pp. 146~147.

시작했다. ‘광명’으로 알려져있는 북한의 인트라넷은 자체의 웹브라우저, 이메일 프로그램, 뉴스그룹, 검색엔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내각의 각 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김일성 종합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평양정부센터 등 연구기관, 과학원 발명국, 인민대학습당, 주요 공장, 기업소 등 1,300여 기관 및 기업소등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IT관련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보급률, 이용가능 인구 등에서 취약한 개발초기 수준에 머무름에 따라 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IT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컴퓨터 센터, 평양정보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S/W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일부제품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발수준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여 왔을 뿐이다.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특히 IT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컴퓨터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자력갱생’을 추구하고 있다. 3차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2008-2012)은 중점 사업의 하나로 정보산업발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07

사 회

- 1. 사회정책 및 구조
 - 가. 사회정책
 - 나. 사회계층 구조
-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 가. 조직생활 통제
 - 나. 경제·사회적 통제
 - 다. 사회 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 라. 사회적 일탈현상과 부조리
 - 마. 7.1 조치 이후 사회상 변화
 - 바. 정치범수용소
- 3. 법제도
 - 가. 법제 특징 및 최근 입법동향
 - 나. 분야별 현황
- 4. 주민생활
 - 가. 의식주생활
 - 나. 직장생활
 - 다. 가정생활
 - 라. 여가생활
- 5. 노동문제
 - 가. 노동정책
 -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 6. 사회복지
 - 가. 사회보장제도
 - 나. 사회복지시설
 - 다. 사회보험
- 7. 보건·의료
 - 가. 보건·의료정책
 - 나. 의료시설
 - 다. 보건·의료요원 양성
 - 라. 고려의학
- 8. 도덕·풍속
 - 가. 도덕과 예의범절
 - 나. 관혼상제
 - 다. 명절
 - 라. 민속놀이
- 9. 환경
 - 가. 환경정책
 - 나. 오염실태





VII. 사회

1. 사회정책 및 구조

가. 사회정책

북한의 사회정책 기조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당이 추구하는 당면목적을 충실히 성취시키는데 두고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¹⁾고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정책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기본은 계급정책으로, 북한사회의 계급적 성격은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촉진하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헌법 제8조에는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보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계급노선을 견지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하고

●● 1

사회주의헌법 제2조.

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당면목표로 삼고 최종적으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으며, 사회정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온 사회를 정치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없애는 계급투쟁을 계속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북한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함께 소위 ‘반당·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데 주력해왔다. 또한 전 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체통의 조직화를 통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모든 주민들의 노력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사회적 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나. 사회계층 구조

북한은 ‘온 사회를 정치적으로 단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주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해 각 개인의 출신배경과 사회적 활동을 기준으로 한 주민성분 분류작업을 수 차례 실시하여 왔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에게 사회적 특혜와 통제를 달리하는 계급정책을 전개해 왔다.

북한은 1958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으로 주민성분 분류작업을 시작한 이래 주민재등록사업(66.4-67.3) 및 주민성분구분사업(67.6-70.9)을 실시,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관리해왔다. 핵심계층은 약 28%, 동요계층은 45%, 적대계층은 27%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중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범죄전력을 갖게되면서 이를 고

려할 필요성이 생기게 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핵심, 기본, 복잡계층)로 재분류하고 있다. 핵심계층에는 혁명가·혁명가 가족, 영예군인, 접견자, 영웅·공로자, 제대군인 등이 포함되며, 복잡계층은 계급적 토대, 사회정치 생활 경위, 가정,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계층으로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종파분자와 함께 입대 기피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월남자와 지주의 가족, 부농가족 등이 포함된다.

북한사회의 계층구조는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계급정책에 의한 의도적 산물이다. 즉 북한사회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표방하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국가보다도 계층간의 차이가 큰 불평등 구조로 되어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사회계층간에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은 반당·반혁명적 색채를 가진 인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김정일체제에 반감을 가질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데 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계층구조가 설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성분에 따라 의식주 생활은 물론 진학, 직장선택 등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의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과거에 정치적 기준에 의해 분류되었던 사회계층 구조와는 별개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사회계층이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과 시장을 매개로 부를 축적한 신흥 부유층뿐 아니라 장사 실패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북한사회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주민성분 조사사업 및 주민통제 조치

구분	시기	내용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처단 및 산간벽지 강제 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 적위대의 사상결속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 3대·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 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 검열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복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복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 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신상카드 작성
공민등록법 채택	1997.11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 발급
공민증 갱신사업	1998.2~1998.10	수첩 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공민증교체 발급	2004.4	비닐코팅식 공민증에서 수첩식 공민증으로 교체

2. 사회통제와 사회문제

가. 조직생활 통제

북한에서 노동당은 최고 권력기관으로 행정·사법·입법부의 상위에 위치한다. 기관의 간부들은 노동당 당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모든 기관에는 각기 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당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일반주민들을 직접통제하고 있는 노동당의 하부조직은 도·시(구역)·군당위원회와 최일선 조직인 당 세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당 조직은 분기별로 학습자료를 만들어 김일성·김정일 ‘노작’ 당정책 해설, 자본주의 병폐 등 주민사상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상·하반기별로 3~4일의 당원 집중학습기간을 정해 놓고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당적 통제 이외의 주민통제 방법으로 조직생활을 통한 통제를 꼽을 수 있다. 모든 주민들은 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노동당 외곽단체인 각종 사회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이 단체들은 노동당을 정점으로 그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으로 당의 통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각종 사찰기관들이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통제하여, 반당·반혁명 세력과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있다.

사찰기관으로는 1945년에 조직된 인민보안성과 1973년 5월 정치사찰 전담기구로 조직된 국가안전보위부가 있는데, 인민보안성은 치안유지 및 반당·반국가 행위자의 색출·검거와 주민 이동사항을 통제하며, 국가안전보위부는 반당·반국가 음모자 색출, 주민 사상동향 감시, 첩보 활동을 위한 공작원 양성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주민통제를 위한 조직으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1977.12.15)시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설치 사실이 알려진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는데, 이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당의 사

상적 지침 위반내용을 지적하고 시정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직장별·세대별로 주 1회 정도의 생활총화를 통해 개개인의 생활에 대한 사상적 검토를 받는다. 주민들은 각자가 속한 인민반에 의해서도 일상생활을 통제·감시받고 있다. 인민반은 통상 20~40세대 단위로 조직되고 인민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인민반 당 분조장 겸임) 등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감시·감독역할을 한다.

나. 경제·사회적 통제

주민에 대한 경제적 통제는 국가에서 일반주민들에 대한 생존의 기본수단을 장악하여 주민들의 통제에 이용하는 것이고, 사회적 통제는 출신성분과 계층에 따라 직장배치 등 사회적 차별대우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경제적 통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북한은 의식주 생활의 기본수단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경제난이 심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배급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필요한 생필품을 개인적으로 장마당 등을 통해 조달하여야 하며 북한주민들 사이에 “이제는 더이상 국가에 의존할 것 없이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적 통제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한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폐지 조치도 종래의 식량배급을 축으로 한 주민통제 방법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사회적 통제로는 당에 의한 직장배치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근로자들이 창조적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체질, 희망, 기술기능 수준에 맞게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²⁾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직장배정시 개인의 소질·능력·희망보다는 출신성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2
사회주의노동법 제30조

북한에서는 한번 배치된 직장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오직 계획적인 직장의 조정, 불순분자의 벽지 이주, 도시인의 농촌 이주와 같은 중앙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시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사회통제가 다소 이완되는 틈을 이용하여 비공식적인 직장이동이 묵인되기도 한다. 특히 ‘안면관계’ 나 뇌물을 이용하여 더 좋은 직장에 배치받거나 배치 받은 후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효율적 사회 통제를 위해 일반주민들의 사적 목적의 여행을 통제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여행증 없이 타행정구역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행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통제기구 요원들의 부정행위 개입사례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9월 사회주의헌법 개정시 거주·여행의 자유를 신설(제75조)하였지만 지금도 여행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 사회 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북한에서는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절도, 강도 등 생계형 범죄와 부정, 부패 등의 사회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의 심화에 따른 생계형 범죄로는 단순절도는 물론이고 생계유지를 위해 일부 여성들이 매춘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물자부족과 관련된 횡령, 착복, 배임 등과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행위의 일반화는 사회적 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노정시키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들의 경제난에 대한 불만표출 정도도 최근에는 더욱 대담화, 노골화되고 있다.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조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은 주로 20~30명 규모로 무리를 지어 암시장에서의 생필품 밀매, 자릿세 갈취 등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민보안원 등과의 부패고리를 형성하며 특히 변경지역에서는 밀수(담배·술·의류·의약품 등)에 개입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와 남북

●●3

노동신문(2008.5.2, 5.23).

교류협력 등 외부사조 유입의 증가에 따른 청소년들의 의식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진출 좌절, 경제난에 따른 가정붕괴 등의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북한이 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사회에는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는데 이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 폭력조직은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등을 자행하고 있는데 북한당국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외부사조의 유입 때문에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에는 서구의 사상문화 유입을 우려하면서 “제국주의의 민심교란 책동과 심리 모략전, 사상문화적 침투”에 대해 “모기장을 단단히 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통제사회에 대한 반감,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의해 초래되는 것으로, 개혁과 개방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한편 북한은 범죄자 수용시설로 인민보안성 산하에 각 시·군 마다 집결소(유치장)를 두고 있으며, 각 도에는 교화소를 설치하고 있다. 집결소에는 수사가 진행중인 범죄가담자나 6개월 미만의 경범죄자를, 교화소에는 1년 이상 15년 미만의 중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다.

각 도의 교화소는 범죄종류와 수감대상에 따라 성격별로 특화되어 있는데, 강·절도범은 함북 회령교화소, 여성 범죄자는 평남 개천교화소, 전염병 환자는 강원도 원산교화소 등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죄수들은 매일 8~9시간씩 목표량이 부과된 중노동에 종사하며, 일과후에는 2시간씩 김일성·김정일 사상학습 등 의식개조 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사회적 일탈현상과 부조리

북한 사회는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체제 경직성

과 왜곡된 중앙집권적 자원 배분 구조,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한 과도한 통제 시스템으로 사회적 부조리와 일탈의 태생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체제유용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부조리 및 사회 일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이 김일성·김정일 교시와 선전매체의 보도 등을 통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이에 대한 척결 의지도 무수히 강조되어 왔다.

특히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에는 경제난이 사회적 부조리를 부채질하여 당 및 경제지도 간부들의 월권, 무사안일주의 등 사업태도에 대한 비판과 자본주의 사조 유입에 대한 경고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의 각종 보도매체에서는 사상학습에 대한 기피, 당 조직 생활의 태만·외면, 소극성, 열성 부족, 노동기피,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 등 사회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 노동력과 원자재 낭비와 국가재산 낭비 및 유용, 뇌물수수 등 반사회적 범죄, 보수주의, 봉건 유교사상 등 낡은 사상 잔재, 청년인텔리의 반사회적 행동, 자본주의 사조유입 등 사상적 이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공식 모임 및 보도매체를 통해 지적하고 있는 부조리와 일탈 현상들은 지나친 통제와 당권 만능화가 빚어낸 결과로, 이는 북한주민의 통제에 대해 형식적 수용과 내면적 저항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 7.1 조치 이후 사회상 변화

7.1 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과거 국가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자력으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노동의욕이 증대되고 개인적 상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전반적인 경제생활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행과정에서의 과도한 물가상승률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빈부격차 심화, 부조리 심리 팽배, 개인주의 확산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또한 변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하층 주민들은 7.1 조치 이전보다 생활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임금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개별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들의 장사활동 등 생계유지 기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권이 신장되어 과거 전통적인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배급제도 붕괴, 빈부격차 심화, 배금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중심적 가치관과 집단주의가 퇴색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정치학습과 생활총화가 형식화되고 당국의 조직통제와 주민동원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등 7.1 조치 이후 주민의식과 가치관, 사회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아직까지 북한 당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으며 적극적 체제 비판으로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체제 변동을 초래할만한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정치범수용소

북한은 1956년 이후 정적(政敵)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처형을 면한 대상자들을 산간오지에 집단수용하여 특별관리해 왔으며, 1966년 4월부터 새로운 성분분류에 따라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반당·반체제 분자들은 특별독재 대상구역이라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투쟁조직인 3대 혁명소조가 본격적으로 활동,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기까지 후계체제에 대한 비판자와 정적들을 적발,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이에 따라 현재 15여만 명의 정치범이 평안남도 개천,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 회령, 청진 등 6개 지역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5년 4월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 방북시 전체수감자 800~1,000명 중 정치범은 24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람은 주로 반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계

반대자, 일부 납북인사들과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당정책 위반자 등 소위 북한당국이 말하는 혁명화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의 관리하에 수용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 일단 들어가면 가족·친지의 면회와 서신연락이 금지되는 등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수용자들의 일과는 구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벽 5시에 기상하여 6시까지 아침식사 등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6시부터는 작업장에 들어가 작업량을 부여받고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오전 작업은 오후 1시까지 진행되고, 오후 작업은 오후 9시에 끝나도록 되어 있어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이 부과되고 있다. 일과 후에는 1시간 이상의 자아비판 등 사상개조 학습을 받아야 한다.

이들이 하는 작업은 주로 석탄과 광물을 캐는 갱도작업과 벌목·개간 등이다.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색출된 정치사상범의 이송 및 경비업무는 인민보안성 산하의 인민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치범으로 분류되었던 탈북자들도 그 동기가 식량구입으로 판명될 경우, 탈북기간에 따라 형량이 경감되어 일반 범죄자와 같이 교화소, 집결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이규창(2007), "북한에
서의 국제법의 국내법
적 지위 및 효력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
42권 2호.

3. 법제도

가. 법제 특징 및 최근 입법동향

북한은 법에 대한 정치 우위의 사회로, 법규보다는 교시와 방침 등이 주요 통치 수단으로 활용된다. 최고의 규범은 당정책이며 법은 당정책의 표현 형식이자 실현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규범적 문건(성문법)만을 법원으로 인정하고 불문법인 관습법과 판례법은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규범적 문건에는 헌법과 법령, 정령, 결정, 명령, 지시 등 6가지가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내각 위원회와 내각의 성은 지시를,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각각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 성문법의 체계 및 상하관계는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기타 규범적 문건의 순으로 효력을 가진다.⁴⁾

현재 북한에서 제정되어 시행중인 법률은 147건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특성으로 인해 사법관계는 상당부분 제한되고 공법 위주의 법체계를 갖는다.

형식면에서 법조문이 비교적 간소하고 조문내용도 실체적 규율보다는 단순 선언적 규정이 다수를 차지하며 조문상 개념도 불명확한 편이다. 또한 법체계 미비로 법적 규율을 받지 않는 영역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은 극히 낮은 편이다.

2000년에 법률 103개를 수록한 법전을 대외비로 발간하였고, 대중용 법전이 2004년 6월 최초로 발간(112개 법 수록)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군사부문 법률과 비공개 법률 13건은 제외되었다.

최근의 입법동향을 보면 과거에 비해 내용면에서 이념 색채가 완화되고 형식면에서도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나, 법의 규범성 측면에서는 아직 현실을 따르지 못하고 있어 일부 영역에서는 사회규범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형사법에서는 2004년 형법개정을 통해 ‘유추해석 조항’ 삭제, ‘범죄구성요건’ 엄격화 등 죄형법정주의를 일부 수용하고, 2005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체포와 구속절차, 고문 및 비인도적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는 등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정치범수용소 및 공개처형 존재, 사법절차의 신뢰성 문제, 정치적 자유 제한 등 아직도 많은 인권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나. 분야별 현황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회주의헌법, 국적법, 국기법, 국장법, 지방주권기관법, 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 공무원 자격판정법 등 정권 및 행정조직의 구성에 대한 법들이 있으며 신소청원법은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시 사전 및 사후구제를 규정한 일종의 행정구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최근에 제정된 법으로는 공무원 임용 및 자질향상을 규정한 공무원자격판정법이 있다.

북한에서 형법⁵⁾은 정권 수호의 무기 및 당 정책 구현수단 기능을 하며 1950년 제정 후 총 7차례 개정되었다. 2004년도의 개정시에는 죄형법정주의를 강화하고 유추해석 조항을 삭제하며 단순 탈북행위 처벌을 완화하고 형벌 종류를 8종으로 세분화하는 등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경제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변화된 경제 및 사회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을 위해 행정처벌법을 마련하였다.

민법은 민법 초안과 민사규정으로만 운영되다가 1990년 민법이 제정되어 독립된 법전체계가 완성되었다. 북한 민법은 일반제도, 소유권, 채권채무, 민사책임 및 민사시효제도로 구성(총 271개조)되고 가족법과 상속법은 별도 법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현수단으로는 사회주의상업법, 화폐유통법, 통계법, 발권법, 인민경제계획법, 중앙은행법 등의 법률들이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합영법 제정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유

●5

북한의 형벌에는 기본형으로 사형과 노동교화형(무기, 유기), 노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으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

도해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합작법,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외화관리법 등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관련법을 제정 등을 통해 투자 관련법 정비를 가속화하였다. 최근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 개성공업지구법을 마련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 제정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우리측과의 경제협력 사명 및 원칙, 전민족의 이익과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1970년대에 제정된 사회주의 노동법이 일반법으로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최근 들어 2003년에 장애자의 교육 및 보호사업을 규정한 장애인보호법을, 2007년에 연로자의 건강보장 및 보호사업을 규정한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보장 관련법을 강화하였다.

보건 분야에서는 1980년에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 보건사업에 대한 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한 인민보건법을 제정하였고, 1997년에는 인민보건법에 대한 보완으로 의료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교류확대에 따른 검역 필요성 증대로 국경위생검역법, 국경동식물검역법, 전염병예방법, 수의방역법 등 방역관련 법률을 마련하였다. 2004년에는 도로교통법, 2005년에는 담배통제법을 제정하는 등 생활규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1986년에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마련한 후 1990년대에는 산림법과 바다오염방지법 및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을 제정하여 환경보호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환경보호 체계를 수립하였다. 2005년에는 대동강오염방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 사전·예방적 환경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현행 법률 현황

구분	법률 명칭 (괄호 안은 제정일자)
정치/행정 (14개)	사회주의헌법(' 72.12), 국적법(' 63.10), 지방주권기관법(' 75.12), 국기법(' 92.10), 각급인민회의대의 원선거법(' 92.10), 문헌법(' 95.1), 출입국법(' 96.1), 공민등록법(' 97.11), 신소청원법(' 98.6), 수도 평양시관리법(' 98.11), 조약법(' 98.12), 기밀법(' 99.2), 국장법(' 00.7), 공무원자격판정법(' 5.11)
형사/사법 (10개)	재판소구성법(' 76.1), 형법(' 90.12), 형사소송법(' 92.1), 변호사법(' 93.12), 중재법(' 95.3), 검찰감시법 (' 98.11), 형민사감정법(' 98.11), 판결판정집행법(' 98.11), 사회안전단속법(' 99.3), 행정처벌법(' 04.7)
경제/자원 (36개)	사회주의상업법(' 92.1), 공증법(' 95.2), 보험법(' 95.4), 재정법(' 95.8), 품질감독법(' 97.7), 화폐유통법(' 98.11), 재산관리법(' 98.12), 통계법(' 99.2), 귀금속관리법(' 99.2), 발권법(' 99.3), 인민경제계획법(' 99.4), 가격법(' 99.8), 손해보상법(' 01.8), 제품생산허가법(' 02.7), 회계법(' 03.3), 중앙은행법(' 04.9), 국가예산수입법(' 05.7), 상업은행법(' 06.1), 자금세척방지법(' 06.10) 토지법(' 77.4), 도시경영법(' 92.1), 건설법(' 93.12), 국토계획법(' 02.3), 하천법(' 2.11), 도시계획법(' 03.3), 간석지법(' 05.7) 수산업(' 95.1), 량정법(' 97.2), 농업법(' 98.12), 양어법(' 98.12), 과수법(' 02.12) 지하자원법(' 93.4), 전력법(' 95.12), 물자원법(' 97.6), 에네르기관리법(' 98.2), 주민연료법(' 8.12)
과학/기술 (13개)	과학기술법(' 88.12), 원자력법(' 92.2), 계량법(' 93.2), 규격법(' 97.7), 상표법(' 98.1), 발명법(' 98.5), 기술수출입법(' 98.6), 공업도안법(' 98.6),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 03.6), 소프트웨어산업법(' 04.6), 유전자전생물안전법(' 04.12), 기상법(' 05.11), 유기산업법(' 05.11)
무역/개방 (22개)	나선경제무역지구법(' 93.1), 금강산관광지구법(' 02.11), 신의주특별행정지구기본법(' 02.9), 개성공업지구법(' 02.11), 세관법(' 83.10), 합병법(' 84.9), 합작법(' 92.10), 외국인투자법(' 92.10), 외국기업법(' 92.10),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93.1), 외화관리법(' 93.1), 토지임대법(' 93.10), 외국투자은행법(' 93.11), 대외경제계약법(' 95.2), 대외민사관계법(' 95.9), 수출입상품검사법(' 96.1), 무역법(' 97.12), 대외경제중재법(' 99.7),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0.4), 가공무역법(' 00.12), 원산지명법(' 03.8), 북남경제협력법(' 05.7)
교통/통신 (12개)	해운법(' 80.8), 항만법(' 86.9), 철도법(' 87.10), 체신법(' 97.2), 자동차운수법(' 97.2), 도로법(' 97.9), 해상감독법(' 97.9), 민용항공법(' 00.3), 갑문법(' 01.3), 배길표식법(' 04.3), 수로법(' 04.3), 도로교통법(' 04.10)
민사(4개)	민사소송법(' 76.1), 민법(' 90.9), 가족법(' 90.10), 상속법(' 02.3)
노동/보건 (20개)	인민보건법(' 80.4), 국경위생검역법(' 96.1), 국경동식물검역법(' 97.7), 전염병예방법(' 97.11), 의약품관리법(' 97.11), 의료법(' 97.12), 수의방역법(' 97.12), 수의약품관리법(' 98.6), 식품위생법(' 98.7), 공중위생법(' 98.7), 마약관리법(' 03.8), 약초법(' 4.12) 사회주의노동법(' 78.4), 화장법(' 98.5), 장애자보호법(' 03.6), 소방법(' 05.2), 담배통제법(' 5.7), 화약류취급법(' 05.11), 적십자회법(' 07.3), 연로자보호법(' 07.4)
교육/문화 (9개)	어린이보육교양법(' 76.4), 문화유물보호법(' 94.3),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 95.12), 체육법(' 97.3), 교육법(' 99.7), 도서관법(' 98.1), 저작권법(' 01.3), 출판법(' 99.1), 교육법(' 99.8)
환경보호 (7개)	환경보호법(' 86.4), 산림법(' 92.11), 바다오염방지법(' 97.10), 국토환경보호단속법(' 98.5), 유용동물보호법(' 98.11), 대동강오염방지법(' 05.2), 환경영향평가법(' 05.11)

4. 주민생활

가. 의식주생활

(1) 의생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복장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부합되도록 규격 화하여 의복을 공급해왔다. 경공업성 피복공업총국 산하 피복연구소에서 직업, 체격, 연령 등에 맞는 옷의 형태와 규격을 제정하여 각 지역 피복공장에서 일괄 생산해왔다.

1990년대 초까지 기본 일상복의 조달은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현재는 주민 스스로 의복을 만들어 입거나 시장 등에서 구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국산 의류가 주로 유통되지만 한국산이나 일본산 의류도 통제를 피해 유통되고 있다.

1960년대의 주민 복장은 ‘천리마시대의 생활양식 준수’ 를 표방함에 따라 남자는 인민복(레닌복)과 노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들어 블라우스와 점퍼, 스커트 등 양장이 등장하고, 색상과 디자인도 다양해졌다. 이는 김일성이 “평양시 등 대도시 주변 인민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유색복장을 해야 한다” 는 지시를 내린 후의 일이다. 1980년대에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맞물리면서 의생활의 다양성이 조금씩 확대되었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은 세계 각국 청년학생들의 다양한 옷차림을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계기가 되어 의복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들의 옷차림이나 머리모양새를 흉내내는 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옷차림이 화려해졌으며, 화장도 진하게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등 서구유행이 유입되어 북한당국이 ‘자본주의 사조 침습’

을 통한 사상적 해이를 우려하여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민족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조선옷(한복)’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간편한 평상복 차림을 선호하고 있다. 한복은 호텔의 접대원 등 각종 행사에 동원된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남성복에 있어서는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를 전후하여 넥타이 양복차림에 이어 간편복 차림까지 등장, 서구적인 세련미를 가미하였으며 김일성 자신도 1984년 5월 소련 및 동구권 순방 이후 인민복 대신에 넥타이 양복을 착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주민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옷차림이 달라지고 있는데, 상층의 경우 멋을 중시해서 비싼 외국산 옷 등을 구입해 입는 반면, 중간층은 싼 가격과 편안함을 중시하고, 하층은 옷차림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 식생활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주·부식에 대한 배급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배급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식량은 시장을 통해 구입하거나 일부 텃밭에서 경작하여 조달하고 있으나, 개인 소비의 절대량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식량증산과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식량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다. 김일성은 1981년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하고 1984년부터는 종래의 ‘의·식·주’라는 용어를 ‘식·의·주’로 변경 사용하는 등 식량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식량증산을 위해 ‘1,500만 톤 알곡고지 점령’, ‘30만 정보 간척지 조성’, ‘20만 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군 칭호쟁취운동’ 등

의 각종 사업과 운동을 추진한 바 있고, 특히 1992년을 ‘대농의 해’ 로 지정하는 등 식량증산에 주력해왔다.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이 실패하고 식량사정이 호전되지 못하자 다시 완충기(1994~1996) 중점과업으로 ‘농업제일주의’ 방침을 앞세워 농업생산력 제고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에도 식량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최근에는 이의 해결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0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며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체의 힘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평양과 지방, 신분, 시기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주민들에게 주로 쌀과 잡곡을 6:4에서 3:7 정도의 배합비율로 배급해왔다. 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하였으며, 배급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카드로 리·동 배급소에서 수령하도록 하였다.

출장이나 여행의 경우에도 ‘양표’라 불리는 양권을 미리 발부받아 매식시 양권과 식대를 함께 지불하는 양표제도를 시행하였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식량난으로 인해 양표를 식당에 제시해도 매식하기가 힘들었고 특히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핵심계층을 제외한 주민들에 대해 배급제가 축소·폐지됨에 따라 이와 같은 양표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 식생활문화 향상, 수익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요리경연 활성화, 지방특산요리 발굴 장려, 민족음식 전문식당 및 외화식당 확대 등 음식문화 발전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3월의 종합시장 허용조치 이후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민들은 쌀과 옥수수 등 주식과 각종 부식물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을 주로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옥수수, 콩 등의 곡물과 채소류는 소규모 텃밭이나 기관에 부속된 경작지에서 재배해

서 먹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는 주민들간에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식생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주생활

북한은 민법 제50조에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고 명시함으로써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 받아 사용한다.

주택은 주로 ‘고층살림집’이라 불리는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의 형태가 많으며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그 형태 및 구조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평양시의 경우 1990년대 건설된 아파트(20~30층)를 제외하고는 10층 이내의 저층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주택형은 1층부터 6층까지 6단계로 구분되며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 배정되고 있다. 다른 기본생활 사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사정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방 1개, 부엌 1개의 2칸 주택이 보통이고, 방 2개, 부엌 1개의 3칸 주택에 두 가구가 동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 일반주민들의 경우 주택을 국가에서 배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등록 후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돈을 주고 집을 구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편법때 매는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불법이지만 그 동안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면서 대도시에서는 당 간부가 아니어도 부를 축적한 계층에서 보다 좋

은 주택을 구입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에 1981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10만여 세대의 주택을 문수·창광·광복·통일·안상택 거리 등에 건설하였으며, 원산, 함흥, 청진 등 지방도시에도 같은 시기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공동주택을 건설하였으나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기간 중 매년 15~20만세대 주택건설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원 부족 및 건설자재 공급난으로 목표에 크게 미달되었고, 평양시 주택건설 및 시가지 정비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양과 지방과의 주거생활 격차가 현저하다. 또한 신설 주택도 당·기관·기업소의 간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일반주민들의 주택사정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나. 직장생활

(1) 직장배치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의 직장배치는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중앙의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성분과 당성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기준이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기준이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으로서 학력, 자격, 실무 능력, 활동력, 근무년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학력은 사회적 신분상승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진학 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기는 사실상 어렵다.

직장배치는 일반적으로 간부와 노동자로 구분된다. 간부는 도·시·군 당(리당 포함) 간부부에서 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국가사무원,

노동현장에서 충실성과 당성이 높은 노동자 등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각 도·시·군(리 포함)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 이와 같은 직장 배치의 경우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며, 국가에서 배치한 생산현장으로부터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있어 처음 배치된 직장이 평생직장으로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경제난으로 사회통제가 이완된 틈을 이용하여 뇌물과 안면관계를 통해 편안한 기관과 직장으로 옮겨 다니는 노동 기피현상 내지 직장이탈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의 직업선호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전 시기에는 당·행정관료 등의 직업을 선호했으나 현재는 경제난의 여파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외화벌이가 가능한 외교관, 무역일꾼, 외향선 타는 선원, 부수입이 많은 서비스업 부문에 배치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 임금

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래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전까지는 대체로 이를 준용해 왔다. 이 기준은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고, 동일직종에서도 숙련도나 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며 임금수준도 이에 따라 결정된다. 또 일반 사무원보다는 당·정 기관 종사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1992년 1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당·정기관, 공장·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편의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당·내각의 상급 370~350원, 특급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광부·제련공 90~100원 및 서비스업 50~80원 등이었다.

이후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통해 임금을 이전의 약 25배 수준으로 인상했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분배 원칙’ 하에 임금

을 차등지급하는 실적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에는 직종과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3) 휴일·휴가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평안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식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용무로도 휴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노동자는 사회주의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978년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 상에는 산전·산후 77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1986년 2월 20일 정령 2494호에서 150일간으로 연장되었으나, 대부분의 공장·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된 현실에서는 이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되고 있다. 정기휴가 이외에도 휴양권 및 정양권이 있는데, 이는 각 직장마다 생산경쟁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서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실시되고 있다.

휴가제도

종류	대상	기간	비고
정기 휴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충적 휴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 외 7~21일	유급휴가
산전산후 휴가	임산부	150일	유급휴가
임시 휴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기간	무급휴가

※ 출처: 사회주의노동법

다. 가정생활

북한은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 대가족 제도를 해체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 평등권의 실현을 추구하여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여성해방의 핵심은 여성들이 가정의 굴레를 벗어나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가족 형태 및 가족 질서의 변화가 필요했다.

가족제도의 변화과정

시기	변화내용
1945~195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 유지 • 봉건적 유습 청산 • 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
1954~196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중심의 경제활동→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
1961~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 사회주의적 인간 주도 • 가정의 혁명화
1991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법 제정(1991.4.11) ※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7조) • 상속법 제정(2002.3.13) ※ 상속과 증여제도 및 질서 확립, 개인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과 보장(1,2조)

이에 따라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조상숭배 관념이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가족제도의 변형은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되었는데,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사회의 잔재라고 이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194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또한 친족범위를 6촌까지로 제한함과 동시에 주민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40~1950년대의 사회주의적 개혁정책(토지사유제 폐지, 재산상속제 소멸 등)과 1960년대의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의 시행으로 가

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위계질서가 파괴되어 대가족 제도가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은 '온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 '최저생산단위'로 규정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1991년 4월 11일 가족법을 제정하였고, 제18조에서 가정생활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들이 장사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체가 됨에 따라 종래의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사회전반에 '선군사상'의 확산과 함께 가정에서도 군대식의 생활기풍을 숭상수범하여 실천할 것을 여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라. 여가생활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일원적으로 국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노동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하루의 일과는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작업 전 30분간의 독보회⁶⁾를 갖고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오후 6시경 하루일과가 끝난다. 일과 후에는 '작업총화'라 하여 지배인 및 당비서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작업총화가 끝나도 직장별로 정치학습이 있는 날이 많아 퇴근은 통상 오후 7~8시경에 하게 된다. 휴일에도 각종 회의·학습·근로봉사·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게을러지고 개인주의화되며 의식이 자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 이상의 여가시간을 허

●●6

독보시간에는 「노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주로 읽는다.

용하지 않고 집단적 규율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 무용, 연극 등의 여가활동도 직장과 인민반을 통해 집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체육활동 역시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한 정신 및 육체적 힘을 키워줌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실현에 적극 기여한다”⁷⁾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가선용이나 개인의 취미활동보다는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체력향상을 통한 노동력과 국방력 증대, 정치적 일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배구 등의 일부 종목은 북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 있다.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주민들은 직장생활과 장사 등 부업의 이중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느라 별다른 여가를 즐기기는 어려우며, 특히 여성들은 최소한의 휴식과 여가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미나 오락시설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가끔 공휴일에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정도이다. 평양 주민들은 휴일에 만경대유회장, 문수유회장 등 오락시설을 이용하거나 온수목욕이 가능한 창광원에 가기도 한다.

최근에는 청년중앙회관 등 평양 시내 여러곳에 ‘화면반주음악실’(노래방)이 많이 보급되어 청년들이 이를 즐기고 있다고 선전하기도 한다. 지방에서는 직장이나 지역단위의 문화회관에 간단한 체육 및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이 여가활동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 밖에 북한 주민들이 즐기는 일상적인 여가활동은 주패놀이(트럼프), TV 시청 등이다. 최근에는 전기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TV를 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축전지를 이용해서 TV나 비디오 시청을 하기도 한다. 최근 들어 당국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도 남한 비디오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여가 활용 방식으로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7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418.

5. 노동문제

가. 노동정책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에서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노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노동규율과 노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⁸⁾고 하여 노동을 전 주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노동을 모든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의 원천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수백만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건설된다”⁹⁾고 정의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동능력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¹⁰⁾고 직업선택의 자유와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노동에 대해 당에서 직접적으로 개입, 모든 근로자는 당국이 배정해 주는 일자리에서 근로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사회는 외형상으로는 일종의 ‘완전고용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에서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개인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관련 법령의 연혁을 보면, 1946년 6월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내각결정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오다 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기존의 노동자·사무원 외에 농민까지 포함한 ‘사회주의노동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후 동법은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노동력의 최대 활용이라는 노동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사회에 대한 통치수단으로서의 노동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령으로 활용되고 있다.

●●8
사회주의헌법 제70조, 제83조.

●●9
사회주의노동법(1999, 6.16) 제2조.

●●10
사회주의헌법 제70조.

나. 노동조직과 노동조건

북한의 「사회주의노동법」은 “국가는 사회적 노동조직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공장·기업소, 사회협동단체는 노동 행정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노동조직에서 군중노선을 구현하며 노력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¹¹⁾고 명시하여 ‘대안의 사업체계’에 기초한 노동조직과 조직에서의 군중노선 구현을 표방하고 있다.

즉 노동조직은 집단주의 정신에 의거해 근로대중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¹²⁾고 규정, 8시간 노동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노동현실은 이와 다르다. 북한에서는 노동사업을 일별·월별·분기별로 계획화해놓고 과업의 초과달성을 위해 천리마운동, 3대혁명 붉은기쟁취운동, 속도전, 새로운 90년대 속도 창조운동, 우리시대 영웅의 모범 따라 배우기 운동 등과 같은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을 벌여 왔다. 사회주의헌법 제14조에서는 “국가는 3대 혁명 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제2의 천리마대진군운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31조와 노동법 제15조에는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세부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11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라 15세까지가 의무교육기간이므로 직업적인 노동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노동, 농촌지원 등의 명목으로 연간 4~14주에 걸쳐 무보수 노동동원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법은 노동재해, 질병,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일시적 보조금의 지급, 일정한 근속노동 연한을 가진 자에 대한 연로연금(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등도 규정하고 있으나,¹³⁾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 11
사회주의노동법 제26조.

●● 12
사회주의노동법 제33조.

●● 13
사회주의노동법 제74조, 제75조.

6. 사회복지

가. 사회보장제도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노령·질병·노동능력 상실자, 무의탁 노인 및 보호자 없는 어린이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헌법(제72조)에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장은 연금과 같은 국가보장 형태와 일시적 보조금, 장례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등의 사회보험 형태가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으로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등이 있다. 1978년 4월 제정된 노동법은 질병·부상·임신·해산에 관한 의료상의 방조, 질병·부상·불구로 인하여 일시적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보조금, 임신·해산으로 인한 경우의 보조금, 질병·부상으로 불구 또는 폐질이 되었을 때의 연금, 부양의 책임을 진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의 그 유가족에 대한 연금, 연로한 피보험자에 대한 연금 등 다양한 명목상의 사회보장·복지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¹⁴⁾ 2007년 4월에는 연로자의 부양, 건강보장, 문화정서생활 등을 보장한 연로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보조금은 사회보험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 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이 있다. 사회보장서비스로는 탁아소, 유치원 시설과 노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쟁 등 국가사업에 동원되었다가 불구가 된 경우 공로자라고 하여 특별대우를 하는 반면, 선천성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방으로 강제퇴거를 당하는 이른바 장애인 소개사업을 90년대까지 시행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8년에 조선불구자지원협회라는 장애인단체를 설립하여 장애인 실태조사, 재활용품 지원, 재활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단체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에는 1999년을 기준으로 총인구의 3.4%인 76만여 명의 장애인이 있는

●●14
사회주의노동법 제73~
79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장애인 존중과 권익보장을 규정한 장애인보호법을 채택하여 국제사회에 장애인 용품 지원을 요청하는 등 과거의 일방적인 장애인 억압정책에서 다소 탈피하여 장애인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헌법에 사회보장에 관한 원칙을 망라하면서 노동 관련 법령에 다양한 복지시책을 마련해 놓아 명목상으로는 마치 복지국가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반 사회보장제도는 규정과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사회복지시설

(1) 탁아소·유치원제도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 제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고 명시, 탁아소·유치원이 북한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조에서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운영이 어린이들에 대해 조기 집단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탁아소와 유치원에 관한 주요 조치 및 활동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어린이 보육에 관한 주요 조치

시기	조치 내용
1947.6	탁아소 규칙에 대한 보건국 명령 제5호
1964.7	유치원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새로운 대책에 대한 내각결정
1966.10	전국 보육교양원 대회
1968.10	유치원 교육과정제도 심의회 구성
1972.5	만 5세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학교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줄 데 대한 김일성 교시
1975.9	11년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1976.4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6차회의, 어린이보육교양법 채택
1979.3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3차회의 교육부문 보고 - 어린이 보육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
1993.2	어린이보육교양법세칙 제정,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여성 권익 강화
1996.4	어린이보육교양법 발표 20주년 기념대회 개최
1998.9	제2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다산 운동 전개
2002.5	박길연 주유엔대사,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아동복지 강조
2003.10	박길연 주유엔대사, 유엔아동특별회의에서 아동권리보호증진 강조
2005.11	제3차 전국어머니대회를 개최하고 보육 걱정없는 직장생활 강조
2006.12	새날 소년동맹결성 80돌 중앙보고대회 개최

(2) 특수 사회복지시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 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 4세 이상 학령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이다.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 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현재 북한에는 근로자들이 휴양생활을 할 수 있는 휴양소가 100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사회보험

(1) 연금제도

북한의 연금제도는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연금의 종류는 공로자연금, 연로연금, 노동능력상실연금, 유가족연금, 영예군인연금 등이 있다. 공로자연금은 국가에 공로를 세워 표창을 받은 자에게 월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며, 연로자연금은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에게 월임금의 60~7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노동능력상실연금과 유가족 연금은 일종의 산재보험에 해당한다.

1986년 11월부터 임금노동자에게만 실시하던 연금제도를 협동농장 농민에게 확대 적용하고, 1992년 3월 1일부터 주민복지향상시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연금을 기존보다 평균 50.7% 인상조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¹⁵⁾ 또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에서는 사회보험제 등 사회적 시책들을 강화·발전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의 여파로 사회보장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중앙당 간부, 군 장성급이나 김일성 훈장, 김정일 표창장, 영웅 칭호, 인민·공훈칭호, 국기훈장 1급 등 국가표창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 노후보장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15

중앙인민위원회 정령(92.2.13)을 통해 1992.3.1부터 생활비(임금) 434% 사회보장연금 50.7%, 장학금 33% 등을 인상 조치하였다.

(2) 산재보험

북한의 산재보험(사회보험)은 앞에서 살펴본 「국가사회보장법」과 「사회주의 노동법」 제73조, 75조, 77조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일시적(통상 6개월 이내)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으로써 근로자들은 의무적으로 매월 수입의 1%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취업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1급부터 5급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급은 임금의 75%, 5급은 50%를 지급한다. 또한 유가족에게는 가족 수에 따라 임금의 40~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열성당원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노동자들의 귀책사유 탓으로 돌려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실업보험

북한은 「국가사회보장법」에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직장을 배정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렵고 달리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 표준 임금의 20%를 6개월 한도로 지급하고, 자발적 실업 및 노동규율 위반, 범죄 등 과실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실업보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보건·의료

가. 보건·의료정책

사회주의헌법 제56조는 형식적으로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선진적인 ‘의사담당구역제’, 치료에 예방을 선행시키는 ‘예방의학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채택한 ‘노동자, 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실시와 산업의료시설 개편에 관한 결정서’에서 윤곽을 나타낸 이후 1948년에 개정한 치료비 관련 규정에 “산모의 해산료, 3세 미만의 유아, 혁명가 및 그 가족, 고아원·양로원 수용자, 정신병자, 2급환자,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전문학교 학생과 대학생은 무상치료제의 대상에 포함시킨다”¹⁶⁾고 함으로써 초기에는 특정대상에 국한하여 시행하였다. 그 후 무상치료제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1952년 11월 ‘내각결정 제203호’에 의하여 개인상공업자와 개인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95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⁷⁾ 1960년 2월 2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의결함으로써 무상치료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제도상으로는 “수술비, 치료비, 외래약값, 입원환자 식사비, 요양치료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보철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¹⁸⁾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완전 무상치료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봉급에서 1%정도를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53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예방사업 강화지시에 의하여 예방의학제도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의학제도는 1958년 5월 4일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중앙 및 각 도·시·군의 ‘위생지도위원회’와 읍 및 노동자구의 ‘위생검열위원회’를 발족시켜 조직을 정비하고 1966년 10월 20일 김일성의 노작 “사회주의 의학은 예방의학이다”를 발표하여 예방사업 내용을

●●16

승창호·이복희 편 『인민보건사업 경험』(평양 인민보건사, 1985), p.62

●●17

위의 책, p.63

●●18

『조선중앙연감』(2001), pp.219~221.

제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행되었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의사가 담당지역 주민의 가정을 연 1~4회 순회하면서 의료상담, 치료 및 위생교육 등 체계적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과도한 의료대상, 넓은 진료범위, 의약품 부족 등으로 대부분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의 ‘호담당구역제’는 1963년 평양시 ‘경림종합진료소’ 소아과에서 처음 실시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건시설과 보건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된 이후인 1969년부터 각 시·군에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등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김일성이 1988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의사호담당제’ 강화를 지시한데 따라 1990년부터는 일반의사가 담당구역의 전염병 파악, 진단서 발급과 환자발생시 전문분야 의사와 연결시켜 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탄광, 공장 등에서는 개별·직장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정책들을 1980년 4월 3일 「인민보건법」(7장 49조)으로 법제화하였고, 1998년에는 이를 보완한 「의료법」을 채택하였다.¹⁹⁾

북한은 의사담당구역제에 대해서 “전 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강관리책임제로서 구역담당사업을 맡고 있는 시·군(구역)병원, 산업병원의 외래임상과 전체의사들 및 리 인민병원, 진료소 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개조, 소독, 예방접종을 비롯 검진·상담 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

북한의 방역 시스템은 1980년대 후반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재정사정 악화로 각급 위생방역소 및 병원에 대한 의약품 공급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종래의 ‘예방의학제’에 의거한 ‘지역담당의사’의 주민 순회진료, 위생교육 등은 형식적 진료행위에 그치고 있다. 병원 치료, 식사, 의약품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경제난 이후에는 의약품 공급이 안 되고 의료진에 대한 배급이 부실화됨으로 인해 실제로는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어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 19

「민주조선」(1998.1. 21·23·25); 「조선중앙통신」(1998.130)

●● 20

「조선중앙연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4), pp.289~292

또한 식량난에 따른 주민 영양상태 악화와 경제난으로 빚어진 영양 실조, 후진성 질병 발생, 필수 의약품 부족, 의료시설 손괴 등으로 보건의료 실태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생, 방역 사정이 악화되자 1997년부터는 10월 20일을 ‘민족면역의 날’로 제정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3년의 중국에서의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발생을 계기로 가축 전염병의 방역에도 힘쓰고 있으며 조류독감(2005년)과 구제역(2007년) 발생 때에도 자체노력과 국제사회 등 외부지원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 바 있다.

나. 의료시설

북한의 의료시설로는 일반병원과 특수병원이 있으며 위생·방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생방역소도 있다.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3단계의 의료체계에 따라 거주지 의료시설을 이용하나 특수질병·의학연구 대상 환자는 적십자병원 등으로 후송된다.

1차 진료기관은 리·동 인민병원, 진료소 약 4,000개, 2차 진료기관은 시(구역)·군 인민병원 약 200개, 3차 진료기관은 도·직할시 인민·대학병원 약 40개 등으로 병원 수는 총 4,240 여 개이며 의료인력은 약 72,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시설 규모

(2007년 현재)

구분	병원수	의료일꾼 (병원당)	진료과목	병상수	주요장비
도(직할시) 인민병원	약 40개	12,000여 명 (약 300명)	전과	800~1200	기본진료 및 치료용 전 장비
시(구역)·군 인민병원	약 200개	20,000여 명 (약 10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결핵과, 간염과, 구강과, 고려치료과(14개과)	100~200	앰블런스 X-선 기자재
리·동 인민병원 (진료소)	약 4,000개	40,000여 명 (약 10명)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산부인과, 고려치료과(6개과)	5~20	규모가 큰 경우 X-선 기자재
합계	4,240여 개	72,000여 명			

특수병원으로서는 도(직할시)·군에 각각 결핵병원, 정신병원, 간염 병원, 구강병예방원 등이 있으며, 주요 군급에는 결핵요양소가 있다.

그 외에 주요 산업지역에는 기업소병원 및 구급소가 있고 주요 어선 단에는 선의(船醫)가 배치되어 치료 및 예방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보건·의료요원 양성

북한에서는 보건·의료요원을 “인민들을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게 하는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영예로운 혁명가”²¹⁾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요원들은 “자기업무에 대한 높은 명예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어야 한다”²²⁾고 하고 있다. 주요 보건·의료요원 양성기관으로는 의학대학, 약학대학 등이 있다. 과거에는 농촌병원의 의료요원 확보를 위해 2년제 도 보건간부학교가 있었으나 수료생들이 농촌배치를 기피함으로써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되자 단계적으로 통폐합되었다.

의학대학²³⁾은 6년제로 졸업과 동시에 의사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재학 중 의사자격에 필요한 과목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중앙급 대학으로 의학대학 중 서열 1위인 평양의학대학이 있으며 이밖에 단과대학으로 평양의과대학(4년제), 의사재교육대학 등이 있다. 또한 본 학부 외에 특설학부와 통신학부가 설치된 대학도 있다. 특설학부에서는 기초학부를 제외한 임상학과가 있는데, 이는 준의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추천을 받아 입학, 의사가 되는 과정이다. 통신학부는 본과 6년제로 대학과 근거리에 있는 자는 야간에 2시간씩 수강하고, 원거리 거주자는 통신수강으로 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약학대학은 고려약학대학(구 함흥약학대학)과 평양의학대학 약학부가 있으며 교육기간은 6년이다. 의리기구학부, 약제학부 등이 있고, 각 학부는 수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밖에 각도의 의학대학에는 약학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 외에 간호원 양성을 위해 별도의 1년제 간호양성소가 있으며 교육기간 3개월인 보육원 양성소가 각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다.

● 21
인민보건법 제38조.

● 22
위의 법 제4조.

● 23
대단적인으학대학인 평양 의학대학 의경우 임상학부(7년), 기초의학부(7년), 고려의학부(7년), 위생학부(6년), 구강학부(6년), 약학부(6년), 재교육학부(2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기간에는 예과 1년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학생은 예과를 거치지 않으나, 군대 및 직장을 거쳐 입학한 학생은 예과를 거쳐야 한다.

라. 고려의학²⁴⁾

북한은 고려의학에 대하여 “역사적 과정에 창조된 민족의학으로서 독특한 치료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병치료와 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해 온 민족의 귀중한 의학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²⁵⁾

북한이 고려치료법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과정을 보면, 1954년 6월 4일 내각결정 제76호로 ‘인민보건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결정’이 있은 후 고려의사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1956년 4월 내각명령 제37호 ‘동의학을 발전시켜 동의치료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여 국가치료기관에 동의과를 새로 설치케 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 평양의학대학에 동의학부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1970년대까지 함흥의학대학, 개성의학대학 등 각 도 의학대학에 11개의 고려의학부를 설치하여 고려의사를 양성하였다.

또한 북한은 고려의학 발전의 필요성에 따라 1961년 의약학연구소 내의 동의학연구실을 동의학연구소로 확대·개편하였다. 1989년에는 동 연구소를 ‘동의과학원’으로 분리하였으며, 1993년에는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개칭하고 ‘고려의학과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확대·개편하였다.

한편 각 지역 의학대학 및 도 병원 등에도 각기 고려의학연구부를 설치하여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향약구급방’ 등 10여 종의 고전 서적들을 번역·출판하고 ‘고려의학사전’, ‘고려약처방집’ 등 160여권의 관련서적들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고려학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수만 건의 민간요법을 수집,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한 후 이 중에서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9,000 여 건의 민간요법을 내각 보건성에서 책자로 출판, 이용토록 하고 있다.

평양의 고려병원 등 각급 고려의료기관과 의학과학연구소, 의학대학 등에서 고려의학의 과학화 연구사업을 추진, 고려약의 성분, 약리작

●● 24

1993년부터 ‘동의학’을 ‘고려의학’으로 개칭하였다. (변경 명칭: 동의사 → 고려의사, 동의요법 → 고려치료법, 동의약 → 고려약, 동의학부 → 고려의학부, 동의과 → 고려치료과)

●● 25

「동의학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2, p.254.

●● 26

‘난치나이’란 고치기 어려운 병을 낫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치료법을 의미한다.

용, 고려치료법의 치료효과, 고려약과 침, 뜸, 부항을 비롯한 가치있는 민간요법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난치나이치료법²⁶⁾, 광천요법 등을 고려의학의 연구성과로서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과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로 수입에 의존하던 신약공급체계가 와해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서 고려의학 발전 및 민간요법 개발에 더욱 치중하였다.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제약공장도 고려약 위주로 생산하였으며 의료인력 양성과 진료에도 양·한방을 병행하고 있다. 1995년 이전에는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가 80%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80% 이상을 전통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도덕·풍속

가. 도덕과 예의범절

(1) 도덕

북한은 해방 후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대해 나름대로의 특이한 해석과 의의를 부여하고,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덕관을 형성하였다. 공산주의 도덕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며 그 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원칙과 규범”이라고 규정하고, “공산주의 도덕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공산주의 도덕의 특징은 풍부한 인간성과 집단주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는 철두철미한 당적이며 인민적인 도덕”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북한에서 새롭게 형성된 도덕적 가치관에서는 공산주의적 품성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정신과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필승의 신념,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적 품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²⁷⁾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는 도덕을 계급투쟁의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 유교적 도덕관을 철저히 배격하면서 오히려 이를 “반동적이며 반사회적인 낡은 도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공산주의 도덕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의 심화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공산주의 도덕관념’은 점차 해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당국은 ‘생활총화’를 비롯한 각종 사상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공산주의적 품성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2) 예의범절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성상 외형적으로는 공중도덕이나 질서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는 일반주민의 질서의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제적인 측면이 보다 강하다. 예의범절이라는 도덕적 행위 규범까지 ‘구찰대’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조직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복장을 비롯한 두발, 위생상태에 이르는 모든 생활영역이 통제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통제의 이완으로 평양 및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으로 갈수록 사회통제가 어려워지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층 또는 교포자녀 등이 옷차림, 두발을 자본주의 유행방식으로 모방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까지 있다. 현재 북한 50대 이상의 구세대는 아직도 전통적 관습과 예의범절을 중요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풍조와 상부상조 의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최근에는 사회환경 변화로 사회분위기가 해이

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들은 외부사조 유입에 따른 의식변화로 체제나 상급자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물질적인 면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증노동이나 군 입대를 회피하는 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나. 관혼상제

(1) 결혼

북한의 「가족법」²⁸⁾ 제9조에 의하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고 함으로써 만혼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군복무 관계로, 여자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 등의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통상 남자는 군에서 제대하는 30세 이후에, 여자는 20대 중반 이후에 결혼하여 왔다. 2003년 북한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평균 결혼 연령은 남자 27.3세, 여자 24.8세이다.²⁹⁾

배우자 선정시 과거에는 상대자의 출신성분이 가장 중시되어 당·정기관의 간부나 군관 등이 인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외무역 종사자, 외화벌이 일꾼 등 경제능력이 중시되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자유연애가 증가함에 따라 연애결혼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결혼식은 통상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는 일요일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길흉을 보고 결혼 택일을 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반주민들은 예식을 마을의 공공회관이나 신랑·신부의 집 등에서 올리지만, 상류층과 일부 귀화교포는 대형 음식점에서 올리기도 한다. 예복은 남자의 경우 양복, 여자는 한복을 주로 착용하며 양가 친지와 동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을 진행한다. 주례는 대체로 자기가 속해 있는 직장 상사, 협동농장 간부 또는 당이나 근로단체 간부가 서며, 주

●●28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90.10.24)에서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가족법' (6장 54조)을 채택하였다.

●●29

「조선중앙통신」 (2003.7.11).

례사는 신랑·신부의 새출발에 대한 격려보다도 당과 수령에 대한 헌신적 충성에 대한 내용으로 대신한다. 신혼여행은 거의 가지 않으며, 결혼식이 끝나면 지역의 사적지를 방문하거나 김일성 동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친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한다.

(2) 회갑·생일

회갑연은 1950년대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와 식량절약이라는 명분하에 금지되었다. 1970년대 이후로는 김일성이 ‘60 청춘, 90 환갑’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회갑연을 제한하였다.

오늘날에는 친척·친지 등이 모여 회갑연을 간소하게 치르고 있다. 이 외에도 칠순, 팔순 등의 장수잔치가 있기는 하나 식량사정의 악화로 인해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인덕정치’를 과시하기 위해 노력영웅 등 공로가 있는 주민들에게 환갑상, 칠순상 등을 자신의 명의로 차려주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은 ‘60회 생일을 쇠는 것은 혁명선배를 존대하는 고상한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권장하고 있다.³⁰⁾ 생일의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3) 장례

북한 주민의 평균수명은 약 70세였으나, 90년대 후반에는 경제난으로 인해 줄어들었다가 현재는 거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장례는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라 지극히 간소하게 치르고 있다. 「화장법」(1998.5)에 의하면 화장은 문화적이고 간편한 장례방법으로, 자연풍치와 국토를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하여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대부분 매장을 선호하여 매장이 일반화되었다.

삼일장이 일반적이던데 상복은 착용하지 않으며 평상복에 남자는 검은 완장을 차고 여자는 흰 리본을 꽂는 정도이다. 장례식과 매장은 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하며, 매장일 경우 운구는 전래의 상여

대신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하여 공동묘지까지 간다. 장례시 3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4) 제사

제사는 6·25전쟁 이전까지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았으나, 휴전 후 부터는 몰자낭비, 분파주의, 종파주의 조장 등의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을 비롯한 일부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차려 놓고 은밀히 제사를 지내왔다.

그후 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추석에 성묘하는 것과 직계가 족에 대한 탈상까지의 제사는 묵인되었다. 특히 1974년 1월 13일 전국 농업대회에서 김일성이 연설을 통해 “음식을 많이 차려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은 낡은 생활습성의 하나이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나 사진 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제사지내는 것은 죽은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죽은 사람의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일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강조한 이후 제사는 어느 정도 허용되면서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상교육의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제례를 미신으로 간주하고 조상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는 공산주의적 시각 때문에 제사의 전통적인 의미와 의식은 사라지고 간소화 되었다. 북한의 제례는 지방 대신 사진을 놓고 간단한 음식을 장만하여 치른다. 최근들어 음력설, 추석 등 민족의 고유명절 때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가까운 곳의 경우 성묘를 가기도 한다.

다. 명절

북한에서의 명절은 국경일, 기념일, 전통민속명절 등을 총칭하고 있

는데,³¹⁾ 이 중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적 명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전통 민속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하여 왔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추석 때 인근에 조상묘소가 있는 경우에 성묘를 허용하였고, 1988년 이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에는 음력설을 민속명절로 지정하였다. 2003년부터는 양력설 대신 음력설을 기본명절로 하고, 정월대보름까지 휴무일로 인정하였고, 단오와 추석을 예전의 명칭인 수리날과 한가위로 부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과도한 주민 노력동원 등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로 보인다.

●●31
『조선말대사전 1』 (1992, p.1104.

국가명절 및 민속명절

명칭	구분		비고
	국가명절	민속명절	
설날		1.(양)	
음력설날		1.(음)	3일 연휴(~음력 1,3)
정월대보름		1.15(음)	
김정일생일	2.16		2일 연휴(~2.17)
국제부녀절	3.8		
김일성생일	4.15		2일 연휴(~4.16)
인민군창건일	4.25		
국제노동자절	5.1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7.27		
해방기념일	8.15		
한가위(추석)		8.15(음)	
정권창건일	9.9		
노동당창건일	10.10		
헌법절	12.27		
계	10회	4회	총 14회, 19일

기념일 현황

기념일	일자	제정 일자
건재공업절	1.8	1983.12.9
무역절	1.28	1997.1.23
기계절	2.20	1972.1.13
식수절	3.2	1971.3.25
농업근로자절	3.5	1971.3.5
어부절	3.22	1962.5.23
보건절	4.5	1980.4.5
체신절	4.8	1972.1.13
탄부절	4.24	1990.10.31
철도절	5.11	1963.3.18
지질탐사절	5.15	1970.2.3
건설자절	5.21	1971.4.30
국제아동절	6.1	1950.4
해군절	6.5	1972.6.3
소년단창단일	6.6	1946.6.6
지방공업절	6.7	1970.4.6
포병절	6.20	1982.10.28
선박공업절	6.23	1988. 4.21
광부절	7.1	1957.7.5
육해운절	7.24	1972.2.26
임업근로자절	8.10	1963.8.10
공군절	8.20	1972.5.20
청년절	8.28	1991.2.1
도시경영절	9.5	1982.8.2
교육절	9.5	1977.9.19
상업절	9.15	1971.11.6
피복공업절	9.20	1998.2.4
전기절	9.24	1971.9.15
금속노동자절	10.9	1970.4.17
방송절	10.14	1970.10.14
체육절	10월 둘째 일요일	1949.8.2
방직공업절	10.15	1973.10.15
출판절	11.1	1970.12.20
화학공업절	12.6	1976.10.16
총 기념일수	34개	

현재 북한의 명절은 소위 10대 국가명절과 4대 민속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대 국가명절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 창건일 등 우상화 및 체제선전에 맞추어 지정하고 있고, 4대 민속명절

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양력설, 정월대보름, 추석 등으로 정해놓고 있다. 음력설은 여타 민속명절과 함께 폐지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에 부활되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양력설을 대신하여 음력설을 ‘기본 설 명절’로 정하고 정월대보름과 함께 크게 쇠고 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은 전통, 같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절에 북한주민들은 친지간에 인사를 나누며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는 등으로 하루를 보낸다. 새해를 맞이하는 양력설에는 웃어른을 찾아 세배를 드리고 덕담을 나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동상이나 초상화 앞에 꽃다발을 바치고 인사를 올리는 것이 ‘우리식의 새로운 세배 풍습’으로 전통화되고 있다.

전래명절 부활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새로 설정한 소위 ‘사회주의 명절’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예술공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김일성 사망 후에도 생존시와 같이 김일성 생일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34개에 달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념일은 해당부문 종사자들끼리 모여 생산을 독려하는 기념행사를 가진 뒤 하루를 쉰다.

라. 민속놀이

북한에서는 민속놀이가 서민계층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를 보존,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민속놀이를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민속명절의 부활과 함께 주민들에게 이를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각종 생계활동이나 정치학습 등으로 인해 이를 즐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전통민속놀이의 활성화

화를 위해 매년 ‘전국민속체육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씨름, 바둑, 장기, 널뛰기, 그네 등의 민속경기를 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절, 정권창건일 등 국가적 명절에도 그네뛰기, 활쏘기, 씨름 등 민속체육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민속놀이의 변화과정

시기	내용
6.25전쟁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민속놀이 존속 - 그네, 씨름(단오) -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음력설) - 농악무,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등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놀이 일부가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 농악을 행사에 이용(5·1절, 8·15 등) -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다리기를 장려
196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로 변형 -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 - 활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 - 씨름, 그네를 ‘민족경기’로 채택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의한 전통문화 부활 - 민족정서가 들어 있는 민속놀이를 긍정적으로 평가 - 각종 명절, 아동절 등에 민속놀이 활성화 - 음력설을 크게 쇠고 정월대보름이 민속명절로 지정되면서 민속놀이 전지역에 확산

9. 환경

가. 환경정책

북한에서 환경문제가 제기된 것은 1960년대 제1차 7개년계획에 따라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단지 건설 등 공업규모의 양적 팽창과 광산자원 등의 무질서한 개발로 인해 대기 및 수질오염 등 산업공해가 나타나면서부터이다. 1972년 12월에 개최된 '전국자연과학일군대회'에서 김일성은 광공업분야의 공해방지를 언급하면서, 공장·기업소를 분산배치할 것과 주택지구와 공장을 격리 건설하고 각 공장·기업소에 수질오염 및 매연방지 설비를 구비토록 촉구하는 등 환경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을 제정³²⁾, 공해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그 동안의 각종 시책을 체계적으로 입법화하면서부터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 시책으로는 북한 전역에 자연환경보호구 및 특별보호구 지정, 10여 개의 환경오염관측소 및 기상수문 관측소 설치, 평양의 평천오수정화장을 비롯한 10여개의 정화장 및 침전지 건설,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남흥청년연합기업소,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등 산업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사설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7조에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조건을 마련해준다”고 환경관련 조항을 명시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전 5장 55조로 구성된 「환경보호법 시행규정」을 채택,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일반원칙, 환경보호지도·관리,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등을 구체화하였다.

2000년 10월에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기간'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0년 이후 「갑문법」, 「국토계획

● 32

환경보호법은 모두 5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환경보호의 기본원칙 제정(1장),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2장), 환경오염 방지대책(제3장), 환경보호에 대한 지도관리(제4장),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제재 조치(제5장) 등이다.

법」, 「하천법」 등을 제정하였다. 2005년에는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동강오염방지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였다.

북한은 1963년 5월 IUCN(국제 자연 및 자연자원 보존연맹)에 가입했지만 1980년대까지는 활동이 거의 없다가, 1990년대부터 UNEP(유엔환경계획) 회의 등 환경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1990년 12월에는 평양에서 UNDP(유엔개발계획), UNEP 대표 및 환경보호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04년에는 UNDP, UNEP와 공동으로 북한 최초의 「북한 환경상태보고서 2003」을 발간하였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가입(2005.4)하였고, 자연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하여 국제적인 환경기구 및 단체들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UNEP는 2008년 국제환경부장관회의에서 북한과 향후 2년에 걸쳐 대동강 유역의 통합 수자원관리, 도시와 농촌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내의 환경 동향을 전담하는 환경센터 설치, 공공 캠페인을 통한 의식계몽운동 전개 등 4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대에는 환경 관련 조직기구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1993년 2월에는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정무원 산하에 비상설기구로 설치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동 기구를 정식 정무원 기구인 ‘국토환경보호부’로 격상시켰다. 1998년 9월에는 사회주의헌법 개정과 더불어 ‘도시경영부’와 ‘국토환경보호부’를 통합하여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으로 개편하였다가, 1999년에 이를 다시 ‘도시경영성’과 ‘국토환경보호성’으로 분리하였다.

북한은 1993년 6월 평양에서 북한 최초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고, 1996년 9월에는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여 매년 계속 실시해오고 있다. 1996년 10월에는 기존의 ‘모범산림군’ (시·구역) 칭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 (시·구역) 칭호를 제정하였으며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하였다.

1998년에는 각 기관은 물론 공장·기업소·가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환경정비사업을 벌인 바 있다. 종전의 '식수월간' (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바꾸어 조림사업 이외에 도로관리, 준설공사, 주거 및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1999년에는 식수절을 종전의 4월 6일에서 3월 2일로 변경하였다.

한편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차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구를 설정, 관리해 오고 있다.³³⁾ 현재 자연보호구는 오가산, 낭림산, 관모봉, 경성 등 4곳으로 되어 있다.³⁴⁾ 이 가운데 백두산은 198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확정되고 2003년에 생물권보호구로 지정되어 국제적 보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 81곳, 식물보호구 25곳, 동물보호구 56곳, 수산자원보호구 26곳, 자원보호구역 4곳, 천연기념물보호구역 36곳 등 9개 유형에 총 1,655곳의 보호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1990년대 중반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오염실태

북한은 그들 스스로 '공해 없는 나라'라고 선전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지속적인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금속·화학공장, 탄광 및 광산 등 공업지대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공해방지를 위한 자본력과 기술의 절대부족으로 인해 오염방지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 대기오염

대기오염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요 공장지대인 흥남·함흥지역에서는 흥남비료공장, 흥남제철소,

● 33

북한은 자연보호구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362.

● 34

북한은 자연보호구를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자연상태로 그대로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설정한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선대백과사전 1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362.

● 35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1986.4.7)에서 부주석 이종욱은 연설을 통해 북한은 '공해없는 나라, 공원속의 도시, 인민의 자상낙원'이라고 주장하였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으로 각종 공해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공해병의 경우 청진내륙지역의 김책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 원산지역의 문평제련소, 원산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유해가스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 및 기관지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수질오염

수질오염은 공장이나 광산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에서는 분뇨처리 정화시설 부족과 생활하수 등으로 인해, 농촌에서는 분뇨를 비료로 사용함으로써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평양의 상수원인 대동강은 서해갑문 건설 이후 남포지역의 공장 폐수가 역류하면서 부영양화가 심화돼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는 광경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두만강 중·상류 지방에서는 무산탄광, 회령제지공장, 회령시멘트공장 등으로부터 탄광폐수, 표백제,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수생식물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압록강의 경우 두만강보다는 심하지 않으나 중·상류 지방에 산재해 있는 광산과 만포시멘트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 뿐만 아니라 중강진·신의·혜산 등의 도시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및 도시내 소규모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해 점점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자연훼손

북한에는 생태적 보호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이 풍부한 편이나 각종 대형 사업 실시로 인해 크게 훼손되었다. 즉 1960년 이래 계속된 4대 군사노선에 의한 전 국토의 요새화, 1970년대부터 시작한 자연개조 5대 방침에 의한 다락밭 개간 및 1980년대에 시작한 '새 땅찾기' 사업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 등은 자연파괴를 가속화하였다.

또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자연훼손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수양산 등 명산의 절경지역 천연바위에 김일성·김정일 이상화 글귀를 새겨놓고 있다. 특히 경관이 수려한 금강산의 자연훼손이 가장 심각하다. 관동팔경의 하나인 삼일포를 비롯하여 만물상 등의 절경과 내금강 만폭동의 오선봉, 외금강 구룡연의 옥녀봉, 금강산 온정리 매바위산, 그 밖에 묘향산 상원동·만폭동의 자연바위, 백두산의 정일봉 등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자연훼손 사례는 금강산 지역에만도 70여개소에 4,500여 글자를 새긴 것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으로는 약 390개소 2만여 글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분야의 주요조치

시기	내용
1986. 4	•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5차회의에서 '환경보호법' (5장 52조) 제정
1990. 12	• 산업오염의 감시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개최
1991. 4	• '모범산림군' (시·구역) 칭호 제정
1993. 2	• 정무원산하에 비상설기구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신설 - 부문별로 산재한 환경업무를 총괄·조정
1993. 6	• 북한 최초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실시 -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주최, 북한주재 UNDP 대표부 직원 참가
1995. 12	•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5장 55조) 채택
1996. 9	• 국토환경보호부문 및 연관부문 일꾼회의 개최(1996년 이후 매년 개최)
1996. 11	• 매년 10월 23일을 「국토환경보호절」로 제정('96. 11. 27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1996	• 명승지·천연기념물보호법(4장 34조) 제정 • 기존의 '모범산림군' 칭호를 폐지하는 대신 '국토환경보호 모범군' (시·구역) 칭호 제정 • 정무원 부서로 국토환경보호부 신설
1997	• 물자원법 (5장 37조) 제정 • 수자원 조성과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규정 제정 • 바다오염방지법 제정
1998	• 종전의 '식수월간' (4~5월, 10~11월)을 '국토환경보호월간'으로 변경 • 국토환경보호단속법 제정 • 헌법개정에 따라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 보호성' 신설

시기	내 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수절 변경(4월 6일 → 3월 2일) • '도시경영 및 국토환경보호성' 을 '도시경영성' 과 '국토환경보호성' 으로 분리·개편 • 유용동물보호법 개정(1959년 '유용동식물 보호할데 대하여' 를 수정·보완) • 유용동물보호법시행규정(4장 37조) 제정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지구법(29조 부칙3조) 제정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법(5장 39조) 제정 • 자연보호구 정비 • '인간과 생물권 계획' (MAB) 국제조정이사회 이사국 선출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환경상태보고서 2003' 발간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동강오염방지법(2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5장 33조) 제정 • 자연환경보호기금 설립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 가입 • 중국과 환경협력협정 체결(황사 및 접경지역 하천오염 관리 관련)



08

문화

- 1. 교육
 - 가. 교육정책
 - 나. 교육관리체계
 - 다. 교육내용
 - 라. 교원양성
 - 마. 특수교육
 - 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교육변화
- 2. 문학·예술
 - 가. 문예정책 및 이론
 - 나. 문예단체
 - 다. 분야별 현황
- 3. 언론·출판
 - 가. 언론
 - 나. 출판
- 4. 관광
 - 가. 관광정책
 - 나. 관광자원
 - 다. 주요 관광지
 - 라. 관광시설
- 5. 체육
 - 가. 체육정책
 - 나. 지도·양성기관
 - 다. 주요 체육대회
 - 라. 체육시설
- 6. 종교
- 7. 역사
 - 가. 시대구분
 - 나. 주체사관
- 8. 언어
- 9. 문화시설





VIII. 문화

1. 교육

가. 교육정책

북한의 교육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헌법 제43조에서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고 명시, 교육이념이 인간을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에 따른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지침은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시와 명령을 정리하여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¹⁾이다. ‘테제’에서는 북한 교육의 목적을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999년 8월에는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동 법은 제1장 교육법의 기본, 제2장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 제3장 교육기관과 교육일꾼, 제4장 교육내용과 방법, 제5장 교육조건보장, 제6장 교육사업 등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법은 1977년에 제정된 ‘사회주의 교육테제’에서 ‘혁명인재 육성’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을 ‘인재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제1장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 제2장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성'으로 고쳐 이념성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 '수재 교육원칙'으로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임을 밝히고 있어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했던 이전 시기와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고양,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10월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통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지침'을 제시하면서 일련의 교육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0년대 말 중등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설치한 데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컴퓨터 분야의 중등 영재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대학에서 '수재반'을 설치하는 등 과학 기술분야의 수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양질의 기술 인력을 조기배출하여 산업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수업연한을 축소조정하고 학점제와 선택교과목제를 도입하였다. 현대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일부 학과를 통합하고 교육과정도 재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들어 북한은 양질의 인력 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교육체계 개편과 교육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 교육관리체계

북한의 교육정책 수립과 총괄적 지도·통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에서 하고 정책집행과 교육행정의 총괄은 내각 산하의 교육성에서 하도록 분담하고 있다. 교육성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를 두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대한 총괄지도는 도(직할시)·시 인민위원회 교육처가 담당한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취학전 교육체계,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

계, 그리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성인교육체계로 구분된다. 기본 학제는 4-6-4(6)제로서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은 4~6년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 반 1년부터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까지로 되어 있다.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로는 공장, 농장 등에 부설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일반대학의 야간부 및 통신부, 방송통신교육기관이 있다.

(1) 의무교육제도

북한은 의무교육을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면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²⁾ 북한에서 말하는 의무교육의 취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조기에 사회주의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학생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두고 있다.

의무교육제도 시행 역사를 보면,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4차회의(1949.9.8)에서 1950년 7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인해 지연되어 1956년부터 의무교육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1956년부터 초등의무교육제(4년제 인민학교)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 중등 3년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1967년에는 9년제 기술의무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는 4년제 인민학교(현 소학교)와 5년제 중학교 과정을 의무화한 것이다. 1972년 당 제5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10년제 의무교육과 1년간 학교 전 의무교육'을 동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함에 따라, 1975년 9월에 유치원 낮은반부터 초등 4년, 중등 6년의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른다.

2002년 9월에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개칭하여, 현재 북한의 기본 학제는 유치원 1년(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중 높은반 1년이 의무교육),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역사

시행년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의무교육(인민학교 4년+ 중학교 5년)
1975년~현재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 고등교육

북한은 일반 고등교육체계와 성인교육체계를 병행 발전시켜왔다. 해방 후 북한 지역에는 단 하나의 고등교육기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초기 북한 교육의 핵심적 과제였다.

1946년 10월 1일 북한 최초의 대학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이 건립되었고 이후 2년간 함흥의과대학, 흥남공업대학, 청진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1948년 7월 7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제157호 결정’에 의해 고등교육 확장시책이 발표되었고, 김일성 대학의 학부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전문학교를 승격시키는 방법으로 대학 증설이 진행되었다. 전후 ‘3개년 복구건설기’(1954~1956년)에는 정치·경제분야 대학들이 신설되었으며, 1957년부터 시작된 ‘5개년계획’ 기간에는 전반적 중등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중등교원의 대량 양성을 위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 확장에 주력하였다.

19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 과업의 하나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천명됨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단기간 내에 고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대학을 신설하기 보다는 지방 산업 운영에 필요한 현장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단과대학을 증설하고 고등전문학교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에서는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의 결합원리에 따라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이라고 일컫는 성인교육기관을 발전시켜왔다. 1948년 2월과 9월 김일성종합대학에 야간학부와 통신학부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1948년에 3개 대학 20개 학급의 야간대학과 4개 대학 82개 학급의 통신대학을 설립하였다.

1960년 8월에는 노동당 확대전원회의를 개최, 6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확보를 위해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 설치와 야간·통신교육 확대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7개년 인민경제계획(1961~1970년) 기간에 공장대학이 증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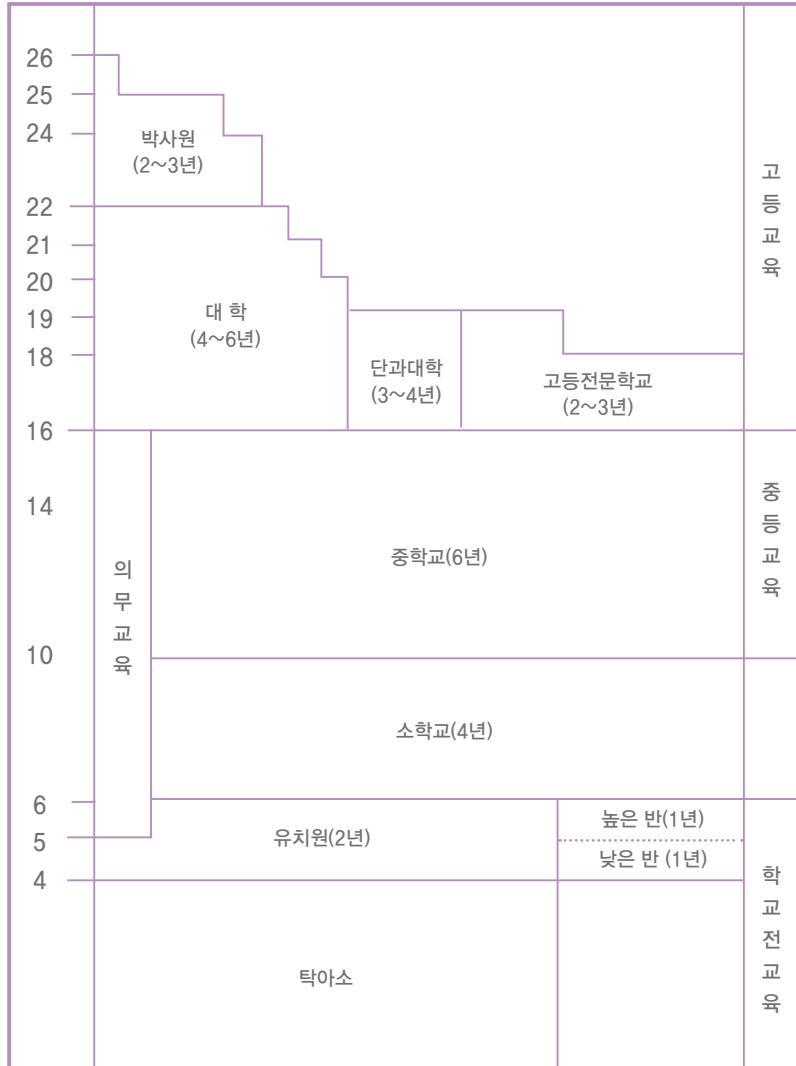
현재 북한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고려성균관’ 등 3개의 종합대학을 위시하여 320여 개 정도의 대학이 있고, 대학생은 33만여 명 정도로 추정된다. 남한과 비교하면 대학은 1/4 정도, 대학생은 약 1/10 정도의 규모이다. 각 도마다 공업대학, 농업대학, 의학대학, 사범대학, 교원대학, 공산대학 등이 있다. 주요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는 공장대학이, 대규모의 협동농장과 수산사업소에는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부설되어있다. 이외에 체육 및 예술전문학교와 기술계 전문학교가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중시 요구에 맞게 관련분야 인재양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9년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자동화학부와 물리학부를 일부 개편하여 ‘컴퓨터과학대학’을, 2001년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정보과학기술대학’과 ‘기계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였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학부와 학과를 신설하고 있다. ‘평양컴퓨터기술대학’과 ‘함흥컴퓨터기술대학’을 설립하였으며, 2003년에는 대학에 23개, 전문학교에 6개의 정보공학과를 신설하는 등, 전국적으로 77개 대학에서 정보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과업의 하나로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교육기간 단축, 학과 통폐합, 원격교육 시스템 도입 등 교육방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08년에는 종전에 80여 개 학과로 운영되던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학과를 30여 개로 통폐합했으며, 정보·나노공학 분야의 비중을 높였다. 또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화상강의, 원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 체계



다. 교육내용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의 양대 과목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소학교는 4년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을 위시하여 ‘사회주의 도덕’, ‘국어’, ‘수학’, ‘영어’, ‘컴퓨터’ 등 총 13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어와 컴퓨터 교과는 2008년도 9월에 개설되었다.

소학교 교육과정

번호	과목명	구분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1	1	1	2
3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1
4	사회주의 도덕		2	2	1	1
5	수학		6	6	6	6
6	국어		6	6	7	8
7	자연		2	2	2	2
8	위생					1
9	음악		2	2	2	2
10	체육		2	2	2	2
11	도화·공작		2	2	1	1
12	외국어				1	1
13	컴퓨터				1	1

※ 1학기 16주, 2학기 18주

※ 여름(8.1-31), 겨울방학(1.1-2.16), 봄방학(3월말 1주간)

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과목명	구 분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역사					2	2	2
3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1	1	1			
4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역사					2	2	2
5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역사					1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당정책					1주	1주	1주
8	국어		5	5	4			
9	문학					4	3	2
10	한문		2	2	1	1	1	1
11	외국어		4	3	3	3	3	3
12	역사		1	1	2	2	2	2
13	지리		2	2	2	2	2	
14	수학		7	7	6	6	6	6
15	물리			2	3	4	4	4
16	화학				2	3	3	4
17	생물			2	2	2	3	3
18	체육		2	2	2	1	1	1
19	음악		1	1	1	1	1	
20	미술		1	1	1			
21	제도					1	1	
22	컴퓨터					2	2	2
23	실습(남·여)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 북한 교육성의 1996년 교육과정안을 기초로 하여 이후 변화내용 반영

※ 1~3학년 연간 50주, 4~6학년은 연간 40주

중학교는 6년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사회주의 도덕’, ‘수학’ 등 총 23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방과 후에는 소조별로 체육, 예능, 가축기르기 등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학생들은 연간 4~8주간 농촌지원활동 등의 생산노동을 해야 하며, 방학기간에는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전적지·사적지 등을 답사하기도 한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정치사상교과, 일반교과,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의 다섯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공은 전공지정과목과 전공선택과목이 있다. 교과 영역별 수업시간 비중을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사상 교과가 25% 정도, 일반교양(외국어, 체육)이 10~15% 정도, 일반기초가 10~40%, 전공기초가 10~40%, 전공이 10~15% 정도이다. 대학의 설립목적과 성격에 따라 교과 영역별 비중이 달라진다.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역사’, ‘위대한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동지 혁명역사’, ‘김일성주의 기본’ 등의 정치사상 교과와 외국어, 체육 등의 일반교양 교과는 전공과 상관없이 이수해야 하며, 일반기초, 전공기초, 전공 과목은 대학과 전공에 따라 달라진다. 졸업 때까지 이수해야 할 교과목은 30~50개 정도이며, 최근 선택교과제를 도입하여 이중 몇 개 교과는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어·러시아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1개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 및 학과에서는 제2외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어 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라. 교원양성

교원양성제도는 정규과정과 비정규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정규과정은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 교원이 되는 과정이며, 비정규과정은 통신대학, 교원·사범대학의 야간학부 등을 졸업후 ‘교원자격검정시험’을 통해 교원이 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력자 중 6월~1년의 단기과정의 교원양성소를 거쳐 교원이 될 수도 있다.

교원대학은 3년제로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하는데, 2002년부터 유치원 교양원반은 2년 6개월로 교육기간을 단축하였다. 교원대학은 각 도·직할시에 1개씩 총 13개가 있다. 사범대학은 4년제로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며, 각 지역에 21개가 분포되어 있다.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원은 5년제인 김형직사범대학에서만 양성해왔으나, 1994년부터는 각 사범대학에 교육기간 3년인 박사원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탁아소에 종사하는 보육원을 양성하는 기관인 '보육원양성소'는 중학교 졸업자로서 주로 사회경력이 있는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교육기간은 1년으로 북한 내 총 20개가 있다. 한편 북한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교육은 각 도·시·군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재교육강습소'에서 실시하며, 재교육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매년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재교육 강습소'에서 '자질향상시험'을 통해 교원들의 정치사상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마. 특수교육

북한의 특수교육기관으로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제1중학교', 혁명유가족 및 특권층 자녀교육을 위한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유자녀대학', '해주유자녀혁명학원', 무용·음악·조형예술·교예 등의 각급 예·체능전문학교, 외국어 분야의 특수교육을 위한 '평양외국어학원' 등이 있다.

'제1중학교'는 정규 중등학교 과정으로서 1984년 9월 평양 제1중학교 설립을 시발로 하여 전국에 20개가 설립되었으며, 1999년 시·군에 까지 확대 신설³⁾하여 현재 20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 제1중학교에서는 주로 과학, 수학, 컴퓨터 분야의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되고 있다. 제1중학교 학생 중에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최고의 영재교육기관은 '평양제1중학교'이다. 이 이외에도 예체능계 인

●●3

「조선중앙방송」(1999. 3.31)

재를 양성하는 ‘금성제1중학교’, ‘금성제2중학교’에서는 최근 컴퓨터교육 강화 추세에 따라 특수학급인 컴퓨터반을 설치하여 컴퓨터 부문의 영재를 양성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소학교 졸업 후 입학하여 8년제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1947년 10월 12일 인민무력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 자녀들이 입학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엄격한 군사조직 체계 하에서 교육을 받는다.

대외사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4년제 고등교육기관인 ‘평양외국어대학’과 6년제 중등교육기관인 ‘평양외국어학원’이 있다. 이 기관에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등 8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이 이외에도 기타 각 시·도에도 각각 1개교씩 외국어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바.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교육변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인민생활 전분야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경제개혁조치에 따라 교육부문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붕괴된 후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북한은 시장경제 학습과 그 준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시장경제 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경제관료들이며, 해외의 국제기구 또는 대학의 경제 및 경영전문가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김일성종합대학에 ‘자본주의 경제’ 강좌를 개설한데 이어 1998년 나진정보센터 등 무역전문가 양성기관을 설립했고, 2000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자본주의제도 연구원’을 세웠다. 그리고 해외연수생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제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나라로 해외연수생을 파견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선진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의 교육은 경제

학, 국제법, 국제기구 등 학문 분야 뿐만아니라 국제무역, 통상외교, 외국인 투자, 개발문제 등 시장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에는 북한당국의 협조하에 유럽 등 외국기관과 기업들이 북한 간부와 주민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기업운영 등을 가르치고 있다. 스위스 산하기구인 개발기업청의 지원으로 북한에 최초로 사립경영학교인 ‘평양비즈니스스쿨’이 설립되어 2005년 현재 30여 명의 첫졸업생을 배출하였다. 2006년에는 UNDP(유엔개발계획) 후원으로 베이징에서 김일성대학 부총장, 최고 인민회의 등 고위 관료 15명이 시장경제관련 학습을 하였다.

북한사회에서는 대학교육기회를 획득하고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데 출신성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출신성분과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교육잡지 등을 통하여 학습제일주의, 실력제일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2. 문학·예술

가. 문예정책 및 이론

(1) 문예정책의 기초

북한에서 ‘문학예술’은 문학을 비롯하여 음악·미술·공연예술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북한은 목적주의적 문예관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을 ‘근로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화하는 수단’이자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데 복무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예술작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당성·노동계급성·인

민성을 들고 있다. ‘당성’이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⁴⁾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은 ‘당의 노선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노동계급을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⁶⁾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그 본질적 특성인 ‘노동계급성’에 따라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복무하며 인민대중을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온 사회를 혁명화·노동계급화 하는 것”⁷⁾이라 주장한다. ‘인민성’이란 “인민들의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맞는 예술로 만드는 것”⁸⁾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에게 맞도록 예술을 대중화함으로써 “인민들을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떠밀고 나가도록”⁹⁾하는 수단으로 예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념이 ‘인민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당성’을 ‘노동계급성의 가장 철저한 표현이며 인민성의 가장 높은 형태’로 규정하여 당성을 노동계급성이나 인민성보다 우위에 놓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문예정책은 당성과 계급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당과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주체문예이론

북한의 문예정책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주체문예이론이다. 북한에서는 초기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예술의 기본 원리로 삼아 왔으나 주체사상이 대두된 이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변형한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였다.

주체문예이론이 공식화된 것은 1980년 12월 김정일이 ‘전국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하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한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할 것을 제창하면서부터이다. 북한에서는 1972년부터 문학예술 부문에 하달된 김정일의 지시

●● 4
『김일성저작집 3』, p.378

●● 5
위의 책, p.378

●● 6
위의 책, p.249

●● 7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364

●● 8
『김일성저작집 13』, p.35

●● 9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88

를 종합하여 '주체의 문예이론' 이라고 일컫고 이를 예술분야의 종합적인 지침으로 삼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의 문예관' 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문예관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의 이익의 견지에서 문학예술을 대하고 미의 본질을 밝히며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의 본성을 고찰하는 혁신적인 관점과 견해" 를 정립하였다고 말한다.

주체문예이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문예관, 기본이념, 창작방법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 종국적으로는 모든 문학예술의 기본원리를 '김일성 유일사상' 으로 종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수령의 유일한 영도를 철저히 실현' 하고 '당의 문예정책 관철과 당의 유일사상이 정확히 구현된 문학예술작품을 만들어 낼 것'¹⁰⁾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주체문예이론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인 '공산주의적 인간학' 을 기초로 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기본이념인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 을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종속시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자론, 전형화론, 속도전 등을 기본 이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종자론' 은 작품의 내용과 관련되는 이론이다. '종자론' 에 의하면 문예 창작에서 기본 요건은 당정책이 의미하는 바를 체득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종자를 올바르게 잡는 일이다. 여기서 종자란 "소재와 주제·사상을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¹¹⁾ 즉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려는 기본 문제를 의미한다. "창작가가 종자를 똑바로 잡아야 자기의 사상, 미학적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고 작품의 철학성을 보장할 수 있다" 고 보며, 종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것"¹²⁾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문예작품이 지도자의 교시와 당의 정책 구현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형화론이란 공산주의적 인간을 기본 주인공으로 중심에 내세우고 그의 사상성과 생활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10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20.

●11

김정일, 「영화예술론」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2), p.17.

●12

「문학예술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769.

인간이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주체형의 인물’을 말한다. 이러한 전형화 이론에 따라 문학예술은 “비타협적 투쟁으로 긍정인물이 승리”하고 “부정적 인물은 결국 교양·개조”되며 사회주의 우월성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작품에서는 갈등을 설정하지 않는¹³⁾ 획일적인 내용을 보여주게 되었다.

●● 13
한중모 외 『주체의 문예 이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p.19 5~208

●● 14
한중모 외, 앞의 책 p186

속도전이란 예술창작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창작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 나가면서 작품의 사상예술적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¹⁴⁾이다. 즉,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당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예술에 대한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높아가고 있어 더 우수하고 많은 작품을 창작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속도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문학예술의 사상의 핵심 ‘중자’를 바로 쥐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당과 지도자가 제시하는 노선과 정책을 빠른 속도로 예술 창작에 반영함으로써 예술을 인민대중의 사상의식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문예이론은 문학예술을 통해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고 이를 통해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김일성 유일사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예관’을 잘 드러내주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매 시기마다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고 이를 예술작품에 반영하도록 문학예술인들을 추동하고 있다.

2002년 10월 북핵문제 발생 이후에는 국제적 고립 심화에 따른 체제위기감 속에서 문학예술인들에게 김정일의 선군정치 찬양, 주민들의 반미투쟁 제고 등을 주제로 한 선군문학 예술작품 창작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7.1 경제개선관리조치」 이후에는 부분적인 시장경제 도입과 외래문화의 유입에 따라 문예전략도 체제수호와 외래문화 유입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 문예단체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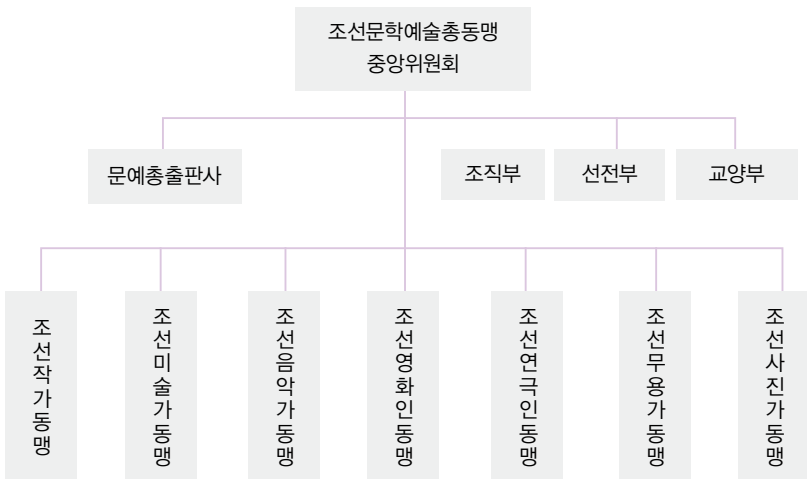
「문학예술사전(中)」(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p.502.

직업예술인의 조직체이자 문학·예술을 총괄하는 단체로서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이 있다. 이에 소속된 예술단체로는 조선작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무용가동맹, 조선음악가동맹, 조선영화인동맹, 조선연극인동맹, 조선사진가동맹 등 7개 동맹이 있다.

문예총은 김일성에 의하여 이룩되었다는 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당의 문예정책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¹⁵⁾ 문예총은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으로 발족되었다가 1951년 3월 10일 월북한 남한 예술인들을 흡수하여 개편된 조선문학예술동맹의 후신이다.

이 조선문학예술동맹은 1953년 9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온 임화, 이원조, 김남천, 설정식 등 남로당계 문예인들의 숙청으로 해산되고 개별단체로 작가동맹, 작곡가동맹, 미술가동맹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2월 무용가동맹, 사진가동맹 등 몇 개의 예술동맹을 다시 망라하여 현재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조직된 것이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산하조직



※ 각 동맹 산하에는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각 시·도에는 총동맹 시·도위원회와 부문별 동맹 시·도위원회가 있다.

북한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의무적으로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예술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문예총과 그 산하동맹에 소속된 철저한 조직인으로서 주제의 구성과 선정, 작업기간이나 분량 및 작품평가에 이르기까지 동맹을 통해 하달되는 노동당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문예총의 각 하위동맹들은 각각 기관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월간지로서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조선예술’ 등이, 계간지로서 2001년부터 ‘예술교육’이 있다.

주체문예이론의 대두와 주체사상체계의 확립 이후에는 각 예술 분야의 창작단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위대성과 영도의 혁명성’을 그려내기 위한 집체창작을 활성화하고 있다. 문학 분야의 4·15문학창작단, 공연예술 분야의 피바다가극단, 만수대예술단, 미술 분야의 만수대창작사 등이 대표적인 창작 및 예술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에는 작가·예술인 전문 조직인 문예총과는 별도로 아마추어 작가와 예술인의 모임인 예술소조가 전지역에 걸쳐 조직되어 있다. 예술소조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각급학교, 인민군대에 폭넓게 조직되어 있는데 문학소조, 연극소조, 음악소조, 미술소조 등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다. 예술소조원들의 창작품은 각 동맹의 기관지를 통해 발표되기도 하고, 이들 중 일부는 후보맹원으로 발탁되어 일정기간 정맹원의 지도를 받은 후 문예총의 정맹원으로 가입하여 전문 작가나 예술가가 되기도 한다.

다. 분야별 현황

(1) 문학

북한의 문학은 해방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체제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소재와 내용 측면에서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에는 문학이 인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 선전선동의 수단

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중화론’이 주요한 이론으로 등장하고 작가는 ‘인간의지를 개조하는 기사’로 규정되었다. 이때의 문학은 주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하거나 사회주의 제도로의 변화를 찬양하거나 또는 소련과의 우호친선을 주요한 소재로 삼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6·25전쟁 시기에 문학은 ‘사상개변의 교양적 역할’에서 ‘투쟁의 무기’로 변모되어 격렬한 어조를 동원하여 반미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부터 정론문학, 실화문학 등이 등장하게 된다.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투쟁시기’(1953.7~1960)에 이르면 정치적 숙청과 함께 문학 분야에서도 ‘사상투쟁’이 전개되었다.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투쟁시기’라고 부르는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전면적 건설’을 위한 3대 혁명 이론과 그 방법으로 천리마 운동이 제시된다. 북한 사회주의 제도 내에서의 권력집중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당시의 현실과 당정책을 반영하는 문제가 문학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사회주의 건설 관련 작품과 남한 현실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며, 항일혁명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67년 김일성의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데 대한 방침’이 나온 이후의 시기를 일컬어 북한에서는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시기’라 부르고 있다. 이때부터 ‘주체사상’이 확립되고 김일성의 권력이 점차 절대화되어 감에 따라 ‘유일사상체계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를 위한 문학의 임무가 강조된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 백두산 창작단¹⁶⁾, 4·15 문학창작단 등이 창설되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체계화하는 작업과 예술활동을 통해 이를 선전·선동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때부터 문학예술의 주요한 이론인 ‘전형화론’, ‘종자론’, ‘속도전론’, ‘집체창작방법’ 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김일성의 ‘항일혁명 투쟁’을 중심으로 한 수령 형상화 문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찬양 작품, ‘사상·기술·문화’ 3대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주체시대의 인물전형을 소

●●16

백두산창작단은 1967년 6월 창립되어 예술영화 ‘내나라’(1988년) 등을 제작했으나 1993년에 해체되었다.

재로 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김정일이 후계자의 지위를 공식화하기에 이르자, 김정일의 주도로 문학예술을 통해 김일성과 그의 주체사상을 우상화, 절대화 하는 일이 가속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문학·예술분야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가 사라지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일성동지의 지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1980년대 이후의 문학은 ‘주체시대의 문학’이라고 불린다.

1972년부터 4·15 문학창작단에 의해 창작되기 시작한 김일성 우상화 시리즈물인 ‘불멸의 역사’ 총서가 1988년에 이르러 항일혁명투쟁의 시기를 다룬 15권으로 총정리되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해방후 편이 창작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개선’, ‘푸른산악’, ‘변영의 길’ 등이 출간되어 현재 총 20여 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와 대비될 수 있는 김정일 우상화 총서로 ‘불멸의 향도’ 총서도 1992년 ‘푸른하늘’을 시작으로 2003년 ‘총대’에 이르기까지 10여 편 간행되었다.

한편 1980년대에는 그 이전의 틀에 박힌 주제로부터 벗어나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다루는 ‘사회주의 현실 주제’ 문학이 등장하였다. 시문학에서 서정화의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소설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갈등, 세대간의 문제, 여성 문제, 애정윤리 문제 등 다양한 현실 문제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시문학에서는 ‘휘파람’, 소설문학에서는 ‘청춘송가’가 남녀의 애정을 다룬 이 시기의 대표적 작품이다.

1990년대에 이르면 김일성 우상화 작업인 ‘수령 형상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김정일을 형상화하는 예술작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붕괴 및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지도자 형상화’ 작품이 대량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직후인 1991년 말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이 ‘원수’로 추대된 1992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기간에는 무려 1천 6백여 편의 찬양시가 창작·발표되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를 ‘일대 전환의 시기’로 간주하면서 그 이유를 ‘수령 형상 문제 해결’과 ‘지도자 형상화’에서 찾고 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과 김일성을 동일시하는 작품

들을 통해 김정일이 김일성을 잇고 있는 유일한 계승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식량난과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정신과 ‘내일을 위한 오늘’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사상적 해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식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작품들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사상교육을 강화해 왔다.

한편, 1990년대에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전형을 창조하되, 긍정성과 부정성을 동시에 지닌 현실적 인물을 그려내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문학의 사상교양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선군혁명 문학’이 본격적으로 강조되면서 선군 사상·선군정치 선전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집중 창작되고 있으며, 비전향장기수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도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간관리층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부패상에 대한 비판이나 이혼문제, 세대간 갈등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 소설도 등장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2) 미술

북한은 “미술은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 미술로 되어야 한다”¹⁷⁾는 김일성 교시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당의 지도에 충실한 작품을 요구하고 있다. 즉 미술을 “조형적 언어를 가지고 현실을 사상미학적으로 파악하며 시각적 구체성, 직관적 명료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형적 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의 사상정서 교양에 이바지”¹⁸⁾하는 예술로 보고 있다. 북한은 미술이 노동과정에서 생겨나서 인간생활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하면서도 지난날의 미술유산에는 착취계급의 사상과 취미를 반영하고 그들에게 이용된 것이 많으며, 일제식민지 통치에 의해 왜곡되어 민족적 및 계급적 대립과 투쟁을 심각하게 제기하여 예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7 「김일성저작집 20」 (1982), pp.427~473.

●18 「문화예술사전」, p.377.

따라서 북한은 참된 미술의 전통을 항일혁명미술에서 찾으면서 김일성이 이끈 항일혁명미술이 최초로 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혁명미술이었다고 주장한다.¹⁹⁾ 때문에 북한의 미술에는 기념비 미술이라는 명칭의 목적적 작품이 많고, 선전화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²⁰⁾

북한에서는 미술의 분야를 사회적 기능에 따라 기념비 미술, 영화미술, 무대미술, 장식미술, 산업미술, 건축미술, 일반미술로 나누고 있다. 재료와 기법에 따라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주의의 원칙에 따라 추상화, 추상조각 등은 ‘추상은 죽음’이라 하여 배척된다. 따라서 “인간성격과 인간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구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생동하게” 그려낸 사실화만 존재한다.²¹⁾

북한의 회화는 조선화, 유화, 벽화, 판화, 역사화 등이 망라되는데, 조선화는 동양화의 맥을 이은 것이지만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을 혼합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화는 전통적인 동양화와는 달리 원색 위주이며 형태감이 분명하다.

북한의 공예에는 금속, 자개, 나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만년화라고 하는 독특한 공예가 대표적인 것이다. 만년화는 조개 껍질이나 유리구슬을 이용, 모자이크화처럼 그려 제작하는 것으로, 만년화 작품으로 ‘만경대 고향집’이라는 장식화가 유명하다. 또한 ‘조선보석화’라 하여 조선화를 그린 바탕에 천연보석가루를 안료로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회화기법도 있다.²²⁾

공예품의 창작·보급은 평양의 중앙미술창작사를 비롯하여 각 시·도에 1~2개씩 있는 미술창작사에서 담당하는데, 해외에도 수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가장 유명한 곳은 평양 ‘만수대창작사’²³⁾이다.

1996년에 만수대창작사 등 여러 미술창작사에서 은퇴한 원로화가들이 자율적으로 송화미술원이라는 민간단체를 결성하였다. 이곳에 소속된 화가들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체미술’의 획일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 19
『조선대백과사전 24』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p.113~114.

●● 20
북한 최고의 주체미술가로 평가받았던 사람은 정영만이다. 김일성상 계관인, 인민예술가, 2중노력영웅인 정영만은 1999년 6월 사망하였으며, 그의 사망 후 김정일은 유가족에게 친필서한을 보내기도 하였다.

●● 21
『주체이론에 기초한 문예이론』 1970, p.46 참조.

●● 22
『조선대백과사전 1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46.

●● 23
만수대창작사는 북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술창작단체로 1959년 11월 17일 창립되었다. 산하에 조선화창작단, 벽화창작단 등 10여 개의 창작단과 동상, 기념품 등 6개 제작단이 있다. 주체사상탑 등 건축물과 평양지하철도 벽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조선화, 유화 등을 창작하였다.

(3) 음악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는 북한의 음악 역시 ‘생활과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을 따른다.²⁴⁾ 김정일의 통치방식의 하나로 ‘음악정치’를 선전하며 음악을 통한 사상교양을 강조함에 따라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 가사를 통한 의사전달이 가능한 성악곡을 중요시한다. 이들 노래의 가사는 당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²⁵⁾ 혁명성, 노동의욕 등의 고취를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순수 서정적인 가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음악 600곡집’에는 가극아리아 190곡, 가곡 302곡, 영화주제가 108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가곡중 80%에 가까운 232편이 직접 김일성을 찬양하는 가사로 되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김일성에 이어 김정일 찬양가요까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 사망 이전까지는 ‘김정일화’,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노래’, ‘빛나라 정일봉’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보급되었는데 주로 김정일 권력승계에 초점을 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1995년부터 8년간 발표된 1,000여곡은 ‘선군혁명 음악’이라고 규정하는데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승리의 길’, ‘강성부흥 아리랑’, ‘선군시대 인민의 노래’ 등이 대표적이며 김정일 및 당에 대한 충성과 체제결속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 노래는 주제가 선명한 가사와 따라 부르기 쉬운 평이한 멜로디, 4·4조 혹은 4·3조의 전형적 박자를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의 전통음악은 그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다. 전통성악 중 판소리와 남도민요는 김일성이 특유의 탁성을 ‘썩소리’라 하여 비판하였기 때문에 배척되었다. 김정일은 민요야말로 “민족적 정서와 생활감정에 맞는 참다운 인민의 노래”라고 하면서 민요 발굴을 강조하였으나, 그 결과 발굴된 상당수의 민요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하였으며, 이를 목에서 쉽게 나오는 비성이 섞인 독특한 가성으로 발성하며 부르기 때문에 전래 민요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1950년대부터 국악기 개량사업을 진행하였고, 1970년대에는

●24

『문화예술사전』, pp.1171~1186.

●25

최초의 김일성 찬가는 조선의 별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 노래를 청년공산주의자 김혁이 창작하여 1950년대 후반기부터 널리 보급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1992.9)

김정일의 주도로 이를 더욱 본격화하였다. 오음계로 인한 종래 악기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아무리 복잡한 곡도 자유자재로 연주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음계개조운동을 벌여, 전통악기를 12음 반음체계에 맞게 개량하였다. 예컨대 가야금은 명주실로 끈 줄 대신 쇠로 만든 줄을 사용하며 부들을 없애고 현을 18줄 또는 그 이상으로 개량하였다. 전통악기를 새로이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와공후를 개량한 33현의 옥류금이 제작되어 전통음악에서 필수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전통음악은 인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요나 노동요 외에 대중적으로 연주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양음악무용대학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통음악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민요를 전자악기와 양악기만으로 연주하는 북한식 경음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기도 한다.

서양음악은 1950년대 중반까지는 연주가 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는 대외용과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주되지 않는다.

대중가요는 노동의욕 고취를 위한 경제선동가요 등이 경제현장에서 연주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때 주로 사용되는 악기는 아코디언, 멜로디언, 멜로디카, 관악기 등이다.

1990년 이후 비정치적인 생활가요풍의 가요가 창작·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사랑을 주제로 한 ‘휘파람’이 북한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²⁶⁾의 공연도 인기를 얻고 있다.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에는 선군정치, 군민일치 미풍 등을 강조하는 가요창작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전시가요도 다시 등장·보급되고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한을 의식하여 ‘우리는 하나’, ‘반갑습니다’ 등 통일을 주제로 한 가요 보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근래에는 일제시기에 불렀던 대중가요, 동요, 가곡 등도 반일·애국의 신념을 심어준 계몽기 노래들이라 하여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음악가 양성은 크게 조기교육, 수재교육, 전문교육을 통해

● 26

인민배우 김광숙, 공훈배우 이분희 등은 ‘보천보 전자악단’에, 인민배우 염청 등은 ‘왕재산 경음악단’에 소속되어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조기교육은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들을 일찍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 뛰어난 음악가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주로 유치원 특별교육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 경상유치원, 대동유치원, 창광유치원 등 유치원 음악반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수재교육은 뛰어난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가진 아동을 선발하여 조기교육을 실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재교육 대상자 선발은 추천제가 아니라 중앙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 수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재교육을 담당하는 김원균명칭평양음악대학 특설학부에 입학하여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된 도 예술대학에서도 우수한 소질을 가진 아동들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국립교향악단을 비롯한 북한 교향악단의 수준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4) 영화

예술을 순수예술로서가 아니라 목적예술로 파악하는 북한에서는 영화를 ‘직관예술’이라 하여 선전·선동효과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어떤 예술장르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영화는 음악, 미술, 연극 등의 모든 예술적 요소가 결합된 종합예술로서 주민들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당의 노선 및 정책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보이고 있다.

김정일의 저술로 주체사상과 주체적 문예이론을 영화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문헌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영화예술론(1973)’은 북한의 영화정책과 영화제작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작된 모든 영화는 이에 의거하여 제작되고 있다.

북한 영화는 전형적으로 긍정 전형과 부정 전형의 대립에서 긍정 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를 취하며, 악역으로는 미군, 일제, 반당분자, 지주, 자본가 등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 전형인 악역이 시대적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김정일의 지시로 상대적으로 부정 전형

이 없는 상태에서 '긍정 전형을 통한 감화' 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²⁷⁾ 그 후 절대적 악역은 없어지고 오직 긍정적 주인공의 감동적인 태도로 모든 오류가 시정되는 구도로 변화하게 되었다.

북한영화는 1950년대 말 천리마운동 이후 대형화되어 20편까지 이어지는 대작시리즈 등 방대한 작품 위주로 제작되었다. 이후 대작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해외영화제에서 외면받자 1984년 이후 규모를 다소 줄이는 대신 서정성, 사실성을 강화하는 변화를 보였다. 최근에는 영화작품에서도 과거 계급성, 이념성 일변도의 작품에서 결혼 문제, 가족문제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 출범 이후에는 선군정치가 강조되면서 군사 관련 영화제작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대외적인 선전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영화제에 참여하였고, 1987년 9월에는 '비동맹 및 기타 발전도상국가들의 평양영화축전'²⁸⁾ 을 창설하였다. 제1차 영화축전에서는 극영화 '도라지꽃' 으로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을, 1990년 9월 개최된 제2차 축전에서 극영화 '생의 흔적' 으로 여우주연상, 기록영화 '통일의 꽃' 으로 축전 최고상인 햇불금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2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축전에서는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제2부' 가 햇불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8년 9월에는 제11차 평양영화축전(평양국제영화제)이 개최되어 40여 개 나라에서 80여편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2~3년을 주기로 개최되는 이 국제영화제에는 최근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참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영화가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 칸 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한 여학생의 일기' 가 처음으로 출품되어 상영되었다.

국내 영화제로는 1991년 2월 김정일 49회 생일을 기해 신설한 '조선영화축전' 이 유일한데, 여기서는 전년도에 제작된 영화 중 예술·기록·과학·아동영화 등 분야별 최우수 작품을 선정, '2·16 영화상' 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영화기법 측면에서 영화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데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0년 제작된 '살아있는 영혼들' 은 북한판

●● 27

최윤섭 "부정인물형상에 서 도식성을 극복하자", 『청년문학』 (평양 문예출판사, 1988.4), pp. 43~47.

●● 28

비동맹 및 개발도상국 영화축전 은 2~3년을 주기로 개최되며, 금·은·동 햇불상과 촬영·연기상 등이 주어진다.

타이타닉에 비견되기도 한다. 촬영기재, 특수효과를 위한 미니어처 제작, 합성촬영, 편집, 디지털기술 등 영화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5·18 영화과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주요 영화촬영소로는 극영화 전문의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인민군 4·25 예술영화촬영소,²⁹⁾ 조선과학영화촬영소,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등이 있다. 각 촬영소 내에는 2~3개의 제작진이 ‘창작단’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영화인 양성전문기관으로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은 영화전문가 외에도 방송원, 사진촬영가 등 영화매체 분야의 전문종사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에는 영화창작학부, 영화배우학부, 영화기술학부 등이 있으며 연구소와 박사원, 재직간부 양성 및 통신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여섯 종류가 있다. 이 여섯 종류의 공간은 전문영화관, 공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영화도 상영하는 극장, 문화회관을 비롯한 사회문화시설, 생산현장의 영화상영시설, 이동영사대, 특급호텔 등이다. 극장, 문화회관을 포함해서 북한전역에 영화상영시설은 약 1천 개가 있으며, 전문영화관은 주요 도시에는 3~4개, 지방 소도시에는 1개소 정도가 건립되어 있다.

(5) 연극

북한에서 연극은 영화나 가극에 비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편이다. 김일성이 일제시기 직접 써서 공연했다는 연극 ‘성황당’을 1978년 6월 14일 김정일이 대규모 무대용으로 음악, 무용 등을 가미하여 새롭게 창작하도록 지시한 후, 새로운 형태인 ‘성황당식 혁명연극’ 방식이 발전하게 된다.³⁰⁾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자주적 인간의 전형 창조, 과장 없고 솔직한 대사, 방창 등 음악적 요소 첨가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정일의 지도 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하여 주체예술의 새 전성기’³¹⁾를 열었다고 주장한 ‘성황당식 5대 혁명연극’으로 ‘성황당’, ‘3인1당’, ‘경축대회’,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를 꼽고 있다. 성황당식 혁명연극

●●29

경희극 ‘약속’ (1996.3), ‘축복’ (1997.3), ‘편지’ (1998), ‘동지’ (1998) 등도 창작하였다.

●●30

「조선중앙방송」(1988, 6.14)

●●31

「조선중앙방송」(1988, 6.14)

들은 기존의 연극내용에 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무대와 음악·무용을 가미함과 동시에 “원작에 밝혀진 주제와 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제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시켰다”³²⁾고 선전하고 있다.

5대 혁명연극 외에 1980년대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으로 새롭게 창조된 현대극으로는 ‘초석’, ‘조국의 품을 찾아서’, ‘이 길을 간다’, ‘어머니와 아들’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선군혁명시기 연극으로 대표되는데 연극 소재로 혁명적 군인정신, 강계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각하는 잘못 보았소’, ‘약속’, ‘축복’, ‘끝장을 보자’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연극인 양성은 평양연극영화대학을 비롯하여 각 도 예술대학, 영화촬영소 양성반과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6) 가극

영화와 더불어 북한당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연예술분야는 가극이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오페라 형식을 띠고 있으나 구성면에서 다소 다르다. 우선 가극은 ‘절가’라는 형식의 노래를 특징적으로 사용하는데, 절가란 여러 개의 절로 나누어진 정형시를 하나의 곡에 맞춰 반복하여 부르는 노래로서 반복에 따른 강조의 효과를 띠고 있다. 이 절가는 북한 혁명가극의 기본적인 표현수단으로, 혁명가극은 오페라의 아리아, 레시타티브 등을 모두 절가로 바꾸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혁명가극에는 방창이라는 형태의 노래가 있으며 이는 배경합창단이 주인공의 입장, 상대자의 입장, 군중 및 관객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해석하면서 극의 전개를 이끌어가는 합창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방창과 절가가 혁명가극의 표현상의 큰 특징이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김정일의 지시로 항일혁명기의 연극 ‘혈해’를 개작한 혁명가극 ‘피바다’로부터 출발되어 웅장한 규모의 혁명가극을 속속 공연하였는데, 이로부터 ‘피바다식 혁명가극’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혁명가극의 대표작으로는 ‘5대 혁명가극’이라 불리는 ‘피바다’, ‘꽃

●● 33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2, p.901.

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밀림아 이야기하라’, ‘금강산의 노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피바다’는 1971년 피바다가극단에서 초연되어 “오늘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참된 교과서가 되고 있으며 혁명적 가극예술의 불멸의 가치로, 고전적인 본보기로 되고 있다”³³⁾고 선전하고 있다.

주요 예술단체 현황

단체명	내용
피바다가극단	1946년 북조선가극단으로 발족 1971년 7월 17일 피바다가극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700여 명
만수대예술단	1946년 평양가무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300여 명
국립교향악단	1946년 중앙교향악단으로 창립 1956년 국립교향악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120여 명
국립민족예술단	1947년 평양모란봉예술단으로 출발하여 199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500여 명
국립연극단	1946년 중앙예술공작단을 전신으로 창립 197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국립희극단	1994년 창립, 단원수는 불명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	1947년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협주단으로 창립 1948년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훈합창단으로 개칭 1998년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으로 독립 2004년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으로 개칭
조선인민군 협주단	1947년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협주단으로 창립 194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영화 및 방송음악단	1958년 창립, 단원수는 불명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963년 조직, 단원수는 약 1000여 명

3. 언론·출판

가. 언론

(1) 언론정책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67조는 ‘국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역할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선전하고 옹호관철하는 한편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할 것을 맹세한다” 고 함으로써³⁴⁾ 언론이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 수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 언론은 김일성·김정일의 교시관철과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복무한다는 역할과 함께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는 기본조건 하에서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된다.³⁵⁾

특히 김정일은 1995년 11월 언론매체에 보낸 친필서한을 통해 언론매체가 사상교양 및 통제기능을 강화해 체제결속에 앞장설 것을 촉구함으로써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³⁶⁾

(2) 언론현황

(가) 신문

북한에는 우리와 같은 개념의 신문은 없다. 다만 노동당, 내각, 사회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가 있을 뿐이다. 즉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기관지인 ‘청년전위’ 등 3개 중앙지와 각 시·도 당위원회에서 발행하는 10여개 지방지가 있다. 이상의 일간지 외에 해외홍보용 주간지인 ‘The Pyongyang Times’ 와 내각의 각 성에서 발간하는 ‘철도신문’, ‘건설

●●34
조선기자동맹 제8차 대회(2001.11.19)에서 결의.

●●35
『노동신문』 만호 발간기념사설(2001.12.1)

●●36
김정일이 조선중앙통신사·조선중앙방송위원회·노동신문사 창간 50돌을 맞아 발송한 기념 축하서한(중방, 1995.12.13)

●● 37

『조선대백과사전 7』(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8), p.489.

신문’, ‘교육신문’ 등의 기관지가 있으며 공장·기업소 발행의 공공신문과 각 대학 발행의 ‘대학신문’ 등이 있다. 북한 신문들은 우리와는 달리 정보전달이나 비판기능보다는 당이나 정권의 선전선동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찬양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관련 행사와 선동기사들이 집중 게재되는 반면, 범죄·도난사건, 체제비판 기사나 광고 등은 게재되지 않고 있다. 기사는 당에서 하달하는 선전 선동 방향과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며, 사전 검열을 거친다.

① 노동신문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노동신문사에서 발행하고 있는 노동신문은 1945년 11월 1일 ‘정로’ 라는 제호로 창간되었으며, 46년 9월 1일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북한 언론의 ‘총참모부’ 라 지칭되고 있는 이 신문은 “위대한 수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와 인간을 혁명적으로 개조하고 전당과 전체인민을 김정일의 주위에 철석같이 묶어 세우며 당 대열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고 있다.³⁷⁾

또한 노동신문은 대내외 주요현안 및 계기발생시 정론이나 사설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총 6면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다. 노동신문사의 기구와 편제는 조선기자동맹 위원장직을 겸직하는 책임주필이 최고책임자로 있고, 책임주필 밑에 고문 부주필과 3~7명의 부주필이 있으며, 그 아래 편집국, 당 역사 교양부, 당 생활부, 혁명교양부, 남조선부, 국제부 등 부서가 있다.

노동신문사는 신문 발행 뿐만 아니라 계기시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는가 하면 주요 사설논집, 대내·대외일지, 노동통신원 등의 출판물을 발간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도 한다. 2005년 11월 1일 노동신문 창간 60돌을 맞이하여 창간 60돌 기념보고회를 개최하고 ‘선군혁명위업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적 기수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것임’ 등을 천명한 바 있다.

② 민주조선

민주조선은 1945년 10월 15일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직속 기관지인 ‘평양일보’로 출발하여 1946년 6월 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기관지인 민주조선으로 창간되었다. 그후 1948년 9월부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기관지로 발행되고 있다.

민주조선은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당정책 관철에 힘있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³⁸⁾

조직은 책임주필·부주필(4명)과 편집국, 인민행정부, 공업부, 사회문화부, 지방서한부, 사진부, 경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주조선은 내각 기관지 특성상 당 관계기사보다는 행정관련 기사가 비교적 많이 실리고 있다. 민주조선은 조선중앙통신사와 노동신문 보도부, 국제부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 4면으로 제작되고 화요일 및 금요일과 특별한 날 등은 6면으로 증면 발행된다.

③ 청년전위

청년전위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1946년 1월 17일 ‘민주청년’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 1964년 5월 12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제5차대회에서 동 연맹의 명칭이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으로 바뀌자, 기관지명도 ‘노동청년’으로 개칭되었으며, 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뀐에 따라 1월 19일 ‘청년전위’로 명칭이 바뀌었다. “청년들 속에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설선전하며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며 청년대중을 당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에 그 임무를 두고 있다.³⁹⁾ 청년전위는 청소년들이 당의 방침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사업

●●38

『조선대백과사전 10』(평양백과사전출판사, 1999), p.97.

●●39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백과사전출판사, 1999), p.31.

과 선전·선동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당의 선전도구라고 할 수 있다.

책임주필·부주필(5명)이 있으며, 편집국, 군중문화부, 학생부, 청년생활부, 사진부 등이 있다.

④ 지방신문

지방신문은 각 시·도당위원회 기관지로 시·도 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된다. 지방신문은 “시·도 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김일성의 혁명사상·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김일성·김정일의 지시 관철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⁴⁰⁾

지방신문의 기사는 정책적인 면에서는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행정적·기술적인 면에서는 내각 출판총국의 지시를 받는다. 현재는 평양신문(1957.6.1), 평남일보(1945.10.1), 평북일보(1945.11.27), 함남일보(1945.9.23), 함북일보(1945.12.28), 자강일보(1949.3.11), 양강일보(1955.1.1), 강원일보(1945.12.28), 황남일보(1945.9.6), 황북일보(1946.9.6), 개성신문(1952.2.19), 남포시신문(1985.12.1) 등 12개가 있다.

(나) 방송

① 라디오 방송

북한의 방송사업은 일제하에 있던 평양방송국을 조선중앙 방송국이라 개칭하고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개최한 ‘조국개선환영 평양시군중대회’를 중계방송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55년 4월 9일에는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아 평양중앙방송의 출력을 150kw로 대폭 강화한 것을 시작으로 다시 300kw로 증강하는 등 방송시설을 확장하고 평양시의 주요 가로와 직장클럽, 각 도·시·군소

●● 40

『조선대백과사전 6,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306』

재지와 노동자구 등지에 유선방송을 설치했다. 또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기구로 평양을 비롯하여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신의주, 개성 등지에 지방방송위원회를 두고 중앙방송의 중계방송과 지역방송을 실시했다.

1957년에는 각 방송국의 시설을 정비하고 기술을 개선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리원, 강계, 해산방송국의 무선방송출력이 증대됨에 따라 방송의 청취지역이 확장되었다. 또한 유선방송시설도 확장되어 234개의 농촌과 리에 새로 유선망이 설치되었고 2만 대의 스피커가 증설되었다.

1967년 12월에는 조선중앙방송을 제1중앙방송(300kw)과 제2중앙방송(500kw)으로 분리하여 ‘제1중앙방송’은 대내방송을, ‘제2중앙방송’은 대외와 대남방송을 담당하도록 했다. 1970년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제1방송, 제2방송, TV방송, 대외방송을 조직하여 각 도(직할시)와 시·군에 지방방송위원회를 설치했고, 1972년 11월 10일 제1방송을 조선중앙방송으로, 제2방송을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였다. 1989년 1월 1일부터 방송이 시작된 ‘평양FM방송’은 음악을 통한 대남선전용 방송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한편 북한은 정규방송과는 별도로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에서 관장운영하는 대남 흑색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1967년 3월 평양 순안에 개설된 ‘남조선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이 그것이다. 이후 북한은 1969년 남한에 ‘통일혁명당’이 결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1970년 6월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으로 개칭하였다. 1985년 8월부터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명칭을 변경·운영하다가 2003년 8월 동 방송을 일시 중단하였으나 2005년 3월 ‘반제민전’으로 변경하였다. 유선방송은 평양으로부터 각 도·시·군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유선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의 스피커로 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다.

② TV방송

북한은 1961년 9월 11일 제4차 당대회 이후 TV방송국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1963년 3월 ‘평양텔레비전방송국’으로 개국한 후 1970년 4월 김일성의 생일을 기해 ‘조선중앙TV’로 개명하였다. 1971년 4월 15일에는 대남선전용으로 ‘개성TV방송국’을 개국했다.

TV방송국을 개국한 북한은 TV수상기 제작기술 요원을 일본, 프랑스 등지에 파견하여 기술을 습득케함으로써 연간 TV수상기 1만여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TV방송망을 더욱 강화하여 전국의 텔레비전 보급을 실현하도록 할 것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⁴¹⁾ 1971년 텔레비전의 전국적 보급을 위해 마식령, 황해, 원산, 자강도 일대에 중계탑을 건설하는 등 중계시설을 확장하였다.

1973년 12월 4일 평양시민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토·일요일 및 명절에 한해 영화, 스포츠 등을 주로 방영하는 ‘만수대 TV방송국’을 개국하였다. 1974년 4월 15일 김일성의 62회 생일을 계기로 조선중앙TV의 컬러방송을 실시하였다. 1997년 2월 16일에는 김정일 생일을 기해 대남선전용인 개성TV 방송을 개편하여 대남방송은 조선중앙TV 방송을 그대로 받아서 방송하고 있으며, 대내방송은 조선교육문화TV를 신설하여 방송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1999년 10월 10일 당창건 54돌을 맞아 위성 중계방송을 시작하였다.

최근들어 방송의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TV방송내용은 드라마 소재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시청률 제고를 위해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드라마를 황금시간대(20:30~21:30)에 편성하고 있다. 작품주제도 당, 수령, 체제우월성 외에 ‘신사고’, ‘대외관계’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드라마 내용도 선동, 체제보위 중심에서 남녀문제, 주민생활, 사회적 갈등 해결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⁴²⁾ 조선중앙TV는 남한에서 개최된 ‘한일월드컵축구경기대회’ 및 ‘부산아시아게임’ 등 주요 경기 내용까지도 보도와 함께 녹화방

● 41

『노동신문』 (1970.11.14)

● 42

예컨대 주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로는 수중발레 선수를 소개한 ‘갈매기’ (2001.7), 월남자가족의 생활상을 그린 ‘수평선’ (2001.8), 이혼문제를 다룬 ‘가정’ (2000.9), 평양방면을 자랑하는 ‘육류풍경’ (2001.11), 맞벌이 부부를 소개하는 ‘엄마를 깨우지 마라’ (2002.3) 등이 있다.

송하였다. 또한 2002년 9월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개최된 남북교향악단 합동 연주회를 최초로 남북 동시 생중계하기도 하였다.

③ 방송체계 및 조직

북한의 방송체계는 당과 내각의 이원체제로 되어 있으며, 표면상으로는 내각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일체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 기능과 규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조직과 편제상으로는 내각 문화성 산하기구로, 문화성이 각 방송국의 시설·기재의 관리 및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방송의 내용이나 방송국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는 당과 내각의 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진다.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에 속해 있지만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에서 임명하고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방송체계



북한의 방송체계는 크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방송,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대남방송, 해외동포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방송 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 방송체계를 보면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각 도(직할시)방송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에 군방송위원회가 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방송위원회의 중앙 조직으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존총국과 10여 개 직속 국처들이 구성되어 있고, 산하에 지방방송을 관장하는 시·도방송위원회와, 그 하부 조직으로 제3방송(유선방송)을 담당하는 군·리방송위원회와 유선방송중계소가 설치되어 있다. 방송국의 시설이나 기재의 보급관리나 사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체신성의 하급조직으로는 시·도 체신국이 있고 그 아래에는 군체신소, 체신분소가 있다. 모든 방송내용은 당의 지도·감독에 따라 사전에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검열을 거쳐 방송된다.

(다) 통신사

북한 유일의 국영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사’는 1946년 12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직속 ‘북조선통신사’로 발족했다. 그후 1948년 10월 12일 내각 직속기관으로 조직체계를 바꾸고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노동당 및 내각의 공식 대변기관으로 존속해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의 임무는 여타 언론매체와 같이 “모든 사회성원들을 수령님과 김정일에게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며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자주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이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대성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 고수”할 임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⁴³⁾

조선중앙통신사의 책임자는 사장이나 통신사 내에는 당관계 업무를 전담하는 정치국이 있어서 사실상 정치국이 통신사 내의 전반적 업무를 관장·통제하고 당의 정책과 지시에 합치되도록 지도·감독한다. 부사장은 해외 및 각 도의 지부관계 업무와 사무적인 분야만을 책임지

● 43

『조선대백과사전 1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70.

고 있고 통신내용은 주필이 담당하고 있다.

주필은 부주필의 도움을 받아 대내외 보도기사의 취재, 편집, 제작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의 통신사가 발행하는 출판물의 내용작성을 책임진다. 통신사의 편제상 특이한 점은 노동신문이나 민주조선처럼 ‘남조선 보도편집국’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중앙통신사는 러시아의 이타르타스, 중국의 신화사 등 50여개 통신사와 보도 분야 협조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이집트 등에 기자를 파견하고 영어, 불어, 노어, 스페인어로 된 보도자료를 각국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조선중앙연감」을 비롯한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나. 출판

북한의 출판물은 노동당의 강력한 선전선동의 수단이다. 김일성은 출판물의 성격에 대해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실천으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⁴⁾ 북한은 김일성의 이러한 ‘교시’에 따라 출판활동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주체의 원칙을 근본초석으로 삼는 것이다. 둘째, 당의 지도밑에 출판보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셋째,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이는 것이다. 종자라는 용어는 작품의 핵으로서 ‘사상적 알맹이’를 말한다. 북한은 이상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때만이 출판물의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 발양할 수 있고 보도성과 정론성, 과학성과 진실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출판사로서는 사상혁명과 관련된 도서출판을 주로 하는 조선노동당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등과 과학기술도서를 출판하는 사회과학출판사, 문예작품을 취급하는 문학예술출판사, 사건을 출판하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등이 있다. 또한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교육성 산하의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교육도서출판사와 해외선전책자를 출판하고 있는 외국문출판사가 있다.

●●44

「김일성저작집 10」, p296

북한에서 출판되는 잡지로는 노동당 이론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문학’, ‘경제연구’, ‘과학원통보’, ‘조선예술’ 등 각 분야별로 70여 종이 있다. 이 중에서 ‘금일의 조선’, ‘조선무역’ 등은 외국어판으로서 해외에 배포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문제 시사전문 계간지인 ‘민족문화 유산’, 단행본으로는 ‘김일성전집’ 및 ‘회고록’과 ‘김정일전집’ 등이 발행되고 있다. 대외선전용 잡지화보로는 ‘조선’이 있다.

4. 관광

가. 관광정책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관광을 부르주아 생활양태로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주민의 대외 관광이나 외국인의 북한여행을 ‘자본주의 타락’의 대표적인 형태로 단정하여 백안시하였다. 그나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관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체제선전 목적으로 행해졌을 뿐이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외화수입 증대수단의 하나로 관광사업에 관심을 보여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시설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합영법’을 제정하여 동법에 관광사업을 포함시켰으며, 1986년에는 여행관리국을 국가관광총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1987년에는 9개 관광개방지역을 선포하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주력하였다.

한편 북한은 1987년 세계관광기구(WTO)에 가입하였으며, 1995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에 가입한 데 이어 1996년에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역에 대한 관광규정」을 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등 관광 휴양지 개발에 주력해오고 있다. 특히 1998년 10월 29일에는 현대·아태간의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합의서가 체결되어 금강산관광이 실현되었다.

2002년은 북한의 관광정책 추진에 있어 획기적인 한 해였다. 2002년 5월 15~18일 세계관광기구(WTO) 사무총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채택(2002.11.13)하였다. 또한 2003년 2월 시범육로관광에 이어 9월 1일부터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9월 15일에는 남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평양관광이 시작되기도 했다. 2007년 7월부터 금강산 내금강 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8년 7월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하여 금강산 관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2007년 12월에는 개성관광이 시작되었으나, 북한은 1년만인 2008년 11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성관광을 중단하였다.

1987년에 9개 지역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허용한 후 이후 16개 지역으로 점차 확대하였으며, 2007년 5월에 총 24개 지역을 외국인 관광지로 개방하였다.

2005년에는 인터넷 사이트「내나라(kcckp.net)」를 개편하여 주요 관광지에 대한 최신정보를 중전 영어에서 8개 외국어로 확대하기도 하였다.

관광사업은 내각 산하 '국가관광총국'이 지도·관리하며 관광계획, 관광조사 및 개발, 관광선전 및 시장개척, 관광재정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산하에는 조선국제여행사, 관광선전통보사 등을 두고 있다. 조선국제여행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계약과 판매, 관광안내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의 베이징과 단둥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 관광선전사는 관광선전을 위한 출판물, 비디오, 사진 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으며, 관광기념품전시관을 통해 북한의 특산물, 기념품 등을 외국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관광자원

북한은 통제사회의 특성상 사적, 유적, 문화재, 자연경승, 향토특산물 등의 관광자원이 대체로 잘 보호·관리되고 있다. 내륙 산간지대와

해안지대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경승지와 명소가 많은데 이 중 금강산·묘향산과 같은 이름난 산과 명사십리, 몽금포 등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또한 도처에 산재해있는 맑은 호수와 깨끗한 심산계곡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북한의 문화유적지는 주로 평양 일원이나 함흥, 개성에 편중되어 있다. 선사유적은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유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고구려, 고려, 조선의 유적은 평양, 함흥, 개성에 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선사유적과 고구려고분, 산간지역 사찰 등 상당수의 유적과 문화재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이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곳은 평양과 그 주위의 성곽, 사찰, 동명왕릉, 단군릉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개방된 대표적 사찰은 묘향산의 보현사와 개성의 관음사 정도이며, 사적지의 경우에도 평양과 그 주변에 있는 유적과 개성의 왕릉, 성곽, 성군관, 고려 왕궁터 정도이다.

다. 주요 관광지

(1) 평양지역

평양(平壤)은 ‘평평한 땅’이라는 뜻 그대로 벌판이 넓고 강을 끼고 있고 교통이 발달하였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자 관광의 중심지이다. 평양은 계획된 ‘전시용 도시’로서 100만 년 전 원시사회와 고대·중세사회의 유적·유물 뿐 아니라 200여 개의 공원·유원지도 조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평양시를 ‘21세기 현대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관광, 문화, 체육, 유통 인프라 확충 등 도시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역사유적지로는 대동문, 보통문, 대성산 남문, 단군릉, 동명왕릉, 대성산성, 연광정 등이 있으며, 박물관으로는 조선혁명박물관, 조선미술박물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조선민속박물관 등이 있다. 체제선전용 기념물로는 만수대기념비, 주체사상탑, 천리마동상, 개선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등이 대표적이며, 공원으로는 만경대유

희장, 모란봉공원, 보통강유원지, 중앙식물원, 중앙동물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이 선전하는 주요명소로는 혁명사적지, 김일성종합대학,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평양교예극장, 김일성경기장, 평양지하철도 등이 있다.

(2) 백두산 지구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장군봉(2,750m)을 주봉으로 하여 여러개의 봉우리가 천지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백두산은 전형적인 고산기후가 특징으로 바람 등 기후변화가 매우 심하다. 빙설이 쌓여 있는 기간이 매우 길며, 눈의 깊이가 1.5~2m나 된다. 5월이 되어야 봄철이 시작되며, 여름에도 백두산의 기온은 20℃에 이르지 못한다. 북한은 백두산을 ‘혁명의 성산’이라 하여 곳곳에 김일성·김정일의 혁명전적지, 사적지를 조성해 놓았다. 백두산 중턱에서 향도봉까지 2km 구간에는 지상케이블식 삭도를 설치하였으며 향도봉에서 천지까지 1.3km 구간은 공중 케이블카를 설치하였다. 평양에서 백두산 삼지연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기차로는 20시간 이상 걸린다.

(3) 개성 지구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은 고려시기 유적과 유물, 고려인삼 등으로 유명하다. 관광지로는 시내에 자남산, 선죽교와 주변 유적들, 남대문과 연복사종, 고려박물관, 고려성군관 등이 있고, 주변에 관문점(8km), 왕건왕릉(6km), 공민왕릉(13km), 박연폭포(25km) 등이 있다.

북한은 개성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1992년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1993년 왕건왕릉 복원사업, 박연폭포, 만월대, 대홍산성, 황진이 묘, 영통사 등 100여 개 개성지역 문화재 복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왔으며 2002년 11월 13일 발표된 ‘개성공업지구법’에 개성시를 관광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묘향산 지구

묘향산은 평안북도, 평안남도, 자강도의 경계점에 위치해 있으며, 동서·남북간의 거리가 각각 28km이다. 주봉인 비로봉의 높이가 1,909m로서 산세가 아름답고 기묘하고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다고 하여 11세기부터 묘향산이라 불리어 왔다.

묘향산에는 1,170여 종의 식물과 33종의 짐승류, 133종의 새류, 2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단군의 유적이 있는 단군사와 고려 때 창건된 보현사 등 여러 유적·유물이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각종 선물들을 전시해놓은 국제친선전람관이 위치해 있다. 북한은 1996년 총 120km로 건설된 평양-향산(묘향산)관광도로에 2000년 10월 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아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2층 버스를 묘향산 관광객을 위해 운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묘향산 관광을 위해 상원동과 만폭동, 비로봉, 칠성동 지역에 약 70km에 달하는 새로운 등산로를 닦아 놓았다.

(5) 신의주-의주 지구

압록강 하류 연안에 위치한 신의주와 의주는 도시관광지로서 국경 관문도시인 신의주에서 시작하여 압록강 상류 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의주까지가 주요 관광지이다. 특히 교량을 통해 중국 단둥시와 연결되어 있어 국경 관광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옛 성곽의 성문과 누각들을 비롯한 역사유적들이 남아 있으며, 공원·유원지들이 비교적 잘 꾸며져 있다.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이 탈세협의 등으로 중국 정부에 체포된 후 신의주 행정구 개발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중국의 단둥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향후 이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광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 남포 지구

국제무역항구도시인 남포를 축으로 하는 이 지구는 강서와 대안의 공업지대와 서해갑문, 태성호와 평양골프장, 덕흥동과 삼묘리 고분, 고구려 벽화무덤 등을 포괄하는 관광지이다. 평양-남포간 55km의 간선도로가 있으며, 평양-강서-청산리-남포의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북한은 평양-남포간 46.3km의 10차선 고속도로(청년영웅도로)를 2000년 10월에 완공하였다.

(7) 구월산-과일 지구

구월산-과일 지구는 중서부 해안지구에 접하고 있는 문화휴양지·피서지로서 구월산을 중심으로 과일군, 진강포 지역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은률의 장거리 콘베어벨트, 안악의 고국원왕무덤 등이 유명하다. 이 지구는 평양과 가깝기 때문에 평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관광, 등산, 해수욕 등 단기관광을 오기도 한다.

2003년에 들어와서 북한은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사리원에 ‘민속거리’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이 지역 문화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 원산-금강산 지구

원산에서 세계적 명산인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110km 전구간은 해안·호수·산의 명승지들이 잇닿아 있다. 원산(송도원, 명사십리), 통천(시중호, 총석정), 고성(삼일포, 해금강) 그리고 금강산이 대표적인 관광지역이다. 금강산은 비로봉(1,638m)을 주봉으로 50여 개의 큰 봉우리들과 각양각색의 1만 2천 봉우리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과 폭포, 연못들로 절경을 이루고 있다.

금강산 관광지역은 1998년 11월 개방된 외금강의 만물상 구역과 구룡연(구룡폭포) 구역, 수정봉 구역, 집선봉에서 세존봉에 이르는 계곡

구역과 삼일포를 포함한 해금강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7년 6월 개방된 내금강에는 보덕암, 금강산 최대 마애불인 묘길상, 삼불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금강산 4대 사찰중 신계사를 제외한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가 위치해 있는 문화·관광 자원의 보고다.

(9) 청진-칠보산 지구

청진-칠보산 지구는 함경북도 도소재지인 청진과 온천휴양지로 유명한 경성, 함북금강으로 불리는 칠보산과 그에 면하고 있는 해안선을 포괄하는 관광지이다. 북동쪽으로는 황금의 삼각주로 알려진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 접하여 있고 청진항과 같은 큰 항구와 발달된 해안선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구이다. 청진에서 남쪽으로 35km 정도 내려오면 경성이 있고, 경성에서 남쪽으로 65km 내려오면 칠보산에 이른다. 경성(주을)은 온천이 많고 자연풍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 공업지대로도 유명하다. 칠보산은 금강산과 마찬가지로 내칠보·외칠보·해칠보로 나뉘며 개심사 등의 사찰과 신비로운 자연미로 널리 알려졌지만 교통이 불편하여 관광지로 많이 이용되지 못하다가, 지난 1996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으며, 1999년에는 구월산(황남)과 함께 대외개방지역의 하나로 선포되었다. 2002년 이후에는 평양 중심의 5박 6일 관광코스 에 칠보산을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10) 나진-선봉 지구

나진-선봉 지구는 북한이 1991년 12월에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포하여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에 힘쓰고 있는 지역이다. 황금의 삼각주라 부르는 이 지역은 북쪽의 두만강 하류를 경계로 중국과 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100만년 전의 원시유적을 비롯하여 구석기·청동기시대 문화 발굴지로도 유명하다. 이 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울창한 숲과 만포, 서만포 등의

천연호수, 21개 섬, 8개 만, 10개 곳으로 구성된 해안절경 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라. 관광시설

북한의 관광 기반시설은 매우 열악하다. 숙박시설로는 주요도시와 관광명소에 호텔, 여관, 야영각이 있으나 시설이 열악하고 전기와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이 많은 평양과 묘향산은 그런대로 수용시설이 좋은 편이다. 주요 음식점으로는 평양의 경우 9개의 지방 특산물 식당을 비롯하여 옥류관, 청류관, 청춘관, 민족식당, 평남면옥 등이 대표적이다. 9개의 지방특산물 식당으로는 통일관(개성), 옥계각(황남), 경암각(황북), 송도각(강원도), 압록각(평북), 강계면옥(자강도), 압록각(양강도), 신흥관(함남), 갈매기각(함북) 등이 알려져 있다.

관광지별 숙박시설 현황

관광지	숙박시설
평양	평양고려호텔(500실), 양각도국제호텔(1,001실), 서산호텔(513실), 청년호텔(465실), 양강호텔(330실), 창광산여관(326실), 평양여관(170실), 보통강여관(162실), 해방산여관(113실)
묘향산	향산호텔(228실), 청천여관(63실), 청병여관(42실)
개성	개성민속여관(50실), 자남산여관(55실)
백두산	베개봉호텔(128실), 민박촌(3,000실), 혜산 여관(49실)
금강산	금강산여관(219실)
남포	항구여관(109실)
나진	나진국제호텔(101실), 비파여관(46실)
청진	천마산여관(36실), 청진외국인숙소(37실)
원산	송도원여관(164실), 동명여관(53실), 송도원관광호텔(83실)
신의주	압록강여관(53실)

5. 체육

가. 체육정책

북한은 체육을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신체발전을 통한 노동력·국방력 강화의 수단적 가치로서 파악하고 있다.⁴⁵⁾ 말하자면 북한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통한 노동과 국방에의 기여”라는 정책기조 하에⁴⁶⁾ 학교체육 강화 등을 통한 1인 1기 권장과 전문체육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체육의 기본목표는 체육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 그리고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매월 둘째 일요일을 ‘체육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 및 단체별로 각종 체육경기를 가질 것을 결정하는 등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독려하고 있다.⁴⁷⁾

나. 지도·양성기관

북한의 체육정책은 체육지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지도·통제·관장하고 있다. 체육지도위원회는 당의 지도하에 대내외 체육경기 조직 및 각종 스포츠행사 조정통제, 인민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 및 양성 등을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체육지도위원회 밑에는 각 도별로 체육위원회를 두고 다시 시·군 체육지도위원회가 있으며 군중체육사업과 직장별·종목별 체육경기대회, 인민체력검정 등을 조직 집행한다.

전문체육인 양성기관으로는 조선체육대학과 중앙체육학원, 각도의 체육전문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의 체육학부 등이 있으며, 기타 체육과학 연구기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조선체육대학은 1958년 9월 평양사범대학 체육학부와 신의주 교원대학 체육과를 통합하여 「평양체육대학」(4년제)으로 설립되었다. 체육 영재 교육, 체육 이론 연구·보급, 체육교원 및 지도자 양성이 주된 임무이며, 졸업시에

●●45

북한은 체육에 대하여 “신체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군선 의지, 규율 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치용어사전」(1970), p.604.

●●46

1969년 11월 4일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일성은 ‘체육을 대중화하여 노동과 국방에 토틈히 준비하자’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사회주의 헌법 제55조에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토틈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 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47

「중앙방송」(1992, 3.8)

는 체육기사 자격증 및 체육지도원(코치)·교사 자격증 등이 주어진다. 학생선발은 필기·실기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입학 후 주된 교육과목으로는 체육이론, 운동해부학, 체육생리학 등 체육기초이론과 각종 실기과목이 있다. 중앙체육학원은 소학교 졸업생 중 체육특기자를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9년제 학교로서 국가대표 후보선수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기타 각급 체육학교는 선수양성과 함께 졸업 후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김정일은 체육선수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로서 체육에서의 '사상·투지·속도·기술전' 방침 관철을 지시한 바 있다.⁴⁸⁾

●●48 「근로자」(1986.12) 참조.

체육지도위원회 조직체계



한편 각 도·시·군(구역)에는 체육동아리가 조직되어 기본적인 체육 종목별로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소학교 및 중학교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직업적인 체육인들은 국가대표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종합팀을 비롯하여 26개 일반 체육단, 해양체육단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다. 주요 체육대회

북한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는 김일성·김정일생일, 노동당창건일, 정권창건기념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전후하여 개최되고 있는데, 이는 체육행사를 통해 주체사상과 당 지도 이념을 구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주요 체육대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체육대회 현황

대회명	목적	창설 및 개최	규모 및 종목
백두산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일생일 (2.16) 기념	•1977년 창설 •매년 2~3월	•각 도·시 체육선수단 •권투·유도 등 30여 종목 * 동계종목 포함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김일성생일 (4.15) 기념	•1969년 창설 •매년 4~5월	•각 도 중앙체육선수단 •농구·탁구 등 40여 종목
오산덕상 체육경기대회	김정숙 생일 (12.24) 기념	•1997년 창설 •매년 12월	•각 도 체육선수단 •농구·탁구 등 10여 종목
전국체육 구락부생 체육경기대회	신인선수 발굴	•1982년 창설 •매년 8월	•축구·무선통신 등 200여 종목
공화국창건기념 체육경기대회	정권창권 (9.9)기념	•1977년 창설 •매년 9월	•각 도·시 체육선수단 •사격·수영 등 30여 종목
당창건 기념 체육경기대회	당창건 (10.10)기념	•1975년 창설 •매년 10월	•각 도·시 및 중앙체육선수단 •육상·축구 등 40여 종목
보천보훤불상 체육경기대회	보천보전투 승리 (1937.6.4) 기념	•1960년 창설 •매년 6~7월	•각 도·시 체육선수단 및 각지 체육구락부원 •국방체육과 육상·씨름 등 30여 종목

대회명	목적	창설 및 개최	규모 및 종목
공화국선수권대회	우수선수발굴	•1979년 창설 •매년 10~11월	•전문체육단 및 도 체육간 •축구, 농구 등 40여 종목
인민체육대회	체육활동 대중화	•1960년 창설 •1963(2회 대회) 부터 5년 주기 •9~10월	•체육선수단 부문과 일반 부 문으로 나누어 경기 •구기, 민속경기, 국방체육 등 50여 종목
전승컵 체육 경기대회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	•1994년 창설 •매년 7월	•체육선수단 •축구, 육상 등 50여 종목
9·5상 대학생 체육대회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기념	•1997년 창설 •매년 9~11월	•각 도 대학생 •농구, 탁구 등 10여 종목
정일봉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시 개념	•1995년 창설 •매년 3~4월	•각 도 중학교 학생 •축구, 농구 등 10여 종목
장자산상 체육대회	학교체육 전문화 방침 지시 기념	•1995년 창설 •매년 10월	•각 도 소학교 학생 •태권도, 탁구 등 10여 종목

라. 체육시설

북한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각종 체육시설 건설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1989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계기로 평양의 청춘거리에 종합체육단지인 안골체육촌을 건설한데 이어 능라도, 양각도 등에도 국제규모의 대형 경기장을 건설하였다.

2000년 이후에도 평양청춘거리에 피로회복관, 체육도서관, 마라톤 숙소, 골프연습장, 체육인 숙소를 신축하였다. 최근에는 체육지도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독려해 지방도시에 있는 경기장과 체육관에 대한 보수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체육시설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각종 정치집회, 집단체조 등을 위해 대형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대부분 평양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지방도시의 체육시설은 함흥, 청진, 사리원, 신의주 등에 잔디경기장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있으며, 기타 도 소재지에는 소규모 종합경기장을 갖추

고 있을 뿐 그 외 시설은 빈약한 형편이다. 현재 북한의 주요 실내체육관과 옥외경기장, 종합체육단지인 안골체육촌, 남포체육촌, 삼지연체육촌의 시설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양소재 실내체육관 현황

명칭	시설 내용	비고
평양체육관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관 : 1973.4.8 •좌석 : 2만 100석 •용도 : 배구, 농구, 탁구, 체조 등 10개 종목의 실내경기 및 군중 집회 가능 	•북한 최대의 실내체육관
평양빙상관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관 : 1982.4.7 •좌석 : 6,000석 •용도 :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피겨스케이팅, 배구, 농구, 정구장 활용 가능 	•3층 원추형 건물
창광원수영장 (평양시 중구역 신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장 : 1980.3.21 •좌석 : 2,000석 •용도 : 수영, 수구, 다이빙 등 경기 가능 	•국제경기 개최 가능
평양류경정주영체육관 (평양 보통강구역 류경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관 : 2003.10.6 •좌석 : 12,000여 석 •용도 : 농구, 배구, 탁구, 체조, 태권도 경기 및 각종 문화행사 가능 	•(주)현대아산에서 남북체육 교류 사업으로 건설

종합체육단지 현황

명칭	시설 내용	비고
안골 체육촌 (평양시 만경대 구역 안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1988.9.3 • 총관람석 : 5만석 • 총부지면적 : 175만여㎡ • 연건축면적 : 26만 7,000여㎡ <p>〈주요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종합운동장 • 서산축구경기장(3만명 수용) • 실내 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볼경기장 (2,500명 수용) - 탁구경기장 (4,500명 수용) - 경경기장 (4,500명 수용) - 중경기장 (2,500명 수용) - 배드민턴경기장 (3,500명 수용) - 수영경기장 (3,500명 수용) - 역도경기장 (2,500명 수용) - 농구경기장 (2,500명 수용) - 배구경기장 (2,500명 수용) - 태권도전당 (2,500명 수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로회복관, 서산호텔, 체육인식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평양축전' 에 대비, 건설된 종합 체육 단지
남포 체육촌 (남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 1973.6 • 총관람석 : 3만석 <p>〈주요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1,800㎡) - 야구장(9,800㎡) - 정구장(경기용 4, 훈련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선수 양성을 위한 전용시설
김일성경기장 (평양시 모란봉 구역 개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45.10 • 수용능력 : 10만명 • 용도 : 축구, 육상, 집단체조 및 각종 군중 집회 장소로 활용 • 기타 : 인조잔디시설 및 야간경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란봉경기장'을 확장·개축 후 ('82.4.10) '김일성 경기장'으로 개칭
5월1일경기장 (평양시 중구역 능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9.5 • 수용능력 : 15만명 • 용도 : 육상, 축구 기타 각종 체육행사의 메인스타디움 • 기타 : 잔디, 야간경기 시설 전광모니터 설치, 프레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차 '평양축전' 에 대비 건설, 평양축전 개·폐회식장
양각도 축구경기장 (평양시 중구역 양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9.5 • 수용능력 : 3만명 • 용도 : 축구·육상경기장으로 활용 • 기타 : 역기, 권투, 레슬링 등을 위한 부속체육시설 보유 	

6. 종교

북한에서는 이미 해방 전에 기독교, 천주교 등이 남한보다 먼저 전파되어 전통 종교인 불교, 천도교 등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속에 깊숙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내면적으로는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즉 북한에서의 종교는 종교 본연의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유일사상 체계라는 테두리 속에서 한정적, 상대적 가치만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교가 아편, 미신으로 간주되어 투쟁과 적결의 대상이 되었다.

북한의 종교관은 김일성이 “종교는 일종의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다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⁴⁹⁾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⁵⁰⁾라고 발언한 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 1955년경에는 북한에서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졌거나 지하화되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 내에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그간 유명무실한 단체에 불과하던 이른바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의 활동을 재개시켰다.

북한은 1980년대 들어 교포 종교인을 적극 초청, 이들과 종교인회담 및 해외에서 반한 종교인집회를 갖는 등 통일전선 전략에 치중하는 한편,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종교인협의회’ 등 종교단체를 신설하고 사찰을 복원하고 법회를 개최하였다. 1988년 장충성당과 봉수교회를 건립하였고 1989년에는 칠골교회를 완공(92년에 신축)하였으며 2006년에는 러시아정교회 사원인 정백사원을 완공하였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미국의 선교단체들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서방국가의 종교단체들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식량난에 따른 구호물자 지원 등을 계기로 남한의 종교단체와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종교단체들을

●● 49

「김일성저작선집 1」,
p173

●● 50

「김일성저작선집 5」,
p154

평양에 초청하고 남북한 동시미사, 공동예배, 동시법회를 개최하는 등 대외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종교단체를 이용한 남한과의 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2003년 3월 1일에는 북측 종교인 105명이 서울을 방문하여 남북종교인들과 ‘3·1 민족대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불교는 여타 종교보다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2년 12월에는 각지 사찰(59개)에 대한 전면적 단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 10월에는 개성 ‘영통사’를 복원하는 등 사찰보수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정일의 사찰 방문도 2002년 6월 ‘양천사’(함남 고원), 2003년 4월 ‘안불사’(함남금야) 방문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정책변화에 따라 종래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순화해서 표현하거나 삭제하는 등 과거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회를 종전에는 ‘반동적 사상과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이라고 정의했는데 최근에는 ‘신자들이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장소’라고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헌법 제68조에서는 1992년 헌법에 명시되어 있던 “누구든지 종교를 통하여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에서 ‘누구든지’라는 단어만 삭제하였을 뿐 근본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종교관련 규정은 “종교적 신앙의 자유는 소위 종교의 간판 밑에 숨어서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반동적 음모와 책동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⁵¹⁾라는 종래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여전히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어서 주민생활에서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인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1989년에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대 역사학과 종교학부를 개설했으며 1995년에 중단되었던 ‘평양신학원’을 2000년 9월에 개원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활동할 목회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러시아정교회 종사자 양성을 위해 모스크바신학교에 유학생을 보낸 바 있다.

●●51

「우리는 왜 종교를 반대하는가」(평양: 노동당출판사, 1969)

종교관련 용어 해석변화 비교

구분	현대조선말사전 1981년판	조선말대사전 1992년판	조선대백과사전 2000년판
기독교	넓은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를 가리우고 합리화하며 허황한 천당을 미끼로 하여 지배계급에게 순종할 것을 설교	교회의 주되는 이념은 평등과 박애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잘 지키면 천당에 간다고 설교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크리스트로 내세우고 그에 의한 인류의 구제를 설교하는 종교
교회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트리는 거점의 하나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 의식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믿도록 선전하기 위하여 지은 건물	종교를 믿는 신자들이 예배, 세례, 성찬과 같은 예식을 진행하는 집합장소
성경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	주로 기독교에서 종교의 교리를 적은 책	
불교	죽어서 극락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세계에서의 모든 고충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노예적인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	인간을 고뇌에서 해방하며 자비심을 베푸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속세를 떠나 도를 잘 닦으면 극락세계에 이른다고 설교	고통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므로 온갖 집착을 버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지향을 억제하며 정신 수양을 통해 모든 것을 해탈하고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고 설교

종교단체 현황

단체	시기	현황
조선종교인 협의회	19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단체들의 협의체로 결성 • 회장 : 장재언
조선불교도 연맹	194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 불교도연맹으로 발족(1965~1971: 비활동)
	1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출현 • 위원장 : 심상진 • 사찰 60여개, 승려(대처승) 300여 명, 신도 1만여 명 • 교육기관 : 불교학원(1989년 양강도 중흥사 → 1991년 평양 광법사)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194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 기독교도연맹으로 발족(1964~1973: 비활동)
	19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기독교도연맹으로 출현
	19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개명 • 위원장 : 강영섭 • 교회 2개(봉수교회 : 1988년, 칠골교회 : 1989년), 가정교회 520여 개, 신·구약성서 및 찬송가 출판(1983년~1984년), 성경전서 및 찬송가 출판(1990년) • 교역자 300여 명, 신도 1만3천여 명 • 교육기관: 평양신학원(1972~1995, 2000)
조선카톨릭교 협회	198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천주교인협의회로 출현
	19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개명 • 회장 : 장재언(장재철) • 성당 1개(장충성당 : 1988년), 신도 3천여 명, 신부·수녀 없음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19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조선 천도교종무원으로 발족 (1952~1973: 비활동)
	197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명칭으로 출현 • 위원장 : 류미영 • 신도 : 1만 4천여 명
조선정교위원회	200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허일진 • 러시아정교회 '정백사원' 준공(2006. 8.24)

7. 역사

●● 52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기원전 277년부터 668년까지 존속한 우리나라의 첫 봉건국가의 명칭이 고려 또는 구려로 불렸다고 한다. 『조선대백과사전 2』(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134)

●● 53

조선역사학회에서는 한반도 역사가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하여 평양지역의 옛 문화를 유물들에 대한 발굴과 연구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 '대동강 문화'로 명명한 바 있다. 『조선중앙방송』(1998.3.11)

북한에서 역사학은 순수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체제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정치사상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로 전락되어 왔다. 역사연구는 노동당 주도하에 사상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역사해석 등 역사서 편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인식도 당의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결정되어 북한의 정치상황 변화, 즉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정략적 목적에 따라 왜곡·변질되어 왔으며, 김일성 가계우상화에 적극 활용되었다.

가. 시대구분

북한의 역사인식에 따르면 역사의 시대구분 또한 남한의 시대구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원시시대를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성립 이전까지로, 고대를 고조선의 건국에서부터 진국의 멸망까지로, 중세는 고구려의 성립에서 1850년대말까지로서 고구려사, 백제사, 전기 신라사, 후기 신라사, 고려사, 조선사로 구분하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을 BC 277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며,⁵²⁾ 최근들어 평양 지역의 신성동 석곽묘, 약새봉 고인돌군, 낙랑시대 무덤군, 고구려 고분벽화 등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들어와서는 단군릉, 동명왕릉, 왕건릉을 개건·복원하고 고대시대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문화는 평양 중심의 '대동강 문화'로 명명한 바 있으며,⁵³⁾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남쪽에 기반을 둔 통일신라가 아닌 개성에 근거를 둔 고려로 인식하고 있다.

근대사는 1860년대부터 1925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현대사는 김일성이 인민대중을 지도하여 소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고 혁명활동을 개시했다는 1926년을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현대사는 일제하에서 김일성이 주도했다고 선전하는 '항일무장투쟁사', 해방 후부터 6·25전쟁 이전까지 북한사회의 변화과정을 서술한 '민주건설

사', 6·25전쟁을 다룬 '조국해방투쟁사', 전쟁 이후의 북한사회를 다루는 '사회주의건설사'로 구성하여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시기 구분을 하고 있다.

나. 주체사관

북한의 역사사관은 마르크스-레닌의 유물사관에 기초하고 노동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된 역사인식의 틀인 '주체사관'이다. 즉 역사는 합법칙적으로 발전하며 그 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 즉 인민대중이라고 보며,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 '사회 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 '혁명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주체사관을 도출하고 있다. 주체사관의 입장에서는 역사를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로 보아 외세의 침략에 대한 투쟁인 반제투쟁과 내적 모순에 대한 투쟁인 반봉건투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관은 투쟁에서의 최고핵심으로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지한 인민대중이 투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일성과 같은 영명한 지도자의 존재가 절실하다고 선전하여 유일사상체계, 즉 김일성·김정일체제의 정통성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8. 언어

● 54

「조선대백과사전 2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1), p.127.

● 55

「조선대백과사전 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1999), p.487.

북한은 언어를 “사회성원들 사이에 사상을 교환하며 한 세대로부터 다음세대로 역사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전달 보존하는데 쓰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언어가 없이는 사람들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어떤 사상의 표현과 전달, 인식도 이루어 질 수 없다. 인간의 활동은 언어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으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상호관계도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인간생활의 힘있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북한에서는 1964년과 1966년 언어정책에 관한 김일성의 두 차례의 교시 이후 말다듬기에 착수하였다. 1966년부터는 내각 직속의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본격적인 말다듬기 사업을 진행하여, 언어에서 나타나는 ‘비혁명적·비문화적’ 요소를 정리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문화어’ 라 부르는 표준어정책을 전개하였다. 문화어는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며, 한자어와 외래어는 대중화된 단어를 제외하고는 한글 고유어로 대체하고 고유어가 없을 때는 ‘풀이말’ 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서울 표준어가 부르조아적 요소와 복고주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인민들의 의식속에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과 봉건·유교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게 될 것” 이라면서, “김일성동지가 항일혁명투쟁시기 힘있는 무기로 쓰였던 혁명적인 조선말에 깊은 력사적 뿌리를 둔 언어”⁵⁵⁾인 문화어를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1981년 ‘현대조선말사전’ 을 편찬한 후 1992년에는 33만 단어가 실려 있는 ‘조선말대사전’ 을 펴냈으며, 2006년에 언어과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조선어어학전서’ 63권을 편찬하였다.

맞춤법은 1948년 ‘조선어 신철자법’, 1954년 ‘조선어 철자법’, 1966년 ‘조선말 규범집’, 1988년 ‘조선말 규범집’ 으로 이어져 왔다. 북한 철자의 특징은 된소리 5자와 이중모음 11자를 포함하여 자모의 수를 40

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음음소 19자중 우리는 자음문자 14자를 쓰고 있고, 북한은 된소리 5자(ㅍ·ㅑ·ㅓ·ㅕ·ㅗ)를 자음문자로 표기하여 19자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10자(ㅏ·ㅓ·ㅕ·ㅗ·ㅛ·ㅝ·ㅟ·ㅡ·ㅣ·ㅥ)를 문자로 쓰고 있으나, 북한은 “ㅈ·ㅊ·ㅋ·ㆁ·ㄱ·ㄴ·ㄷ·ㄹ·ㅍ·ㅑ·ㅓ·ㅕ·ㅗ·ㅛ·ㅝ·ㅟ·ㅡ·ㅣ·ㅥ·ㅦ”를 포함한 21자 모두를 문자화하고 있다.

문법에서는 음운에 있어서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ㄹ’, ‘ㄴ’을 모음 앞에서도 그대로 표기·발음하고 있다. 품사의 경우 남한의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9개의 품사와는 달리 ‘조사’를 빼 8개의 품사를 두고 있다. 북한의 어휘는 남한의 어휘와 형태의 차이가 없으나 의미내용이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많으며, 수령, 교시, 노력영웅, 공훈배우, 인민배우 등 사회주의적 이념이나 북한 특유의 사상·제도를 가리키는 어휘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사전에는 ‘늘 친하게 어울려 노는 사람’, 북한사전에는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혁명대오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풀이되어 있는 ‘동무’처럼 남북간에 그 의미가 상이한 어휘도 있다.

또한 북한 지역의 방언이 ‘문화어’에 포함되어 우리의 표준어와 달라진 경우와 한자말 어휘가 고유어로 다듬어져서 달라진 경우가 많다. 한자사용에 대해서는 해방 후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오다가 1949년부터는 한글을 전용하고 있다. 신문, 잡지, 교과서 등 모든 출판물이 한글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주민은 자신의 이름도 한글로만 쓰고 있다. 1958년 이후 중학교에서는 초보적 필수한자를 교육하고 있었으나 최근 교원부족 등으로 지방에서는 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장부호의 표기도 남북한 간에 차이가 있다. 마침표, 물음표, 쉼표 등 기본부호 외의 부호는 상이한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인용부호로 큰따옴표(“ ”) 대신 인용표(《 》)를, 작은따옴표(“ ”) 대신 거듭인용표(〈 〉)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는 겹낫표(『 』), 낫표(「 」), 가운데점(·)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언어 차이의 몇가지 사례

구분	개조 또는 신조어	비고
한자어 변형	이신작칙 만부하 만가동 직관물	술선수범 완전가동 전시물
일상용어	칼바람 동강웃 료해	매운 바람 투피스 이해
스포츠 용어	구석차기 순간타격 룬밀 던져넣기	코너킥 스파이크 골밀숯
문학·예술 용어	나오기 소리너비	등장 음역
사회주의 신조어	밥공장 149호대상	밥을 사가는 곳 불순분자
적개심 고취용어	승냥이, 주구, 원수	
노력착취 용어	평양속도, 천리마운동, 충성의 사회주의 경쟁운동	

한글 맞춤법과 조선어 규범집의 부호법 비교

맞춤법(남)		규범집(북)		맞춤법(남)		규범집(북)	
온점	.	점	.	소괄호	()	쌍괄호	()
물음표	?	물음표	?	중괄호	{ }	대괄호	{ }
느낌표	!	느낌표	!	대괄호	[]	꼭쇠괄호	[]
반점	,	반점	,	줄표	—	풀이표	—
가운데점	·	×		붙임표	-	이음표	-
쌍점	:	두점	:	물결표	~	물결표	~
빗금	/	빗선	/	드러냄표	°, ·	밀점
큰따옴표	“ ”	인용표	《 》	숨김표	○○,××,□□	숨김표	○○
겹낫표	『 』	×		빠짐표	□	×	
작은따옴표	‘ ’	거듭인용표	〈 〉	줄임표	줄임표	...
낫 표	「 」	×		×		반두점	;
				×		같음표	”

9. 문화시설

북한의 문화시설은 주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라는 고유의 목적보다 전인민의 노동계급화·혁명화라는 공산주의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 건립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공산정권 혁명역사의 정통성 및 김일성 가계 우상화, 북한사회의 우월성 부각, 주민 사상교육 강화, 체제과시, 대규모 집회 개최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성을 띠고 있다. 즉 모든 건축물은 사상예술적 의미를 가지고 각각의 개성을 가진다는 원칙 아래 건립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물들은 ‘노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건설한다는 구실로 최근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화시설물은 전국 각지에 건립되어 있지만, 특히 평양에 집중 설치되어 있고 평양에서도 중구역에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시설은 평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한편 기업소, 공장 등에도 공장 문화회관이나 구락부, 선전실 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다른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문화 향유보다는 주로 사상교양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설들을 대내 주민용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체제과시 및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의 주요 문화시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요 박물관·기념관·전람관

명칭	설립일	내용	비고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45.12.1	원시사회에서부터 19세기까지의 역사적 유물과 문헌자료 전시	1978.2.12 김일성 현지교시
조선혁명박물관 (평양시 만수대 언덕)	1948.8.1	김일성의 항일혁명 활동 및 사회주의 혁명 투쟁과정의 사적물 및 자료 전시	1961.1 '국립중앙 해방 투쟁박물관'을 개칭 1972.4.24 만수대로 신축 이전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53.8.17	항일혁명기의 자료, 6·25전쟁 당시 인민군 자료·병기류 전시 및 김일성 업적 선전	1974.4.11 '조국해방기념관'을 개칭, 확장 건립
조선미술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54.9.28	가원전 3~4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품 진열	1965.3.11 김일성 현지교시
왕재산혁명박물관 (함북 은성군)	1975.10.19	김일성의 1930~40년대 '항일투쟁' 활동 자료 전시	당원 및 노동자들에게 김일성의 혁명역사를 학습시키는 정치학교 기능
당창건사적관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	1970.10.1	노동당 창립과 관련된 자료 및 사적물 전시	해방 직후 김일성이 사용하던 노동당 중앙위 건물
보천보혁명박물관 (양강도 보천군 보천읍)	1955.8.7	1937.6.4 '보천보전투' 관련 자료 및 김일성의 현지지도 사적자료 전시	1963.6 구건물 옆에 현대적 건물 신축, 1977년 진열체계 및 자료 보충 정비
국제친선전람관 (묘향산)	1978.8.26	김일성에게 보내온 146개국 인사들의 선물 28,000여 점 중 일부 전시	건물 내부의 천정 벽에 '김일성화' 치장
금수산기념궁전 (평양시 대성구역 미암동)	1977.4.15	김일성시신 안치 및 김일성 유품 전시	김일성 집무실인 '금수산의사당'을 김일성사망 후 1995.6.12 현 명칭으로 개칭하고 1995.7.8 개관
조선민속박물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1956.2.10	민속유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연구사업 및 군중교양 사업도 전개	1960.6.10 김일성 현지교시

주요 회관·공전·학습당

명칭	설립일	내용	비고
4·25문화회관	1975.10.7	노동자 및 인민군의 사상·문화 교양장소	극장 (6,000석, 1,100석) 영화관 (600석)
인민대학습당	1982.4.1	'전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한 종합도서관	장서능력 (3,000만권), 1일 수용능력 (2,000명)
인민문화공전	1974.11	문화·오락시설을 구비한 북한주민들의 휴식, 학습, 문화, 교양 장소	대회의장 (3,000석), 원탁회의장 (930m ²), 휴게실, 영화관, 당구장 등
청년문화회관	1989.5.		극장 (2,000석, 600석), 다기능홀 (1,000명)
만경대학생 소년공전	1989.4.1	청소년들의 특별 과외활동 장소	극장(2,000석), 체육관, 수영장
평양학생 소년공전	1963.9.30	평양시 청소년들의 특별 과외활동 장소	장서 (5만여 권), 극장 (1,100석), 체육관 (500명 수용), 도서관 (200석) 등

주요 동·식물원

명칭	설립일	내용	비고
중앙동물원	1959. 4.30	800여 종 7,000여 마리 사육	편의봉사시설 및 오락 시설 구비
중앙식물원	1959. 4.30	5,000여 종 식물 재배	'김일성화·김정일화' 온실 설치

주요 극장

명칭	설립일	내용	비고
만수대예술극장	1977.1.1	관람석 : 4,000석	북한 최대 극장
평양대극장	1960.8.13	관람석 : 2,200석 최대 무대출연 인원 : 2,000명 종합 연습실 : 700명	가극공연 외 각종 기념 행사 개최
함흥대극장	1984.4.15	관람석 : 2,500석 소극장 : 700석	김정일 지시로 건설
평양교예극장	1989.5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동평양대극장	1989.5.18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평양국제영화회관	1989.5.18	관람석 : 3,150석	평양축전 시설
봉화예술극장	1985.6	관람석 : 2,000석, 800석	현대적 무대공연 설비

기타 위락시설

명칭	설립일	내용	비고
옥류관	1960.8.15	250석의 좌석과 20여 개의 기본실 및 50여 개의 부속실, 600여 명 수용능력 대연회장	종합음식점
청류관	1982.4.15	1,000여 석의 실내좌석과 6,000여 석의 야외좌석 및 39개의 봉사실 구비	종합음식점
창광원	1980.3.15	목욕탕 (1만명 수용), 물놀이장, 수영장(관람석 2,000)	종합적인 문화 위락시설
만경대유회장	1982.4. 8	5만명 수용규모, 29종의 유희 시설	종합오락시설



09

대남 · 통일

- 1. 대남전략 기초
 - 가. 대남인식과 전략목표
 - 나. 대남전략 및 전술
 - 다. 대남기구
- 2. 대남전략 전개과정
 - 가. 1945~1953: 무력적화통일 추구
 - 나. 1953~1969: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적극 모색
 - 다. 1970~1989: 대결관계 속에서 대화전략 추진
 - 라. 1990~1999: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구사
 - 마. 2000~2007: 공존 · 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 바. 2008~현재: 대남 경계 및 긴장고조
- 3. 연방제 통일방안
 - 가. 1960년대: '남북연방제'안
 - 나. 1970년대: '남북연방제'안
 - 다.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 라. 1990년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안
 - 마. 2000년대: '낮은 단계 연방제'안





Ⅸ. 대남·통일

1. 대남전략 기조

가. 대남인식과 전략목표

북한의 대남인식은 전통적으로 남한을 미국이 세계 제패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로 점령한 '식민지'로 보는 관점에 토대를 두어 왔다. 북한은 8·15광복 이후 줄곧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침략적 군사기지이다. 미제는 남조선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완전히 예속시켰다”¹⁾고 선전해 왔다.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해 북한은 “조국통일은 나라의 한 부분을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함으로써 국토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분열된 특수한 조건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조국통일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한다.²⁾ 따라서 북한은 통일을 분단된 국토와 민족을 단순히 재결합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남한 내부의 ‘매판세력’이라는 내외의 ‘분열주의세력’을 분쇄하고 그들에 의해 강요된 분단된 조국을 다시 통일된 조국으로 만드는 문제로 파악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민족해방’과 파쇼적 반동세력에 대한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목표로 추구해 왔다.³⁾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

●●1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211.

●●2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이론」 (서울: 도서출판 태백, 1989), p.282.

●●3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p.479: “남조선 혁명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인 동시에 미제의 앞잡이들인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그들의 파썸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남인식과 전략목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차츰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과 맞물려 한반도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확인된 남북간 국력 차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앞서 당면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전술적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즉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기 앞서 ‘남한으로부터의 자본주의 혁명’을 방지하고 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당면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또한 1990년 독일 통일은 북한에게 흡수통일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 주었고, 이는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북한은 1991년 신년사⁴⁾를 통해 흡수통일 방식을 배제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의 민족통일국가 창립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사실상 포기하고 UN 동시가입을 수용하였다. 또한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공존논리’를 바탕으로 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통일문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변화는 1993년 4월 김일성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김일성은 10대 강령에서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 역시 1998년 4월 ‘민족대단결 5대 방침’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 4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풀어 나가도록 후대에 맡겨도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은 연방제를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나타냈다.

북한은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에 호응해 나오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며, 또한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약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남 인식이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측면에 비중을 둔 방향으로 바뀌면서 2000년과 2007년 2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 대화와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자행한 일단의 무력 도발과 군사적 긴장 조성 사례⁵⁾를 비롯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을 볼 때, 북한의 대남인식 기조와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공영을 실현하기 위한 「비핵·개방·3000 구상」을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6.15 통일시대와 배치되는 반통일적 대결 선언’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요 계기시마다 대화를 제의⁶⁾하였지만, 북한이 거부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큰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의 대상’으로 보는 이중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대남전략 및 전술

북한 대남전략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남조선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는데 있다.

●●5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1996년 9월, 1998년 6월), 북한 군의 서해상 도발 및 1·2차 연평해전(1999년 6월, 2002년 6월) 등

●●6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11일 국회개원식 시정연설 및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제의하였으며, 2009년에도 3.1절 기념사 및 8.15 경축사를 통해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였다.

●7

『김일성저작집 4』(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p.286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정책에 대처하여 이미 해방된 북조선에서 혁명을 적극 밀고 나가며 북조선에 특정한 혁명기지를 창설하여만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8

하중호 앞의 책 p.22 “공화국 북반부에 혁명기지를 꾸릴데 대한 사상은 해방 직후 북반부에 마련된 유리한 조건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당이 있고 인민주권이 있으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목표하에 다양한 대남전략전술을 운용해 왔으며,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초기 ‘민주기지론’에서 최근의 ‘민족공조론’·‘우리민족끼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그 형태를 달리해 왔다. 분단 이후 현재까지 북한이 구사해오고 있는 대남전략전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혁명적 민주기지론

남조선혁명을 위한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조직하기 위해 개최된 서북5도 당대회에서 ‘혁명적 민주기지론’이란 형태로 그 기본구상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미군의 남한 점령으로 전국적 범위에서 혁명을 동시에 추진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북한지역의 혁명역량을 먼저 강화하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⁷⁾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을 기본적인 대남혁명 전략으로 채택한 것은 해방직후 모든 면에서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우세한 상황이었고 이같은 유리한 정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실현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⁸⁾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따라 해방 직후부터 건당, 건국, 건군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북한지역에서 노동당을 먼저 건설하고 무장력인 인민군을 창건하였으며 이어 1948년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2)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은 초창기의 ‘민주기지론’이 한단계 발전된 것으로 1970년 11월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

다”는 일종의 ‘지역혁명론’으로서 우선 1단계로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다음, 2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북한이 초창기 혁명적 민주기지론 전략에서 이처럼 지역혁명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6.25전쟁 이후 분단이 장기화됨으로써 남북한의 상반된 정치·사회체제가 고착화되고 무력적화통일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이 남한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혁명의 주인을 남한인민 자신이라고 선동하는 것과 혁명역량의 편성을 주력군과 보조역량으로 구분하면서 주력군 편성에 역점을 두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인식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북한은 이러한 전략하에 1960년대 후반의 통일혁명당을 시작으로 1970년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남한내 지하당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으며, 주한 미군철수 주장도 되풀이 하고 있다.

(3)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이른바 3대혁명역량, 즉 북한체제의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⁹⁾ 이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은 1964년 2월 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되었다.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의 내용은 우선 대내적으로 민주혁명기지도선에 기초하여,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혁명기지도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 세가지 방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군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위적 군사노선에 따라 전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9 김일성은 “3대 혁명역량은 첫째,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국의 통일,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3대 역량의 준비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다.

●●10
허종호, 앞의 책, pp. 277~280.

●●11
통일전선전술은 1921년 6월 제3회 코민테른 회의에서 레닌에 의해 처음 채택된 전술로 레닌은 '너에게 3개의 적이 있거든 그 중 둘과 동맹하여 하나를 타도하고 나머지 둘중 하나와 동맹하여 다른 하나를 타도하고 마지막 하나는 1대 1로 대결하여 타도하라'고 주장하였다.

●●12
『정치용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615.

●●13
김정일은 이른바 '8·4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에서 '남조선의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던 관계하지 않고 손잡고 나갈 것' 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상층 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남 차원에서는 남한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시키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혼란을 유도하여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⁰⁾

대외적으로는 국제혁명 차원에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대 혁명역량 강화 전략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북한의 경제위기 및 국제적 고립 심화, 남한의 국력신장 등으로 실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4) 통일전선전술

북한은 대남혁명전략의 수행을 위해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전술인 통일전선전술을 사용해 왔다. 이는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 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 세력의 힘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전통적인 투쟁기법이다.¹¹⁾

통일전선의 개념에 대해 김일성은 "통일전선이란 노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해당한 혁명의 승리에 리해관계를 같이 하는 여러 정당·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이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기 위하여 무은(조직한) 정치적 연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¹²⁾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하층 통일전선을 위주로 하되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에서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다.¹³⁾

실제로 북한은 통일전선조직체로서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을 결성하였으며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민주연합전선 등의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출범시켰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차원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였다.

(5) 민족단결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수행과정에서 핵심은 ‘반미·자주와 연공·연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족대단결론’이다. 북한의 민족대단결 주장은 1972년 7월 4일 채택한 ‘남북공동성명’에서 처음 거론되었고,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 김일성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5대방침’에서 다시 주장되었으며,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간부들과의 담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¹⁴⁾ 이후 북한은 1993년 4월 5일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1998년 4월 18일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¹⁵⁾을 통해 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6) 민족공조론·우리민족끼리론

북한이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 계기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다. 동 선언 1항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명시하였다.

북한은 2001년 1월 10일 개최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 대회’에서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자”고 제의하는 등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운동의 핵심용어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2002년 10월 2차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라고 하면서 “민족공조로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위한 운동과 투쟁을 벌이는 것은 핵전쟁 위험을 막고 민족자주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⁶⁾ 2003년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도 한반도 정세를 ‘조선민족 대 미국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 압살책동을 분

●●14

김일성은 5대방침에서 “전체 조선민족은 계급적 차이와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조평통’ 간부들과의 담화에서는 “조선반도 분단은 민족내부의 모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세에 의한 것으로 통일의 기본은 철차나 방법 문제가 아니라 민족대단결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김정일은 ‘남북연석회의 (1948.4) 50주년 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1998.4.18)에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자”에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③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④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⑤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련대연합을 강화하여야 한다.

●●16

『노동신문』 (2002.10.29)

● 17

2005.08.27 평양방송, "우리 민족끼리 이념이 가장 열렬한 민족애에 기초하고 있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이념이며 온 겨레를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길로 힘차게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임을 실증해줍니다."

2008.6.15. 노동신문, "지난 8년간의 조국통일 운동과정들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을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이다. 지금 '우리 민족끼리' 는 자주통일의 대명제로, 시대정신으로 겨레의 심장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 겨레가 사는 곳마다에서 민족공조의 기상이 내려치고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기초한 민족주체의 애국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었다."

2008.10.4 우리민족끼리 사설 "우리민족끼리 이념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온 겨레가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천명한 조국통일의 표대이며, 민족운명 개척의 생명선이다."

● 18

2009.7.8 우리민족끼리, "장군님께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에 기초하여 역사적인 6.15 공동

선언을 내세우신 것을

쇄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핵문제로 인한 긴장된 정세하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명분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민족전래의 상부상조 전통에 의한 것이라는 대주민 선전논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북한은 2005년 이후 '민족공조'보다는 '우리민족끼리'를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우리민족끼리'를 '통일문제 관련 최고 이념'으로 발전시키며, '6.15시대 조국통일의 기본 이념'으로 강조하고 있다.¹⁷⁾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집약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다.¹⁸⁾

2008년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는' 남한 정부를 비난하고, 남한 사회내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¹⁹⁾

다. 대남기구

과거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남선전선동 등의 정치심리적 차원과 간접납파를 통한 한국내 지하조직망 구성·유지 등의 공작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남협상, 남북경협, 대북지원 확보 등을 통한 실리확보가 추가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사업체계를 보면 노동당 비서국에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담당 비서를 두고 그 밑에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구 사회문화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 등이 있다.

아울러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외곽단체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등을 두고 있다.

또한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 단체인사들로 구성된 민족화

해협의회(민화협)라는 단체를 구성, 민간부문에 대한 대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기구로서는 2005년 6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설치하여 남과 북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하였다.²⁰⁾

(1) 통일전선부

통일전선부는 통일전선공작과 남북대화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대남사업의 핵심부서로서 1978년 설치되었으며, 남북회담, 해외교포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공작사업, 국내 좌익운동권 지도 등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대화·교류가 확대되면서 통일전선부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

(2) 대외연락부

1947년 북로당 '5과' 로 창설된 이래 연락부로, 그후 사회문화부로, 다시 대외연락부로 개칭(1997)되었으며 남한내 지하당 건설을 비롯하여 정당, 사회단체, 군부에 대한 공작거점 구축 및 공작전술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간첩교육과 파견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조총련에 대한 활동지도도 담당하고 있다.

(3) 35호실

일명 조사부로 불리우며 주로 해외 및 대남 정보수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제·대남 테러공작도 수행한 바 있다.

(4) 작전부

작전부는 공작원들에 대한 기본 교육훈련, 침투공작원 호송·안내 및 복귀, 대남침투 루트개척 등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공작부서이다.

선언을 탄생시키시었고 '우리민족끼리'의 이념 밑에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6.15 자주통일의 시대를 펼쳐주시었다."

●●19

2008.10.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 의 가치를 높이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갈 때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는 반드시 열리지게 될 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그 이행을 방해해나서는 내외 분열주의 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2009.6.8, 중방, "자주권 실현에 대한 거례의 확고한 의사와 지향, 민족주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실현하려는 굳은 의지를 구현한 새 세계 조국통일의 표대가 바로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입니다. 북남공동선언 등에서 탈선한다는 것은 곧 성스러운 자주이념인 우리 민족끼리를 부정하면서 시대와 외세의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0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내각의 수장 명단이 발표되었으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등장하지 않았음.

●●21

『장차사전』, 앞의 책 pp 77~72

●●22

위의 책 p73 “조선노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각계 각종 애국적 민주주의력량을 단합하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사회단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부는 남파 공작원과 전투원들에 대한 정규 기본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 남파공작원 파견기지인 2개의 육상연락소(개성, 사리원)와 4개의 해상연락소(청진, 원산, 남포, 제주)를 보유하고 있다.

(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조국전선’은 노동당의 통일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는 당의 전위기구로서 1949년 6월 25일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72개 정당·사회단체를 망라해 결성되었다.²¹⁾

북한은 이 기구의 성격을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의 령량을 묶어 세운 정치조직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24개 정당 및 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전선’은 남한에서 주요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명·담화·기자회견 형식 등으로 대남선전과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는 한편, 남한 각계각층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6)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조평통’은 1961년 5월 13일 결성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의 통일·대화노선 관철과 정책수행 및 통일전선 형성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구는 4·19혁명 직후 우리 사회내에 통일논의가 분출되자 이를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기 위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하면서 북한의 정당·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을 망라하여 설립되었다.²²⁾

‘조평통’은 국내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 형성, 남한내 친북 통일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남한의 정세변화와 사건 또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직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국 등이 있다.

(7) 조국통일연구원

1959년 12월 노동당 문화부 산하 '남조선연구소'로 신설된 이후 1978년 1월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으로 흡수되었으며, 1989년경 '조국통일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원장과 부원장 밑에 종합정세연구실과 종합편집실이 있으며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반 요소별 대남정책자료를 작성하고 남한 주요인물에 대한 분석과 평가, 미·일 등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정책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격주간지 「남조선문제 연구」 등을 발행하고 있다.

(8) 반제민족전선(반제민전)

'반제민전'은 과거 남한내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였던 통일혁명당(1969.8.25 창당)의 후신으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위장조직이다. 북한은 정세변화에 맞춰 통일혁명당의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로 개칭(1985.7.27)하고 대남흑색방송인 '통혁당의 목소리 방송'을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개칭(1985.8.8)하였다.

이후 2005.3 '반제민전'으로 명칭을 재차 개칭하였다. '반제민전'은 그 동안 대남흑색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통하여 남한내 좌익세력을 이념적·조직투쟁적으로 지도해왔으며, 남한내 중대사건 또는 남북관계 현안 발생시 담화, 기자회견, 선언문 등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여 왔다. 한편 북한은 '구국의 소리방송'을 2003년 8월 1일부터 중단하고 8월 15일부터 '조선중앙방송'을 중계하고 있으며 현재 홈페이지 「구국전선」(1997.6 개설)을 통해 대남 선전·선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아·태평화위'는 아·태지역 미수교 국가들과 정치·경제·문화교류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1994년 5월 통일전선부 산하에 설립된 노동당

의 외곽단체이다. 조직체계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이 있으며 그 밑에 정치, 경제, 문화, 관광, 종교 등 부문별 부서들과 연구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장구역할과 함께, 유력 외국인사에 대한 방북 초청 및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을 통해 북한의 폐쇄적이고 호전적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남북간의 각종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업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화협’은 1998년 6월 8일 북한이 8·15 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대남단체의 하나이다.

이 기구는 북한이 ‘민족화해’를 내세워 결성한 최초의 협의체로서,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 방침’(1998. 4)에서 언급된 ‘온 민족의 접촉·대화와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화협’의 조직은 회장과 부회장, 실장, 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남북경협사무소

남북경협사무소는 2005년 10월 개성에 개소한 남북당국간 경협사업의 상시적 협의기구이다. 남북이 합의한 경협사무소 개설·운영합의서(2005.7)에는 ①남북간 경제거래 및 투자의 소개와 연락, 지원, 자문 등 다양한 편의 보장 ②당국 및 민간경협 당사자간의 회담 및 면담 장소 보장 ③교역·투자 자료 제공 ④투자대표단 교환, 상품전시회, 실무연수, 거래 및 투자상담회 등 경제교류협력과 관련한 활동 보장 ⑤쌍방 당국이 합의해 위임한 업무 등을 사무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대남전략 전개과정

가. 1945~1953: 무력적화통일 추구

북한이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당시 북한 지도층은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력에 의한 통일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김일성은 정권수립 다음날인 1948년 9월 10일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미·소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²³⁾

이후 김일성은 ‘국토완정론’을 통일의 화두로 삼았다. 이는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북한지역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통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를 위해 김일성은 북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한편 1949년과 1950년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과 전쟁지원을 약속받았다. 또한 북한은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사건, 무장계릴라 남파 등 폭력도발을 통해 남한군사력의 분산과 사회환란을 조성하는 가운데, 1950년대 6월 25일 ‘민족해방전쟁’이란 명분하에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그들의 목표는 좌절되었고, 1953년 7월 휴전과 함께 한반도는 다시 분단상태로 남게 되었다.

나. 1953~1969: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전략 모색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서명된 이후 1950년대 말까지 북한은 전후 복구사업에 주력하였으며, 복구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1960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대남전략을 구사하였다. 전후 북한 지도부에 있어서 급선무는 무엇보다 전쟁으로 파괴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23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49), p.45.

적 기반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겉으로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통일을 부차적인 위치로 내리고 국내의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을 먼저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연안파, 소련파 등의 파벌을 숙청함으로써 김일성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소련 및 중국의 지원하에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등 전후 체제정비에 전력을 기울였다.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1954년 4월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론을 앞세웠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연방제’ 제안으로 이어졌다. 특히 1960년대는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공세적 대남전략을 구사하였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전후 체제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데 따른 자신감과 1960년대 초반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격변상황²⁴⁾에 자극받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북한지역의 군사기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6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3대 혁명력량 강화’ 노선을 내세워 대남혁명전략을 좀더 구체화하였다. 김일성은 1966년 10월 ‘3대 혁명력량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혁명력량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을 옹계 배합해서 부단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²⁵⁾

이러한 전략에 따라 북한은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1968.1),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1968.11), KAL여객기납치(1969.12) 등 대남 무력도발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한편, 무력불행사 협정체결 제의(1962.6),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제의(1963.12),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소집 제의(1966.9), 남북자유왕래 제의(1968.9) 등 통일전선전술 차원의 위장 평화공세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다. 1970~1989: 대결관계 속에서 제한된 유화전력 병행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동서 긴장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

●● 24

당시 남한은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군사쿠데타, 1960년대 중반의 한·일국교정상화를 둘러싼 혼란 등으로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 25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0), pp.384~403.

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남조선혁명 투쟁을 지속하는 양면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71년 4월 주한 미군철수 및 감군, 연방제 실시, 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8개항의 대남 평화제안을 내놓았으며, 남북적십자회담과 정치적 대화를 위한 비밀접촉에 응해 오는 등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한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1973년 6월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을 포함한 '조국통일 5대방침'²⁶⁾을 발표하고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1974.8)하는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포함한 '남북공동성명'이 채택 발표되었고,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대화없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있는 대결'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였다.²⁷⁾ 그러나 닉슨 독트린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고, 남베트남이 패망하는 등 국제혁명 역량이 강화되자²⁸⁾ 북한은 다시 대남 강경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부터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남침용 땅굴과 박정희 대통령 저격미수사건(1974.7),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 등은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한편 북한은 1979년 10·26사건 이후 남한에서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1980.2~8) 등을 통해 남한정세에 대한 탐색도 시도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일성은 더 이상 과도체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완전한 통일형태로서의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는 등 통일공세를 강화하였다.²⁹⁾ 이후 북한은 남한사회가 급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막고 사회혼란을 지속시키기 위해 아웅산묘소 폭탄테러(1983.10), 부산 대포 무장간첩침투(1983.12) 등 대남도발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행위로 인해 서방국가들로부터 비난이 거세어지고 외교적 고립상태가 심화되자, 북한은 테러국가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북한이 1984년 9월 수재물자 전달을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고향방

●●26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방침'은 ①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 ② 제방면에 걸친 합작과 교류 실현 ③ 각계각층 인사들의 통일을 위한 애국사업 참여 ④ 고려연방공화국 창설 ⑤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등이다.

●●27

7·4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통일 3원칙과 상호비방중상 및 무력도발 금지, 다방면의 남북간 교류,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에 합의하였다.

●●28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6), p.450: 당시 김일성은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단호히 대담하여 침략자들을 철저히 소멸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조국통일일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9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 기존의 연방제와 다른 것은 ①기존의 연방제가 갖고 있던 '과도적 성격' 배제 ②연방형성의 원칙, 연방기구의 구성과 임무, 기능 구체화 ③남한의 반공정권 퇴진, 주한미군 철수 등 선결조건 제시 ④10대 시정방침 제시 등이다.

●● 30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해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문단교환, 체육 및 경제회담 등 각종 대화와 교류에 호응해 나온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성공적인 북방정책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진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자, 이를 저지하고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김포공항 폭탄 테러(1986.9), KAL기 폭파(1987.11) 등 또 다시 대남 폭력도발을 자행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대남 폭력혁명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남한과의 접촉과 대화를 시도하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남북간의 국력 격차가 차츰 심화되고 대외 정세가 북한에 불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와 함께 시작된 외교적 고립감을 1989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하는 듯 했으나,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이 서독 주도하에 실현됨으로써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라. 1990~1999: 체제유지 차원의 방어적 대남전략 구사

북한은 1989년 말을 기점으로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독일 통일(1990.10.3)이 실현되자 생존전략차원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기존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정하여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시하여 남측으로부터 흡수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시도하였다.³⁰⁾ 이어 김일성은 1993년 4월 발표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통해 ‘공존, 공영, 공리 도모’와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배제’를 주장하였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그동안 반대해 왔던 남북한 UN 동시가입(1991.9.17)을 선택한데 이어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발효(1992.2.19)시켰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앞세워 주민들의 사상통제

를 강화하고, 체제수호 차원에서 미사일 등의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였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격적인 남북간 교류협력과 관계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내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체제유지 차원에서 비롯된 이같은 방어적 성격의 대남전략은 김일성 사후 체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보다 강화되었다. 당국차원의 남북관계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중단상태가 지속되었다. 한편,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대북 비료지원문제를 놓고 베이징 당국대표회담이 개최(1998.4)되는 등 당국차원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비동시적·비대칭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진전을 거부하고 일방적 시혜만을 고집함으로써 다시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다.

북한은 남한당국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는 달리 민간기업들과의 경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1996년 8월 대우 남포공장의 본격가동과 함께 남한 기업과의 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남한 기업들과의 경협사업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의 시행으로 민간차원의 교류와 경협사업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한은 당국 차원의 관계 개선에 수반될 수 있는 체제유지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면서 심화된 경제 난국을 탈피하기 위해서 남한 기업들로부터 대북투자 유치를 실현시키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마. 2000~2007: 정치·경제적 실리쟁기기 대남전략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치이념과 체제를 고수하면서도 실리주의적 정책 기조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은 2001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 31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당국 사이의 대화채널로 개설된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8년 2월까지 총 21차례 진행되었다.

● 32

2000년 9월 제주도에 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남북군사실무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보장조치도 마련되었다. 경제분야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총 94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분야별로 철도, 도로, 개성공단, 경제협력 등 10여 개의 실무회담이 구성·운영되었다.

● 33

또한 2003년 10월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할 수 있도록 금강산에 이산가족면회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8년 7월 12일 '금강산면회사무소'를 완공하였다.

● 34

TV 뉴스 평양 생방송(2002.9.11~13), 드라마 촬영(2002.1), 남북 방송인 토론회(2003.10, 평양), 남북 언론인 토론회(2006.11), 남북합작 드라마 '사육신' 제작(2006.12) 등

“새 시대에 맞게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풀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관리에서 실리보장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³¹⁾을 비롯하여 경제·군사·적십자·체육 등 여러 분야 회담 개최에 적극 나섰다.³²⁾

북한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경제 교류협력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추진하여 2003년 6월 14일 철도 궤도 연결식을 거쳐 2007년 5월 17일 남북 철도 시험운행이 실시되었다. 개성공단사업은 2003년 6월 30일 착공식을 가진 이래 2009년 6월 현재 40,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의 관광객은 2008년 7월 우리측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될 때까지 2백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투자보장·청산결제·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 등의 합의서를 포함한 13개의 경협 합의서가 발효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북한도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 6월 내각에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대남경협 담당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2005년 7월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에도 호응하여, 2000년 8월 이후 15차례에 걸쳐 19,96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였으며, 44,835명의 생사를 확인하였다.³³⁾

북한은 언론·예술·종교·학술 등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000년 8월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시작으로 언론·방송 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³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들도 개최되었다.³⁵⁾ 또한 종교분야에서는 매년 부활절, 부처님 오신 날, 개천절 등을 맞아 관련 중단·교단별로 공동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교육·학술 분야에서는 공동토론회와 공동실태조사사업 등이 진행되었으며,³⁶⁾ 체육 분야에서도 국제행사 남북 선수단 공

동입장,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 등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³⁷⁾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 끊이지 않아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도 계속되었다.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7월) 및 핵실험(10월) 등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데 소홀함이 없었다. 이를 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였으며³⁸⁾, 2007년 10월 남한 대선을 2개월여 앞두고 남북정상 회담에 응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남한의 정권교체를 대비하여 대규모 경험 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바. 2008~현재: 긴장고조를 통한 대남 압박전략 전환

2008년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북핵 폐기 및 북한의 개방 필요성, 북한의 인권개선 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자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외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종' 하고 '6.15 및 10.4 공동선언을 부정' 하고 있다며 왜곡,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한의 상생과 공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반통일 대결 선언' 이라고 주장하며 극렬 반박하였다.

2008년 5월, 6월에는 촛불시위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비난 소재를 다양화하였으며, 우리 대통령 및 당국자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재발방지대책 요구 등을 거부하였다. 우리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7.12) 등에 반발하여, 북한은 8월 3일 금강산 지구의 불필요한 인원 추방,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 35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2000.8, 서울), 춘향전 평양공연(2001.1), 고구려 유물전시회(2002.12~2003.3, 서울), 윤이상 음악회(2006.4, 금강산) 등

●● 36

일제식민지배 관련 남북공동토론회(2001.3, 평양), 국호 영문 표기 문제관련 남북학술토론회(2003.8, 평양), 고구려 고분 공동실태조사사업(2006.4) 등

●● 37

2000년 9월 시드니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개막식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남북통일 축구대회(2002.9, 서울), 2002년 9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및 2003년 8월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규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등

●● 38

공화국 정당·정부·단체 연합성명(2007.1.17) : "전 민족은 6.15가 열어놓은 북남 래왕의 길과 통일회합의 마당을 더욱 넓혀 나가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엄격한 제한 및 통제, 금강산 관광지구와 군사통제 구역 내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통보하였다.

11월 12일에는 판문점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북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직통 전화를 단절시키겠다고 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군사 분계선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1월에는 ‘전면 대결 태세’, ‘군사적 대응 조치’ 등을 언급하면서 “남북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무효화 하고,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서해 해상 경계선 조항을 폐기 한다” 고 주장하였다.

2009년 3월 9일에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일종의 선전포고’ 라고 주장하고, ‘군 통신 차단’을 선언하였다. 또한 5월에는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반발, 북한 선박 단속과 검색행위 등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경고하고, 정전 협정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북한은 과거에도 우리측의 새 정부 출범시 대남비난을 강화하면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대남 차원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한 내 갈등을 부추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시켜 남북관계를 그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 차원에서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내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의 건강 악화설 이후 내부통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북한 엘리트들이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3. 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은 ‘남조선혁명’ 을 통한 ‘조국통일’ 이라는 전략과 함께 연방제 통일방안을 앞세워 대남 평화공세를 전개해왔다. 연방제는 1960년 최초로 제안된 이래 대내외 정세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의 구체적 내용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1960년대: ‘남북연방제’ 안

남한에서 1960년 4·19 혁명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은 같은 해 8월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기하였다.

김일성은 “남조선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 고 하면서, “당분간 남북조선에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 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 이라고 연방제의 성격을 규정하였다.³⁹⁾ 이어 북한은 그해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최용건의 보고를 통해 “련방제가 실시되어 최고민족회의가 조직되거나 남북한 경제위원회가 구성되면 수행할 과업” 으로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 남북한 자유총선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통일의 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둘째, 남북연방제를 과도적 대책으로 제시하면서 당분간 두 정치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남북한 정부당국의 대표들로 일종의 협의조정기구인 ‘최고민족위원회’ 를 구성하자고 함으로써 국가연합적 성격을 시사한 듯한 인상을 주고

●● 39 김일성, 앞의 책, p214

●●40

허담은 최고인민회의의 제 4기 제5차 회의(1971. 4.12)에서 ①미군철수, ②10만이하로 감군, ③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이익에 배치되는 조약폐기, ④남북총선거, ⑤정당사회단체 활동보장, ⑥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 실시, ⑦광범위한 교류실시, ⑧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평화통일 8개항'을 제시하였다.

●●41

김일성,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1973.6.25),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4), p.448.

●●42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 남북조절위원회, 『남북대화백서』 (서울: 대한공문사, 1978), pp.261~264.

있다. 넷째, 특수한 형태의 과도적 중앙정부격인 최고민족위원회의의 주요기능은 내정권·외교권·군사권(군통수권)의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이 이러한 내용의 연방제를 제시한 것은 4·19혁명 이후 남한사회에서 벌어진 활발한 통일논의에 고무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남한의 장면(張勉) 정부에 의해 즉각 거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북측 제안은 남한의 일부 혁신적인 학생·사회단체의 지지를 받는 등 남한 내의 통일운동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에 고무된 북한은 이듬해 5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결성하고 이 기구를 통해 '남북연방제'를 다시 한번 제의하였다.

나. 1970년대: '남북연방제' 안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연방제 통일론을 계속 주장하였다. 북한은 1971년 4월 허담의 8개항으로 된 평화통일방안⁴⁰⁾ 제의에 이어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의 이른바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발표하면서 그중 하나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안'을 제시하였다.⁴¹⁾

그러나 이 제안은 같은 날 오전 남한 정부가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불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한 '평화통일 외교정책 특별선언'⁴²⁾을 발표한데 대한 북한측의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남조선 반동들의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장 남북 총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조건에서 현실은 완전통일에 이르는 합리적인 중간걸음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과 북의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라고 주장하였다.

'조국통일 5대방침'의 주요내용은 ①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②다방면적 협력과 교류의 실현, ③대민족회의 소집, ④고려연방공화국 창설, ⑤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으로 남북한 현



행제도의 지속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향한 ‘과도적 조치’ 이기는 하나 몇 가지 측면에서 1960년대 연방제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남북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 라는 기구가 없어지고 그 대신 통일전선 형태의 ‘대민족회의’ 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그해 8월 28일 김영주 성명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비롯한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간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조치로 나타났다.⁴³⁾

한편 1960년대 연방제 방안이 ‘최고민족위원회’ 가 경제·문화문제만 통일적으로 다루고 군사·외교분야에 있어서는 남북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고려연방공화국안’ 에서는 ‘대민족회의’ 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고려연방공화국’ 이라는 단일국호를 제시하면서 단일국호에 따른 유엔 동시가입과 대외 활동을 주장하였다.

결국 ‘고려연방공화국안’ 은 초창기 연방제 방안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통일지향적이라는 인식을 부각시키면서, 실제로는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 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의도는 1974년 1월 30일 개최된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동 회의에서 북한측 부위원장 류장식은 ‘대민족회의’ 구성문제와 관련하여 쌍방 대표단의 인원수를 최소한 각각 350명 내지 1,500명 규모로 하고, 남한측 대표단 속에는 반공정당, 반공단체, 반공인사들이 참가할 수 없으며, ‘통일혁명당’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대회에서 기존 연방제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을 제시하였다. 김

● 43
북한은 김영주 성명을 통해 당시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을 구실로 “중앙정보부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애국적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력을 비롯한 중앙정보부 강빠들과는 마주앉아 국가대사를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대화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 44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1), pp. 56~57.

● 45

북한은 연방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1983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35돌 경축연회 김일성 연설을 통해 “연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북남이 료번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1983.9.10)

● 46

북한은 ‘10대 시정방침’으로 ①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 견지와 자주적 정책 실시 ②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적 단결 도모 ③ 경제적 합작 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보장 ④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서 교류 협조 실현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발전 ⑤ 교통체신 연결과 자유로운 이용보장 ⑥ 근로대중과 전체인민들의 생활안정도 및 복지의 계통적 증진 ⑦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및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보위 ⑧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옹호 및 보호 ⑨ 통일이전의 대외관계의 처리 및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 조절 ⑩ 통일국가로서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 발전 및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일성은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과 북에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를 수립하고 그 위에 통일연방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의하였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김일성은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①남한에서의 군사파쇼정권의 청산과 사회민주화 실현, ②평화협정체결과 미군철수, ③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한 통일실현을 제시하였다.

연방공화국 창립과 관련해서는 남북한 동수의 대표들과 해외동포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 지역정부들을 지도하고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며,⁴⁵⁾ 남북한 군대를 축소하여 ‘민족연합군’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방국가의 대외정책노선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뻘러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실천에 옮겨야 할 정책방향을 ‘10대 시정방침’으로 제시하였다.⁴⁶⁾

북한이 1980년에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과거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연방제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과 함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통일방안의 명칭으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에 ‘민주’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라 하였고 또한 방안구성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연방형성의 원칙과 연방기구의 임무 및 기능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도적 방안으로서의 연방제가 아니라 완성형 통일국가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상정한 점이다.

셋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용납하는 원칙 위에서 연방정부를 수립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연방상설위원회’가 정치·외교·군사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전제와 모순되게 남한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정권의 퇴진, 주한 미군철수 등을 선결조

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북한은 10대 시정방침을 연방제로 통일된 이후에 실시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통일방안과 함께 제시하여 연방제 방안이 구체적이고 통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연방’이라는 용어를 국문과 외국어로 표기할 때 차이가 나는 것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이중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문으로 표기할 때는 ‘연방’으로 표기하여 연방정부가 군사·외교권을 포함한 대외주권을 행사하는 연방형 통합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로 표기할 때는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이라고 함으로써 ‘국가연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선(先) 선결조건의 관철, 후(後) 합작공산화의 실현’을 의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북한이 여전히 ‘남조선혁명전략’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1990년대: ‘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연방제’ 안

북한은 1991년 1월 김일성 신년사를 통해 기존의 통일완성형 연방제 주장에서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김일성은 동 신년사에서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 나가도록 후대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련방공화국의 지역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 더 높여 나가는 방

●47

『노동신문』 (1991.1.1)
p.540.

●48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5차 회의(1993. 4.7) 강성산 보고를 통해 ①민족대단결로 자주, 평화, 중립적 통일국가 창립, ②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 ③공존·공영·공리도모,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인정 및 존중, ④오든형태의 정쟁 중지, 외세의 침략에 공동대처, ⑤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가시고 신뢰하고 단합, ⑥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서로 다른 주의 주장에 대한 배척 중지, ⑦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 보호 및 민족대단결 이용 장려, ⑧접촉, 왕래, 대화의 실현, ⑨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의 연대성 강화, ⑩민족대단결과 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 등 10개항을 제시하였다.

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⁴⁷⁾

또한 김일성은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한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강요하려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내게 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언급내용은 북한이 종래의 완성형 연방제 통일방안에서 잠정적·단계적인 연방제 통일방안으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보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도통일 후대론’, ‘지역 자치정부의 권한강화론’ 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1990년 동서독이 서독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이룩한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제도통일은 동·서독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력이 약한 북한이 남한에게 흡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단계적 연방제론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정세변화를 관망해보려는 수세적·방어적 태도로의 방향전환이었다.

북한의 이같은 통일전략의 변화는 1993년 4월 김일성의 소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⁴⁸⁾ 을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있다. 김일성은 10대 강령 제1항에서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민족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전민족 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뽄록 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1997년 8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조국통일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을 소위 ‘조국통일 3대현장’ 으로 규정하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마. 2000년대: ‘낮은 단계 연방제’ 제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제기되었다.⁴⁹⁾ 북한은 동년 10월 개최된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 기념보고회(2000.10.6)에서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 보고를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⁵⁰⁾라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2001년 12월 9일 노동신문과 2002년 1월7일 평양방송을 통해 ‘6·15공동선언’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당위성에 맞추어 해석하는 변화를 시도했으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자, 2002년 5월 30일자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하여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지난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제시한 연방제 방안과 비교할 때 두 개 정부의 권한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91년의 연방제 방안에서는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라고 되어 있어, 권한의 개념이나 범위가 모호하였으나,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서는 두 개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고 함으로써 두 개 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다.

‘낮은 단계 연방제안’은 외교권과 국방권까지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측면에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과 일부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낮은 단계 연방’이 ‘하나의 국가’라는 점에서 2개의 국

● 49

6·15 남북공동선언
2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50

「조선중앙방송」(2000.10.6), 「노동신문」(2000.12.15)

가를 과도기로 상정한 ‘남북연합’ 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 화해·협력단계를 장기간 거치면서 이질감을 해소하는 파급효과를 가정하고 있으나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 는 여전히 기존의 연방제 통일 목표에 반하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인 장벽들의 제거’ 를 주장하는 등 정치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

